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31-140022-14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정책 · 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제출한 중앙당의 10대 기본정책과 시·도별 5대 공약을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정당들의 지속적인 정책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당의 정책·공약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Contents

정당별 10대 기본정책 및 5대 핵심공약

▶ 새누리당 ····· 1
▶ 새정치민주연합 ····· 81
▶ 통합진보당 ····· 205
▶ 정의당 ····· 315
▶ 겨레자유평화통일당 ····· 417
▶ 경제민주당 ····· 439
▶ 공화당 ····· 447
▶ 국제녹색당 ····· 461
▶ 노동당 ····· 475
▶ 기독민주당 ····· 559
▶ 녹색당 ····· 571
▶ 새정치국민의당 ····· 803
▶ 한나라당 ····· 817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 중앙 10대 정책

No.	정 책
1	국민안전 최우선 / 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2	가족행복 2014 /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3	복지체감 100℃ /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4	건강한 지방자치 / 지방자치와 재정이 강화됩니다.
5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6	늘어나는 일자리 /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는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7	파이팅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氣)를 살리겠습니다.
8	비정상의 정상화 /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9	살기좋은 농어촌 / 농어촌 지역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10	힘찬 미래 /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시·도별 5대 핵심공약

정책 1

국민안전 최우선

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안전의 현주소는 처참했습니다. 위기 발생시 정부의 현장 대처와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 또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후진국형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병폐를 바로 잡아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 표

- '국민안전 플랜' 마련
- 안전 관련 잘못된 관행과 비리 철폐
- 다중이용교통시설의 안전 대책 강화
- 아동학대 근절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치안 서비스 강화

이행 방법 및 기간

- 국민안전 플랜 마련
  -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의 강력한 기구로의 전면 개편 등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 개혁
  - 안전매뉴얼 재정비 및 재난 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 자연재해, 대형화재, 비행기사고, 해상사고, 교통사고,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유형별 안전 진단 및 대책 마련
  - 안전 기준, 안전관리 감독체계 전면 재정비 등 안전과 관련된 비정상 관행·제도·규정의 전수조사 및 개선
- 안전 관련 잘못된 관행과 비리 철폐
  - 퇴직 공직자 유관단체, 협회 등 재취업 엄격 제한
  - 안전 관련 관리 · 감독 강화

· 시민참여 안전 점검 시스템 구축

· 안전점검, 안전시설 등 안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안전 관련 훈련 및 교육 강화

· 재난 유형별 맞춤형 훈련 강화 및 민방위 훈련 내실화

· 초 · 중 · 고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수업' 강화

–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정보제공 시스템 도입

● 다중이용교통시설의 안전 대책 강화

– 다중이용교통시설 종사자 윤리의식 및 역량 강화

· 인명 구조 의무 규정 위반시 처벌 대폭 강화

· 운행책임자의 적성검사 기준 엄격 적용 등 자격 요건 강화

· 운행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으로 비정상운행(과로 · 피로 운전 등) 금지

–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 및 관리 · 감독 강화

· 지하철, 여객선, 철도, 버스 등 노후 교통수단에 대한 운행 기준 강화

· 철도·항공에 대한 안전감독관제 강화 및 여객선 안전감독관제 도입

· 사고가 잦거나 조류가 강한 곳의 '항해금지지역' 지정

· 여객선 승객 · 화물 관리를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

· 터미널,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 강화

– 유형별 긴급대피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 동영상 주기적 방영 및 정기 실제 훈련 실시

● 아동학대 근절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관련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 가정폭력 방지 교육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 포함 실시

– 신고 이행률 제고 위한 아동학대 통합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 · 감독 및 전문성 강화

● 안전 취약계층(어르신 · 아이 · 여성)에 대한 치안 서비스 강화

– 가정방문 서비스 유형별 안전대책수립으로 여성 · 주부의 불안감 해소

· (택배) 공공장소 무인택배함 설치 및 지인간 택배 전달 활성화

· (검침) 방문 사전안내 활성화 및 여성 자원봉사자 동행검침 추진

· (수리 · 배달) 방문직원 사진 사전 전송 및 사후 안심콜 서비스

- ‘여성 안심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하고,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원룸건물 방범인증제, 지역경찰 책임담당제 등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 24,860개소에 CCTV 설치 확대
- 4대분야(치안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생활안전지도」구축 및 전국 확산 추진
- 이동형 및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확충 및 찾아가는 예방 교육 확대

재원조달방안 등

지방선거 재원 조달 방안 참조 (p23)

정책 2

가족행복 2014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생애 주기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 수요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령 어르신 및 어린이들의 건강 부분이나, 초·중·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부분,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완화 등 각 세대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목 표

- 모든 병·의원에서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확대
- 국가건강검진 20-30대 가정주부 실시
- 모든 초·중·고 교실 최적온도 유지
- 청년·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동네 병·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독감 및 A형 간염 추가
-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가정주부를 포함하여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 주요 검진항목(28개) 중심
- 모든 초·중·고 교실 최적 온도 유지
  - 초·중·고교에 대한 전기료 지원 확대
  - ·'14년 초·중·고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4% 내외) 및 추가 예산지원(1,003억원)으로 학교당 전기료 약 25% 지원
  - 학교 운영비 중 교실 냉·난방비 예산 확보 의무화
  - 초·중·고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지원

- 청년 ·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대책 마련
  - 행복주택 조기 공급 및 전국으로 확산, 대학생 전세 임대 공급 확대, 행복(공공)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원 확대
  - 2030 세대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특례 적용 시한 연장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선거 재원 조달 방안 참조 (p23)

정책 3

복지체감 100℃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복지예산 100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아무런 지원도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꼭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누구나 복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

-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가구 혹한기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천명 증원
  - 민간 자원봉사 조직인 「좋은이웃들」 사업 지원 강화('15년까지 100개소 '17년까지 170개소)
  - 읍 · 면 · 동 단위로 「희망찾기 지원단」 운영
  - 지원절차 간소화 등 현장 중심 탄력적 복지제도 운용체계 마련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상시인력 및 긴급인력)
- 저소득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 전기, 가스, 연탄 등 구입비용을 '15년 동절기부터 본격 지급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확대
  -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 지원을 '15년부터 1~6급 전체 여성 장애인으로 확대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선거 재원 조달 방안 참조 (p23)

정책 4

건강한 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재정을 대폭 강화하고 튼튼하고 투명하게 지방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40%대로 하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치는 현실입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강화 및 지방 자치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튼튼하고 투명하게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목표

- 건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와 재정 대폭 강화
- 지방 재정의 최후 안전장치 및 건전성 제고 시스템 마련

이행방법 및 기간

- 건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와 재정 대폭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비율 확대(20% ⇒ 40%)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 확대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지방 재원 확충
  - 지역밀착형 복지 · 경제 · 일자리 관련 사업의 포괄보조금화 추진
  - 체납과세자료의 연계를 위한 과세자료 ·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관리 강화
- 지방 재정의 최후 안전장치 및 건전성 제고 시스템 마련
  -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일명:파산제*) 도입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하여 재정 회생을 추진, 필수 주민 서비스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파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기준 절차, 지자체의 책임범위, 회생방법(지출구조조정 및 수입확대 등) 등은 여론 수렴 후 법제화 추진

- 부채 종합 관리 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통합부채' 중심 관리
  -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자산부채관리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별 부채 총괄관리 책임자인 '부채관리관' 지정 운영
  - 부채 과다 공기업을 건전화 대상으로 분류하여 공사채발행 기준 엄격 적용
- 재정 악화 우려 지자체에 재정전문가 파견하여 재정 운용 자문 및 지도
-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사전투자심사 강화
  -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매년 보완토록 의무화 운영 내실화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법제화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대규모 지방재정수반 사업과 법령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안행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투자심사 의무화
-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 확대
  -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편리하도록 통합 재정공개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하도급 계약 등 공개범위 확대
- 민간 지원 보조금 관리와 지방회계 전문성 강화
  - 지방보조금의 민간 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사후성과 평가 강화
  - 결산검사위원 전원을 민간전문가로 선임하는 등 결산검사의 객관성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회계법 제정
-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 책임 강화
  -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수당 · 연가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경영평가 결과에 CEO의 해임 등 책임 연계
  - 출자 · 출연기관의 채용 · 회계 · 계약 등 운영기준 마련 및 경영평가 의무화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선거 재원 조달 방안 참조 (p23)

정책 5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지역의 이름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업과 인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기조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 지역마다 활기 넘치고 어디서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

-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 설정 및 일자리 창출 현황 공개
- 「Pre-World Class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기반 히든챔피언 육성
- 전국 4개지역(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에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
-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주민 맞춤형 활력 사업 지원

이행방법 및 기간

-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 설정 및 일자리 창출 현황 공개
  -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중에 달성할 고용률, 취업자 수 등 일자리 목표 설정 및 공시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 우대
  - 매년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고용현황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
- 「Pre-World Class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기반 히든챔피언 육성
  - 지방 유망기업에 대한 R&D 기획,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전국 4개 지역(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에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
  -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4개 지역에 지역 뿌리산업 특성에 맞게 뿌리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험 · 분석 장비 구축
  - 구축된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 공정혁신 등 뿌리기업 밀착 지원
-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주민 맞춤형 활력 사업 지원
  - 쇠퇴하는 구도심 등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 적극 지원
  - 재개발 재건축 등 뉴타운 해제 지역 등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적극 지원
  -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 집중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선거 재원 조달 방안 참조 (p23)

정책 6

늘어나는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 만들어 일하는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부족하고 창업을 만류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청년 사업가들의 도전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여성과 제대군인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표

- 청년 창업 기반 확충
- 여성인재 발굴 양성
-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이행방법 및 기간

- 청년 창업 기반 확충
  -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분야 지원 인프라 확대
  - 창업보육센터(BI) 대형화 및 운영지원 확대
  - 실패 기업인 재도전 지원센터를 통해 재기교육, 기업회생, 신용회복, 재창업자금등을 연계 지원
- 여성인재 발굴 양성
  - 국가인재 DB와 연계, 지방자치단체 여성인재정보 관리 · 운영 시스템(여성인재풀) 구축 활용
  - 여성인재 아카데미 지원 강화 등 여성인재를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대책 강화
  -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조직 확대,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취업률 50% 이상 달성 위한 일자리 5만개 지속 확보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선거 재원 조달 방안 참조 (p23)

정책 7

파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氣)를 살리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 자금조달 애로,과중한 이자부담, 카드수수료 부담, 실패에 대한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목표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체크카드 확대 등을 통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적극 지원
- 산업단지 고용환경 획기적 개선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체크카드 확대 등을 통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연 매출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2% 이하 수수료율 적용
  - 체크카드 수수료율 1% 이하로 인하
  - '체크카드 특별소득공제제도' 도입 및 체크카드 결제자에 대한 가격할인 허용
-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중견기업 세액공제 구간 신설

  * (현행) 중소기업 7%, 일반기업 3% → (개선) 중소기업 7%, 중견기업 5%, 그 외 3%

  - R&D 투자금액에 대한 중견기업 세액공제 구간 신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현재 연 300만 원 한도에서 단계적 확대

-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 운영, 기금규모 지속 확대
  -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합리적 조정, 보증규모 확대
  - 매년 1천 개 이상 유망 창업기업 선정, 신 · 기보 보증지원 및 본인 연대보증 부담 5년간 면제, 크라우드펀딩 제도 조속 도입 등 금융지원 강화
  - 중소 · 중견기업 관련 자본시장 규제 개선 등 지원 강화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기준 연 20% 이상에서 연 15% 이상으로 완화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적극 지원
  - 채무액수 30억 이하인 중소기업 대상 기업 회생절차 대폭 간소화
  - 업종전환 ·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임대보증금 회수지원 시스템 마련
- 산업단지 고용환경 획기적 개선
  - 산업단지 내 주거, 문화, 복지, 교육시설을 패키지로 개선하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선거 재원 조달 방안 참조 (p23)

정책 8

비정상의 정상화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우리 생활의 곳곳에는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보험사기, 불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운영, 자동차 연비 및 리콜 내용 비공개 등 작지만 불편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정상적인 사회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목표

- 경제민주화 지속추진
- 보조금 부조리 근절 등 가계통신비 인하
- 보험사기 근절 종합대책 마련
- 아파트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공적 지원 확대
- 도심 등 입지규제최소지구를 지정해 지역경제 중심지로 육성
-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
- 자동차 연비, 리콜내용 공개하고 자동차검사와 정비를 원스톱으로 처리
- 군사제한시설 구역 규제 완화 · 해제

이행방법 및 기간

- 경제민주화 지속추진
  -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 지속 점검
  - '13년 국회 통과된 주요과제(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에 대한 현장체감도 향상 위한 감시·감독 강화
  - 대기업 외에도 불공정 거래 기업들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적극 마련
- 보조금 부조리 근절 등 가계통신비 인하
  - 보조금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
  - 이동전화 가입비 전년대비 50% 인하
  - 노인 및 장애인 전용 LTE 요금제 확대

- 보험사기 근절 종합대책 마련
  -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 보험관련 기관의 정보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보강
  -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규제 장치 강화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강구
- 아파트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공적 지원 확대
  - 아파트관리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는「아파트관리센터」운영
  - 관리비 공개항목 세분화 및 인근 유사단지와 관리비 등을 비교할 수 있는「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기능 강화
  -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 1회 외부전문가 회계감사 및 단지 내 각종 공사·용역에 대한 전자입찰제 의무화
- 도심 등 입지규제최소지구를 지정해 지역경제 중심지로 육성
  - 유연하게 입지규제 적용 가능한 용도지구(또는 용도구역) 신설
  - 도시 거점시설(교통, 문화시설 등)과 그 주변지역,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대상 입지규제최소지구 지정
  -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 및 층수 제한,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
  - 상위법령 불일치,법령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규제사항 신설하는 경우 등 일괄 정비
  - 지방자치단체별「규제개혁추진단」설치
  - 안전행정부 및 시·도 내「지방규제신고센터」설치
  -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의 차이를 보여주는「지방규제 지도정보시스템」구축
  - 지방규제지수 개발·공표
- 자동차 연비, 리콜내용 공개하고 자동차검사와 정비를 원스톱으로 처리
  - 시험자동차 길들이기, 주행저항시험 등 기준 통일 및 연비 과다 사실 공개, 자동차 제작사·보험사 홈페이지에 리콜내용 공지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민간 정비업체 입주 혹은 출장정비 추진
- 군사제한시설 구역 규제 완화·해제
  - 군사시설·기지의 도시외곽으로 이전 및 통폐합 추진
  -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군사분계선부터의 제한거리 조정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선거 재원 조달 방안 참조 (p23)

정책 9

살기좋은 농어촌

농어촌 지역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현황과 문제점

- 최근 농어가 소득 정체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직된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가중, 투자의욕 상실 등으로 농어촌의 소득 증대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어촌의 급속한 노령화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농어촌 주민의 교통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목표

- 농어촌의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 농어촌 교통 · 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농어촌 금융부담 경감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정책자금 지원
  - · 주요 농어업 정책자금(시설자금, 운영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의 금리 인하 추진
  - 6차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농어가 소득 및 농어촌 활력 증대
  - · 산업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통한 공동 연구개발, 품질관리,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 공동이용시설(제조 · 가공공장, 판매장, 체험시설 등) 설치 지원
  - 농업인의 수입을 든든히 지키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 도입 추진
- 농어촌 교통 · 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에 대한 병원 선운영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도서 주민의 여객선 차량에 대한 운임 지원
  - 노후 여객선 교체 및 낙도 보조항로 서비스 체계 개선
  - 수요 응답형 콜방식 교통서비스 도입으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 및 비용 절감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선거 재원 조달 방안 참조 (p23)

정책 10

힘찬 미래

대한민국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창조 경제와 문화를 융성하고, 나눔 문화 확산과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양성평등의 가치를 지켜가는 노력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목표

-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과학특구 경쟁력 확충
- 일상 속 문화공간 확대,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예술인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새로운 기부형태인 기부연금제도 도입
- 정보영재학교 설립 추진,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국가평생교육기관화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및 남북한 교류 활성화
- 군 의료 시스템 민간시설 활용 확대 · 질적 보장
- 지방자치단체 여성참여율 확대 방안 마련
- 자원순환 및 문화공간인 재활용 · 업사이클 센터 설치 확대

이행방법 및 기간

-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과학특구 경쟁력 확충
  -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설치
  - 동종 · 동일업무 수행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체제 일원화
  - 기업 주도 공동연구법인 설립
  - 연구개발자 휴직기간 확대, 등록취소 유예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 일상 속 문화공간 확대,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예술인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작은 영화관,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 생활권 기반 문화활동 공간 확대
  - 공공체육시설 거점으로 다종목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전문지도자 제공
  - 고용보험 가입 어려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예술인 긴급지원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새로운 기부형태인 기부연금제도 도입
  - 노후를 준비하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 기부품 모집 · 접수행위 외 사용행위까지 검사범위 확대 등 기부금 및 성금 관리 운영상의 투명성 제고
- 정보영재학교 설립 추진,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국가평생교육기관화
  -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 운영 성과 평가 · 분석 후 정보영재학교 설립
  - 직업실무역량 향상 교육과정, 대중적인 고등평생교육 ·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및 남북한 교류 활성화
  -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 조성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북한 모자패키지 사업 추진 등
- 군 의료 시스템 민간시설 활용 확대 · 질적 보장
  - 민간의료시설 이용 확대 · 민군의료 협력체계 확대
  - 의료장비 · 의료 인력보강 및 신속한 후송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여성참여율 확대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40% 달성 추진(여성참여 조사 및 결과 공표)
  -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 제 · 개정 통한 여성참여 50% 의무화 추진
- 자원순환 및 문화공간인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 설치 확대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 설치 확대
  - 업사이클 교육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선거 재원 조달 방안 참조 (p23)

지방선거 재원조달 방안

1.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

❑ 새누리당의 공약 소요예산은 4년간('15~'18) 총 5.5조원(국고 기준)으로, 공약실천을 위해 향후 약 5.8조원 마련 계획

2. 재원조달 방안

❑ 공약 재원조달 방안

(단위: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합계
세수증가(A)	4,900	6,000	6,400	7,300	24,600
건강보험(B)	300	350	400	450	1,500
세출절감(C)	6,800	7,600	8,100	9,300	31,800
합계(D)	12,000	13,950	14,900	17,050	57,900
세입확대 [(A+B)] /D	43%	46%	46%	45%	45%
세출절감 [C/D]	57%	54%	54%	55%	55%

❑ 재원조달 상세내용

세수증가(A)	건강보험(B)	세출절감(C)
- 비과제 감면 일몰제 적용 및 조기폐지를 통한 세입확대 - 수익자부담을 강화하여 부담금 확대,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특별회계, 기금수입 확대 -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파악을 통한 수입 확대	- 기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	- paygo원칙 적용으로 기존 세출예산 절감 - 민자 활용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새누리당

시·도별 5대 핵심공약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 기 도
- 강 원 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공약 1 시민의 안전과 건강 지키기

목표 및 비전

- 재난, 생활, 먹거리, 환경 등 4대 분야의 안전제고
- 서울지하철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

주요 공약

- 서울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시민의 안전에 두겠습니다
  - 재난안전, 생활안전, 먹거리 안전, 환경안전, 4대 안전 분야의 지킴이 역할을 할 시민안전본부 설립
  - 사고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민 1% 안전요원 육성
  - 소방방재본부 안전예산 2배 확대
  - CCTV를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첨단 통제센터 확충
- 하루 700만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발로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안전 및 공기질 개선)
  - 임기중 1조원을 투입해 구식 ATS차량을 신식 ATO차량으로 교체, 관제실 상황판을 자동경보시스템으로 교체
  - 지하철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안전방재처와 테러 · 사고대응을 하는 비상계획처의 안전관련 기능 통합
  - 신설동역 지하에 재난대응 훈련센터 설치 및 1년에 4차례 이상 실제상황에 가까운 안전훈련 실시
  - 서울 메트로의 화재예방 및 피난설비인 소방설비 유지보수 예산 50억 이상으로 증액
  - 지하철에 자동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해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모든 지하철 객차에 공기청정기 설치

공약 2 활기찬 강북 만들기

목표 및 비전

- 북한산벨트를 관광특구로 조성하고 강북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강남북간 불균형 해소

주요 공약

- 동부간선도로 일부 지하화 : 상층부는 수변공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부분에는 수변공원 조성으로 중랑천 자연성을 회복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 창동 차량기지 이전 :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 조성
  - 창동 차량기지 이전부지(24만㎡)에 북부권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강북지역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 강북에 엔터프라이즈존 지정
  - 강북 창동차량기지부지, 은평 뉴타운 지역에 강남 테헤란로급 '강북 엔터프라이즈존'을 지정해 기업들의 본사·연구소, 금융·보험회사를 유치하고 지방세 등 혜택부여
- 은평~종로~성북~강북~도봉 북한산벨트를 친환경 관광특구로
  - 강북지역에 북한산과 같은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임에도 이 지역은 고도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곳임. 북한산이 모두에게 축복을 주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관광특구로 만들고 한옥마을, 아토피센터 등 조성 계획
- 경전철 공사 적극 추진
  - 경전철은 서민의 주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혼잡도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23개 간선도로 조속 완공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주요 간선도로 공사의 전반적 실태를 재점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적기 준공을 유도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

공약 3 좋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목표 및 비전

- 서울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좋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 창출

주요 공약

-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창조산업 단지로 조성
  - 100여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빈자리(82만평)에 창조산업과 벤처산업 단지 조성
- 30곳의 유휴부지에 신규투자 추진
  - 서울시에 투자 신청한 30곳 유휴부지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투자 추진
-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단계적 추진
  - 철도청 부지 11만평, 서부이촌동 3만평, 총 14만평에 대해 기본계획은 종합적으로 하고 큰 그림을 갖더라도 사업시행은 구역을 3~4개로 나눠 단계적 추진
  - 서부이촌동 주거지역은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 뉴타운사업 선별적 추진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 뉴타운 사업이 문제가 된 것은 서울지 25개구가 동시에 추진하면서 과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므로, 뉴타운 사업을 차근차근, 꾸준하게 추진
  - 우리나라 신규주택 공급은 연 40만호 정도인데 절반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 도모
- 다가구 매입,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 서울시는 지난 24년간 2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이는 서울시 350만 가구의 5.6%에 지나지 않음.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기존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
- 마곡지구를 대표적 산업·창조적 건축 단지로
  - 마곡지구를 대표적 첨단산업 단지 및 친환경 창조건축단지로 재탄생
  - 서울의 최첨단 산업단지개념에 걸맞게 대표적 창조건축단지 조성. 에너지 Free와 배출가스 Free 건축을 위한 친환경 창조건축 지원조례 제정

공약 4 서민 부담 줄이기

목표 및 비전

-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을 통한 서민부담 줄이기

주요 공약

- Early Bird 우대 요금 체계 추진
  - 서울의 대중교통은 획일적인 요금체계로 인해 사회 ·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부족함. 일용직 근로자 등 이른 아침 출근하는 분들에 대한 요금 할인으로 서민들의 교통비용을 줄여주고 출근시간대 분산으로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기대
- 지하철, 역사주변, 고궁,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를 프리 와이파이존으로 조성
  -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지하철, 역사주변, 고궁,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공공무료 와이파이 구축 확대. 공공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물론 소외계층의 정보이용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임

공약 5 모두가 따뜻한 서울 만들기

목표 및 비전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모두가 따뜻한 서울 만들기

주요 공약

- 무한돌봄제도 시행
  - 기존 신청주의 복지정책에서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체계를 바꿔 송파구 세모녀 사건 재발방지
  - 통 · 반장, 가스검침원, 학교 사회복지사 등 위기가정 발굴관리 나눔이웃(무한돌보미) 1만명 육성
  - 발굴된 위기가정 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 실시
-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 전국 평균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122%인데 서울은 68%에 불과. 25개 구별 2개씩 50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서울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100% 달성
  - 다가구, 단독주택 등을 매입, 시설보완으로 주거근접지역에 소규모단위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대
  - 서울의 부족한 중 · 대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노인요양병원에는 식당과 물리치료실을, 공공 노인복지시설에는 치료시설을 갖춰 복합화 추진
- 워킹맘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확대
  - 구로공단 · 창신동 봉제공장 등 서울형 제조밀집지역에 직장어린이집 100여개 신설로 고용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

부산광역시

공약 1 사상 스마트 밸리 조성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재생계획 수립

목표

-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

이행 방법

- 사상 스마트벨리 조성 및 노후산단 리모델링
- 첨단산업, 문화 · 예술, 비즈니스 복합지구로 조성

공약 2 부산 전통산업 고도화

현황 및 문제점

- '14년 예산 82억원 반영(핵심원천 부품소재 기술개발, 신발성능표준화 인증체계 구축 등)
- 산업용 해양섬유 개발에 관한 연구 진행 및 타 섬유특화 지자체와 협의 단계

목표

- 부산의 전통산업인 신발산업과 섬유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부산 경제를 활성화

이행 방법

- 기술집약적 산업 고도화를 통한 신발산업의 세계화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글로벌 신발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등
- 신발산업 단지 조성
- 해양산업용섬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센터 설립

공약 3 동북아 문화·예술 콘텐츠 중심도시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14.6월 발표 예정)
- 아시아 영화학교 설립을 위한 TFT 구성, 기획 중

목표

- 각종 문화 · 예술 산업을 적극 육성,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부산을 문화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

이행 방법

-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및 아시아 영화 제작 핵심 인프라 구축
-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조성
- 창작단지, 문화예술산업클러스터, 기업육성센터 구축

공약 4 방사선 의·과학벨트 구축 차질없이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10년 7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
-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 중

목표

- '20년 2,000조원의 시장규모가 예상되는 방사선 산업의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벨트를 조성

이행 방법

- 방사선 연구 인프라와 기술진흥 및 고급인력 양성 지속 추진
- 에너지, 첨단소재, 의과학 등 핵심 산업 연구개발단지로 복합기능화
  - 울산, 온산공단과 연계

공약 5 부전 철도시설 이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이전에 따른 효과에 대한 용역 진행 중

목표

- 철도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활용,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

이행방법

- 부전 철도시설 이전 지원 및 후적지 활용 방안 마련

대구광역시

공약 1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예비 타당성 조사 중

목표

- 대구와 경산, 구미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 도시간 연계성을 강화시켜 지역 균형발전 실현

이행 방법

- 구미~대구~경산간 광역철도망 구축 추진
  - 정차역(9개소) : 구미, 사곡, 왜관, 왜관공단, 서대구, 원대, 대구, 동대구, 경산
- 기존선(북부연결선)에 서대구역 KTX 역사 건설 추진

공약 2 국가 첨단의료허브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14년 예산 20억원 반영(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 구축)
-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 인프라 준공('13.11월)
-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차 종합계획 수립('13.12월)

목표

- 첨단복합단지의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의료산업 집적지 형성으로 대구를 글로벌 첨단의료 도시로 육성

이행 방법

- 첨단의료 R&D센터 및 인프라 확충
- 첨단의료기술 교육 및 산업화 지원 클러스터 구축
- '17년까지 120여개 기관 입주 목표(진행 중)

공약 3 K-2 공군기지 이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도심 군사공항의 소음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큼
- K-2 이전방안 연구용역 시행('13.8월~'14.8월)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13.3월 제정)

목표

- 국가안보를 고려해 도심 군사공항을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고, 기존 공항자리는 주민들을 위해 활용

이행 방법

- K-2 공군기지 이전 지원 및 후적지 활용 방안 마련

공약 4 신성장동력 사업 육성으로 첨단산업도시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SW융합기술고도화 기반조성사업 지역 확정 및 협약 체결('13.8월)
- 물산업 선도기업 유치 기초조사('14.3월)
  - 선도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및 유치전략 수립
- 로봇산업 진흥원 건축 착공('13.2월), '14년 예산 80억원 반영
- 로봇산업 클러스터 건축 착공('13.12월), '14년 예산 216억원 반영

목표

- 소프트웨어(SW)융합사업, 물산업, 로봇산업 등 대구의 특색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대구를 창조경제의 메카로 탈바꿈

이행 방법

- SW융합기술센터 설립 및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개발 지원
- 물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물산업 진흥시설(물융합연구동, 글로벌비지니스센터 등), 물산업 실증화 단지 구축
- 로봇혁신센터, 로봇협동화 팩토리 등을 포함한 로봇산업 클러스터 차질없이 조성

공약 5 국가산단연결 광역철도망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13.12월-'14.6월), '14.7월 발표 예정

목표

- 달성 1,2차 산단과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대합산단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개설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근로자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함

이행 방법

- 달성군~국가산단(구지)~대합산단(창녕)구간 광역철도망 구축

인천광역시

공약 1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의 눈부신 성장을 위해 인천을 동북아 경제 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함
-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채드윅송도국제학교,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개교/유타대, 겐트대학교 '14년 9월 개교 예정)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중('14.4월-'14.8월)

목표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 영종, 청라에 대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뒷받침

이행 방법

- "GCF(녹색기후기금)" 관련 산업집적화로 글로벌 녹색산업 허브로 육성
- 세계적 수준의 Green-MICE 인프라 구축
- 최고 수준의 쾌적한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공약 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조속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경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집중으로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10. 10월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안" 발의
- '13. 3월 통합채산제 평가를 통한 현 요금제도 개선 방안 수립 용역 발주
- '13. 5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이관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목표

- 현재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이행 방법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공약 3 인천항 경쟁력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신항 진입도로 건설('13.8월 착공, '15.3월 완공 예정)
- '14년 예산 50억원 반영(기본 및 실시설계비)

목표

- 인천항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대형선박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14m인 항로의 수심을 16m로 증심

이행 방법

-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인천신항 항로 증심 추진(14m → 16m)

공약 4 인천 보훈병원 건립 추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보훈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인천 · 경기권의 국가유공자들은 서울보훈병원까지 원거리 통원진료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올해 상반기 완료예정

목표

-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 보훈병원 건립

이행 방법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건립 추진

공약 5 GTX 송도~청량리 구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B.C노선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추진할 계획

목표

- 송도국제도시에 국제기구가 유치됨에 따라 30분 내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역 급행철도를 건설

이행 방법

- GTX 송도~청량리 구간 추진

광주광역시

공약 1 인구 250만 광역벨트화 창조 생산도시 육성

현황과 문제점

- 광역도시발전구상 국정과제 102번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도시권 별 발전 전략추진에 해당

목표

- 250만 인구 규모를 갖춘 광주메트로폴리탄 기틀을 마련하고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광주 육성

이행 방법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광주메트로폴리탄 기틀 마련

공약 2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구축

현황과 문제점

-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 기획 추진 중('14년 3월~12월)
- 사업의 기획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기 위해 광주시, 산업연구원 컨소시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9월경 사업기획안 주요내용 작성완료 예정

목표

- 광주를 친환경 그린카 생산의 중심기지로 발전시켜 전 세계적인 꿈의 도시로 육성,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행 방법

-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반영 추진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구축 추진

공약 3 창조적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과 문제점

- '04-'14년 국비 6,991억원(旣지원 5,939억원, 지원예정 1,052억원)

목표

- 국립 아시아문화의 전당의 건립으로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

이행 방법

- 조속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 · 재정적 지원 적극 추진

공약 4 5·18 아카이브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5·18 아카이브 구축 국비 125억원 旣지원('12년 30억원, '13년 45억원, '14년 50억원)

목표

- 세계속의 민주 · 인권 · 평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

이행 방법

- 5·18 민주화 관련 상징 시설물과 공원화 사업 추진
- 광주교도소 – 시가문화권 – 무등산 – 구 도청 및 5.18아카이브센터 등을 5.18 사적지와 연결하는 세계적인 인권 · 관광벨트 구축

공약 5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단계적 추진

현황과 문제점

- 부산~순천 철도고속화 : 진주~광양 복선화사업은 '1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진행 중
-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 '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사업으로 선정

목표

-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접근성 향상

이행 방법

- 부산~순천간 철도고속화 : 진주~광양 복선화사업 '15년 차질 없이 개통
- 광주송정~순천간 전철화 :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대전광역시

공약 1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14년 2월~7월)

목표

-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활용한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차질 없는 지원

이행 방법

-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복합 문화공간 조성

공약 2 대전역 명품역사 건립 및 역세권 개발

목표

- 대전역사와 주변 개발로 대전이 철도의 중심지로 재도약

이행 방법

- 명품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14년 6월)
-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민자 유치하여 개발 추진('14년 11월)

공약 3 첨단산업 융성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현황과 문제점

- '14년 예산 2,100억원 반영

목표

-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복합 문화공간 조성

이행 방법

- '17년까지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을 건립하여 세계 우수 과학자를 유치하고 창조경제의 중심도시로 육성
- 신동 · 둔곡지구에 세계 최고수준의 중이온가속기 구축 및 첨단기업 유치로 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
- 과학벨트 기능지구별로 'Science-Biz 플라자'를 구축하여 기업 유치, 산 · 학 · 연 공동연구 사업화의 거점으로 활용

공약 4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 착수

현황과 문제점

-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시범사업단지로 지정('09년)
- 지구지정 완료('12년 9월)
- 재생시행계획 수립('13년 4월~'14년 5월)

목표

-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모델로 개발

이행 방법

- 도로 등 기반시설정비 사업 본격 착수('14년부터)
- 노후화된 대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 모델로 개발

공약 5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시 통과구간(신탄진~계룡시)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현황과 문제점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14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목표

-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을 조기착공하여 대전시의 도시철도기능을 강화, 세종시와 과학벨트의 조기 안착과 충청지역이 공동발전을 도모

이행 방법

-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시 통과구간(신탄진 ~ 계룡시) 전철화 사업 조기 시행
- 신탄진의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울산광역시

공약 1 울산테크노산업단지를 울산의 신성장 동력 산실로 육성

현황과 문제점

-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울산 수소산업 생산 · 연구 클러스터 조성
-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기술지원센터 구축
-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 구축
- 뿌리산업 ACE기술지원센터 설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등 5개기관 유치
-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인 울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확정

목표

- 울산의 경제구조를 에너지, 바이오 등의 산업구조로 변화 · 발전시키기 위해 울산테크노산업단지를 신성장 동력의 산실로 육성

이행 방법

-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제조업이 한 공간에 통합되는 고품격 산업단지로 개발

공약 2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현황과 문제점

- 국토해양부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11년 6월)
-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14년)

목표

- 도심 중심의 현재 도로망 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이행 방법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부고속도로(봉계IC-울산포항고속도로-북구 강동동(국도31호선)) 도로개설 추진

공약 3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

현황과 문제점

- 노후 산단기반시설 개선 : 행복한산단만들기사업(QWL) 330억원 예산 지원 ('13~'14년)

목표

- 공단리모델링, 노후 산단기반시설 개선,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등을 차질없이 진행, 울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이행 방법

- 노후 산단기반시설 개선사업 지속 추진('14년)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4.3.21 착공, 국비 40억원 지원, '13~'15년)

공약 4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현황 및 문제점

- 산재모병원 설립 방안 등 연구용역 실시('12년 7월-'13년 1월)
- 산재모병원 설립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건립계획 수립('13년 7월)

목표

-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을 설립하여 울산 40만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이행 방법

-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14년 4월)

공약 5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현황과 문제점

-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공고('14년 2월) 및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완료('14년 4월)

목표

- 산업기술발전사 전시관, 첨단기술 홍보관, 과학기술인재육성 교육체험관과 복합문화공간이 어우러진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설립

이행 방법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추진('14년 하반기)

세종특별자치시

공약 1 명품세종시 건설을 위한 도로망 구축 적극 지원

현황과 문제점

- 3개 노선 기개통 : 대전유성, 정안IC, 오송역 연결도로
- 9개 노선 사업 진행 중 : 대덕테크노밸리, 청원IC, 청주, 공주 연결도로 등
- 조치원 연결도로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 추진중

목표

-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내외로 접근성 강화

이행 방법

- 대덕테크노밸리, 청원IC, 청주, 공주 연결도로 등 9개 노선 사업의 차질없는 사업 진행
- 조치원역 컨테이너 장치장을 중부 ICD와 통합하여 이전 추진('14년 12월까지)
- 조치원 연결도로확장(6→8차선)은 타당성 재조사 중이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

공약 2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현황과 문제점

- 수도권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수립('08년 6월)
- 기본조사 완료('09년 12월)
- '11년 6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상 우선순위 지정

목표

- 서울 ~ 세종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로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 기능을 보완하여 수도권 교통혼잡을 완화 및 정부세종청사 등으로의 접근성 강화

이행방법

- 경기도 구리시~세종특별시 장군면(총 129.1km, 6차로) 고속도로 조속 착공

공약 3 세종 테크노파크 설립

목표

- 세종 테크노파크 설립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로 지역기업의 역량 확보

이행 방법

- '18년까지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 수행을 위한 세종 테크노파크 설립

공약 4 녹색 신교통 R&D 파크 조성

현황과 문제점

- 新교통시스템의 개척 및 선도가 필요한 상황
- 2013년 9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세종시 간 R&D파크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

목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는 新교통시스템의 전용시험장을 세종시에 건설하여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

이행 방법

- 녹색신교통 R&D파크 및 메타융합대학원 등 조성

공약 5 세종시 과학기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SB플라자 및 테크노파크 연계)

현황과 문제점

- 기능지구 산업단지 조성 지원·요청
- 과학기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 3개 기능지구에 통보('13년 10월)

목표

-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거점지구의 연구성과와 사업화를 조기실현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과학기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건설

이행 방법

- 인접지역에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반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노력

경기도

공약 1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교통난으로 장거리 통근자들의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A노선 '14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14년 예산 : 65억원), 상반기 내에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예정

목표

- 경기도 주요 거점역에서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교통수단 건설

이행 방법

- A노선(일산 ~ 삼성) 차질없이 추진
- B노선(송도 ~ 청량리)과 C노선(의정부 ~ 금정)은 A노선 기본 계획 용역시 사업 재기획 후 조속 추진

공약 2 한류의 메카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한류열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류 기반조성 필요
- '14년 예산 5억원 반영(실시설계비)
-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목표

- 경기도를 한류의 메카로 육성해 한류 확산에 기여

이행 방법

- K-POP 공연장 건립
- 한류월드 MICE(회의 · 관광 · 컨벤션 · 전시회 등) 복합단지 개발

공약 3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13.9월 ~ '14.5월)

목표

- 낙후된 수도권 북부지역의 발전과 교통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KTX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 동북부 지역의 KTX접근 이용성 증대

이행 방법

- 수도권 KTX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
  - 사전용역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공약 4 수도권 교통대책 지속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14년 예산 인덕원~수원(90억원), 월곶~판교(55억원), 여주~원주(12억원) 반영

목표

- 경기도 어디에서나 막힘없이 통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

이행 방법

-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여주~원주 구간 차질없이 추진

공약 5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화성 전곡항('11.12월 준공) 운영중
- 화성 제부항('13.7월 착공, '17.6월 준공 예정), 안산 홀곶항('17년 완료 예정), 안산 방아머리항('20년 완료 예정) 추진 및 계획
- '13년까지 192억원 지원

목표

- 마리나항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서해 경기만을 해양레저 최적의 장소로 개발

이행 방법

- 경기만 마리나항 개발계획 차질없이 추진
  - 화성 제부 마리나항, 안산 홀곶 마리나항,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 지속추진

강원도

공약 1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현황과 문제점

- '13년 예산 50억원 반영(활성화 용역)
- '14년 예산 50억원 반영(사업재기획 조사)

목표

- 강원 동해 북부권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조속 추진

이행 방법

- 춘천, 양구, 인제, 속초 등 90.7km 구간을 고속화철도로 연결
- '14년 예비타당성 추진 예정

공약 2 지역경제를 살리는 복합관광 중심지 육성

현황과 문제점

-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통위 법안 소위 상정 ('14.2.19)
- 레고랜드 이용객들의 접근 편의 제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진입교량 설치 지원('14년 착공, '17년 준공 예정)

목표

- 설악금강의 국제 관광경쟁력 확보와 춘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확고한 통일 기반 조성

이행 방법

-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설악금강 일대를 특구로 지정
- 레고랜드 진입을 위한 춘천시 근화동~하중도, 길이 810m·25m·4차선 교량 건설

공약 3 동계올림픽 복합관광중심지대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

현황과 문제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14.3.21)

목표

- 동계올림픽 종료 후 관련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가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이행 방법

- 태백-강릉 세계 최장 트레킹 코스 개발
- 명상치유센터와 명상수련원 건립 및 대학과 연계한 메디케어산업 연구 기반 조성
- 정부의 5대 유망서비스산업 지정 지역인 서해(인천)와 남해(제주도)외에 동해(올림픽 개최지) 포함 추진

공약 4 여주～원주, 원주～강릉 전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여주~원주
  - '14년 예산 12억원 반영(기본설계비)
  -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원주~강릉
  -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 착공 : 평창~강릉('12.6.15), 원주~평창('13.4.24)
  - 강릉시 도심구간 지하화 및 강릉역 반지하 방안 확정

목표

- 동해안권 균형발전과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망 개선,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동해안 경제권 활성화
- 이행 방법
  - 여주~원주(21.9km) 구간을 복선전제 단선전철로 연결
  - 원주~강릉간 복선철도의 차질 없는 건설

공약 5 의료기기 생산·수출 단지 조성

현황과 문제점

- 강화된 의료기기 국제기준 규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4년 신규사업(첨단의료기기생산수출단지지원, 10억원)을 추진하여 해외 인증평가 기술개발 및 교육 지원 중

목표

- 원주는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생산거점지이자 국내 수출의 24%를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생산 · 수출 허브로 만들고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이행 방법

-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첨단기술의 연구결과를 제품화하는 생산 · 수출 거점화
- 전용공단조성 : 첨단의료기기 생산전용공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추진
- 의료기기 생산거점 구축과 글로벌 Top 100대 강소기업 육성

충청북도

공약 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현황과 문제점

- '14.4.14 : 청주공항 활성화사업 재기획조사 연구 용역계약 체결
  - "국내 항공정비 MRO 발전방안" 기획연구 중('13.11~'14.6, 항공안전기술센터)
  ※ 신규 MRO 단지 조성 및 MRO R&D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중

목표

- 충북 지역발전의 핵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대한민국 제2의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을 충청의 관문공항으로 육성

이행 방법

- 공항 SOC 확충 및 공항 활성화 관련 사업 적극 지원
- '14.10월경 MRO 발전방안 마련 예정(국토부)

공약 2 지속가능한 청주·청원 통합 지원체계 구축

현황과 문제점

- '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행정정보시스템 50억원(교부세 25억원, 국비 25억원) 지원, 통합지원 경비 교부세 100억원 (청주 50억원, 청원 50억원) 지원 기 완료
- 「행정체계개편특별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맞춰 지원할 계획(10년간 총 3천억원)

목표

- 청원군과 청주시의 상생발전을 통해 광역도시권의 중추도시로 육성

이행 방법

- 정부의 통합시 필요한 행정전산망 구축, 통합청사 건립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 통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격차해소 및 상생방안 지원

공약 3 중부내륙권 광역 교통망 구축

현황과 문제점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년 예산 : 42억원(1/2공구 실시설계비)
- (동서5축고속도로) '14년 예산 : 10억원(사전기본계획 조사용역비)
- (괴산~괴산IC) '14년 예산 : 80억원('18년 적기준공을 위해 '14년 연차소요 반영)
- (괴산~음성) '14년 예산 : 50억원('21년 적기준공을 위해 '14년 연차소요 반영)
- (진천~증평 1) '14년 예산 : 64억원('18년 적기준공을 위해 '14년 연차소요 반영)
- (진천~증평 2) '14년 예산 : 69억원('14년 준공소요 반영)

목표

- 중부내륙을 연계하는 국도 및 고속화도로를 개통하여 지역 균형발전 노력

이행 방법

- 중부 내륙을 연계하는 국도 및 고속화도로 조기 추진 및 개통 노력

공약 4 보은·옥천·영동 힐링 1번지 조성

현황과 문제점

- 보은 : '산림바이오 휴양밸리 조성사업'('14년 25억 예산 반영)
- 옥천 · 영동 : 예비타당성 없이 사업별 개별 추진

목표

- 숲을 교육, 문화, 일자리 창출 등 융복합 창조산업과 연계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국민 행복 숲을 조성

이행 방법

- 보은 속리산 권역
  - 산림바이오 휴양밸리 조성사업 확대 지원
- 옥천 장령산 권역
  - 행복숲 교육원 조성 추진
- 영동 산막리 권역
  - 행복숲 체험원 조성 추진

공약 5 제천 ~ 평창간(국지도 82호선) 고속화도로(선형개량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 포함
-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중

목표

-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까지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충북 북부지역의 산업 · 물류 · 관광발전을 도모

이행 방법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

충청남도

공약 1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지원

현황과 문제점

- (장항선 복선 전철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14년 4월)되어 예비타당성 추진 중

목표

- 주변 도시와의 연계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조성, 충남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

이행 방법

- (충남도청 진입도로) 주진입도로(8.43km) '14년 완료계획, 제2진입도로(2.3km) '16년 완료계획
- 장항선 복선 전철화 조기 완공 노력

공약 2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량 급증과 병목현상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13년 12월~) 진행중

목표

- 서해안 고속도로의 미착공 구간의 조기착공

이행방법

- KDI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 노력

공약 3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현황과 문제점

- '14년 사전기본계획조사 용역비 10억원 반영

목표

- 세종시와 경북도청 신도시간 직결도로를 건설

이행 방법

- 사전기본계획조사 등 착수('14년 6월 ~ '15년 9월 예정) 추진

공약 4 과학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 정상추진

목표

-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을 조성하고 과학기반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이행 방법

- 엑스포과학공원 내 기초과학연구원 건설('17년 완공), IBS 건립 착공('15년), 신동 · 둔곡지구 개발('14년~)을 통해 기초연구 글로벌 거점으로 활용
- 중이온가속기 구축 추진현황 및 계획
  -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12.5~'13.6), 중이온가속기 4차년도 협약 및 사업착수('14.4~)
  - 핵심부품인 초전도가속관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완료('14.12월)
- 과학벨트 기능지구별 'Science-Biz 플라자'를 구축하여 기업 유치, 산 · 학 · 연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 사업화의 거점으로 활용('14년~)

공약 5 충청권 광역 철도망 건설

현황과 문제점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논산~청주공항('16년~'20년) 착수사업 확정
- 계룡~신탄진 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14년 4월)되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중

목표

-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으로 성장

이행 방법

-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시 통과구간(신탄진~계룡시) 전철화 사업 조기 시행
- 신탄진의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전라북도

공약 1 한중 경제협력의 심장 '새만금' - SOC 조기 개발

현황과 문제점

- 동서 2축 도로(새만금 신항만~새만금 · 전주간 고속도로) '13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13년 8월~'14년 6월)
- 남북 2축 도로(새만금 산단~부안관광단지) '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중('13년 12월~'14년 6월)
-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 연구('13년 11월~'14년 11월, 국토연구원) 진행 중

목표

- 새만금에 2020년까지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SOC 조기 개발

이행 방법

-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추진
- 새만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참여 추진

공약 2 전북을 농·생명·식품·금융산업의 허브로

현황과 문제점

- 대전역 명품역사 건설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14년 4월)

목표

- 새만금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新성장동력산업으로 자동차·기계, 녹색에너지, 식품·생명, 융복합 산업을 중점 육성

이행 방법

-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후속 대책 추진

공약 3 동부 내륙권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문제점

- 격포~하서 구간 '14년 공사비 140억원 반영
- 태인~산내구간 '14년 실시설계비 4억원 반영

목표

- 새만금 개발 사업과 연계한 전북의 동부 내륙권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이행 방법

- 정읍~남원 구간,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16년~'20년) 수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공약 4 고도 익산 르네상스 지원

현황과 문제점

- 익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적정성 사전조사용역(전발연) : 13년 12월~14년 2월
- 이주단지조성 사업(옥룡천 편입 40세대) : '14년 2월~
  - 토지매입, 매장문화재 조사, 이주단지 부지조성 등
- '14년도 고도보존육성사업 예산 : 51억원(국비 36억, 지방비 15억)
  - 금마지구조성사업,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등

목표

- 고도 익산의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해 세계적인 역사관광도시로 육성

이행 방법

- 3분야(특별보존, 역사문화환경, 고도육성 기반구축 등) 차질 없이 추진

공약 5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간) 건설 추진

목표

- 부안~고창간 부창대교를 건설하여 접근성 강화

이행 방법

-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16년-'20년) 수립시 사업 재기획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전라남도

공약 1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인프라 적극 추진

현황과 문제점

-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
  - 여수 신북항 건설(89억원)
  - 크루즈 부두 준설비(50억원)
  - 카페리 접안시설 개량비(50억원)
  - 신항지구 국제마리나항만 조성(16억원)
- 사후활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연구용역 실시 계획

목표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인프라 효율적 활용

이행 방법

- 용역결과에 따라 사후활용 차질없이 추진

공약 2 호남 고속철도 건설

목표

- 무안공항 활성화와 향후 급증할 황해권 물류와 교역 등 교통 수요에 대처

이행 방법

- 사업량 64.9km, 설계속도 300km/h
- 무안공항·나주역 경유 등 다양한 노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간 합의도출 후, 합리적 노선 선정 예정

공약 3 광주 –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현황과 문제점

- 타당성 재조사 : '13년 5월 ~ '14년 6월
- '14년 실시설계비 100억원 반영

목표

- 국가기간교통망 남북 2축 노선 미연결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중서부권 접근성 제고로 물류비용 절감 및 관광개발을 촉진

이행 방법

- '광주~해남 간' 고속도로 건설 우선 추진

공약 4 과학 로켓 개발 사업(우주항공 체험관광명소 구축)

현황과 문제점

- '14년 사업기획예산 2억원 반영
- 전라남도, 고흥군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 검토 중

목표

- 과학 로켓 센터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건설

이행 방법

- 기획연구를 통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노력

공약 5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미래형 소재사업 육성) 차질없이 추진

현황과 문제점

- '1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확정 통보('14년 4월)

목표

-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광양만권을 미래형 소재산업의 메카로 집중육성

이행 방법

-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 고흥우주산업과 연계 추진

경상북도

공약 1 도청 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조속 추진

목표

- 경북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북 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이행 방법

-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 경북도청 진입도로 중 안동방면도로(5.0km)는 '14년 완료, 예천방면도로(8.5km)는 '15년 완료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 국비 629억 5,100만원 지원, '17년 준공
- 생태하천 복원사업 : 국비 60억원 지원, '14년 사업 완료

공약 2 글로벌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목표

- 글로벌 창조경제와 IT 융복합 시장의 기반을 조성해 ICT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행 방법

- ICT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및 고급인력 양성 지속 추진

공약 3 동해안고속도로 및 동서5축고속도로(세종 – 안동 – 울진) 건설

목표

- 21C 환동해권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세종시와 도청 신도시 간의 행정 ·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이행 방법

- 동해안고속도로(포항~삼척, 166.8km), 동서5축고속도로(세종~울진, 176km)기본계획 수립 등 차질 없는 추진

공약 4 중부내륙·남부내륙·동해선 철도 건설

현황 및 문제점

- 중부내륙철도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14년 3월~'15년 1월)
- 남부내륙철도 : '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목표

- 중부 · 남부 내륙철도 건설 및 동해중남부선 개통으로 동해안 관광산업의 대동맥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 견인

이행 방법

- 중부내륙 · 남부내륙 · 동해선 철도 건설 추진
  - 동해중남부선 : 울산~삼척 242.3km를 4개구간으로 단계별 개통 추진

공약 5 울릉도·독도 한민족 생활섬 프로젝트

현황 및 문제점

- 울릉공항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14년 4월)
- 울릉일주도로 : '11년 착수하여 '16년 완공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 '14년 예산 205억원 반영
- 울릉 사동항 2단계 건설 : '14. 2월 공사 착수, '17년말 준공, '14년 예산 487억원 반영

목표

- 독도의 국민 접근성을 높여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홍보를 통해 세계와 함께하는 독도 조성

이행 방법

- 울릉공항, 울릉일주도로, 울릉 사동항 2단계 건설

경상남도

공약 1 산업단지 고도화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기능 확대 : 고부가가치 조선산업단지 및 생산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소 설립(725억원) 및 하동지구 4개 진입도로(1,117억원) 등의 국비지원 사업 정상 추진 중
- 혁신산단 : 현재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창원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선정해 리모델링집중 지원 중

목표

- 산업단지 고도화 및 연구개발 기능강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여건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행 방법

- 산업단지 고도화, 혁신도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인프라 구축 추진

공약 2 문화관광 실크로드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합천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착공('14년 4월)
- 녹색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중 : '12년~'14년 30억원 지원

목표

- 경남 권역별 관광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관광산업 육성으로 경남 경쟁력 강화
- 지리산권 · 한려해상권 · 섬진강권 · 경남동부지역문화권 등 권역별 특성화 관광산업 육성

이행 방법

- 국립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 동부스포츠 센터 착공(창원)

공약 3 항공·나노·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활성화

목표

- 항공 산업 및 해양플랜트의 확고한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경남권 경제의 재도약

이행 방법

- 항공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항공부품 R&D 및 인증센터 건립
-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생산 산업단지 조성
- 세계조선해양엑스포 추진 및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
- 나노융합 특화산업단지 조성

공약 4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도로망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거제~마산 : 창원 측 2개 공구(거제~마산2,3)는 '14년 예산 400억원 반영
- 창녕~현풍고속도로 : '14년 예산 18억원 반영(실시설계비)
- 군북~가야 : 4차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수요예측재조사 진행중('12.10~, KDI), '14년 예산 5억원 반영(설계비)
- 함양~울산 고속도로 : '14년 3월 밀양~울산 고속도로 착공, 함양~밀양 구간 실시설계 중, '14년 예산 500억원 반영(실시설계 및 공사)
- 남부내륙철도 : '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 제2안민터널 :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11-'15)」에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13.4.'15.3.), '14년 예산 15억원 반영(실시 설계)

목표

- 지역주민의 이동과 농축수산물의 편리한 수송을 위해 교통망을 형성하고 중부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산업기반 및 관광루트 구축

이행 방법

-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도로망 확대 추진

공약 5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목표

- 부산~광주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을 통해 관광 및 물류 산업의 도약과 영·호남 지역 화합 도모

이행 방법

- 부산~순천간 복선화 사업 적극 지원
- 순천~광주 구간 조기 착공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1 제주관광의 세계화

목표

- 제주를 고품격 관광지로 도약시키고 제주관광 2천만시대 도모

이행 방법

-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시장 다변화 추진
- 종합적인 관광객 유치마케팅 계획 수립
- 공적 관광업무의 확대 · 정비 및 수준 향상
- 마리나, 요트, 낚시 등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인프라 확충

공약 2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목표

-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계승해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문화융성을 통해 제주관광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이행 방법

- 탐라문화광장 조성
- 역사와 문화를 융합한 문화예술 도시공동체 복원
- 제주문화예술 생태지도 구축

공약 3 선진 감귤유통체계 구축

목표

- 감귤 재배구조 개선으로 감귤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 농가소득 향상

이행 방법

- 고품질 감귤 생산여건 조성 및 신품종 개발 지원
- 비가림 시설사업 확대

공약 4 제주형 신성장산업 육성

목표

- 제주의 바람과 물, 용암해수, 환경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이행 방법

- 청정 물산업을 21세기 블루골드로 육성
- 탄소 없는 섬 제주 추진

공약 5 제주 4.3평화재단 내실화

현황 및 방법

-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총사업비 120억원 중 70억원 반영

목표

-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유지

이행 방법

- 제주 4.3평화재단 기금 조성의 조속한 추진 및 지원
- 제주 4.3평화재단의 설립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정상 추진 중 : 기금조성을 통해 지원액에 상당한 재단 출연금을 연 20~30억원 내외로 지속 지원 ('14년 30억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공약

▣ 중앙 10대 정책

No.	정 책
1	“사람보다는 이윤을 생각하는 탐욕”과 “국민보다는 조직을 생각하는 풍토”를 종식시켜,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새로운 내 나라”,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2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만들기 :**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신설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
3	**공공성 강화로 안심 보육 실현 :** 신규아파트단지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신설하고, 학교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주도의 안심 보육·교육 실현
4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출퇴근 시간 단축 :** 추가부담없이 무한 환승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및 대중교통망 통합으로 교통비는 내리고 출퇴근시간 단축 추진
5	**생활임금제 도입 및 상시적 업무 정규직 채용 :**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추진
6	**효도하는 정당, 당당한 노후생활 실현 지원 :** 어르신에 대한 건강지원과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인생 2모작 실현 지원
7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EBS 영어교육전문채널 신설을 통한 영어사교육비 절감, 교복값 인하 및 대학입학금 폐지 추진
8	**전월세난 해소 및 세입자 보호 :**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전월세난 해소 및 임대료 상한제 등 세입자 권리보호 강화
9	**국민 세금 부담 완화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향 등 세금부담 완화로 가계경제 살리기 추진
10	**지역균형발전 추진 :** 지방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인프라 수준 향상으로 지방의 삶의 질 개선 및 국토의 균형발전 추진

▣ 시·도별 5대 핵심공약

정책 1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람보다는 이윤을 생각하는 탐욕"과 "국민보다는 조직을 생각하는 풍토"를 종식시켜,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새로운 내 나라",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여름 학생들이 여름 캠프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빈발함
  - 금년 2월 경주 리조트에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 최근에는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총체적인 안전 부실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마비로 3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함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재난예측능력이나 방재시설, 재난관리 전담인력 등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은 총체적 부실 상태임

목표

- 대한민국은 지난 4월16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 "사람보다는 이윤을 생각하는 탐욕"과 "국민보다는 조직을 생각하는 풍토"를 종식시켜서,
  -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새로운 내 나라", "사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이행방법

-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위원회(가칭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운영 기본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분야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
- 국회에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의 수입·운항·사고 및 구조 과정의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개편방안 등 안전 대책 수립
- 대통령이 재난관리에 총 책임을 지면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위기관리센터'를 부활하는 등 재난대응시스템 총 정비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관리소홀 등으로 대규모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기업과 소유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무한 책임 부여 및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구상권 의무화
  - 피해 구제의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교통수단에서의 사전 안전 관리 강화
  - 시설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 시설 및 안전장비 등에 대하여 "특혜 없는" 국제적 안전기준 적용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시 관계기관 합동 및 관할구역 교차 점검 의무화 등 국가의 안전 감독 강화
  - 안전 관련 증명은 점검기관이 관계 행정당국에 직접 제출하게 함
  - 안전관련 필수 종사자의 정규직화 및 적정 임금 의무화
- 학생 안전, 부모 안심, 학교사고 대책 강화
  -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안전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 배치
  - 등하교길 안전 강화를 위해 '아이 맘 편한 엄마지킴이단' 구성, 운영 지원
  - 수학여행 등 학생 참여 행사를 학생이 선택하는 적정규모 체험학습 중심으로 운영
- 무분별하게 완화된 안전관리 규제 전면 재검토
- 신속한 구조체계 수립
  - 모든 사고 및 재난관리 신고센터 통합 추진
  - 재난발생시 골든타임내 현장 도착 및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전면개편
  - 사고 현장과 지휘부 등을 연결하는 부처 간 재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가들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확충

- 공공 및 민간의 국가 방재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재난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 재정비
-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의 발달 정도에 부합하는 장비 확충
- 소방·경찰·군 등 공공 부문 종사자의 사고 대비 비상인명구조 능력 강화

● 재난현장에서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 수립
- 세월호 생존자, 희생자 가족 등의 치유와 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 재난 현장에서 생존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마련
-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마련
- 희생자 장례절차 등에 대한 공통 매뉴얼 마련

● 해난사고 안전시스템 총 정비
- 해난사고대응체계 및 해양구조구난초동작전매뉴얼 제정 및 훈련 강화
- 해역별 민간합동해양구조단 설치·지원 및 민간구조요원 역량과 장비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해경에 '구조구난 즉시 대응팀(5분대기조)' 각 권역별 배치 추진
- 선박 안전운항시스템 총 정비

이행기간

●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국회에 구성될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국정조사위원회(가칭)"의 활동결과와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배정 추진

정책 2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만들기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신설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

현황과 문제점

- 환자 보호자가 직접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의료비 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요인으로 작용
- 사적 고용형태의 간병인들에 의한 환자 간병 체계 하에서는 위생상의 문제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더구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목표

-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별도로 신설하여 모든 입원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

이행방법

- 2014년 말까지 건강보험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켜 별도 보험을 신설하는 법적근거 마련
- 2015년까지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전국의 모든 공공의료기관으로, 2017년까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이행기간

- 2014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완료
- 2015년 말까지 모든 공공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재원조달방안 등

-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및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확대
- 별도의 보험료(간병보험료) 신설

정책 3

공공성 강화로 안심 보육 실현

신규아파트단지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신설하고, 학교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 주도의 안심 보육·교육 실현

현황과 문제점

- 안심보육 및 보육서비스 질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가 두드러지게 높음
- 2013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2,332개소로서 전체 어린이집의 5.33%에 불과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함
  - 이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평균 9.7개월을 대기하여야 하며, 일부지역에서는 출산 전에(태아시기) 신청하여도 4~5세가 되어야 입소가 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금년 4월기준 국·공립 유치원 시설이 부족하여 전체 시설 이용 원아중 21.5%만이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음

목표

- 중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전체의 30% 수준까지 확충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함

이행방법

- 국가 및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신설 규모 확대
-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해당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여줌으로써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유도
-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장기 임대하여 지자체가 운영하여, 실질적인 공립 어린이집·유치원화 추진
  - 보육 협동조합 및 보육전문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 초등학교병설 유치원 확대

이행기간

- 2015년부터 매년 1천개소 이상의 확대를 목표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 예산 지속적 확대

정책 4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출퇴근 시간 단축

추가부담없이 무한 환승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및 대중교통망 통합으로 교통비는 내리고 출퇴근시간 단축 추진

현황과 문제점

- 대한민국 3.26인 가정의 월 생활비 330만원 중 교통비가 30만8천원(13년)
  - 가계지출현황에 따르면 월 생활비중 교통비가 9.3%를 차지하며 식료/숙박비-33만7천원, 교육비-33만2천원에 이어 3위를 차지, 주거비(22만원), 의료비(16만원)보다 큰 부담
- 2013년 기준 버스업계에 1조3천억원 이상, 택시업계에 7천억원, 국철에 3,100억원, 도시철도에 2천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에 최소 2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천문학적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환승의 편의는 매우 제한적인 바, 관료-업체 중심의 교통정책결정에서 주민참여, 고객중심의 교통정책 전환 필요성

목표

- 교통비 절감, 교통편의 개선 및 교통안전 강화

이행방법

- 추가부담 없이 무한 환승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추가부담 없이 무제한 환승할 수 있는 정액제 패스카드를 월, 주, 일 단위로 발행
  - 연 1,000만 외국인관광객에게도 정액제 패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시티투어 편의제공
- 대중교통 월정액제 이용객에게 지하철 연계 주차장 무료이용
  - 월정액제 이용객의 경우 지하철, 버스주차장 연계 외곽 주차장의 무료이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비경감 및 불필요한 도심진입 예방

- 버스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시간대별 교통수요에 맞춰 교통수단을 최적 배분하여 출퇴근시간 대폭 단축
- 어린이 등 보행 취약계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

이행기간

-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예산확보 추진

정책 5

생활임금제 도입 및 상시적 업무 정규직 채용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추진

현황과 문제점

- 1시간을 일해도 "점심 한 끼" 해결 안되는 너무 낮은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수준은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서, 현재의 시급(5,210원)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게 현실임
  -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대비 35%로 하위권임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사실상 공약을 파기함
  -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정부(서울시 성북구・노원구) 및 지방의회(부천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시행으로 최저임금 견인하고 있음

    ※ '생활임금' : 노동자에게 적절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공공부문 및 참여민간기업의 임금을 책정, 지급함으로써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

-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으로 점철된 비정규직의 현실
  - (규모) 전체 임금노동자 1,824만명 중 837만명(임금노동자의 45.9%, '13.8월 기준)
  - (임금수준) 정규직대비 월평균임금 총액 49.7%, 시간당임금 52.8%
  - 사회보험 가입률 및 근로조건의 차별 정도(2013년 8월, 단위 : %)

구 분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 일제	서면 계약
정규직	96.8	98.8	83.8	99.3	96.6	71.7	89.3	83.5	65.1
비정규직	33.0	38.9	37.1	31.4	37.5	18.9	25.4	46.2	44.1

  - (고용안정성)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년수는 5.57년, 정규직은 8.24년, 비정규직은 2.41년에 불과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부문에서 2015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미온적 대처에 그침

- 박근혜정부는 「기간제법」에 따른 의무적 정규직 전환 대상자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없이 '무기한' 계약직 전환
- 그러나, 서울시・인천시・광주시・충남도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정부는, 소속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예산까지 절감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함

목표

-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서민들의 소득 신장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임금제도(공공+참여민간기업 최저임금) 도입・확대하고,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장+근로기준)을 확립하여 소득양극화 해소 추진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 하여, 민간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을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유도 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에 종사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전환을 우선하여, 전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
  -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 완화
  - 정규직 전환대상에 기간제 등 직접고용비정규직 뿐 아니라, 용역・파견・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환시 호봉제 등의 도입으로 임금・근로조건 개선
-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 원칙과 관행 확립
  -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법・제도 개선
  -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 무기계약직 전환 시 또는 전환 후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차별시정제도 개선 : 차별시정 신청 노동조합까지 확대 등
  - '임금대장신고제' 실시로 비정규직 차별 실질적 시정 장치 마련

이행방법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 단체장 생활임금제 도입·시행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역·기초의회 의원 생활임금 조례 추진
- 생활임금 근거 명시 –「최저임금법」개정
- 지방정부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기간제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비정규직관련법 개정

이행기간

- 2018년 임기 내 달성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며, 지방세제의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및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충당
- 구체적인 재원규모는 시행방법 및 적용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정책 6

효도하는 정당, 당당한 노후생활 실현 지원

어르신에 대한 건강지원과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인생 2모작 실현 지원

현황과 문제점

-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이자 오늘날의 풍족한 사회를 만들어낸 장본인임
  - 그러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독보적 1위인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경제·사회·문화·교육·건강 등 생활의 제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 노인공경이라는 표면적 문화와 달리, 어르신들은 사회생활은 물론 가족생활에서도 당당한 구성원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어르신들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나아가 한분 한분이 자립적 주체로서 노후생활을 당당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목표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어르신의 건강 지원 강화
-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강화

이행방법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어르신의 건강 지원 강화
  - 간병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보호자 간병 필요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추진
  - 어르신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중풍 환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강화
  - 일하는 65세 이상 어른신에게 고용보험 적용 추진
  -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참여수당 인상 추진

- 퇴직 고령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버고용안정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전담인력 확보

●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 경로당·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확대
- 경로당 등 시설에서의 아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지원
- 100세 시대 대비 노년기 인문교양교육, 은퇴자 취업교육 등을 담당할 제3세대 대학 설립 지원

● 장례시설물 및 용품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례비 부담 경감 추진

● 노인 복지 등을 전담하는 총괄 기구(가칭, 노인복지청) 신설 추진

이행기간

●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재원을 확대하여 투입

정책 7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EBS 영어교육전문채널 신설을 통한 영어사교육비 절감, 교복값 인하 및 대학입학금 폐지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교육투자는 낮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높음
  - 2013년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8%로 OECD 평균(5.4%)보다 0.6%p 낮고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보다 1.9%p 높게 나타남.
- 사교육비는 2013년 기준 총 18조 6천억원에 달하고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3만9천원으로 가계 경제에 큰 부담
- 2013년도 사교육비 총액중 영어사교육비는 6조 3,318억원(34%)이고 유치원생도 영어사교육을 받는 등 영어 사교육시장 성행
- 2013년도 전국 196개 대학의 입학금은 0원인 대학부터 100만원이 넘는 대학까지 천차만별이고 입학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상당수 대학들이 입학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
  - 사립대는 최고 103만100원에서 최저 15만원으로 약 7배 차이를 보였고 국공립대도 최고 40만원에서 최저 2만원으로 20배 차이

목표

- 초·중·고생 실용영어능력 up, 영어사교육비 down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3대 방안
  - 초중고생 맞춤형 실용영어 전용의 지상파 채널 EBS 13-2 신설
  - MMS 시험방송을 이용한 지상파 EBS 13-2 영어학습채널 신설
  - EBS 지상파 영어방송 채널을 신설하여 초중고생 위주의 실용 영어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기반 자기주도 영어 학습을 위해 EBSe 인터넷 사이트 품질 최고화
  -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 콘텐츠 제공, 자기주도 학습 관리시스템을 도입
  - 학습결과가 온라인과 문자로 학부모에게 자동 알림 서비스 제공
  - 언제 어디서든 영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웹과 앱 서비스 지원

- 향후 EBSe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으로 학교-가정 통합형 영어 학습 모델 개발 및 전면화 추진

● 중·고등학생 교복값 30% 인하를 위한 5대 대책 추진
- 국·공립·사립학교 '학교주관 구매 의무화'및 학교주관 구매가격 공시제 도입
- 교복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해 품질 좋고 저렴한 교복 공급
- 중·고교 저소득계층 신입생 자녀 약 10만명에게 교복값 지원
-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 지자체 교복은행 설립 등을 위한 조례 제정
- 학생 교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별 '교복 만족도 조사 및 품질 평가제' 도입, 정부 차원의 '교복불편사항신고창구'신설

● 대학 입학금 폐지
- 법적근거 없고 대학별 천차만별이며 입학금 외 용도로 사용되는 대학입학금 폐지
- 국·공립대학 입학금은 즉시 폐지, 사립대학 입학금은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이행방법

●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5년 예산부터 관련 사업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추진

이행기간

●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예산 활용

정책 8

전월세난 해소 및 세입자 보호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전월세난 해소 및 임대료 상한제 등 세입자 권리보호 강화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전세대란 이후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전월세 모두 연속 상승추세. 820만 가구가 남의 집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지만 정부는 무주택자 주거복지차원의 전월세대책이 아니라 부동산경기부양 차원의 주택시장 규제완화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점. 특히 자가→전세→월세로의 주거악순환구조를 기정사실화한 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

(자료 : 국토부 2012년 주택통계조사)

구 분		'06년도	'08년도	'10년도	'12년도
자가 점유율(%)		55.6	56.4	54.3	53.8
평균 거주기간(년)		7.66	7.71	7.87	8.60
최초 주택구입시까지의 이사 횟수(회)	전 국	-	-	3.9	3.4
	수도권	-	-	4.2	3.7
월세(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가구 (%)		18.95	18.25	21.43	21.6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총가구대비 미달가구 비율, %)		268만 (16.6%)	212만 (12.7%)	184만 (10.6%)	128만 (7.2%)
주택구입비/연소득(PIR)	전 국	4.2	4.3	4.3	5.1
	수도권	5.7	6.9	6.9	6.7
주택구입비/월소득(PIR)	전 국	18.7	17.5	19.2	19.8
	수도권	19.9	22.3	20.9	23.3
최초주택구입 소요년수(년)	전 국	8.1	8.3	8.5	8.0
	수도권	7.9	9.0	9.0	7.9
최초주택구입 가구주연령(세)		-	-	38.4	40.9
주택보유에 대한 의식		-	-	83.7	72.8

- 주거복지차원에서 박근혜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목돈 안 드는 전세〉는 1년간 실적이 거의 전무하여 폐기된 상태이고, 13년 「4·1부동산대책」 이후 14년 「3·5임대시장선진화대책」까지 6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월세난 해소나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목표

- 820만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들이 자가→전세→월세→주거취약계층으로의 악순환 구조가 아니라 무거취약계층→월세/전세→자가로의 주거선순환구조로 전환
- 부동산시장자율화(규제폐지)가 아니라 임대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① 투명한 임대 정보, 수요자중심의 임대물량 확보 ② 동등한 임대인-임차인관계 설정 ③ 공정한 임대차거래(계약)를 꾀함

이행방법

- 장기공공임대 공급목표 설정, 주거급여 실시 등 주거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전·월세난 해소
  - 공공임대 12만호 공급으로 장기공공임대 2017년 7% 수준 확보
  - 대형(263만호) 및 리모델링 아파트 세대분할(쪼개기) 허용
  - 임대용 노후주택 재·개축시 용적율 인센티브 제공 및 세금감면
  - 정부·광역자치단체간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공임대공급 조정, 확대
- 임대인-임차인 간 동등한 권리 보호
  - 임대료상한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인센티브 실시
  -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대출상환정보 확인권 부여로 깡통전세 예방 및 은행 등 채권자의 경매신청 시 임차인 통지 제도 의무화 추진
- 정부지원 전세보증금융상품 대상자 확대 등 전월세금융/보증제도 개선
- 전세보증금 반환지원을 위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전국 확산
- 주거급여 대상을 예산기준으로 선정된 97만가구가 아니라 최저주거수준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128만가구 전체로 확대
- 노숙/쉼터, 쪽방/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반지하, 옥탑방, 3인이상 단칸방 거주, 다세대동거가구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주거' 총량제 도입
- 공공기숙사 확대등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절감
  - LH가 시행중인 전세임대 주택수를 현행 신규3천호에서 신규1만호를 유지
  - 출신지 지자체와 거주지 지자체(학교)가 건축비와 부지를 공동 부담하는 공공기숙사 도입

이행기간

-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주거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예산확보 추진

정책 9

국민 세금 부담 완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향 등 세금부담 완화로 가계경제 살리기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 2000년 69%에 이르렀던 가계소득 비중이 2012년에는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중 17%에서 23%로 증가
  -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 추세가 여타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는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3위
-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법인세는 감세하였으나, 대기업들은 자산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세수만 줄어들고, 국가채무만 증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박근혜 정부는 대대적인 법인세 감면 등에 따른 세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파악이 수월하고 투명한 월급쟁이들의 지갑에서 세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세수 확충을 도모하고 있음
  - 월급쟁이인 중산층과 서민들은 소득이 별로 늘지도 않는데, 세금만 늘어나게 되었음
- 월급쟁이를 비롯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 경감과 실질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하여, 일부 소득공제를 상향하거나 세금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목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초유의 전세금 연속 인상 등으로 중산층・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공제율(50%)을 상향하여 가계부담을 경감할 필요

- 도서구입비 연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신설
  -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학생 참고서 포함)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신설
- 대출시 납부하는 인지세 폐지
  -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함
-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점을 연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점은 2000년 연매출 2,40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전혀 조정되고 있지 않음.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및 자영업자 증가 등을 감안하여 납무면제점 상향 조정 필요

이행방법

-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

이행기간

-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는, 2012. 12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도서구입비 세제감면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서구입비 세제지원으로 인하여 출판업계의 매출액이 증가해서 이로 인한 세수 확보로 충당 가능하여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 법인세 감세 철회 등을 통해 조달

정책 10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방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인프라 수준 향상으로 지방의 삶의 질 개선 및 국토의 균형 발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임
  - "국가는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헌법 제123조 제2항)
-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지역균형발전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여전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 불균형 발전이 지속되고 있음
- 우리의 지방자치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기반이 미약함
  - 지방재정분권이 매우 취약함
  -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으로의 기능분산도 미흡
  -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2로 국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9.6%('14년 예산기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이 취약
- 이제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도 함께 이루는 지역중심 구조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음

목표

-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토 균형발전 실현
  -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 기업, 공공지원기관 등이 연계된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대학입학과 취업에 있어 지역출신 할당제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질적 성장 도모

-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실현
  - 국가의 사무와 재정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권을 확대
  - 조례제정, 기구와 정원 조정 등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강화
  -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20%로 인상 추진
  - 지방세 비중 확대 및 지방세원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
- 지방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인프라 수준 향상으로 지방의 삶의 질 개선
  - 지방대학 육성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연구기능과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생활권별로 24시간 전문의 진료와 2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의료센터 구축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
-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대규모 국책사업 계획과 집행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 남부권 8개 광역단체가 참가하는 「경제개발연합협의체」 구성하여 '남부광역경제권' 발전에 공동 대응
  -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한 '동남권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
  - KTX 호남선의 차질없는 개통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
  - 수도권 전철 1호선 도심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이행방법

- 관련 법률 제·개정
- 2015년 예산부터 관련 사업 예산 반영 추진

이행기간

-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제·개정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완료된 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예산 확대하고, 예타 등 사전절차 미완료 사업의 경우 조속히 예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추진

재원조달방안

- 중앙-지방간 적절한 재원 분담 원칙 확립
- 지출구조조정 및 재원배분 조정으로 관련 예산 확보
-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예산 반영

‘생활자공약’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1. 소요재원 규모 : 연평균 6.8조원, 4년간('15년~'18년) 27.1조원

❑ 새정치민주연합의 ‘생활자공약’ 실행을 위한 총 추가소요재원은 연평균 약 6.8조원이며, 4년간('15년~'18년) 총 27.1조임

① 국비 및 지방비 부담 : 연평균 3.8조원, 4년간 총 15.2조원

② 고용보험, 간병보험 등 보험 부담 : 연평균 3.0조원, 4년간 총 12.0조원

2. 재원조달방안

① 지출우선순위 조정 및 재정지출 절감

- ‘안전’과 ‘민생’에 우선 투자
-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부 출연·출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부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 등 재정지출 절감

② 법인세 과세 정상화 : 연평균 5.1조원 추가세수 확보

- 현행 : 과표 ‘2~200억원’ 구간에 세율 20% 적용, ‘2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2% 적용

  (➡)개편안 : 과표 ‘2~500억’ 구간에 대해 세율 22% 적용, ‘5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

- 세수효과: 연평균 5.1조원 추가세수 확보

  * 법인세 과세만 정상화해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방공약이행을 위한 국고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

③ 간병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수입 확대

- 생활자를 위한 핵심공약인 ‘보호자 필요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위해 2017년부터 간병보험제도를 도입

  * 간병보험제도 시행시 연간 소요액은 연간 약 3조877억원으로 추계되며, 부담비율은 국고 20%, 자부담 20%, 건강보험 60%임

- 간병보험제도 시행시 건강보험가입자(2,955만명) 1인당 추가보험부담료는 매월 5,220원으로 추계됨.

새정치민주연합

시·도별 5대 핵심공약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1. 심야전용버스 확충으로 심야시간대 교통 편의성 확립
2.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3. 도심특화산업 활성화
4. 석면가루 안 날리는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 지하철
5. 보행친화·자연친화 서울 조성

인천광역시

1.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 도약의 계기로 활용
2. 주거비·보육비 걱정 없는 '누구나 집' 5만호 공급
3. 인천 제2의료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기반 확대
4. 모든 버스·버스정류장·지하철에 무상와이파이 구축
5.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벨트 구축

경기도

1.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道) 설치
2.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 교통 시스템 구축
3. 한강·임진강·예성강 하구 평화협력지대 조성
4. 경기남부 융복합 산업기술단지(Techno-Valley) 조성
5. 안산의 힐링도시 지정 및 대규모 재난 대응 치유센터 설치

강원도

1. 강원도를 남북경제 협력의 전초기지로 조성
2.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적극 지원
3. 강원도를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로 조성
4. 강원도의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확충
5. 영서·영동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대전광역시

1.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
2. 구 도청부지의 적극적 활용으로 원도심 활성화
3. 충청권 광역 철도망 조기착공으로 대전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4. 대전지방의료원 설립으로 취약지역 의료안전망 구축
5. 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외곽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1.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2.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 인구 10만 조치원 건설
3. 세종시표 복지모델 정착
4. 세종시표 로컬푸드 완성 및 세종 농업브랜드 육성
5. 세종시를 광역과 기초를 겸한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로 육성

충청북도

1.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 지원
2.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3.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정상적 추진
4. BIT(생명과학과 정보통신)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는 충북
5. 충청권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

충청남도

1. 3농혁신 지속 추진으로 농어민·농어업·농어촌 발전 도모
2. 생태복원과 해양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해양건도 충남」 구현
3. 백제역사문화, 충청유교문화 종합개발
4. 한중 교류 전진기지 구축을 통해 환황해권 시대 주도
5. 서해안 유류피해지역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부산광역시

1. 해양특화산업 집중 육성
2. 지지부진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해결
3.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및 도심철도 이전 추진
4. 수산업 부흥 지원
5. 낙동강 하구역 생태 복원

대구광역시

1.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
2. 대구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물 제공
3. 대구시를 첨단공구산업의 메카로 조성
4. 대구를 중소기업 중심도시로 육성
5. 명품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대구 만들기

울산광역시

1. 산업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2. 대곡천 일대 인류문화유산지구 조성 및 도시의 역사성 복원
3. 대형 복합기능의 공공도서관을 울산의 랜드마크로 조성
4. 신성장 역점산업으로 노후원전 폐로화 사업 기반 조성
5. '국립 산재모(母)병원' 설립 위치 이전 및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

경상북도

1. '뿌리산업'을 경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 '3대 문화권'별 특성화 사업 지원
3.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4. 울릉도의 관광 인프라 확충
5. 첨단과학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경상남도

1. 국제기능올림픽 유치로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도약
2.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항공산업 집중 육성
3. 경남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4. 도시인이 탐내는 귀농 모범지역 경남 육성
5. 김해 의료기기산업단지 육성

광주광역시

1.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 명예훼손 방지법」 마련
2.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2015년 성공적인 개관 지원
3.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지 육성
4. 광주 상품거래소 설립 추진
5. 2015광주하계U대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전라북도

1. 농생명 융복합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2.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협력 허브로 육성
3. 전통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4. 지리산·덕유산·내장산권 힐링 거점 조성
5. 전북을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조성

전라남도

1. 수산양식혁명(Blue Revolution)을 위한 기반 구축
2. 항공기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구축
3. 여수박람회 및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효율적 사후 활용
4.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5. 혁신도시 연계 융·복합 산업밸리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공항 인프라 시설 확충
2. 환경친화적 에너지 산업 육성
3. 강정 해군기지 갈등 해소 및 '평화의 섬, 제주' 조성
4. '제주도의 문화'를 살린 문화창조산업화 전략 추진
5.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섬 제주' 만들기

서울특별시

공약 1 심야전용버스 확충으로 심야시간대 교통 편의성 확립

현황과 문제점

- 심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교통수요가 매우 많지만,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늦은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고, 택시는 적어서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음
-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13년 4월 2개노선 12대 시범운행 후, 13년 9월 9개노선 44대 확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음

목표

-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심야전용버스 확충

이행방법

- 주요 노선별 심야전용버스 확충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적으로 확충

재원조달방안 등

- 시 자체예산 활용

공약 2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황과 문제점

- 한양도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 소홀과 홍보부족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음
  - 15.9월 이코모스(ICOMOS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실사 예정
  - 한양도성 보존 · 관리 · 활용 마스터 플랜 마련('12.8~13.10월)

목표

-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함으로써 서울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

이행방법

- 한양도성 탐방로 및 한양도성 수목 등 정비
-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보존 · 관리 ·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보존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기준 수립
- 단절된 성곽구간 연결
-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추진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적으로 등재 추진 및 관리 강화

재원조달방안 등

- 시 · 구비

공약 3 도심특화산업 활성화

현황과 문제점

- 서울에는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도심산업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심특화산업이 발전하는데 한계
- 산업 및 특정개발 활성화 계획 수립('12.8)
  - 지역산업공동체 중심 개발진흥지구 운영
  - 실질적 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시행
  -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체계 마련
  -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세금감면, 자금융자, 앵커시설 조성 지원

목표

- 서울의 주요 지역별 특화산업을 활성화시켜 서울의 경제 활성화 도모

이행방법

- 종로 주얼리센터 건립
- 동대문 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 및 구두테마역 조성
- 강북봉제지원센터를 통한 봉제산업 육성 등

이행기간

- 임기중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시 예산

공약 4 석면가루 안 날리는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 지하철

현황과 문제점

- 고장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필요
-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서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목표

- 사고 및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
- 노후화된 시설 교체로 인해 사고와 위험발생의 불확실성 방지

이행방법

- 4개 노선 우선 교체(1~4호선) 후 낙후된 노선 및 구간별 시설보강
- 석면사용 지하역사 석면뿜칠 제거

이행기간

- 임기중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시예산 및 국비지원예산 확보

공약 5 보행친화 · 자연친화 서울 조성

현황과 문제점

- 서울이 보행자들이 다니기에 매우 불편한 도시로 변하고 있고, 수해 등의 도심재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자동차에 밀려난 가로를 보행자에 환원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보행여건 개선 필요

목표

- 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거리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행을 유도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차량 운행을 감축하여 대기환경질 개선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정보제공망 확충

이행방법

- 보행전용거리 확대, 보행친화구역 조성,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시행 등 쾌적한 거리 조성
-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신호체계 개선, 도심권 횡단보도 전면적 설치등 안전한 거리 조성
- 보행친화도시 서울 걷기대회 개최, 도심보행길(프롬나드) 조성 등 이야기 있는 거리 조성
- 국지적인 정밀 강수 예측을 위한 도시의 기상측정망 확충, 도심지역 수해대비를 위한 하수관망 개량 및 수방시설 등 확충,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 등
- 도시농업사업 활성화

이행기간

- 임기중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예산

인천광역시

공약 1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 도약의 계기로 활용

현황과 문제점

- 불합리한 SOC사업의 조정, 정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었음
-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시의 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라는 시민적 여론이 증대되고 있어 인천시·조직위의 현명한 대회 운영이 필요한 시점임
- 대회 수익성을 극대화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회 시설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익시설과 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가 요구됨

목표

- 40억 아시아인이 하나 되는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도약의 계기로 활용

이행방법

- 국내외 대기업 후원 유치와 IT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마케팅, 후원 강화를 통해 흑자대회 달성
-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시민들의 문화체육복합시설로 활용
  - 아울렛·영화관 등 민간수익형 시설유치로 사후 관리비용을 절감, 어린이 복지시설·주민센터를 설치해 주민 편의 증대
  - 대회 종료 후 경기장 시설을 주민의 문화체육복합 시설로 추진하여 모든 시민의 스포츠 배움의 장이자 문화·여가의 중심으로 활용
  - 대회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남북화합 유도
  -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가 유도 및 남북 공동입장, 공동응원 추진을 통해 남북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서해 5도의 긴장을 완화

소요예산 및 이행기간

-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및 흑자대회 실현
  - 2014년 / 기존 반영된 예산(4,823억원) 활용
- 경기장 시민의 문화체육시설로 활용
  - 2014년~ (계속사업) / 기존 시설에 민자시설 유치로 추가예산 소요 없음
- 남북화합의 대회 실현
  - 2014년/ 추가예산 소요 없음

공약 2 주거비 · 보육비 걱정 없는 '누구나 집' 5만호 공급

현황과 문제점

-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에도 불구, 공급 · 매매 위주의 정책기조가 변하지 않고 있어 수도권 중산층 ·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12월 현재 수도권 전세주택가격 64주 연속 상승
- 빚 권하는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하우스푸어가 양산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음
- 중산층 ·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
  - 신도시 개발 위주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낙후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정책이 필요함

목표

- 중산층 · 서민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드림

이행방법

- 주거비 · 보육비 걱정 없는 '누구나 집' 5만호 공급
  - 시중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최소 10년 이상 거주 가능

- 보증금의 90%까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저리로 누구나 대출가능
- 국공립어린이집과 단지 내 무상 와이파이 설치로 보육비·통신비 절감

● 민간참여를 통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공공재정 투입 경감
-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임대주택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가 분양 물량의 일부를 매입하여 장기 임대 사업을 영위

● 임대주택단지 내 시설을 활용하여 대형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이행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등

● 2014년~2020년 / 총 건설비용 10조원 예상, 도시공사 지분 9%(9천억), 도시공사와 민간이 투자한 리츠사의 민간수익사업으로 시 예산 소요 없음
- 2014년 : 도화지구 시범사업(506호) 분양
- 2014년~2015년 : 5만호 공급 용역 실시 및 추가부지 선정, 민간 투자자 모집 및 리츠사 설립
- 2015년~2020년 : 공사 착공 및 분양

공약 3 인천 제2의료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기반 확대

현황과 문제점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공건강보험 체계와는 별개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반쪽짜리 의료 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

● 부족한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인천 서부 권역에 그치고 있는 인천 의료원의 서비스 범위를 동부권역까지 확장해 공공의료 기반을 넓히고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목표

● 인천 제2의료원을 설립해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 기반 강화

이행방법

- 인천 동부 권역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제2의료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
- 향후 공공의료 트러스트 구축으로 제3, 제4 의료원 설립을 유도해 시민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이행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등

- 2014년~2018년 / 총사업비 약 1,200억원
  - 2014년~2015년 :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시행
  - 2015년~2018년 : 부지확보(15년), 공사착공(16년) 및 준공(18년)

공약 4 모든 버스 · 버스정류장 · 지하철에 무상와이파이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은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녹색기후기금 유치,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신도시 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인천의 승용차 분담률은 44.8%로 대중교통 분담률(40.6%) 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이는 대중교통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기인함
- 인천 시민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 부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데이터요금 비용 절감 혜택을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의 매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목표

- 인천시내 버스・지하철・정류장 등 모든 대중교통망에 무상 와이파이를 설치해 통신비 절감 및 교통복지 증진

이행방법

- 3단계로 무상 와이파이 설치(총 8000개 설치)
  - ① (단기)모든 대중교통 및 시설 → ②(중기)공공시설 및 인구밀집 지역 → ③(장기)일반 주거지역까지 확대해 U-CITY 기반을 구축

-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상 와이파이 설치를 통해 통신비 절감이라는 매력 요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향후 공공정보 제공・긴급통신망으로 활용하는 등 U-CITY 기반으로 활용

이행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등

- 2015년~2016년 /총 30억원 소요
  - 15년~16년 : 모든 대중교통시설에 AP 설치 및 무상 와이파이서비스 제공

공약 5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벨트 구축

현황과 문제점

- 인천-개성-해주 삼각벨트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선도필요
  - 홍콩이 광동의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고 심천에 제조업 이전을 통해 지속적 경쟁력을 확보했듯이, 개성・해주와 연계를 통해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인력,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과 대륙을 잇는 동북아의 국제・물류 기지화
- 통일 한반도를 대비하여 접경지역인 영종-강화의 인프라 확대필요
  - 통일 한반도를 대비하여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이용한 'Air & Sea 허브' 구축으로 물류체계를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영종-강화 도로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

목표

-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 추진해 한반도 평화경제벨트 구축

이행방법

-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가칭)서해통일고속도로 건설 추진
  - 영종~강화간 1단계사업 우선 추진
  - 통행료 절감을 위해 영종~강화 구간은 국도로 추진한 뒤 향후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하고, 강화~개성~해주 구간은 고속도로로 추진

- 인천(동북아물류허브)~서울(동북아금융허브)~개성・해주(배후생산기지)가 포함된 「3각 경제축」인 메가시티를 형성해 통일한반도를 동북아의 국제・물류 기지화

이행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등

- 2014년 ~ 2020년 1단계 사업 완료 추진
  - 14년~15년 연구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 16년~20년 착공 및 준공
- 2, 3단계 사업은 국가 상위계획 반영 후 기간 조정하여 추진

경기도

공약 1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道) 설치

현황과 문제점

-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경기도 총면적의 42%,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경기도 전체의 11.6%, GRDP 비중은 19%, 고속도로는 14% 수준에 불과
- 경기도내 남부와 북부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조성할 필요성 대두
-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분도가 아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는 '특별도' 설치가 바람직

목표

-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조성

이행방법

- 경기북부 10개 시군 일원으로 하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내국인 면세품 판매장(DMZ면세점)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 도모
  -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DMZ면세점 매출액의 일부를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 설치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 특별도 설치 공론화 및 방안 마련
- 2015년 : 관련법 개정

재원조달방안

- DMZ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

공약 2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 교통 시스템 구축

현황과 문제점

-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하루 12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하루 1시간 이상 통근(왕복 2~3시간)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
- 최근 경기도내 권역간 장거리 통행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도내 도시간 광역교통시스템 미비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내 지역간 이동 및 출·퇴근에 많은 시간 소요되고 있음

목표

-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교통복지 향상

이행방법

- 버스운영체계 개선
-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노선과 운행횟수 대폭 확대
- 도내 거점 도시간 유기적인 대중교통 연결망 구축
-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기광역순환버스 조기 시행
- 도내 도시간 연결 광역 전철 노선 확대
- 광역 전철역에 환승센터와 주차장 시설 확충
- 구도심지역, 일반주거지역(다세대주택지역), 상업지역, 산업단지 등에 공영주차장 확대와 야간주차장 조성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 경기도-서울-인천 등 수도권 광역시도간 협의 완료
- 2015년 상반기 : 관련 법령 개정 완료

재원조달 방안

- 비예산 사업(주로 제도개선 사업)
- 광역전철 노선 확대 :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 국비예산 차질없는 확보

공약 3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하구 평화협력지대 조성

현황과 문제점

- 지난 '10 · 4남북공동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및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발표
-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 일대는 판문점과 오두산 전망대와 같은 역사자원이 많고, 환경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공간임
- 동 지역에 평화협력지대를 조성하여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조성하고 경기북부의 경제활력 도모

목표

-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

이행방법

-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하구 남북 공동개발 추진
- 강화도, 예성강 하구와 개풍군 일대 등 육상관광과 연계한 '한반도해양평화공원' 조성 추진
  - 서해 지역의 갯벌 및 하구습지의 풍부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체험생태공원 조성
  - 한강 · 임진강 하구의 남북한 공동 홍수 방제시스템 개발 구축
- 육상 · 해상 수송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금융)-경기(물류)-개성(제조업)'을 연계시킨 발전 전략 수립

이행기간

- 남북관계와 연계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

재원조달 방안

- 남북협력기금 활용

공약 4 경기남부 융복합 산업기술단지(Techno-Valley) 조성

현황과 문제점

- 경기도는 IT, BT, NT 등 지식기반산업의 중심
  - 지식기반 제조업중 경기도 비중(생산액 기준)은 반도체(70%), 메카트로닉스(43%), 생물(62%), 정밀화학(34%), 정밀기기(33%) 등으로 경기도는 이미 다양한 지식기반산업이 발전되어 있음
- 특히 경기남부는 지식기반산업 연구시설 및 기업들이 집적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융합기술연구원'을 비롯 '경기바이오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이 입지한 광교테크노밸리는 융합기술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
  - 또한 경기 남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IT산업 최고 집적지로 IT기반의 기술·산업간 융복합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목표

- 경기남부 융복합산업 기술단지 조성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 향상

이행방법

- 광교테크노벨리를 중심으로 경기남부 일대를 연구개발특구 및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 추진
  - 산업단지내로 한정된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에 광교테크노벨리가 포함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
  - 과학연구단지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비 지원 유도
- 지역내 기업들과 글로벌 협력시스템 구축
- 지역내 대학-연구소-기업-공공지원기관 등을 연계하여 IT, NT, 반도체 첨단 클러스터와 바이오·신약·인공장기 등 생명공학 클러스터 조성

이행기간

- 2014년도 : 연구개발특구 지정 완료

재원조달방안

- 비예산사업

공약 5 안산의 힐링도시 지정 및 대규모 재난 대응 치유센터 설치

현황과 문제점

- '세월호' 참사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안산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목표

- 세월호 희생자·유가족 및 안산시민의 조속한 정신적 치유와 사회복귀 지원

이행방법

- 안산을 "힐링도시"로 지정하여, 세월호 참사에서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신건강치유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 및 유가족의 조속한 회복 지원
-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생환자 등에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통해 사회 복귀 지원

이행기간

- 2014년도 내 추진 완료

재원조달 방안

- 2014년도 사업은 국비예산(예비비) 활용
- 국비, 도·시비 확보

강원도

공약 1 강원도를 남북경제 협력의 전초기지로 조성

현황과 문제점

- 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 남북 평화통일 기반 마련과 경제협력 모델지역으로 적당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음.
- 평화 기반조성사업을 바탕으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자원 등을 활용한 남북 지역 경제협력 통합시범모델 구축 필요함.

목표

- 남북한 평화 경제모델 구축

이행방법

-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동해안권 경제활성화 도모
  - 남한의 설악권(고성~속초~양양)과 북한의 금강산지구 연계 개발
  - 남북 통합의 관광경제권 기반 조성
-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한반도 평화와 신뢰조성에 중점을 둔 평화 프로젝트로 추진
- 철원평화산업단지 시범단지 조성 추진
  - 철원 등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및 남북통일과 상생발전 기여

이행기간

-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반영

공약 2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적극 지원

현황과 문제점

- 국가 위상제고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개최도시의 지속적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함
- 평창동계올림픽은 온 국민의 성원으로 유치에 성공하였으나 도세가 열악한 강원도의 힘만으로 개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2.5% 수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이 필요

목표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로 조성

이행방법

-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지원
-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조기 착공으로 올림픽 개최 기반 구축 마련
- 국립 평창 동계선수촌 조성
-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추진

이행기간

-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공약 3 강원도를 동북아 관광 · 휴양 중심지로 조성

현황과 문제점

- 강원도는 설악산 · 금강산 · 오대산 · 치악산 등 명산들이 주로 위치해 있고, 우리 민족의 젖줄인 북한강과 동해안 일대의 넓은 백사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
- 웰빙(Well-Being) 열풍으로 강원도의 관광자원이 새롭게 부각되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 관광 · 휴양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음.

목표

- 강원도를 동북아 관광 · 휴양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행방법

- 동계 휴양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 동계휴양지 메카로 육성
-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격 개발
- 폐광지역 4개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관광자원화사업 확대 추진
- 속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개발

이행기간

-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반영

공약 4 강원도의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현황과 문제점

- 동북아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열어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기반 구축
-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교통·SOC 등 물류 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및 지원 필요

목표

- 수도권 근접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원도내 균형개발 촉진

이행방법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
- 여주~원주간 철도,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
-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조기 완공
- 노선확대 및 다변화를 통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한 북방항로, 유라시아를 향한 항만·항로 개발

이행기간

-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반영

공약 5 영서 · 영동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현황과 문제점

- 환동해 경제권의 부상으로 인한 동해안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 증대
- 낙후한 폐광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에 대한 경제자립형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

목표

- 영동 · 영서 지역균형 발전

이행방법

- 원주 첨단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
-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자본유치 기반 마련
- 동해안 비철금속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 탄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행기간

- 임기 내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반영

대전광역시

공약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

현황과 문제점

- 기초과학기능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산학연교육, 과학기술문화와 연계하는 융합전략이 요구
- 정부 출연(연)간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과 각 분야별 핵심기능을 '융합'하는 기술분야간/기능간 연계가 절실
-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산업, 교육, 문화를 종합적으로 융합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내실화를 도모

목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과학기술, 산업, 교육, 문화를 융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적인 기초과학 거점으로 육성

이행방법

- 우수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연구개발 프로그램 대폭 확대
  - 정부출연(연)간 핵심융합기술개발 투자 대폭 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 확대
  - 출연(연)간 연계를 통한 차세대 대표적인 융합기술개발 과제 추진
  - 출연(연)의 對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기능 의무화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대덕 특구 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오송·오창, 세종, 대덕특구)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결
-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 지원 위한 대학의 산학연교육 대폭 확대
  - 대학의 산학연협력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예산 대폭 확대
  - 각 연구원 인력과 대학·산업체 인력 교류 대폭 강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과학체험마을 기능 및 역할 부여
  -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선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체험 기능 및 역할 대폭 확대

이행기간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예산 차질 없는 확보

공약 2 구 도청부지의 적극적 활용으로 원도심 활성화

현황과 문제점

-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구 충남도청 지역의 공동화 및 당해 지역경제 침체 우려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자치단체가 수천억 원 소요되는 활용계획 추진이 곤란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 도청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상시적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이 요구

목표

- 도청이전 부지의 효과적 활용으로 대전시 중구 원도심의 침체를 막고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

이행방법

-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추진
  - 박물관 또는 전시관, 시민대학이외에도 창작센터, 대중문화예술 및 K-pop 관련 산업 및 교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로 구성된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추진
- 이전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도청이전특별법」개정

이행기간

- 2014년 : 도청이전부지 활용계획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및 국비 예산 확보

공약 3 충청권 광역 철도망 조기착공으로 대전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4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에 따라 충청권 철도망 조기 착공 요구 가시화
  - 호남선 KTX 전용선로 개설에 따라 논산~청주공항(106.9km)의 기존 국철을 활용하는 충청권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충청권 교통난 해소와 세종시와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청권 철도망의 조기 구축 필요

목표

- 충청권내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대전과 충청권 상생발전 도모

이행방법

- 논산 ~ 대전 ~ 세종 ~ 조치원 ~ 청주공항(106.9km)을 경유하는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
- 광역철도망에 대전지역 구간을 통과하는 도심철도의 기능을 부여하여 대전지역 교통여건 개선
-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2019년 개통되도록 추진
  - 2011. 4.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통해 후반기(2016년~2020년) 착수사업으로 반영된 충청권 광역 철도망 사업의 조기착수

이행기간

- 2015년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 2016년 이후 :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단계적(예비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착공) 추진

재원조달 방안

- 국비, 시비, 민간투자 활용

공약 4 대전지방의료원 설립으로 취약지역 의료안전망 구축

현황과 문제점

- 대전은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같은 광역지자체의 보건시책을 담당할 공립종합병원이 부재
- 구도심인 동쪽과 신도심인 서쪽의 건강불평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저소득 계층 비율이 높은 동쪽은 종합병원 접근성이 낮은 실정

목표

- 대전시의 구도심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여 지역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의 형평성을 도모

이행방법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전지방의료원을 설립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서 지역의 의료취약지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구축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의료 목적의 보건의료 운영에 대해 국비 지원 추진

이행기간

- 2015년: 설립계획 확정
- 2016년~2018년: 설립공사 및 완공

재원조달방안

- 시비활용
- 국비지원 예산 확보

공약 5 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외곽 이전

현황과 문제점

- 대덕구 한국마사회 대전지사가 사옥을 리모델링해 발매장 면적을 현 1만 927㎡에서 2만 4870㎡로 늘리는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을 발표
- 1997년 장외발매장이 들어선 후 지역주민들의 주거·교육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 이를 외면하고 장외발매소를 확장하려는 마사회에 대해 장외발매소 확장 계획 철회와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지역주민의 요구 비등

목표

-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이행방법

- 서구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확장 저지
-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내에는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장외발매소의 외곽 이전 및 축소

이행기간

- 2014년 :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재원조달방안

- 비예산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공약 1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현황과 문제점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도 미흡한 실정임
- 세종시는 21세기에 건설되는 최대의 신도시로 환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 환경, 주거, 교육, 의료, 교통, 문화를 갖춘 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이며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함.

목표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자족기능 확충

- 국회, 청와대 등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 행정중심의 남부권과 경제중심의 북부권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 모색
- 세종시 원도심인 조치원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구상 수립・시행

이행 방법

-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보
  - 국회 분원 설치
  -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 국제 프레스센터 설치
- 안전행정부 세종시 이전 추진
  - 의전 등 대통령 관련 업무는 서울 잔류
- 자족기능 확충
  - 세종시・행복청 합동『통합 투자유치기획단』운영
  -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기 착공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 추진
  - 대학, 종합병원 등 조기 건립을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

-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학 공동 참여로 세종시 미래비전 제시 및 권역별 발전방안 마련

이행기간

- 2014년 : 『세종시 발전 100인위원회』 구성
- 2015년 :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등 자족기능 확충방안 확정
- 2016년-2017년 : 안전행정부 등 유관부처 이전 완료
- 2018년 : 과학비즈니스 기능지구(국가산단) 운영 본격화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시비 예산 확보

공약 2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 인구 10만 조치원 건설

현황과 문제점

-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등 조치원읍에 있는 지방 공공기관들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세종시의 생활 근거지인 조치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10만의 활력있는 도시로 육성

목표

- 2025년까지 세종시 경제중심축이 될 인구 10만 조치원 완성

이행 방법

- 조치원 도심을 11개권역으로 분류, 순환형 공영개발 추진
  - 도심재생권(7개권역)과 신시가지(4개권역)을 3개년 단위로 개발
  -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시가지에 먼저 건립하고 재개발 지구별로 순차 개발
- 조치원 동서횡단도로 확장, 국도1호선 확장 등 교통망 확충

- 현 시청부지 개발, 제2시청사를 겸한 중앙행정타운 조성
- 서창천과 조천 수변공간 정비, 조치원 생태중심으로 육성
-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할『조치원 발전 100인 위원회』구성

이행기간 : 조치원 도심 개발

- 1년 내 지구 지정, 2년내 기본계획 확정, 임기내 선도지구 완공

재원조달방안 : 민자 유치, 국비+시비

-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 교통망 확충 : 국비+시비
- 제2청사(중앙행정타운) : 시비(토지 제공)+민자(건축비)

공약 3 세종시표 복지모델 정착

현황과 문제점

- 광역과 기초를 겸한 새로운 지자체 모델인 세종시에 적합한 복지사업 모델 개발

목표

-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사회적 책임 공식화

이행 방법

-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의 최저 기준선(minimum standards)과 적정 기준선(decent standards) 마련
- 읍면 단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세종형 마을복지센터 운영
  - 읍면 단위 생활권에 건립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강관리, 보육, 교육과 문화체육 활동이 어우러지는 세종 복지기준의 상징으로 육성
- 세종시 거주 청소년(만16~18세)에게 대중교통, 문구류 구입, 각종 공연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교통카드 발급

- 세종시립의원을 치매, 중풍 등 노인 중증질환 전문병원으로 전면 개편. 보건소·민간 요양병원의 후견기관으로 육성

이행기간

- 2014년 : 세종형 복지모델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 2015년 : 시민 대토론회 개최, 세종형 복지기준(안) 확정
- 2016년 :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 2017년-2018년 : 세종형 복지기준 운영

재원조달방안

- 국비 + 시비
-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추가분 시비로 충당

공약 4 세종시표 로컬푸드 완성 및 세종 농업브랜드 육성

현황과 문제점

- 세종시는 대전, 충남, 충북과 인접한 충청의 상징적 위치와 위상을 고려하면 충청권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임
- 세종시 인근 자치단체간 상생발전 모색 필요, 특히 도농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 필요

목표

- 도·농이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건설

이행 방법

- 세종시표 로컬푸드 완성
  - 로컬푸드에 기반한『세종시 식품계획 2030』수립하여 농가경제 활성화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직매장, 농민가공센터 설치
- 로컬푸드 참여농가 소득 보장(임기중 3천가구의소농・고령농・영세농 지원)

●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확대
- 친환경농업지구 지정 확대 및 지원 : 1개소 ⇨ 5개소
- 퇴・액비의 친환경 자원화 등 자연순환농업 확대 추진

● 세종 농업브랜드 육성 : 세종 농업의 6차산업화 본격 추진
- 세종시 농산품과 주말농장, 영농체험, 농가민박, 귀농・귀촌 교육 등을 통합한 브랜드를 개발, 세종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
- 생협, 협동조합 등 농업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세종농업 영 리더 육성

● 농업 부시장(명예직) 임명

● 『세종형 3농(근교・관광・식품연계농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이행기간

● 2014년 : 세종형 3농 추진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실시

● 2015년 : 시민 대토론회 개최, 세종시 농업기본계획 확정

● 2016년 : 중점 분야별 시범사업 실시 및 보완

● 2017년-2018년 : 세종형 3농 활성화 정책 운영

재원조달방안

● 국비 + 시비 + 자부담

공약 5 세종시를 광역과 기초를 겸한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로 육성

현황과 문제점

-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는 광역업무와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례가 없는 자치단체로 출범하였으나, 자치권도 크게 미약하고, 재정수입은 재정지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조임

목표

- 세종시를 광역과 기초를 겸한 지방행정체제의 모델로서 성공 사례로 만들고, 지방행정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

이행방법

- 세종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 국가 행정의 중추기능을 해야 할 자치단체로서 재정의 조속한 안정이 필요하며 그에 부합하는 국가 재정 투입 추진
- 세종시 특별법 개정 추진
  - 실질적인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및 자치 재정권 부여
  - 광역과 지방을 겸한 단층 구조의 극복방안으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 세종특별시 권역내의 지역간 균형발전

이행기간

- 2015년 : 관련법 개정 및 제도 완비

재원조달방안

- 국비

충청북도

공약 1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 지원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통합 청주시 출범
- 통합청주시는 인구 82만의 전국 7위의 도시로 발족하였음에도 통합청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밑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목표

-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청주시를 출범하게 된 동력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 내겠음
- 충북이 세종시, 대전시와 더불어 신수도권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토대를 구축

이행방법

- 청주시 통합청사 건립 사업을 적극 지원
- 청주시·청원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
- 통합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 감소

이행기간

- 2014년 ~ 2018년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도비

공약 2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현황과 문제점

- 충북내륙고속화도로 부재로 인해 산업 발전 및 도민 화합 지체

목표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오송·오창단지 및 충주·원주 기업도시, 증평산업 단지 등 중부내륙과학첨단벨트 조성에 기여
- 청주를 중심으로 남부, 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함으로써 충북 도정의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의 달성
- 도민의 화합과 동질성을 유지하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이행방법

- 충북 영동에서 제천과 단양을 잇는 내륙고속화도로 건설
  -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청주~음성~충주~제천·단양)
  -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초정~미원~보은~영동)

이행기간

- 임기내(2014년 ~ 2018년) 완공 추진

재원조달 방안

- 국비

공약 3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정상적 추진

현황과 문제점

- 민선5기 충북도는 과학벨트의 차질 없는 조성 및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관련사업 집중·특화 육성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 정부의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 안에 산업단지 조성근거 명시

목표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세계적 기초과학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

이행방법

- 기능지구 내 사이언스 비즈니스플라자 건설
-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 과학벨트에 필요한 장비개발 및 인력 지원

이행기간

- 2014년 ~ 2018년

재원조달 방안

- 국비

공약 4 BIT(생명과학과 정보통신)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는 충북

현황과 문제점

- 오송 지역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의 보건 관련 국책기관이 이전되면서 보건의료 행정타운이 형성
-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인접해 있는 오창정보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바이오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

목표

- 바이오산업 전략지역 오송과 오창과학단지를 적극 지원하여 충북을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육성
- 세종시와 대전 대덕과 연계된 'BIT(생명과학과정보통신) 산업 경제권'을 만들어 수도권 못지않은 '자립적 경제권'을 형성
- 생명 정보와 전자산업이 융합된 BIT산업의 중심 경제권으로 육성

이행방법

- 오송첨단복합단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확충하여, 산·학·연·관 클러스터가 구축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확충
- B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행기간

- 2014년 ~ 2018년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도비

공약 5 충청권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

현황과 문제점

- 충북지역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어려움 상존

목표

- 친환경 철도 노선의 신규 개설과 철로의 확장을 통해 철도친화도 충북 건설
-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및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
- 충북 균형발전의 토대로 '함께하는 충북' 실현

이행방법

-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사업 차질없는 추진
- 중부내륙고속화철도(이천~감곡~충주~괴산~문경) 조기 완공
- 청주공항역 확장이전, 북청주역 설치

이행기간

- 2014년 ~ 2018년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도비

충청남도

공약 1 심야전용버스 확충으로 심야시간대 교통 편의성 확립

현황과 문제점

- 우리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FTA로 가격하락 및 소득감소와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등 심각한 상황이고, 한중FTA, TPP 등 메가톤급 통상협상이 타결될 경우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임
- 이런 열악한 여건에서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3농 정책」이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민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음

목표

- '3농 혁신'을 불어 넣어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을 회생시키고 식량안보 달성

이행방법

-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업의 지속 발전 추진
  - 농수축산물 특화사업 및 브랜드화, 지역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추진, 맞춤형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농어업인 중심의 로컬푸드 생산-가공·체험-유통의 연계 추진
  -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가공·체험-유통의 연계시스템 확충,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공공·기업급식 확대, 농어촌 6차산업 활성화
- 마을 만들기 사업(공간의 재구성) 지속 추진
  -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전단계별 맞춤 지원, 귀농선배와 함께하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주민중심 두레 결성 지원, 민관합동 도랑살리기 추진
- 농어업지도자 지속적 육성
  - 3농대학, 여성농업인과정 운영 확대, 마을 특성에 맞는 인력의 육성 지원, 농어촌 마을 현장포럼 개최

이행기간

- 2014~2017년 임기중 지속적인 추진

재원조달방안

- 도비 예산

공약 2 생태복원과 해양의 새로운 가치창출로「해양건도 충남」구현

현황과 문제점

- 과거 식량증산, 산업용지, 용수 확보를 위한 방조제 건설과 간척사업 추진으로 하구의 생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됨
  - 금강권역의 경우 하구 67개 중 약61개(약91%)가 닫힌 하구로서, 닫힌 하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방조제 등으로 개발된 곳 중 수질문제가 심각하거나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생태복원 시범 사업 추진 필요

목표

- 생태계 복원 사업 확대 및 생태·환경 산업 기반 마련

이행방법

- 연안 하구둑에 대한 생태계 변화 및 복원 타당성 연구조사
- 충남 홍성호·보령호 중 타당성이 높은 대상지 시범사업 추진
- 서해안 유류피해지역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 해양환경 생태계와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특별해양환경복원
  - 피해주민 소송 지원 및 피해주민 생계안정대책 마련 추진
  - 유류피해 극복 기념시설 건립 지원

- 서해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및 관광휴양벨트 조성 추진
  - 수산업 특화단지 조성 추진에 대한 생태계 변화 및 복원

이행기간

- 2014 ~ 2018

재원조달방안 등

- 도비 활용

공약 3 백제역사문화, 충청유교문화 종합개발

현황과 문제점

- 충남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서해안과 백제의 숨결을 간직한 역사유적, 기호유교문화 유산 등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
- 자연과 역사, 문화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목표

- 충청유교문화 종합개발
- 백제역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진 관광인프라 구축

이행방법

- 충청유교문화 종합개발
  - 기호유교문화의 본거지인 충남(논산, 공주, 부여, 금산, 계룡)·대전·충북·세종·전북 등을 연계하는 기호유교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 추진

- 동아시아 융복합 유교문화연구센터 건립, 유교자원 발굴 및 공동 조사, 기호유교문화 자원의 지역특화 관광자원화 사업(관광루트, 복원사업) 지원

● 백제역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 충남 공주시, 부여군, 전북 익산시에 걸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적극 지원

이행기간

● 2015~2016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예산

공약 4 한중 교류 전진기지 구축을 통해 환황해권 시대 주도

현황과 문제점

● 서산, 태안, 당진, 대산, 보령항 등 충남의 서해안은 중국과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최단 거리에 위치

● 환황해권 시대에 중국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 대두. 서해안 지역의 항만인프라 확충을 통해 급증하는 중국수출입 물량을 책임지는 관문 역할 수행 여건 조성 필요

목표

●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충남 서해안지역 항만시설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이행방법

● 충남 서해안지역 항만시설 및 교통 인프라 확충
- 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등의 항만시설 확충 적극 지원
- 당진-서산(대산항)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배후 교통망 확충지원
- 서산-태안-당진권 광역종합계획 수립
- 아산만권 종합개발지역에 서산(대산항) 지역산업벨트 추가

- 송악물류단지 등 항만배후 산업물류단지 조성 지원
-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 추진
  - 현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중국 교류 거점 지역으로 집중 개발

이행기간

- 2015~2018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예산

공약 5 서해안 유류피해지역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현황과 문제점

- 서해 기름유출사고 발생 후 5년이 지났으나(2009. 12. 7 사고발생) 태안군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함. 태안 근흥 소원 원북 이원면과 보령군 오천면 등에서는 주민들이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생태계 오염에 따른 어업피해와 높은 암 발생 등 건강이상으로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삼성의 1천억원 기탁 약속 이행을 유도하고 시민사회, 지역주민과의 협의 거쳐 주민사업 추진할 기구를 창립할 필요가 있음

목표

- 기름유출사고 피해 주민의 피해극복 지원
- 지역주민의 자립노력에 기초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 마련 지원

이행방법

- 피해주민 소송 지원 및 피해주민 생계안정대책 마련
  - 피해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생계안정 대책 마련 추진

- 유류피해 극복 기념시설 건립 지원
  - 기름유출사고의 끔찍함과 1백만명 자원봉사의 힘으로 점점 살아나는 태안의 생태적 기적을 기억하고 후대에 알려줄 태안의 검은 눈물 기념관 건립 추진
- 서해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이행기간

- 2014~2017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예산 확보
- 기업, 지역시민사회, 정부 협력 사업으로 추진

부산광역시

공약 1 해양특화산업 집중 육성

현황과 문제점

- 부산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합한 산업은 대부분 해양과 관련한 산업이거나 해양 관련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운 산업임
- 따라서 이런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해양수산 관련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 육성 필요

목표

- 부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행방법

- 부산신항의 국제환적항으로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국제 임가공산업단지 조성
  - 조선부품 소재 연구개발을 위한 특구 지정 등 조선산업 부품소재 산업 육성
  - 선박금융 활성화 지원
- 이행기간
  - 2018년까지 각종 법률 및 제도 도입하여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국제 임가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 추정액은 19년까지 3천억임
- 국비 및 시예산으로 조달

공약 2 지지부진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해결

현황과 문제점

- 북항 재개발 사업은 4대강에 예산을 쏟아 붓느라 철저히 무시되고 예산지원이 소외된 대표적인 사례

목표

- 북항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심 정비 및 관광객 유치

이행방법

- 북항 재개발 지역의 범위 확대를 위해 자성대부두를 조기 재개발하고 문현금융단지 및 부산시민공원과의 연계 추진
  - 구도심과 연계 개발
  - 공공개발 방식 채택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세계적 수준의 친수공간을 조성

이행기간

- 2019년까지 각종 법률 및 제도 도입하여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19년까지 1조2천억 소요 추정
- 공영개발 및 일부 민자로 추진

공약 3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및 도심철도 이전 추진

현황과 문제점

- 부산의 원도심은 기능을 상실하여 재정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
  특히 취약한 서민주거지역으로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개선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됨.
  - 도심철도의 경우는 부산시민의 희생 속에서 수십 년간 유지되었던 국가기간 시설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전하고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임.

목표

- 쇠퇴한 상가와 주거지역의 환경개선과 기능전환으로 인구 재유입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행방법

- 부산 구도심 전체를 「도시재생기본법」에 의한 도시재생시범지구로 지정하여 도심재생 사업 활성화 도모
- 도심철도시설 부지에 도심형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
  - 이전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 개정 등 사업여건 조성
  - 도시형 지식산업 집적지 및 공용시설용지로 도로, 공원 등 조성
  - 도심지 폐철로 재개발사업 시범지구로 '부산시민의 길' 지정
  -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 시민 걷기 길로 조성
  - 주변 노후 주택을 공공방식으로 재개발

이행기간

- 2019년까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 대상 지역 전체를 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완료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공약 4 수산업 부흥 지원

현황과 문제점

-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제2수도'였고 산업과 수출의 거점이었지만 과거의 활력을 상실한 상태
- 부산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산의 풀뿌리 산업인 수산업을 부흥시켜야 할 필요성 절실

목표

- 부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행방법

- 남항을 국가관리 항만으로 재지정하고 국제수산관광단지로 개발
  - 주변의 관광자원과 자갈치시장을 연계하여 씨푸드테마파크 조성
  - 남항경관개선 및 관광타운 개발
  - 수산식품 클러스트 조성
  - 수산식품산업 집적지대 조성
  - 지역 특화 전통 수산식품의 명품화 및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 지원

이행기간

- 2019년까지 법률 및 제도 도입하고 예산 확보하여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예산으로 조달

공약 5 낙동강 하구역 생태 복원

현황과 문제점

- 부산시민들에게 낙동강 하구역은 이제 더 이상 재첩, 은어, 고니가 서식하던 살아있는 자연 생태계가 아님
- 물 흐름이 느려져 상수원 수질은 나빠지고 녹조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등 생태 복원이 절실한 상황

목표

- 생태계복원으로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행방법

- 하구둑 수문 부분 상시개방(1단계) : 갈수기 10일만 닫으면 해수 역류 방지 가능
- 16개 수문 전면 개방(2단계) : 해수 역류 방지용 보 설치, 해수 역류 피해 상황 시뮬레이션 통해 단계적 시행
- 낙동강 하구유역의 세계적 생태공원 조성
  - 을숙도 일대를 에코뮤지엄(생태박물관 및 갤러리)으로 조성
  - 하단포구 친환경 정비, 전통나루·나룻배 뱃길 복원, 갈맷길 연결 생태체험장 조성, 하류생태문화 발굴 활성화

이행기간

- 2019년까지 법률 및 제도 정비하고 예산 확보하여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예산으로 조달

대구광역시

공약 1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컨벤션 센터 건립

현황과 문제점

- 국민의 정부 때 역사와의 화해 차원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중단됨
-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의 유지를 계승하여 대구에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목표

- 컨벤션 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영·호남간 상생발전 도모

이행방법

- 대구 심장부인 경북도청 이전 부지 일부에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컨벤션 센터' 건립 추진
-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 복합지구 조성 지원
  -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전시 컨벤션, 비즈니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이 일정 구역 내에서 일체화 되는 MICE 복합지구 조성

이행기간

- 2014년 : 공론화 및 예비타당성 조사
- 2015년 : 공사 착공

재원조달방안 등

- 도청이전특별법을 개정, 국비지원 확보

공약 2 대구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물 제공

현황과 문제점

- 대구지역민을 위한 취수원인 낙동강 중류에서 극심한 녹조현상이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났고, 가을까지 녹조현상이 이어지는 등 대구시 식수 불안 가중

목표

- 대구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제공

이행방법

- 대구 시민들의 식수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취수원을 낙동강 상류로 이전
- 4대강 사업에 대한 '신뢰할만한' 조사평가 실시 후 복원대책 마련하여 국민의혹 해소

이행기간 : 2013~2017년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와 국비 지원

공약 3 대구시를 첨단공구산업의 메카로 조성

현황과 문제점

- 대구지역은 공구산업의 집적도가 높고, 자동차부품 등 전방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최대 공구상가 밀집지역으로 첨단공구산업의 최적지임

목표

- 대구시를 첨단공구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여 대구 경제를 활성화

이행방법

- 공구 융복합 기술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핵심분야 기술개발 투자 확대
  - R&D 및 품질인증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사업화지원을 통한 매출, 고용 성장 지원
- 대구 경제정책의 기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도'로 전환하여 대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집중 육성

이행기간 : 2015~2017년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와 국비 지원

공약 4 대구를 중소기업 중심도시로 육성

현황과 문제점

- 대구광역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 및 중개 연구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최적지임
- 대구의 성서산단 등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성장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목표

-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도모

이행방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글로벌 제약기업과 첨단의료 R&D센터 유치로 합성신약과 IT기반 의료기기 분야 특성화
- 첨단의료기술 교육 및 산업화 지원 클러스터 구축
-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이행기간

- 2014~2017년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와 국비 지원

공약 5 명품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대구 만들기

현황과 문제점

- 대구를 문화 소비도시에서 문화 창작도시로의 도약시킬 필요
  - 지방 최고의 공연 인프라를 갖춘 대구를 공연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창작도시로의 모습을 갖추기 인프라 구축
- 수도권 문화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 분권 실현
- 즐기는 문화에서 참여하고 창작하는 문화로의 확대

목표

- 문화산업 진흥으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이행방법

- 대구 문화 예술 부흥을 위한 '대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 문화 예술 관련 지자체 예산 2배 증액(현재 1.39% → 2.8%)
  - 시민 문화기준선 도입, 공공 영화관 건립, 주민 생활권 내 마을형 문화공간 확충 (마을예술창작소)
-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및 국제오페라축제 지원
-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메디치'기금 조성하여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및 생활 지원

이행기간

- 2014~2017년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비, 국비 지원

울산광역시

공약 1 산업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현황과 문제점

- 울산은 자동차산업과 중화학, 중공업의 메카인 만큼 지역소재 기업체에서 각종 산업재해와 공장폭발 등 각종 재난이 잦은 도시임

목표

- 산업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이행방법

- 시민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
- 재해·재난 통합관리(예방, 관리, 연구) 클러스터 조성
  - 울산과기대 방재학부, 혁신도시 내 국립방재연구소, 지역 내 산업재해 기업 등 재난·재해 관련 지역 R&D 기반 연계
  - 각종 재해 및 재난(산업 재해 및 재난, 도시 방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예방시스템, 대응 체계 등 연구·개발
  - 새로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발전
- 지역성장과정에서 체득한 산업재해나 재난극복 등의 유·무형의 자산을 자원화하는 탈산업화 대응 전략 마련
- 원전정비 및 운영에 지방정부 및 주민참여 법제화

이행기간

- '18년 임기내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예산

공약 2 대곡천 일대 인류문화유산지구 조성 및 도시의 역사성 복원

현황과 문제점

- 울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선사시대의 인류사적 가치를 가진 보고를 비롯해 근대문화유적까지 도시의 역사적 가치가 상품으로서의 성장 동력으로 재평가 되고 있음
- 이에 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문화·환경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도시의 정체성이 없는 2류 도시로 전락
- 따라서 도시와 시민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현재까지의 역사성을 재구성하여 최고의 문화·환경도시로 도약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도시의 미래를 문화적으로 재설계 시작

목표

- 원형보존과 생태복원을 통해 도시의 역사성 복원 및 시민의 정체성 확립

이행방법

- 반구대 암각화·천전리 각석 등 대곡천 일대를 인류문화유산지구로 조성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울산의 근현대 '역사의 길'로 조성
- 기존의 도심 녹지공원을 주제별 도심 테마공원으로 재조성
- 중구 문화의 거리를 문화지구로 조성 추진

이행기간

- '18년 임기내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예산

공약 3 대형 복합기능의 공공도서관을 울산의 랜드마크로 조성

현황과 문제점

- 산업수도에 가려진 열악한 도시의 미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울산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
- 도서관 육성과 지역 도서관 활용에 대한 비전 부재

목표

- 세계 최고수준의 공공도서관(시립) 설립

이행방법

- 2015년 5월 착공 예정인 울산시립도서관 건립 계획 전면 재검토
- 시립도서관이 울산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컨트롤 타워로 추진

이행기간

- '18년 임기내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예산

공약 4 신성장 역점산업으로 노후원전 폐로화 사업 기반 조성

현황과 문제점

-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원전 폐로 및 해체 예정

목표

- 미래성장동력으로 원전 폐로사업을 울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 울산과기대 에너지특성학부, 혁신도시 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지역 에너지 관련기업 등을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조성

이행방법

-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원전 폐로 및 해체에 대비한 폐로사업화 기반 조성
- 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개발센터, 신재생에너지기반 전지센터 등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 업체를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게 해 전문기업 육성

이행기간

- '18년 임기내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예산

공약 5 '국립 산재모(母)병원' 설립 위치 이전 및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

현황과 문제점

- 2004년 참여정부에서 '울산지역거점 국립병원' 설립을 시행 대상사업으로 확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설립 무산
-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울산 재활전문 산재병원 건립방안'을 검토. 부산대 양산병원 및 대구산재재활병원의 진료중복 등의 이유로 무산
- 2012년 여·야 대선공약으로 로 공공의료원 또는 산재병원 재추진. 2013년 7월 노동부의 용역조사 결과, 국립 산재모병원 건립 지역으로 선정
- 다만, 예정부지가 도시외곽에 치우쳐 교통접근성이 취약하고, 숙박·편의시설까지 계획된 의료영리화 의도로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음

목표

- 산재모병원을 울산의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시민의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추진

이행방법

- 산재모병원 위치를 예정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닌 교통접근성이 확보된 새로운 부지에 설립
- 산재모병원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곳이자 치료비 걱정 없는 곳으로 추진
- 울산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등 의료복지 제공

이행기간

- '18년 임기내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예산

경상북도

공약 1 '뿌리산업'을 경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국내 뿌리산업의 규모는 약 87조4,000억원으로 해당 기업만 2만4,997개임. 하지만 이중 대부분이 소규모기업으로 이를 연계하는 집약적 산업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뿌리산업 : 주조, 성형·금형, 열처리, 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
- 지역내 뿌리산업과 연계한 강소형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거점화를 위한 산업벨트를 조성 필요

목표

- 뿌리산업을 경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이행방법

- 민관 합동으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TF팀 설치
- 뿌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뿌리기업 네트워크 형성
- 뿌리산업 창업컨설팅 상설화

이행기간

- 2015년 이후 지속 실시

재원조달방안 등

- 도 예산 반영

공약 2 '3대 문화권'별 특성화 사업 지원

현황과 문제점

- 경상북도는 신라·가야 문화 유교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2000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2005년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2008년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사업 등이 진행되어 왔음
- 하지만 지방재정 열악으로 관광 선호도에 미치지 못하는 관광인프라와 관광자원 광역연계 및 특화개발 미흡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

목표

- 3대 문화권과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와 자연, 인간이 공생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이행방법

- 경주 중심의 신라문화권 : 화랑풍류체험벨트, 신라문화 유기적 복원
- 안동, 영주 중심의 유교문화권 : 한국문화 테마파크와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 고령, 성주 중심의 가야문화권 :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지는 창조관광 콘텐츠 발굴

이행기간

- 2015년 이후 지속 실시

재원조달방안 등

- 도비 활용
- 국비지원 예산 확보

공약 3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현황과 문제점

- 경북지역은 국내 최대의 농축산 지역임.
- 경북 지역의 넓고 다양한 지리적 여건과 생명산업 부분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 마련 필요
-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 신산업 종목 발굴 및 인프라 구성 필요

목표

- 친환경·고부가가치 농축산업을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이행방법

- 말산업 육성 지원
  - 경북도내 말 산업 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 적극 활용으로 말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 승마와 축산, 레저, 힐링, 관광 등을 연계한 종합발전 기반 마련
- 귀농학교 설립 지원
  - 귀농 컨설팅 센터, 영농체험관, 지역사회 소통관 등 건립 지원
  - '성공귀농' 모델 개발 및 보급
- 지역 농어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명산업 발전을 주도할 지역 인재 및 조직 양성 지원

이행기간

- 2015년 이후 지속 실시

재원조달방안 등

- 도 예산 반영

공약 4 울릉도의 관광 인프라 확충

현황과 문제점

- 울릉도와 독도는 경북이 가진 천혜의 자원 지역임. 특히 독도는 일본의 영토분쟁화 대상으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울릉공항은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중으로 2016년 실시 설계, 2017년 본공사, 2020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음

목표

- 울릉도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

이행방법

- 울릉도·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기간시설 조기 완공
  - 울릉공항(경비행장) 조기 완공
  -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개발
- 울릉도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울릉도 친환경 녹색섬 사업 추진 :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활용한 자체 발전시스템 구축
  - 울릉도 천연수목원 조성
  - 울릉도 친환경 녹색섬 사업 추진, 천연수목원 조성

이행기간

- 2015년 이후 지속 실시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 및 도비
- 민자 활용

공약 5 첨단과학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현황과 문제점

- 과거 낙동강벨트에 조성된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향후 지속가능한 미래형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변화 발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신약개발·차세대 소자산업 등의 발전토대가 될 첨단과학 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반영 미흡

목표

- 경북의 발전을 이끌 신산업으로 태양광·수소에너지·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굴 및 육성

이행방법

- 방사광가속기 등 첨단과학중심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완공을 위해 예산 지원
  - 가속기 융합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의료생명공학-신소재-에너지 환경 관련 R&D 센터 구축, 가속기 연계 스마트 워크 시스템 구축
-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 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및 조직 양성 지원

이행기간

- 2015년 이후 지속 실시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예산 확대
- 도예산 반영

경상남도

공약 1 국제기능올림픽 유치로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도약

현황과 문제점

- 산업발전의 주역인 기능인력 저변 감소 추세
  - 특성화고 졸업생 약 44%가 전문대학(29.6%) 또는 대학(14.5%) 진학
  -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경시 풍조와 학력 우선주의 영향으로 산업현장의 경쟁력 약화
-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제 행사 참가 및 추진 경험을 토대로 국제기능올림픽 유치에 있어 유리한 입장임
- 특히 창원시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직종과 부합하는 기능인력 도시임

목표

- 국제기능올림픽을 유치하여 기능인력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으로 개인·사회의 경제적 성장 계기로 활용

이행방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직종과 부합하는 기능인력 도시인 창원시를 중심으로 국제기능올림픽 유치
- 국제기능올림픽 개최를 우수기능인 육성의 기반 구축의 계기로 활용
- 우수한 기술력의 국제교류 계기 마련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 도시 및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출마케팅 지원

이행기간

- 2017년 국제기능올림픽 유치 추진

재원조달 방안

- 도예산 활용

공약 2 국가항공산업단지 지정 등 항공산업 집중 육성

현황과 문제점

- 경남은 국내 항공 산업 매출의 92%, 관련 기업체의 70%, 근로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임
- 항공산업은 부품산업 육성, 기술혁신 역량의 제고와 함께, 산학 및 기업 간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함
- 넓게 분산되어 있는 항공 산업 관련 인프라를 한 권역으로 모아 경남의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

목표

-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인 항공 산업을 21세기 국가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이행방법

- 진주·사천 '국가항공산업단지' 지정
  - 국내 최대 항공 산업 집적지인 진주·사천 연담도시권에 항공 산업 생산단지, 항공 산업 소재 부품 기업 단지, 연구개발센터, 지원시설 등 특화된 '국가항공산업단지' 지정
- 진주·사천 항공 산업을 서부경남의 산업화전략에 연계
  - 소재산업단지의 신규개발을 통해 항공 산업과 소재산업의 복합 거점 육성

이행기간

- 2015년 : 지정 완료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도비

공약 3 경남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현황과 문제점

- 경남 동남권은 기계, 자동차, 항공 등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로봇산업의 최적지임
  - 이 지역의 산업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 연구기관 등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
- 국책사업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초 기능인력도 부족한 실정임

목표

- 경남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로봇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해 국가 로봇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이행방법

-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
  - 로봇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등 구축
  - 로봇랜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구축비 지원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입도로 확장
- 로봇기술 마이스터고 지정(전환형) 추진으로 전략육성 산업 기초 인재 육성

이행기간

- 2014~2017년

재원조달 방안

- 국비 예산 확보

공약 4 도시인이 탐내는 귀농 모범지역 경남 육성

현황과 문제점

- 경남 서북부·서부권은 경남에서는 가장 귀농이 활발한 귀농 1번지임
- 귀농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하고 귀농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이 함께하는 통합형 지역커뮤니티 형성이 필요

목표

- 경남 서부권역을 도시인도 좋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귀농모범 지역으로 육성

이행방법

- 귀농·귀촌 초기 정착금 지원 확대
  - 귀농·귀촌 생활정착자금 지원 확대
  - 귀농·귀촌에 따른 정착 관련 경비의 세제지원 강화
  - 귀농·귀촌 준비금 지원
- 은퇴예정자에 대한 정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통합 촉진 지원시스템 강화
  -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시스템 강화
  - 성공적 귀농·귀촌 정착인 멘토링사업 확대

이행기간

- 2014~2017년

재원조달 방안 등

- 도비 활용

공약 5 김해 의료기기산업단지 육성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조성중인 김해 테크노밸리는 전기, 전자, 기계업종 등과 연계한 의료기기 전문단지로 특화될 계획임
- 의료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내 대학과 연계하고 다양한 지원기관을 유치시켜 산·학·연 간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목표

- 김해시 일원에 의료기기 전문 산업단지를 특화하여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이행방법

- 의료산업 전문업체 및 연구기관 지속적 유치
  - 의생명기업체 지속적 유치로 집적화 추진
  - 기업체 공동 연구개발, 신기술 인증 지원
-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건립 지원
-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첨단 건강검진센터 유치

이행기간

- 2014~2017년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예산 활용

광주광역시

공약 1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 명예훼손 방지법」 마련

현황과 문제점

-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부인 및 폄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목표

-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정부기념식에서 제창 등의 논란을 종식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부인 및 폄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국가형벌권을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인간 존엄성 보호를 강화

이행방법

- 정당,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이 함께하는 기념곡 지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역사적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
- 5·18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

이행기간

- 2014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안 처리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 미수반 사업

공약 2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2015년 성공적인 개관 지원

현황과 문제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을 위해서는 문화전당 완벽시공, 전당 콘텐츠 개발, 운영체계 구축 등 추진 필요
-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목표

-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중심도시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과 안정적 운영 지원
- 광주를 아시아 각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교류의 허브로 육성하고,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전국 및 아시아의 우수한 인적자본이 지역으로 집중, 시민 문화활동 및 문화교류를 통한 사회자본 확대

이행방법

-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
-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 추진 및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 원의 성공적 개관 추진

이행기간

- 2014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안 처리
-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재원조달방안 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활용

공약 3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지 육성

현황과 문제점

- 열악한 내륙권의 산업기반 확충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등 기존산업 특화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
- 내륙 자동차생산 거점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주에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완성차 및 부품업체 직접화로 생산효율 극대화와 수출 증대 필요

목표

- 광주를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로 육성

이행방법

- 완성차 생산라인 추가유치, 그린카 상용화 생산라인유치 등 부품산업 시설 확충
- '빛그린 국가산단'을 '자동차산업 임대전용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산단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3%에서 1%로 하향 조정 추진
- 자동차 부품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자동차전문기술교육원 등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유망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

이행기간

- 2018년까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완료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예산, 민자 활용

공약 4 광주 상품거래소 설립 추진

현황과 문제점

- 광주를 동북아의 새로운 상품, 곡물, 물류국제기지로 형성
- 농산물과 원자재뿐만 아니라 미술품 등의 예술품, 한류를 축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문화상품교류와 창조경제의 육성에 이바지

목표

- 거래소 입지 복합금융센터 건설을 통해 약 3,300억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 및 1,7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달성
- 상품거래소 운영을 통해 설립 이후 10년간 약 1조 4,000억원의 경제효과 달성

이행방법

- 농산물, 자연자원(구리, 알루미늄, 원유등) 1차 상품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선도계약, 선물 및 옵션계약)을 조직하는 거래소 설립
- 일반상품거래법(안)에 상품거래소 본점을 광주로 명시 및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준비단 구성·운영

이행기간

- 2016년까지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준비단 구성·운영을 통해 복합금융센터, 현물거래소 설립 완료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예산

공약 5 2015 광주하계U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현황과 문제점

- 2015 하계 U대회 및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원과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제약과 한계가 있음.
- 지역의 특수성과 위상을 고려한 품격 있고 특색 있는 대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목표

-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위한 계기로 활용
- 남북 단일팀 구성을 통해 남북간 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에 기여

이행방법

- 남북단일팀구성 및 공동입장을 위한 UN・FISU・남북단일팀추진위원회 협력추진 및 남북회담에서 단일팀 구성 의제 채택
- 다목적 체육관 등 경기장 5개소 건립과 국민생활관 등 69개 경기장 개보수 지원
-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국제경기대회지원법」개정 추진

이행기간

- 대회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지원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예산

전라북도

공약 1 농생명융복합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

현황과 문제점

-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2010.3)
-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 수정계획서 제출(2013.9)

목표

- 농생명 융복합 분야를 특화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

이행방법

- 농생명 융복합 분야를 특화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 전주, 정읍, 완주 등의 지역에 농생명 융복합 소재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이 실질적으로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필요

이행기간

- 2015년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사업

공약 2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협력 허브로 육성

현황과 문제점

- 새만금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동북아 경제권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지역
  - 용지조성에 있어 산업용지와 농업용지는 농어촌공사가 참여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복합도시와 관광용지 등은 대규모 해상매립사업으로 수익성이 부족하여 민간 투자가 어려운 상황.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공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주도의 선도개발이 절실한 상황
- 새만금개발종합계획이 마련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주도의 선도 개발이 필요한 시점

목표

- 새만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허브로 육성

이행방법

- 전문 공기업이 참여하는 새만금 선도개발 방식 도입
  - 복합도시는 토지주택공사, 관광용지는 관광공사가 참여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협력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동서 2축(신항만-새만금)의 완공과 남북 2축(군산공항-관광단지) 도로 건설 추진

이행기간 : 2013~2017년

재원조달방안 등

- 2014년 국가예산 7,045억원 확보
- 추가 소요 재원 국비 조달

공약 3 전통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문제점

- 세계적으로 문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파워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
- 전북은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곳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거점으로 한식, 한지, 한옥 등 한 스타일 6개 분야 문화 컨텐츠가 있어 전통문화산업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 전통문화산업 육성으로 해외 관광객 증가로 한류문화 체험·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류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소비·관광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

목표

- 전통문화 융합산업 생산·연구개발·체험 중심지구 조성

이행방법

- 'K-Food 복합단지' 조성
  - K-Food 전시관·체험관, 이벤트관, 한식공원 등
  -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 청소년 한문화체험관 건립
  - 한지, 소리, 한식 등 전통문화체험시설, 생활관(숙박), 전시공간
- 전통건축, 전통공예, 한지, 소리산업 분야 특화 지원 및 테마별 특화거리 조성 지원

이행기간

- 2015~2017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공약 4 지리산 · 덕유산 · 내장산권 힐링 거점 육성

현황과 문제점

- 지리산 · 덕유산 · 내장산 권역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역사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휴양 · 힐링 거점으로 육성 필요

목표

- 자연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는 휴양 · 힐링 거점 조성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

이행방법

- 한방산림치유개발센터,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단지 조성
- 승마치유센터 조성
- 주거와 의료관광을 접목한 한국형 치유마을 조성 지원

이행기간

- 2015~2019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공약 5 전북을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조성

현황과 문제점

- 세계 4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확정되어 금융 산업 육성의 초석이 마련
-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연계한 연기금 자산운용중심의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통한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육성 필요

목표

- 기금운용본부 안정적 정착여건 조성하고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연기금 중심의 특화 금융산업 발전 모색

이행방법

- 2014년 '전북 금융산업 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 연기금 중심의 특화금융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이행기간

- 2014~2017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국민연금공단 사업비로 추진

전라남도

공약 1 수산양식혁명(Blue Revolution)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과 문제점

- 전국 최초로 전남(진도군)에 전복양식섬이 시범 조성되었으나 대량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확대조성 필요
- 한·중 FTA체결(예정) 등을 고려할 때 수출 경쟁력 있는 양식섬 조성이 시급하나 정부지원 미흡으로 사업 장기화 우려
  - 진도지구('13~'15), 완도·신안지구('14~'16) 사업기간 단축 필요

목표 및 이행방법

- IT기반 첨단 친환경 양식섬 조성 지원
- 수출형 전복·해삼 양식 전략단지 조성
  - 완도군을 중심으로 한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 규모화, 기업화 지원
  - 해삼종묘 생산, 양식어장 개발 지원
- 신의~하의권 바다목장(Blue Seed Valley) 조성
  - 생계형 소규모 연안양식에서 기업형 대규모 외해양식으로 전환
  -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확대 보급
  - 해양종묘 R&D·가공유통 Complex

이행기간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 약 450억원
- 국비 및 도비, 자부담

공약 2 항공기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구축

현황과 문제점

- 고흥 항공센터에 중·대형기, 헬기 등의 비행성능 시험이 가능한 장비, 활주로 등 기반 시설 확충 필요
- 정부의 「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 목표 달성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필수

※ 추진상황

- '10. 11. : 산업부, 비행시험 평가분야 유망거점 지역으로 고흥 선정
- '11. 7. : 道, 센터구축 연구용역 및 항공센터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 '11. 12 ~ : 산업부, 항공센터 기반확충사업('12~'16/200억원) 확정

목표

- 우리나라 항공산업 중 연구·설계는 대전, 부품제조, 완제기 생산 등은 경남과 함께 전남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비행시험 분야 집중육성

이행방법

- 전남 고흥 일대에 비행종합시험 장비구축
- 항공센터 기반 확충사업(R&D) 차질 없는 추진
- 활주로(1.5km) 신설·확장

이행기간 : 2016년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 약 300억원
- 국비 예산

공약 3 여수박람회 및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효율적 사후 활용

현황과 문제점

- 성공적으로 개최된 여수박람회장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활용하여 1,000만 관광객 시대의 동아시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 박람회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여수·순천시를 비롯한 남해안권 발전 견인

목표 및 이행방법

- 여수박람회
  - 박람회장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장기임대 및 분할납부 방식 도입 등「여수박람회 사후활용 계획」변경
  - 박람회장의 사후활용 활성화와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 지원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후방산업 집적단지 조성
  - 뷰티웰니스 서비스산업, 조경화훼산업 육성
  - 뷰티 휴양랜드, 한방 아로마센터, 슬로푸드 휴(休) 프라자 조성

이행기간 : 2016년까지

재원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 약 3,000억원
- 국비 및 도비 예산

공약 4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현황과 문제점

- 남해안 고속철도는 영·호남지역민들의 공통 숙원사업이자 산재한 자원의 통합과 연계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철도설치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 구간 동시개발이 절실
- '03년 12월 착공 후 철도사업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07년 4월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11년 3월 타당성 재조사 결과 단선으로 시설규모가 축소되어 '14년 2월 현재 보완설계가 진행 중임

목표

- 공사 중지 후 단선으로 설계 중인 '목포~순천' 구간 복선화 추진

이행방법

- 국가철도계획에 반영
  - 노선 : 목포~보성~순천

이행기간

- 2014년 : 복선화를 위한 설계 보완
- 2015년 : 복선화 공사 착공

재원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약 1.3조원
- 국비 예산

공약 5 혁신도시 연계 융·복합 산업밸리 조성

현황과 문제점

- 광주R&D특구, 혁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국도 13호선 주변의 산업단지를 융·복합산업 밸리로 조성
  - 기존 산단 : 첨단, 하남, 본촌, 소촌, 평동, 나주산단 등
  - 조성중인 산단 : 첨단2, 진곡, 빛그린, 평동2산단 등
- 혁신도시를 차세대 지식·지능기반산업, 탄소금융의 거점 등 광주와 전남의 신산업 중심 도시로 조성

목표

- 광주R&D특구, 혁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국도 13호선 주변의 산업단지를 융·복합산업 밸리 조성

이행방법

- 나노산업단지 조성
  -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
  - BT(생명), NT(나노), IT(정보통신), ET(에너지) 등의 융복합화에 따른 나노바이오, 마이크로 응용레이저 등 신산업 육성
- 그린에너지카 지원센터 설립과 전기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 전기자동차 부품 실험 및 성능평가, 신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그린에너지카 지원센터 설립
  - 대마산단을 전기자동차산단으로 특화 조성
- 화순의 백신생산기반을 활용한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로 확대

재원조달방안 등

- 전남 동부권 일원(여수, 순천, 광양, 고흥 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조성 : 총사업비 약 5,000억원, 국비 및 도비 예산 활용
-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단 일원 전기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 총사업비 약 3,600억원, 국비 및 도비 예산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1 제주공항 인프라 시설 확충

현황과 문제점

- 현 제주공항은 확장공사에도 불구, 날로 증가하는 여객과 화물로 2019년에는 포화상태에 다를 것으로 예측
  -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국토연구원, 2012.4)에서는 제주공항의 포화시기를 2019년으로 예측
-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인한 제주방문, 유네스코 트리플(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달성으로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무비자 입국허가제로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관광객의 주요교통수단은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

목표

- 제주공항 포화상태로 인한 항공교통대란이 제주관광과 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파급 방지

이행방법

- 신공항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 중 합리적 대안 조기 도출
  - 비교 조사를 통해 제주 항공 인프라 강화 방안 강구
- 현재 포화상태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

이행기간

- 2015년 : 대안 마련
- 2019년 : 사업 완료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공약 2 환경친화적 에너지 산업 육성

현황과 문제점

- 스마트그리드는 주택·건설·산업체, 버스, 렌트카, 전기자동차 등 교통수단, 생활·관광 정보시스템 등 적용범위가 광범위, 도시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10. 1)을 수립하고 총 27.5조를 투입하여 2030년까지 국가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할 계획
- '09.2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목표

- 스마트그리드 사업 통해 제주의 열악한 산업구조 개선, 친환경 마을 경관 개선, 문화여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이행방법

- 스마트그리드 광역거점화 및 이에 기반한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3차산업혁명 모델 선도 지역화 실현
-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등 보급형 에너지기술 자체 확보 시스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
- (가칭) 기후변화R&D센터 설립을 통한 국가차원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 제주 자체 기반마련 후 국가차원 연구센터로 격상하는 전략 추진

이행기간

- 2018년까지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예산

공약 3 강정 해군기지 갈등 해소 및 '평화의 섬, 제주' 조성

현황과 문제점

-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 필요
-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중·일 트라이앵글 존의 중심에 있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조성

목표

- '평화의 섬' 제주라는 확고한 비전 속에 해군기지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 국제평화 교류 거점으로서 위상 강화

이행방법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해법 및 로드맵 마련
- 주변지역발전계획을 강정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주도형으로 전환 추진
- 강정마을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지정하고 평화박물관 건립 지원
- 국제민간평화포럼 개최 등 '강정마을~알뜨르 지역'을 제주 세계평화의 섬 거점지 위상을 갖도록 육성

이행기간

- 2018년까지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도비 예산

공약 4 '제주도의 문화'를 살린 문화창조산업화 전략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제주는 기원 전후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지닌 탐라국이자 동북아시아의 한 축으로서 활발한 대외교류를 펼쳐 온 개방의 역사 갖고 있음
-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을 가시화하고 문화컨텐츠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대응할 필요

목표

- '탐라문화권' 역사와 문화를 확고히 정립, 건물과 성곽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언어・역사・민속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연구

이행방법

-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을 국가차원의 지원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 지역특색이 발현된 건축문화경관 조성을 위한 지역토착건축문화표준화 모델링사업 추진
- 제주어 세대전승을 위한 대대적인 제주어살리기 운동 전개
- '제주학센터'를 '제주학 육성지원 센터'로 확대 본격적인 지역학 육성・지원

이행기간

- 2018년까지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도비

공약 5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섬 제주' 만들기

현황과 문제점

- 도민 삶의 질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사람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민생활 행복 정책 추진
- 도민들의 안전욕구와 필요에 맞는 정책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제주만들기 필요

목표

-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한 섬 제주' 만들기

이행방법

- 버스노선 확충 및 체계 합리화와 업무용 콜택시제도 도입 등 승용차 없이 이동이 편리한 '대중교통 특별도' 전략 추진
- 여성과 아이들, 올레 여행객 등이 안전한 (가칭) 'safety island 2020' 추진
- 구제역, AI,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특별도 종합대책' 추진

이행기간

- 2018년까지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도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합진보당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합진보당 정책공약

▣ 중앙 10대 정책

No.	정 책
1	“돈보다 생명을! 위험사회에서 안전 사회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마을 만들기)
2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 물·전기·가스 무상공급
3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54만원
4	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6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7	마을버스부터 버스공영제 실시
8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혁으로 모두에게 생활안정 보장
9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강화
10	장기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확대

▣ 시·도별 5대 핵심공약

정책 1

"돈보다 생명을! 위험사회에서 안전 사회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마을 만들기)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 사건이 발생함.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기업, 기업과 유착된 관료들,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무능한 정부 등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치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에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국가 정책의 방향 선회가 절실히 필요함.
-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일 지하철 추돌 사고가 발생함. 세월호에 지하철 추돌사고까지 전 국민의 안전 '불안증'이 극에 달해 있음.
- 또한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이 줄을 이었음. 현대중공업 5명, 미포조선에서 1명, 울산공장에서만 한 달 새 6명이 사망했고, 삼호중공업까지 포함하면 두 달도 안 돼 8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음.
-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안전한 산업현장, 안전한 마을 만들기까지 전 국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목표

-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 하는 재난 관리 대책 수립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 안전한 산업현장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사고 근절
-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전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 도모

이행방법

1)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①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세월호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해난사고 안전시스템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②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여객선, 버스, 지하철 등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 여객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 차량, 시설 등 정비 업무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고 직영, 정규직화로 책임성 강화

③ 규제완화, 민영화 중단

- 세월호 침몰사건과 지하철 추돌사고는 규제완화가 불러온 참사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규제완화, 민영화 중단

2) 안전한 산업현장 만들기

① 산업현장 산재사고 방지 대책

-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위험물질 및 안전에 대한 노동자, 시민 감독기구 설치
- 산업안전인력 확충 요구 및 현장위험 발생시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 공단 안전사고시 유해물질 누출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즉각 제공하며, 긴급진료체계 수립
- 발암물질에 대한 정밀한 역학조사 추진 및 대책마련

② 건설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 및 신축과정에서 감독 강화
- 안전기술 지도원 영세 공장 현장 지원
- 건축주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제 시행

③ 주요 산업단지를 산재 없는 안전산업단지로 리모델링

- 국가산업단지 국세 중 10%를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환경 개선 지원금'으로 전환해 노후화된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

3) 안전한 마을 만들기

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전면 확대!

- 수산물 이력제 실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 점검 및 합동 단속 실시
- 학교급식에 국내산 우수수산물 공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국내산 수산물 비율 확대를 위한 지역수산물 직거래 지원

②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 여성1인 가구,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밀집된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순찰

- 가로등, 방범창 등 시설환경 개선
- 지역사회 안전망 자율조직 활성화
- 안심택시 서비스,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③ 아이 안전

-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쉼터 설치
-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 놀이터 오존소독 실시
- 경찰, 소방서와 연계하여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실시

이행 기간

- 지금부터 추진 ~

재원조달 방안

- 종합적인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가 예산 추진
-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산업단지 국세 중 10%를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환경 개선 지원금'으로 전환해 노후화된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
-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자체 예산 조달

정책 2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

현황과 문제점

- 물 · 전기 · 가스는 공공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생활필수품
- 물 · 전기 · 가스는 안정된 주거와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 권리
- 저소득층 가계는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월세와 함께 물 · 전기 · 가스 요금이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급증하는 전력수요 등에 대하여 에너지 감축이 필요함.
  물 · 전기 · 가스 민영화는 요금폭등을 초래함.

목표

- (가정용) 물 · 전기 · 가스는 생활필수 공공재로서 기본권 보장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 감축 유도

이행방법

1)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제" 기본 설계안

⇨ 물 · 전기 · 가스 최저생계 필요 사용량 무상공급

⇨ 초과사용구간 누진 적용 등 요금체계 개편

⇨ 필요에너지 산정위원회(가칭)를 통해 무상구간 설정

〈4인가구 기준 무상 공급하는 최저생계 필요 에너지량(안)〉

	최저생계 필요 에너지량		요금체계 변경 (과다사용가구 누진)	비 고
	월 무상공급량	월 무상공급비용		
물	1인 3㎥ 4인 가구 12㎥	1인 1,417원 4인 가구 5,668원	3㎥이하– 무상제공 3㎥초과~ 2배 누진요금	UN권고량
전기	265kWh	36,922원	① 가정용 – 265kWh이하 : 무상제공 – 265kWh초과~337kWh이하 :현행요금적용 – 337kWh 초과 :누진율인상 ※ 2013년 월평균 사용량 337kWh ② 산업용 – 특혜폐지, 산업용 요금인상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가스	3,026.59MJ	68,498원 (서울요금기준)	– 3,026.59MJ이하 : 무상제공 – 3,026.59MJ초과 : 현행유지	

주) 4인가구 기준으로 전기, 가스 기준량을 산정한 것은 최저생계 필요에너지량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산정에서 4인 가구에 대해서만 최저생계 필요에너지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주) 전기의 경우 최저생계비 산정기준에 따라 265kWh 이하로 무상구간을 설정했으나 환경적 문제 등 에너지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재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주) 4인가구 가스 사용량은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기준량(70.7㎥)을 열량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함. 최저생계비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도시가스 공급가구 뿐만 아니라 전체가구에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 추계하였음. 같은 열량을 소비하더라도 열원의 종류, 주택노후도와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택유형과 가구원수별 최저주거면적 등을 기준으로 필요량을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추진함.

주) 도시가스 등 저렴한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요청했으나 가구 수 미달로 거절당한 미공급 지역, 일정량 이상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지역 거주가구에 대해 무상 공급액에 준하는 난방용 에너지 급여지원

2)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제" 실현을 위한 우선 실행 사항

① 필요 에너지량 산정 및 무상 공급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 에너지 사용 및 비용 실태 조사 우선 실시

–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위원회(가칭) 설치

– (물 · 전기 · 가스) 필요에너지 산정위원회(가칭) 설치

② 빈곤층에게 즉각 실시

③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지원 확대

– 가정용 난방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 및 노후 보일러 교체와 같은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확대 실시함.

– 에너지효율 진단서비스를 무상제공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계량기 별도 설치 지원

– 절수시설 설비지원

3)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4) 관련 조례 및 법률 제·개정

① 에너지 기본 조례 제·개정

- 에너지 기본권 명시, 에너지 사용 실태 조사 및 무상공급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위원회', 기본 필요에너지 산정위원회 설치, 예산 지원 등 내용 포함

②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관련 조례 제정

③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조례

④ 재생에너지 지원조례 개정,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조례 제정

⑤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실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이행기간

- 2015년~

재원조달방안 등

- 평균사용량 초과 과소비 가구에 대해서 누진요금 적용하여 소요예산 확보
-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및 누진 적용을 통한 재원 확보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계정을 신설
-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재원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 못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한 2조3,657억 원을 재원으로 2015년부터 사업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함

정책 3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54만원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은 최하임금
  - 최저임금위원회가 따르면 2013년 단신근로자(혼자 사는 노동자)의 평균생계비가 월 151만원으로 추산되었으나 정작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월 108만원으로 결정되었음. 임금은 노동자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임.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는 가족은커녕 단신근로자의 삶도 영위할 수 없음.
  - EU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최저임금으로 권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하임금이라 할 수 있음.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최저선을 위한 임금인상
  - 단신노동자의 한달 평균 생활비 151만원, 보건복지부의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생활임금도입 확산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을 조례 또는 지침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음.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생활임금을 5,580원으로 확정하였음. 부천시가 결정한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됨.
  - 성북구와 노원구도 연구용역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8%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음 (2013년 시간당 6,490원 월 135만원 / 2014년 시간당 6,850원 월 143만)

목표

-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출연기관 등 노동자의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지급

이행방법

-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행기간

- 2015년~

재원조달방안 등

-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

정책 4

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

현황과 문제점

- 자연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은 풍작이 나도 가격 하락으로 고통 받고, 흉작이 나도 해당농산물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함.
- 정부의 가격지지정책인 수매비축사업은 수매량이 미미하고 수매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유명무실한 상태임. 농사에 투여한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식품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비중은 41.9%인 반면 수입산 농산물 비중은 58.1%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식품업체의 수입 농산물 이용이 높은 이유는 국내산 농산물 가격과 공급의 불안정성이었음. 외식업체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 구입가격이 불안정하고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충남은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농민들 스스로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차기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목표

-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

이행방법

- 지역별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 관내 농협 출연금 및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

이행기간

- 지역별 조례 제정 후 실시

재원조달방안 등

- 기금 조성 : 관내 농협 출연금 및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

정책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과 실적은 87,780명에 불과
  - 이명박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계획은 2013년까지 6만4천명이고, 박근혜정부는 2015년까지 6만5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음.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2013년 전환계획인원 4만1천명을 제외하면 실제 박근혜정부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불과 2만4천명에 밖에 되지 않음.
  -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과 실적은 87,780명에 불과하여 노무현 정부의 5년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의 절반에 불과함.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임.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10명중 8명은 계속 비정규직
  - 201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까지 단 18%의 인원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음. 이는 10명중 2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8명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 총액인건비제와 정부지침이 무기계약직 전환의 걸림돌
  -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꺼리고 있음. 현재 정부의 지침은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에 대해 총액인건비제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임.
  - 정부 지침에 의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제한되는 것도 이유임. 정부 지침은 '55세 이상 제한, 대상자 개인별 평가, 계약종료시점에 전환, 10개월 이상 근무자,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한해 전환' 등인데 이렇게 할 경우 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목표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 일용직(일시사역인부)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해 단계적 정규직화

이행방법

- 정부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
  - 55세 이상 전환제한 폐지하고 만59세까지 정규직 전환
  - 60세 이상은 계약해지 금지하고 고용안정 보장
  - 과거 2년 업무 기준 폐지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예상 업무 전환
  - 계약종료 시점 아닌 특정기간 설정 일괄 적용
  - 개인별 평가에 의한 전환제외 방식 아닌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 자치단체장 지침으로 예산 반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례 제정

이행기간

- 자치단체장 지침 및 조례 제정 후 실시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

정책 6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현황과 문제점

-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으로 정착한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은 복지 이슈였고,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공동 공약이었음.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시장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교육 복지 정책으로 보편화 함. 2014년 현재 무상급식은 진보-보수 교육감 구분 없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착함.

- 박근혜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파기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걸었음.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2014년부터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했음. 그러나 취임 첫 해부터 교육공약을 파기하여, 2014년 교육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첫걸음-무상급식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고교 무상교육 약속은 실현 가능함.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고등학교 의무교육화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상황이므로, 급식 영역에서 먼저 실현할 필요가 있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으로 가는 징검다리임.

- 무상급식 공약의 유효성
  - 2013년 8월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교육만족도 조사를 보면 광주교육청이 가장 잘 한 사업으로 교사, 학부모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을 뽑았음.
  - 학부모는 58.7%로 압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았음. 무상급식은 철지난 공약이 아니라 지금도 가장 지지받는 교육복지 정책임.

- 전국적 무상급식 현황
  - 2013년 3월 전국 72.6%의 학교에서 실시. 초등학교의 94.6%, 중학교의 58.6%, 고등학교의 12.9%가 무상급식 실시

- 진보교육감 지역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보수교육감 지역은 부산 48.7%, 대구 16.6%, 울산 36.6%로 지역에 따라 교육복지 혜택의 차이가 명확하게 벌어졌음.

목표

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은 2015년 즉각 실시

- 2010년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 이미 전국적으로 중학교 58.6%가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학교는 단계적 실시가 아니라 2015년 전면적 실시 가능

②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5년부터 단계적 실시

- 중학교 무상급식이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듯이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2015년부터 단계적 실시. 2015년 고등학교 1학년, 2016년 2학년, 2017년 3학년까지 완성

③ 학교급식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

- 2011년 12월 15일 WTO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을 정부조달협정 적용 예외로 인정받게 됨.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의 국제법적 근거를 얻음으로써 학교급식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광주의 경우 학교 단위로 추진하던 친환경 식재료(쌀) 구매를 시교육청이 일괄 공동구매하고, 공급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에게 근거리 학교를 묶어 배송. 이와 같은 사례를 전국 일반화할 수 있음.

이행방법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재개정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 지자체, 교육청과 협조해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재원조달방안 등

- 전국의 190여만 모든 고등학생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1조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
-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며,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여 무상급식에 우선 배정함.
-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정치권과 협의를 강화해 나감.

정책 7

마을버스부터 버스공영제 실시

현황과 문제점

-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 서민의 발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버스 중 버스는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일부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 권한 행사가 제한되어 있어 공공성 확대 제한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준공영제, 벽지노선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요금할인 등 공익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영 또는 준공영제 한계를 극복하여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
  - 정부차원에서도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도로교통 위주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자본잠식상태의 사실상 파산상태에서 시민혈세로 회사운영 지속
  - 완전 자본 잠식상태의 버스회사들의 취약한 재무상태가 시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준공영제 실시지역인 서울의 경우 29.3%가 적자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도 존재함. 민영제로 운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78.6%가 적자상태이며 완전자본잠식상태의 버스회사도 7개나 됨(2011년 기준).
  - 경남 김해시 시내버스 요금 과다지급 및 보조금 횡령이 드러나 환수
  - 지방자치단체에게 면허취소권한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권한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민간 버스업체들에서 운송비 부풀리기, 광고매출 축소 등 비리가 생기고 있고, 파산상태라 할 수 있는 자본완전잠식상태의 업체들도 면허권을 유지하면서 지자체 보조금으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임.

● 버스준공영제 한계 극복

-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배경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함께 자가용차량 증가와 자가용위주 교통체계로 인해 위협받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한 측면이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버스이용객이 줄어들면서 버스회사의 요금인상 요구에 대응하여 버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
-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이후 재정지원금은 대폭 증가했음에도 시민이용 만족도나 운수종사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버스공공성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있음.
- 현행 준공영제는 요금수입과 무관하게 사업주에게 원가 및 약 10%에 가까운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임.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운송수익과 무관하게 자본대비 9.27%(마을버스 4.92%)라는 과다한 이윤을 보장하여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 반면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노선조정을 포함한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버스노선신설이 면허권을 요하는 것임에도 면허발급 이후에는 재산권으로 사유화되는 법률 한계 때문임.
- 완전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초기 버스차량 인수비용이 들어갈 것이나 그 외 지자체가 직영하면서 운행수입을 관리하여 추가비용은 들지 않음. 오히려 민간기업에 보장해주던 이윤 7~10%를 절감할 수 있고, 통합관리를 통해 각 회사의 관리・임원직을 축소하여 인건비까지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버스준공영제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버스회사 기업공시, 정보공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비스 평가, 노선입찰 및 운송수입금 운영 및 지급 등을 심의하는 기구에 시민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대부분 실질적인 집행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보완이 필요함.

목표

● 마을버스부터 버스 완전 공영제 단계적 실시

이행방법

① 마을버스부터 공영제

- 마을버스회사의 열악한 재무상태는 마을버스 서비스 저하, 운수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유발하는 요소임. 특히 지하철이나 간선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이 미비한 곳을 중심으로 노선이 배치되기 때문에 보다 공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함.

-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마을버스회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완전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준공영제에서는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적자분을 보존하면서 이윤까지 보장해주고 있으나 공영제로 운영할 경우 기업이윤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절감됨.

② 버스공영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버스공영제운영을 위한 시민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
- 노선조정권 확보
- 정보공개 및 투명성확대. 운송비용 등 정보공시
- 민영버스 → (준공영제) → 공영제로의 전환계획 수립과 준공영제 지역에서 공영제로 전환하고 공공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자본 완전잠식상태 버스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노선인수 절차, 면허취소 건의절차
- 재정지원방안(서비스평가와 기업 건정성 평가에 기반한 보조금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 도입)

③ 노선 조정 및 적자노선 인수

- 적자노선 인수 및 부실업체 퇴출(민관 혼합형)
- 노선의 공동소유로 노선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함.

④ 시내버스 서비스 심사평가위원회, 버스공영제 시민운영위원회 구성

- 우선 버스공영제 실시를 위해 시민, 전문가, 운수종사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위원회 구성
- 시내버스 서비스 심사평가위원회의 시민참여, 노동자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등 공공성 평가 배점을 높임.
- 공영제 실시에 따라 '버스공영제 시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결정과 면허 및 노선 입찰 등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대를 기함.

⑤ 대중교통 공영제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 도로건설 중심의 자가용 위주 교통정책을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함.

이행기간

- 2015년~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

정책 8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혁으로 모두에게 생활안정 보장

현황과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전달체계의 문제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 '세모녀 사건' 등 취약계층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전면화됨.
  - 수급자의 수는 2012년 139만명으로 추산됨. 전국가구기준 절대빈곤율(1인 가구, 시장소득 기준)은 11.1%임.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평균 3%에 해당됨.
- 2012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된 비율은 17.7%로 집계됨.
  - 기타 추정소득 부과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남.
  - 신청주의로 인해서 수급대상자가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점 드러남.

목표

- 중위소득 50% 수준의 최저생활 보장 (2014년 기준 차상위 계층 기준으로 보장)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이행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혁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최저생계비를 현재 기준의 120%(현 차상위계층 기준)로 상향 조정하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지원
  - 소득인정제도 개선 (재산기준 완화, 추정소득 부과 폐지)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지역에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단계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계획을 조례에 포함.

- 원스톱 긴급복지전달체계 구축
  -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전수조사를 통해서 신청주의의 문제점 해소
  - 담당 복지공무원제도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 구축
- 단계별 생활안정 지원비 보장
  - 1 단계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에 처한 빈곤층 지원
  - 2 단계 : 이후 빈곤층 지원 대상을 확대 : 차상위층까지 확대

이행기간

- 2015년~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
- 장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혁으로 정부 예산 지원

정책 9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강화

아동치과주치의제, 산모·신행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지원, 어르신에게 무상틀니

1. 아동 치과주치의제 시행

현황과 문제점

- 아동 치과주치의제는 치과의사가 일정 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맡아 구강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강관리와 치료를 해주는 제도로서 치료중심이었던 치과진료를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음.
- 서울시가 2012년 처음 실시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한 아동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났음
- 현재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를 확대하고, 나아가 모든 아동에게 치과주치의제를 실시하도록 함.

목표

- 아동 치과주치의제 시행·확대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로 전환
-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 도입

이행방법

-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하고 취약계층 아동부터 시범, 단계적 실시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설치로 지역 아동의 구강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제의 대상 범위 확대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

2.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 지원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2,368천원, 4인 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약 20만 원 가량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예외 지원을 제외하면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에만 해당하며 대다수 산모들이 평균 비용 200만원(2주)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함께 모든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무상지원이 실시된다면 고비용의 민간산후조리원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목표

- 모든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지원

이행방법

-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자 확대
- 모든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 지원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

3. 어르신에게 무상틀니 지원

현황과 문제점

- 2013년 7월 치과의사협회지에 개제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2,812명 대상으로 건강 설문을 진행한 결과, 무치악자는 18%, 1개 이상의 어금니 상실자는 75.5%, 현존 치아보유자는 6.5%였음.
- 현재 만 65세이상 저소득 노인들(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에게는 전액 무료, 7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비용의 일부 지원(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20%,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30%)
- 또한 작년 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모두 50%이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20~30%로 낮아졌으나 보통 위 또는 아래 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가격이 약 120만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
- 현행제도는 노인들에게 질 높은 틀니를 제작해주고 금전적인 부담, 불편을 최소화시키기에는 역부족임.

목표

- 현행 만 7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일부 지원되는 비용을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은 무상, 2종은 본인 부담률 15%로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무상 틀니 지원

이행방법

- 기초, 광역 자치단체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실시
-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장기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 노인 무상 틀니 실시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현행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1종 무상, 2종 15% 부담부터 우선 실시
  - 이후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상 틀니 제공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

정책 10

장기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확대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전월세 대책이 아닙니다.
  - 취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전세대란을 막을 수 없는 다주택자를 위한 제2의 부자 감세
  - 대출지원 확대는 빚내서 집사라는 하우스푸어 양산정책임.
  - 전세세입자를 위해 공약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시행실패 후 폐기, 이름만 남았음.
- 내 집 없이도 주거걱정 없도록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 박근혜정부 행복주택 20만호 계획 축소와 2013년 신규 공공임대공급을 위한 사업승인 물량 목표치에 미달
  -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높여 임대주택부지,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박근혜정부 공약인 행복주택은 지자체가 부지를 발굴하여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지구선정을 하고 있음).
- 늘어나는 1인가구, 노인 가구에게 제공할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합니다.
  -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임대주택 공급유형을 다양화해야 함.
  - 특히 대도시 구도심지역이나 대학가, 농어촌지역 등이 1인 가구 또는 노인 가구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 가구의 특성과 임대주택 수요를 파악하여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1인가구와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목표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확대

이행방법

① 공공주택 확보계획 수립, 사회주택기금 설치

-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강화
-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해 전체 가구수, 실수요자, 소득분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등을 고려한 단계별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공급 계획과 토지주택공사 공급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수립함.
- 개발이익 환수분 및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자체 사회주택기금 설치하여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확보 재원 마련함.

② 공공원룸

-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원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제력이 취약한 1인 가구에 공공원룸식 공동주택을 청년노동자, 대학생 등 청장년 1인 가구에 공급
- 식당, 거실 등 공동 생활공간과 침실, 욕실, 간단한 취사공간을 갖춘 원룸형 개인공간을 동시에 확보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

〈유사사례〉 서울시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서울시 희망하우징, 유스 하우징(Youth Housing)

③ 노인복지주택

- 주거가 취약한 1인 고령자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 의료지원 및 건강관리, 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복합 주택

〈사례〉 성남시 고령자 무상 주택 '아리움'

④ 준 공공임대주택

- 장기임대보장,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개인(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집수리지원 등 추가지원을 통해 장기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2013년 임대주택법 개정됨).

⑤ 전세임대주택 확대

-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 기존 민간주택을 지자체나 LH가 임대하여 무주택서민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정책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 LH가 지역별 공급량을 정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발만 하기 때문에 지역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대학생,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시행하여 확대하자는 것임.

이행기간

- 2015년~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

통합진보당

시 · 도별 5대 핵심공약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공약 1 '생활임금조례' 제정,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목표

- 서울시 및 25개 구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
- 생활임금 보장 수준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154만원(EU권고안)

이행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의회를 통한 생활임금조례 제정
- 서울시장이 매년 생활 생활임금 공표(EU권고안)
- 민간에는 조달정책을 통한 '계약준수제'로 생활임금 준용 촉구
-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생활임금제도 관련 조항을 신설
- 지방계약법을 고쳐 생활임금 도입 법적 근거 마련

이행기간

- 2014년 : 자치단체 소속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 전면시행
- 2015년 : 서울시 공공조달시장 참여 민간기업 전면 시행

재원조달방안

- 구청별 2억여원 × 25개구 자체 재원으로 시행 가능

공약 2 '세모녀 조례'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

목표

- 원스톱 긴급복지전달 체계로 살아갈 수 있는 월세와 생활비 지급
- 사회복지부시장 산하에 원스톱 해결센터를 설치하여 이웃의 신고만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전문상담원을 보내 '긴급지원대상자'를 결정
- 부양의무제 기준을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수급기준 완화

이행방법

- 사회복지부시장제 도입(행정부시장 겸) 및 복지공무원 두배 확충
-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 대폭 확대해 생계, 주거, 치료가 불가능한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
-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대폭 강화
- '교통방송, 지하철·버스·노점 광고'에 민생복지 홍보 할당제를 시행
- '부양의무제 폐지와 기초생활수급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포괄한 세모녀법의 통과

이행기간

- 2014년 : 세월호, 쌍용차, 세모녀 등 사회적 재난 방지를 위한 민생 종합대책 입법화

재원조달방안

- 지난해 50%(971억 → 499억)나 삭감된 긴급복지예산에 대한 추경 편성
- 세모녀법의 통과를 통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과 추가 시비 50억원 소요

공약 3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

목표

- (가정용) 물・전기・가스는 생활필수 공공재로서 기본권 보장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 감축 유도

이행방법

- 물・전기・가스 최저생계 필요 사용량 무상공급
- 초과사용구간 누진 적용 등 요금체계 개편
- 필요에너지 산정위원회(가칭)를 통해 무상구간 설정
-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관련 조례 및 법률 제・개정
  - 에너지 기본 조례 제・개정
  -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관련 조례 제정
  -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조례
  - 재생에너지 지원조례 개정,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조례 제정 등

이행기간

- 2014년 : 빈곤층에게 즉각 실시
- 2015년 :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지원 확대
- 2017년 : 필요 에너지량 산정 및 무상 공급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재원조달방안

- 무상공급 초과 과소비 가구에 대해서 누진요금을 적용할 경우 실재 소요예산을 줄일 수 있음.
-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및 누진 적용을 통한 재원 확보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계정을 신설

공약 5 농약급식 저지 및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목표

- 제초제 사용 및 방사능 검사 없는 농약급식재료(GAP) 확대 즉각 중단
-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

이행방법

- 친환경 식재료 권장비율 원상회복 및 농약급식 중단 촉구
-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타' 등 공적 식재료 유통시스템 구축 강화
- 학교급식 질 향상 민관대책회의 운영(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학부모등)
-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의 잔류농약검사 및 방사능 검사에 대한 정기 합동점검 시행 (교육 관료의 부실 및 부조리 철저 예방)
- 매월 1회 서울시장-교육감-학교비정규직 노조 간의 '학교급식실태 점검회의' 개최

이행기간

- 2014년 : 농약급식 중단, 친환경급식 고 1학년까지 확대
- 2015년 : 고 2~3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재원조달방안

- 고등학생 33만명 700억원 추정 예산(총예산 62조)이므로 예산 우선 순위 조정으로 해결

경기도

공약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목표

① 2012년 제정된 '경기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례'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
- 상시, 고정업무부터 / 직접고용 방식 :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설치

② 경기도 공공부문 1만5천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경기도 52개 직종 단기계약 근로자 전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전원 정규직(상용직)으로 고용함.
- 이후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및 시,군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③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함 (자금지원/임금보전, 행정지원 등)
-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최대 '1인당 30만원, 6개월' 동안 보조 (사업시행과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금' 설치)

④ 계약준수제, 고용영향평가제 등을 통해 민간위탁 규제

이행방법

-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 일용직(일시사역인부)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해 단계적 정규직화
- 60세 이상은 계약해지 금지하고 고용안정 보장
- 과거 2년 업무 기준 폐지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예상 업무 전환
- 계약종료 시점 아닌 특정기간 설정 일괄 적용
- 개인별 평가에 의한 전환제외 방식 아닌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이행기간

- 2014년 : 공공기관 비정규직현황 조사 및 파악, 각종 토론회 개최, 용역조사
- 2015년 :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추가편성
- 경기도 일자리 안정기금 조성 : 1,000억원(2015년~2018년)

공약 2 쌀시장 개방 저지, 농산물 가격문제 해결

목표

① 쌀시장 개방 저지

- 정부는 올 6월까지 쌀 관세화 전면개방 계획안을 정부안으로 확정 짓고 올 9월에 WTO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임.
- 쌀 시장 전면 개방 저지를 위한 경기도 결의안 채택. 경기도 차원의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배제 도입을 촉구하고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에 강력한 의지표명
- 경기도내 쌀 생산 시군을 중심으로 쌀 농가 총회와 쌀 생산자 위원회 구성하여 경기도내 쌀 자급 시스템을 구축

② 농산물 가격안정

- 지난 8년 동안 동결되어온 쌀 목표가격 23만원 인상
-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우선
- 경기도내 농산물 생산량의 50%를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 실시
- 경기도 각 시군별 로컬푸드, 학급급식 등과의 연계 사업 강화
-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농협, 농민단체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품목별 위원회 구성

이행방법

① 쌀시장 개방 저지

- 결의문, 건의안 등을 통한 정부와 국회 견인
- 시군의회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

② 농산물가격안정

- 전국에서 꼴찌인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
- 쌀 농가 총회, 쌀 생산자 위원회 구성

이행기간

- 2014~2018

재원조달방안

- 지역별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 관내 농협 출연금 및 경기도 각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설치

공약 3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제

목표

- 기본생활 필수품으로서 물 · 전기 · 가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 도시가스 등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소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확산 병행추진
-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검토(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이행방법

① 기본 필요에너지량까지 무상 공급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 에너지 사용 및 비용 실태 조사 우선 실시
-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위원회(가칭) 설치
  ·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기본 정책 및 계획 제안·심의
- (물·전기·가스) 기본 필요에너지 산정위원회(가칭) 설치
  · 지역주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연으로 구성
  · 기본 필요에너지량 산정 및 무상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

② 최저생계에 필요한 물·전기·가스요금 우선 지원

③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중앙정부 법 개정촉구

이행기간

- 2014~2018

재원조달방안

-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무상공급시
  - 물 28억 5천만원 / 전기 3백3십억원 / 가스 6백십억원
    · 경기도 전체 가구 무상공급시
  - 물 360억원 / 전기 1조 4천억원 / 가스 2조 7천억원
- 물 무상공급 예산 추계와 같이 평균사용량 초과 과소비 가구에 대해서 누진요금을 적용할 경우 실제 소요예산을 줄일 수 있음.
-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및 누진 적용을 통한 재원 확보
  (전체 전력 평균요금으로 인상할 경우 약 1조 6천억 가량, 일반용요금 적용시 약 5조원 가량, 주택용요금 적용시 약 8조 가량 수입 발생)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계정을 신설하여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원마련, 에너지 소비량 감소와 동시에 소요예산을 줄일 수 있음.

공약 4 1개동 1보건지소 설치, 1개시 1공공병원 건립

목표

① 1개동 1보건지소(건강지원센터)

-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기반 1차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전략은 공공의료의 오래된 과제이고 전략임.
- 주민의 건강증진 참여에 대한 논의 또한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실질적인 주민건강증진 참여 조직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은 미흡
- 1개동 1개 건강생활지원 센터 개설

② 1개시 1공공병원 건립

-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방의료원은 6곳에 불과
- 우리 지역에 질 좋은 공공병원 지정 및 설립
- 기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공공의료 기능 확대
- 지방정부의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예산 지원

이행방법

① 1개동 1보건지소 설치

- 도시지역은 취약계층 밀집 지역부터 설치 확대
- 농촌지역은 읍·면지역에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 혹은 병설하여 관할 보건기관 인력의 통합적 활동을 통해 주민건강생활지원을 강화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충분한 인력확보를 통해 지역 곳곳을 방문하여 지원

② 1개시 1공공병원 건립

- 응급의료센터와 분만실을 갖춘 지역거점 병원 건설
- 시, 군단위의 병상부족분은 일정 병상(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건립
- 운영비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

이행기간

- 2014~2018

재원조달방안

① 1개동 1보건지소
- 539개 읍면동 중 취약지역 50개지역 우선 설치 : 50 × 5억 = 250억(시, 도비)
- 이후 실태조사결과에 기초해 추가예산 편성, 기타 시설설치 및 서비스 제공 재원마련
- 국고보조금 확대

② 1개시 1공공병원 건립
- 기존 6개지방의료원+종합병원 지역을 제외한 10시군 우선건립 : 6 × 500억(시, 도비)
- 국고보조금 확대

공약 5 남북교류확대, 평화특구 건설

목표

① 남북교류확대
- 경기도와 민간,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으로 지원과 연대로 남북교류의 활력 개척
- 지역 고용 확대 등 지역민의 직접 참여 보장
- 장기적으로 지역적,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방식으로 추진함

② 평화특구 건설
- 지금처럼 남북한 긴장고조 국면으로는 어떠한 교류와 협력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게는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제안
- 524 조치로 실질적으로 중단된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방법

① 남북교류확대
- 농촌현대화사업, 양묘장같은 제한적 사업에서 문화, 체육, 학술, 학생, 청년영역으로 대폭 확대
- 반환미군 기지 통일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 파주-개성관 통일마라톤 개최

② 평화특구 건설

- 파주시를 접경지역 최고의 남북교류 사업의 전초기지 도시로 육성
- 고양시를 개성공단 물류배후기지로 육성하여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함
- 평화/통일 관련 기업, 대학, 학술연구단체 적극 유치
-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왕래특구 지역으로 발전

이행기간

- 2014~2018

재원조달방안

① 남북교류확대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대폭상향(잔고 150억 → 1,000억원 조성)

② 평화특구 건설

- 국비반영

인천광역시

공약 1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제 도입

취지

- 가정용 물 · 전기 · 가스는 공공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생필품

목표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 (근거 : 헌법 제34조)

이행방법

- 인천광역시 산하에 「생활필수 공공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 정책 및 계획 수립

재원조달방안

- 소요되는 예산은 산업용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의 특혜를 폐지하여 가정용 수준으로 인상하면 얻어지는 재원과 누진적용으로 얻어지는 재원, 그리고 부자감세 폐지 등을 통해 조달한다.

기대효과

- 모든 생활필수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게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양 만큼만 무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누진을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는 제도이다.

공약 2 생활임금조례 제정으로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취지

- 정부의 최저임금은 한 노동자가 받는 시간당 최저액이고, 생활임금은 한 명의 풀타임 노동자를 가진 가족에게 필요한 임금 수준임.
-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월 108만원인데 보건복지부가 발표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630,820원
- EU 권고사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당 7,399원으로 월 154만원 정도

이행방법

-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 소속 및 출연기관 노동자 그리고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민간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154만원 보장

공약 3 예산낭비 근절 및 지방재원 확충

취지

-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각종 국제행사,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나, 선정과정에서 과장된 예산 타당성 조사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제행사는 SOC사업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지방재정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행방법

- 지자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도록 법령으로 제정하며, 계획부터 타당성 조사, 예산, 결산 전 과정을 지방의회에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는 대신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은 급증하며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음.
- 지난 6년 여간 시행된 감세정책이 지방정부의 지방세 예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세 예산 역시 줄어들어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의 증가율 역시 감소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의 법정 교부율 19.24%를 상향조정하고 복지재정 수요를 감안한 자치단체 배분 방식 개선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감면 특혜를 최소화하고 양도소득세 지방세 환 및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제 전환율 20% 이상 확대로 지방재원 확대 필요함.

공약 4 구립산후조리원 설립

취지

- 전국적으로 2006년 294개소였던 산후조리원이 2014년 기준으로 544개소로 증가했으나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서울과 서귀포에 2개로 대부분 민간시설로 안전 등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어려움
- 산후조리원의 2주간 평균 요금은 199만원으로 하루 이용료가 14만원이 넘어 비용 부담이 큼

목표

- 구립 산후조리원을 시범적으로 설립하여 산후조리의 공공성 확대 필요함.

이행방법

- 군, 구에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로 산후조리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확립

공약 5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및 학습준비물 무상 실현

취지

- 인천은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94.6%, 중학교는 58.6%, 고등학교는 12.9%가 무상급식 실시 중
-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으로 가는 징검다리임

목표

- 중학교 무상급식은 2015년부터 즉각 실시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차후 단계적으로 실시
- 무상 학습준비물도 보편적인 정책으로 점차 정착되고 있음. 인천도 실시하는게 필요함. 학습준비물 무상은 즉각 실시하고, 수학여행, 체험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되 당장 전면실시가 어려우면 저소득층부터 실시

대전광역시

공약 1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제

선정이유

① 물・전기・가스의 비용이 빈곤층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② 가정용 물・전기・가스는 공공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생필품

목표

- 기본생활 필수품으로서 물・전기・가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 감축 유도

이행방법

1) 기본 환경 구축

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민간발전사 특혜 및 대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폐지

② 도시가스 등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소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확산 병행추진 (에너지 효율사업에 의해 가구당 8~4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③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검토(도시가스 미보급지역)

2) 최저생계에 필요한 물・전기・가스 무상 공급

(4인표준가구기준)	월 사용량	월 요금(원)	
전기(주택용)	265kWh	38,423원	2014년 요금 적용
가스	70.7㎥	68,498원	
수도(가정용, 상수도)	3㎥(1인당)	1,417원 (전국 가정용 평균)	

3) 당면 과제

① 기본 필요에너지량까지 무상 공급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② 최저생계에 필요한 물・전기・가스요금 우선 지원

③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 개정 촉구

이행기간

- 4개년 계획에 의한 단계적 시행

재원조달방안

- 누진율 인상 구간을 통한 재원 확보
-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및 누진 적용을 통한 재원 확보(통합진보당 - 대전광역시)

공약 2 청소 · 시설관리부터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전환

선정이유

① 민간위탁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 필요

-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방침에 의해 민간위탁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은 현재 6,990건(광역 1,127건, 기초 5,863건)이며, 보건・복지분야가 42.3%, 환경위생분야가 2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감사원 감사연구원 2013)

② 청소・시설관리 등 민간위탁으로 민간업체 배만 불려

- 청소, 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간접고용직은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기간 내내 최저임금, 연차휴가 사용 불가능 및 임금인상 원천 불허 등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고, 청소・시설관리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의 유착관계로 인한 각종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음.

③ 민간위탁 단계적 폐지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계기

-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결과에 따르면 외주 민간업체의 이윤 등 소요경비가 줄어들어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목표

- 청소・시설관리, 보건・복지분야는 계약 종료 이후 직접고용 시행

이행방법

① 2015년까지 청소·시설관리 민간위탁 폐지 및 임금인상

- 2014년 12월 민간위탁 계약종료에 따른 민간위탁업무 직접고용으로 전환

② 2017년까지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 단계적 민간위탁 폐지

- 보건·복지분야의 영리위주 민간업체 위탁부터 폐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이행기간

- 1단계 2015년까지 -2단계 2017년까지

재원조달방안

- 예산 증감 없고, 절감예산을 노동자 복리후생 등에 충당

공약 3 도시철도 2호선 중단, 버스완전공영제로

선정이유

①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② 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자본잠식상태의 사실상 파산상태에서 시민혈세로 회사운영 지속

③ 버스준공영제 한계 극복

④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고 도시경관문제 등 문제가 많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추진 중단 필요

목표

-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중단
- 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로 전환 실시

방법

①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중단

- 총 사업비 1조 8천억 가량이 투입되며 극심한 적자누적이 예상됨.
- 지상고가방식은 도시경관 훼손, 환승어려움, 운영적자, 안전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점 발생
- 대안으로 충청권광역철도망 조기착공과 BRT의 효과적 활용
- 절감되는 예산을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에 투입하여 이용만족도 높은 시내버스체계 구축

② 버스 완전 공영제

- 버스공영제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의 전환계획 수립
- 적자노선 인수 및 부실업체 퇴출
- 버스 공영제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이행기간

- 도시철도 2호선 중단 : 2014년 즉각 실시
- 버스완전공영제 전환 : 단계적 시행

재원조달방안

- 2호선 건설에 투입될 예산을 절감하여 일부 전환
- 시내버스 초기 인수비용 시비 조달, 운영비용은 준공영제의 이윤율 보장이 삭제되면서 절감되는 예산과 시비로 충당

공약 4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선정이유

①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으로 정착함

② 박근혜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파기

-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걸었음.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2014년부터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했음. 그러나 취임 첫 해부터 교육공약을 파기하여, 2014년 교육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음.

③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첫걸음-무상급식

④ 대전의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현황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

- 2013년 3월 전국 72.6%의 학교에서 실시. 초등학교의 94.6%, 중학교의 58.6%, 고등학교의 12.9%가 무상급식 실시.
- 무상급식학교비율이 대전은 48.8%로 전국 최하위 수준

목표

-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방법

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은 2015년 즉각 실시

②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5년부터 단계적 실시

③ 학교급식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

이행기간

- 중학교 무상급식 : 2015년 즉각 실시
- 고등학교 무상급식 : 2015년부터 단계적 실시(2015년 1학년, 2016년 2학년, 2017년 3학년)

재원조달방안

-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며,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여 무상급식에 배정함.
-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확대 지속적으로 요구 및 정치권과 협의를 강화해 나감.

공약 5 서민에게 활짝 열린 공공병원 설립

선정이유

- 대전시민의 73.3%가 시립병원 설립을 원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는 7%에 불과함.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빼면 거의 100%가 민간임. 민간의료기간의 비중의 너무 높아서 돈벌이 중심의 상업적 의료가 중심이 되어도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가 불가능함.
- 의료기관이 대도시 서울 중심으로 몰려 있으며, 특히 '빅5' 병원으로 쏠림이 심각함에 따라 소수 병원과 나머지 병원 간의 양극화 심화, 지역적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
- 공공병원은 사실상 적정진료와 국민건강, 그리고 고용창출에 투자되는 돈인만큼 지방정부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그렇지 않을 경우 작년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확인되듯이 서민에게 질좋은 공공병원 설립은 요원하게 됨.

목표

- 대전에 질 좋은 공공병원인 대전시립병원 설립
- 건강증진과 질병관리의 체계를 강화하는 거점 마련
- 응급의료센터와 분만실을 갖춘 지역거점 병원 건설

방법

- 일정병상(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
- 의료장비 지원 등 지자체의 지원 강화

이행기간

- 2015년 내에 착공

재원조달방안

- 건립비 2천207억원 예상(500병상)
- 건립비 : 국민건강보험과 국고에서 반반 출자 또는 국고지원
- 운영비 : 적자분 시비 지원

충청북도

공약 1 진천음성혁신도시로 충북도청이전, 충청북도 균형발전 달성

1. 청주권

- 기존 도청 부지를 통합 정주시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
- 연초제조창~수동~상당공원~도청부지를 숲과 문화가 숨쉬는 청주 랜드마크 조성
- 국제기구 유치 등으로 인권과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품격도시로 도약

2. 북부권

- 충주 기업도시에 경제자유구역 본청과 경제통상국 이전
- 충주~제천~단양을 연결한 생활공동체 구축
- 충주의료원 기능의 대폭보강 - 청주의료원 수준으로 지원

3. 중부권

- 충북혁신도시에 도청이전, 수도권-충북도-세종시를 잇는 충북의 사회개조 착수
- 충북도청, 이전 공공기관 등과 함께 새로운 충북도약
- 교육과 첨단산업이 녹아 있는 새 시대 중부권의 중심지로 육성

4. 남부권

- 충북도 농정국, 관광국(신설) 이전을 통해 진짜 균형발전 추진
-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재산정을 통해 대청댐 인근지역개발 기금 마련 및 국토균형발전 철학 재정립
- 남부권의료원(영동) 건립을 통해 남부권 의료생활 연계망 구축 (통합진보당 - 충청북도)

공약 2 버스공영제 실시를 통한 무상버스 실현

목표

- 버스공영제 실시
- 무상버스 실현 등 교통공공성 확대

이행방법

1. 충북교통공사 설립

- 민간 운영 대중버스의 노선을 '(가칭)충북교통공사' 설립 후 인수

2.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대중교통 무상공급 확대

- 대중교통 무상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권과 이동권 두 마리 토끼잡기에 나설 것임.

3. 신교통수단으로 무상버스 운행

- 신교통 수단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4. 비도심 지역에 찾아가는 소형 마중버스 운행

- 도내 농촌지역 등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택시처럼 운행되는 마중버스 교통체계를 구축

5. 농촌학생 통학택시운영/ 공무용 택시도입

- 농촌지역 통학택시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지역 및 도농복합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

재원조달방안 등(소요재원)

- 현재 충북 버스회사에 600억원 지원 중
- 버스완전공영제 실시에 약300억원 소요
- 청소년, 65세이상 고령층 무상버스 운행에 약700억원 소요
- 400억원 추가재원만으로 버스공영제와 무상버스 동시 실현 가능

공약 3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

1.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 안정을 유지하여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

- 최저보장가격을 생산비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생산자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2. 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

- 지역별 조례제정 및 기금조성 : 관내 농협출연금 및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3.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약

- 농축산물 생산량의 50%를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 실시
-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로컬푸드, 학교급식 운동 등 다양한 지역운동과의 연계
- 국내산 농산물이 안정된 물량과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약재배를 활성화함. 계약재배로 수매 물량과 수매가격이 고정되면 계약재배 범위내에서는 농민피해가 최소화될 것임.
- 지자체와 농협, 농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품목별 위원회 구성

공약 4 노동이 아름다운 충북건설

1. 생활임금 조례제정으로 충북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 현재 최저임금은 최하위 임금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생활임금으로 하는 생활임금 조례제정

2.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공공기관에서 시작, 단계적 확대

- 청소, 시설관리부터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으로 전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 일용직(일시사역인부)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3.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 노동자 생명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기능 확대필요
- 관내 모든 공사의 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지원

-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실질적 운영

5. 청년 일자리 5% 지원조례 제정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청년의무고용제 5% 실현 조례 제정 및 정원확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업무 협약을 맺어 재정지원과 함께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공약 5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 실시

현황과 문제점

-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으로 최소한의 서민 생존보장
- 우리사회의 비극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서
- 가정용 물, 전기, 가스는 공공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생필품
-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에너지 지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에너지 감축이 필요함.

목표

-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 실시

이행방법

- 1단계 : 최저생계에 필요한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 ⇨ 최저생계기준 물, 전기, 가스 사용량 무상공급
- 2단계 : 물, 전기, 가스 기본 필요에너지량 무상공급

재원조달방안 등

- 누진율 적용 및 과다사용구간 요금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
-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및 누진적용을 통한 재원확보

강원도

공약 1 무상복지 5대 핵심과제 실현

1. 국민기초생활재인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물・전기・가스 최저생계 필요에너지량 무상공급 즉각 실시
- 관련 법률 및 조례 제・개정
  - 강원도의 〈에너지 기본 조례〉를 〈필수 에너지 기본 조례〉로 개정
  -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관련 조례 제정
  -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조례 제정
  -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실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2.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3. 체험학습비 및 교복 무상지원조례 제정으로 무상교육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체험학습비
  - 현재 초등학교는 전체, 중・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체험학습비가 조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고 해당 학생 전체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중학교, 고등학교 11만명×10만원=110억이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무상교복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중・고교 신입생 3만3000명에게 1인당 약 2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60억원의 재원 소요. 강원도교육청과 예산 분담 협의하겠습니다.

4. 젊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단설 유치원과 공공 어린이집 확대/증설을 추진 하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들을 늦게까지 돌봐주는 질좋은 단설 유치원은 강원도 전체 14곳 밖에 안됩니다. 이를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강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83개로 전체 1265곳의 6.5%에 불과합니다.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50%, 1개 동 1개 읍・면당 1개 확충을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민간어린이집의 공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5. 아동들을 위한 단계적 “아동 치과 주치의제” 실행을 추진하겠습니다.

- 구청별 2억여원×25개구로 자체 재원으로 시행 가능

공약 2 농민이 대접받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1. 강원도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전국 17개 자치도,시,군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또는 최저생산비 지급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관내 농협 출연금 및 지자체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농축산물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 보전해 주겠습니다.

2. 반값농자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2012년 농협중앙회의 비료업체 공개입찰 과정에서 비료업체들은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지난 15년 동안 1조6천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가격만큼 농민들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원가 공개를 하고 농약값, 사료값, 비료값 등 생산비 반값 실현을 위한 강원도와 시,군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 재해보험 가입비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 이상기온으로 인한 대형자연재해 빈발로 농업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주요 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복숭아, 포도)의 경우 45.1%로 농가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해보험비에 대한 농민 부담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조례제정 및 예산 확보로 현행 농민 자부담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겠습니다.

4. 농촌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 경로당에 급식·난방비 지원 확대,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 2014년 경로당은 정부로부터 동절기(1~3월, 11~12월)에 난방비로 월 30만원, 폭염기(7~8월)에는 냉방비로 월 5만원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4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 34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7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를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 75세 이상 노인 틀니 개인부담(50%) 전액 지자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농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농민의 목소리를 강원 농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약 3 노동자가 대접받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1. 강원도청에서부터 비정규직 없애겠습니다

- 2015년까지 강원도청과 산하기관 청소・시설관리 민간위탁 폐지 및 임금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시 민간업체에 보장하는 이윤이 없어지고, 비정규직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간접고용직 직접고용 비용 추계〉

연도・대상	항 목	민간업체		서울시 직접고용
2012년 12월 (청소직)	관리비	415억원	⇒	254억원 (39% 인하)
	인건비	658억원		765억원 (16% 인상)
2014년 1월 (시설・경비직)	관리비	315억원	⇒	260억원 (17.5% 인하)
	인건비	343억원		397억원 (15.7% 인상)

2.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례를 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 일용직(일시사역인부)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해 단계적 정규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최저임금 154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을 조례 또는 지침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생활임금을 5,580원으로 확정하였음. 성북구와 노원구도 연구용역으로 노동자 평균임금(2013년 2,577,417원)의 58%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시간당 6,850원 월 143만원)

〈강원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예산 추계〉

(단위 : 만원)

인 원	임 금	154만원 인상분	월총액	연 총액
399	100	54	61,446	798,798

4.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으로 최저임금 감시와 노동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5.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공약 4 "강원도에 어울리는 강원경제"를 만들겠습니다.

1. 강원도가 나서 대형마트 규제하고 재래시장을 보호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2.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로컬푸드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강원도 농민과 소비자가 다 만족하게 하겠습니다.

3. 동해를 "동북아의 지중해"로 만들겠습니다.

- 동해는 4개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해는 4국간의 자원과 사람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자원이 동해를 통해 들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고, 동해안 지역을 러시아와 중국 동북 지방으로 가는 물류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동해안 시대를 더욱 활짝 열겠습니다.
-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남북간의 철길을 연결시킴으로써 동해안을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4. "강원도은행"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5. 알펜시아 동계스포츠 지구 정부 매입을 추진하여 매일 1억8천만원의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공약 5 "평화통일 강원도, 청정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1. 강원도를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① 강원도를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한 환경부터 조성하겠습니다.

- 금강산 관광 즉시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 금강산-설악산 통일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강원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생태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해안에 평화의 바다공원 및 남북 공동 조업 구역을 설치하겠습니다.
-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건설로 동해안 남북 철도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② 민과 관이 함께 “평화통일강원특별자치도” 추진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2. 삼척핵발전소 건설 저지,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저지로 “청정 강원도”를 지키겠습니다.

① 삼척핵발전소 건설 막아내는데 삼척시민과 함께 하는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② 불·탈법으로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은 인허가를 취소하고, 강원도 골프장 총량제 실시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③ 강원도의 자연조건에 맞는 풍력발전, 태양발전 등 친환경대체에너지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공약 1 울산생활임금 도입

선정이유

- 울산은 1인당 지역총생산 6,330만원 1위, 1인당 연소득 4년째 1위(4인가족 기준 7,324만원)로 부자도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월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11만 3천가구(26.6%)나 됩니다. 45만 울산노동자 중 23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국민 누구나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활임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

- 2014년 기준 시급 7,510원, 월 1,569,590원(주 40시간 기준)의 울산생활임금 도입
  ※ 매년 기준이 달라집니다.
- 산정방법 : 노동자 평균임금 60% + 울산소비자물가상승률

이행방법

- 1단계 :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지방공기업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 2단계 :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및 발주사업 단체 및 사업체
- 3단계 : 민간기업과 생활임금준수 협약추진. 생활임금 도입시 공공사업 입찰 인센티브 제공

이행기간

- 1단계 2015년 적용. 2단계 2017년. 3단계 지속추진

재원조달방안

- 1단계와 2단계는 울산시 예산, 국비(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에 따른). 3단계는 비예산 사업

공약 2 45만 노동자가 함께 누리는 현장복지 실현

선정이유

-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을 만들어 온 것은 노동자들의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노동자들은 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가 4명이나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석유화학공단 화재 폭발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산업도시라는 이름하에 지난 12년 동안 재벌도우미 시정을 펴 온 탓입니다.
- 이윤중심, 재벌중심 사회를 사람중심, 생명중심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목표

- 24시간 산재 및 임금,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는 전태일 콜센터 설치
- 울산 17개 산업단지 및 공단별 노동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목욕탕, 주차장, 공공행정센터, 건강증진센터, 식당 등 맞춤형 건립)
- 울산광역시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 24시간 산재 및 직업병 재활을 위한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건립
- 30~40년된 낡은 산업단지를 안전한 산업단지로 전면 리모델링
- 현장 위험시 노동자 작업중지권 제도 시행

이행방법

- 1단계 : 노동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광역시 울산추진위원회 구성 및 로드맵 확정
- 2단계 : 우선순위별로 사업 추진
- 3단계 : 노동광역시 울산추진위원회가 지속적인 사업평가 및 후속추진계획 수립 및 시책 입안

이행기간

- 전태일콜센터 2015년. 퇴직자지원센터 2016년. 산업단지별 종합복지관 및 안전산단 리모델링은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방안

- 국비(국가산단 국세 중 10%), 울산시 예산

공약 3 노동부시장 중심으로 일자리는 만들고, 차별은 없애고,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울산 건설

선정이유

- 노동자가 행복해야 울산이 행복해집니다. 노동광역시 울산은 일하기 좋은 울산입니다. 노동광역시 울산을 추진할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합니다. 노동부시장을 임명해 노동광역시 울산을 중단없이 추진합니다.

목표

- 노동부시장 임명
-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및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공무원 채용할당제 도입
- 청소년 인권보호(학교 노동인권교육 전면실시. 알바권리보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지원(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 현장 발암물질 및 금지물질 사용 자체감시권 도입

이행방법

- 1단계 : 2015년 정기인사에서 노동부시장 임명
- 2단계 : 각 사업 추진 위한 의견수렴 및 협의. (할당제) 법개정 요구
- 3단계 : 이해당사자 합의된 사업부터 추진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조례 재개정부터 시작해 2017년까지 사업시행. 계속사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재원조달방안

- 울산시 예산, 국비, 민자

공약 4 고교무상교육,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

선정이유

- 전남은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이 95%이고 전국 평균은 72.6%인데 울산은 36%, 17개 시도 중 대구 다음으로 최하위입니다. 사회복지예산 많다고 매년 얘기하지만 울산시 전체예산과 비교하면 세종시 빼고 전국 시도 중 꼴찌입니다.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라는데 복지는 왜 이럴까요? 성장과 이윤추구가 상식이 아니라 복지가 상식인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목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특목고,자율사립고 추후검토)
- 공공 청소년 문화체험 시설확대 및 청소년 지도사 의무배치
- 울산 230개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56개 모든 행정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이상 설치
- 부모 맞춤형 보육시설 구별 1개소 이상 운영(시간연장, 24시간)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 시행(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이행방법

-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3학년부터 시행

-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민의견 수렴 통해 우선순위 결정 후 추진
- 치과주치의는 지역 병의원과 협약 체결 후 시행

이행기간

- 2016년 이내 사업 시작.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8년까지 단계적 추진

재원조달방안

- 국비, 울산시 예산, 구군비

공약 5 주거, 교통, 의료 보장으로 생활의 행복을 높입니다.

선정이유

- 울산교통혼잡비용 6,714억, 증가율 24% 전국 최고. 대책 필요
- 노인요양병원 빼고 보건소가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울산. 전국 산재병원 일반환자 이용 48%. 울산 산재모병원도 일반환자 이용 필요.
- 주택보급율은 106% 그러나 집없는 사람이 40%가 넘는 울산

목표

- 전면적인 노선개편, 맞춤형 출퇴근 버스, 25세 미만 청소년 100원버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로 대중교통의 혁신을 만들어갑니다.
- 서민 부담없는 장기임대주택 2천호 공급
-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전세자금 미반환 시 단기전세자금 지원,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 산재모병원에 공공병원 기능 추가
- 택시 휴게소 설치, 공공기관 업무용 택시 도입, 불법택시회사 신고포상제 시행

이행방법

- 교통 : 버스공영제 중장기계획 수립-적자노선 공영화-버스노선개편-완전공영제 추진. 무상버스는 2016년 도입
- 주택 : 전월세 지원센터 설치. 지역금융기관과 협약체결
- 공공의료 : 산재모병원에 공공의료센터 설치.

이행기간

- 산재모병원 공공의료센터는 건립과 맞추어 진행. 버스공영제 및 무상버스는 2016년 시작해 2022년까지 완료. 전월세지원센터는 2015년 시행

재원조달방안

- 국비, 울산시 예산, 산재기금

경상북도

공약 1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선정이유

- EU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최저임금으로 권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하임금이라 할 수 있음.
- 단신노동자의 한달 평균 생활비 151만원, 보건복지부의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을 조례 또는 지침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음.

목표

-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출연기관 등 노동자의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지급

이행방법

-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행기간

- 2014년 ~

재원조달방안

- 도 자체 재원으로 시행

공약 2 쌀 시장 전면개방 저지(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선정이유

-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1995년~2004년까지 10년간 쌀에 한해서만 (시장개방)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수입하기로 약속함. 1995년 국내소비량의 1%에서 2004년 4%(20만5천 톤) 수입 조건이었음. 이후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른 관세화 연장조치로 10년간 다시 유예되어 2014년 올해 만료됨.
- 2004년 쌀 협상결과에 따라 의무 수입물량 중 10%~30% 수준을 밥쌀용으로 국내에 시판하게 되어 있음. 2013년 MMA 쌀 도입물량은 388,353톤이고 이중 밥쌀용 쌀은 116,505톤임.
-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2012년 기준 4백만6천 톤으로 작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나, 매년 벼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어 생산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 쌀은 농민에게 생존권의 문제이고 국민에게는 건강을 책임져주는 소중한 주식이며, 국가에게는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주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쌀 시장 전면 개방은 올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손꼽힘.

목표

① 쌀 시장 전면 개방 저지를 통해 식량주권 강화

② 국내 쌀 생산 기반을 지켜 식량자급률 향상

③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방법

- 정부는 올 6월까지 쌀 관세화 전면개방 계획안을 정부안으로 확정 짓고 올 9월에 WTO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임. 민주당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쌀 관세화 전면 개방 불가피론 입장을 갖고 있음.
- 반면 전농을 비롯한 진보적 농민 단체는 정부의 쌀 관세화 전면개방에 맞서 현상유지안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쌀 시장 전면 개방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성 등 범국민적 저지운동을 준비하고 있음.

- 쌀시장 전면개방 문제를 선거쟁점화 하여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여론을 농촌지역에서 부터 확산
- 결의문, 건의안 등을 통한 정부와 국회 운동 전개
- 쌀 농가 총회, 쌀 생산자 위원회 구성

공약 3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제

선정이유

① 물・전기・가스는 공공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생필품

- 물・전기・가스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건 및 환경을 유지하고 식료품을 섭취 가능하도록 취사를 해야 하며, 체온을 유지해야 함. 이를 위해 누구나 최소한의 전기, 상하수도와 취사 및 난방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② 물・전기・가스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급받고 누려야 할 기본권적인 성격을 지님.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 (헌법 제34조)

③ 우리사회의 비극,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 지난 2월 26일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구의 세 모녀가 동반자살을 했고, 이후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약하기만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도 등의 공공부조제도 역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

④ 급증하는 전력수요 등에 대하여 에너지 감축이 필요함.

⑤ 물・전기・가스 민영화는 요금폭등을 초래함.

목표

- (가정용) 물・전기・가스는 생활필수 공공재로서 기본권 보장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 감축 유도

방법

1)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기본 설계안

⇨ 물・전기・가스 최저생계 필요 사용량 무상공급

⇨ 초과사용구간 누진 적용 등 요금체계 개편

⇨ 필요에너지 산정위원회(가칭)를 통해 무상구간 설정

① 필요 에너지량 산정 및 무상 공급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② 빈곤층에게 즉각 실시

③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지원 확대 (2015년부터)

2)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공약 4 돌봄의 사회화(보육 서비스 다양화/ 방과후 돌봄/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 급식 실시/ 가족 돌봄/산부인과 확충 및 지역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선정이유

-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군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되어 농촌지역 면단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거의 없고 영세한 민간어린이집이 대부분임. 보육교사의 근로조건도 열악하여 보육교사가 농촌에서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음.
- 올해 돌봄교실 시행 발표했으나 돌봄 교실 대상이 1-2학년으로 한정됨.
- 농촌지역은 일정 수입을 보장받지 못해 급식사업을 포기하는 민간업체가 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농산물 납품을 맡으며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음.
-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부모의 가족 간호를 자녀 양육 못지않게 심각하게 고려해야함.
- 201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140개 시・군 대상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 점검 결과를 발표했음.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내과・한방과・치과・물리치료실의 이용이 가능하나 산부인과가 부족하였음.

목표

-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전체의 50%로 확대
-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
- 초등학생 전학년에게 방과 후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
-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안정적 농가소득 마련
-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억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전체 요양기관의 최소 30%까지 확대
- 농촌 거주 여성들이 출산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여 젊은층의 농촌거주 장려

방법

-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조례 제정
- '방과 후 활동 조례' 제정으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역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시설에 대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지자체 지원 강화
- 각 시도 교육청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높이도록 예산 확대
-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설립과 확대 계획을 명문화한 공공요양원 설립 조례 제정
- 지역 내 산부인과 병원과 연계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공약 5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자립 활동 보장

선정이유

- 장애인의 64.9%가 버스나 택시 이용 불편 경험
- 보도육교나 지하보도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동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①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자 지나치게 제한

- 활동보조서비스가 5만 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장애인은 36만여 명(전체장애인의 13.9%)에 이름. 결국 15%의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신청 자격 1급으로 제한하고, 신청자에게는 다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판정하고 있음.

② 활동지원 급여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③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 제약

목표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
-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방법

- 2018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 광역시도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조례 제정 또는 개정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지원센타 설치, 시군구 이동지원센타 네트워크 구축
-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와 보도 정비 및 교통 및 여객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

①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 활동보조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②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등급 폐지
- 활동보조 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경상남도

공약 1 진주의료원 재개원

현황

- 경남의 경우 2012년 농가는 137,505(통계청)가구, 농가인구는 327,932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이중 이른바 “의료취약지역”인 서부권과 군부의 농가인구는 70%(95,843)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의료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어, 몸이 아파 제때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2012년 농식부가 발표한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적·신체적 장애 증후군」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의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이 비농업 종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목표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업인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

이행방법

- 해당 자치조례 재개정

이행기간

- 2014년 ~

재원조달방안

- 조례 개정 사항으로 재원 필요 없음.

공약 2 '미래농업과학단지' 조성

현황

-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농촌의 경쟁력이 도시에 비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음.
- 따라서 약화된 농업·농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하고, 농촌의 특색 있는 자원활용을 위한 연구지원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 제고가 필요함.
- 농업과 관광·유통·가공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극대화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제고가 필요

목표

- 미래농업과학 단지 조성

  ① 역할 및 기능

  - 농업을 대표함과 동시에 미래 농업의 비전 제시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미래의 농업에 대한 연구, 미래 농업에 대비한 기술연구와 대책 마련
  - 주변 농업 관련 시설 및 자원 연계를 통해 경남 농업·농촌에 이해도 제고

효과

- 미래 농업대안 미래 비전 제시
- 도·농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행기간

- 2015년~

공약 3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

현황

- 자연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은 풍작이 나도 가격 하락으로 고통 받고, 흉작이 나도 해당농산물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됨.
- 정부의 가격지지정책인 수매비축사업은 수매량이 미미하고 수매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유명무실한 상태임. 농사에 투여한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1970년 80.6%에 달하던 식량자급률이 최근 전체 식량자급율은 40%대이고, 식용과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20%대로 급락하였음. 중국은 식량자급률이 87%이지만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식량 안보에다 둘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차기 작형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 단체, 산지유통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목표

-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

이행기간

- 2015년

재원조달방안

- 조례 제정을 통한 기금 조성

공약 4 무상급식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

현황

-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010년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하면서, 2013학년도까지는 모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를 약속함. 또한 로드맵대로 하면 2014학년부터는 동지역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었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상급식을 처음의 약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목표

- 2016년까지 경남지역 모든 '초중고'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방법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개정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

이행기간

- 2014년~

공약 5 2015년을 '원전하나 없애기 원년' 선포

현황

- 우리나라는 세계 제10위 에너지 소비국이자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고립국가이다.
  - 총 전력 생산량의 95.5%를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와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규모는 원자력 23.8%, 화력 60.5%, 기타 8.2%이다.
- 특히 원자력 발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몰고 온 후쿠시마 원전붕괴로 일본 전역을 넘어 우리나라까지 공포로 몰아 넣었다.
  - 따라서 2015년 '원전하나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원자력발전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에너지 수요 절감,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목표

- 2020년까지 고리원전 1호기에 맞먹는 원전 줄이기 실천 활동

방법

- '원전하나 줄이기' 도민위원회 구성
- 에너지 자립마을 100개 선정
- 친환경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행기간

- 2015년~

대구광역시

공약 1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목표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 부당해고자 복직 추진
- 공공부문 노동자 생활임금 154만원 보장

이행방법

-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 공공기관 부당해고자 복직 추진(대구도시철도공사 해고자 등)

이행기간

- 2014년 ~

재원조달방안

- 시 자체 재원으로 조달

공약 2 1,000개 협동조합으로 1,000개 골목경제 살리기

선정이유

- 대구시의 경제 침체를 불러 온 가장 큰 원인은 새누리당의 장기독점 하에서 재벌을 향한 일방적 구애, 투자 유치에만 집중한 것.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만 기대는 해바라기식으로는 대구경제의 희망은 없음.
- 이런 외래 의존적 경제 전략에서 내발적 상생경제로 새롭게 변모해야 함. 이른바 한탕주의 '로또 프로젝트'식의 편향을 버리고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선순환되는 지역경제 시스템으로 탈바꿈해야 함.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증대 필요

목표

- 1,000개 협동조합으로 1,000개 골목경제 살리기

방법

-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과 협동경제 지원 예산 확충(13년 현재 6,0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 협동조합지원기금 조성

이행기간

- 2014년 ~

공약 3 청년 특별지구 '청춘 빌리지' 조성

선정이유

- 계명대 김영철 교수가 발표한 대구경북 청년의 수도권 유출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금'과 '여가 및 문화 생활 향유의 기회'가 직장 소재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대구지역 가장 취약한 내용 중 하나가 문화관련 컨텐츠가 없음.
- 이는 청년계층도 마찬가지이며, 내용도 부족하지만 공간적, 물리적 제약이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치맥페스티벌, 김광석 거리, 근대화의 거리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 사업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고용창출과 브랜드 가치 향상의 효과가 있음.
- 현재 일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비용의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

목표

- 청년 특별지구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주거, 생활, 문화 복합공동체를 실현함.
- 청년 특별지구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고, 시장을 형성함.
- 청년 특별지구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복합 문화공간으로 형성함.

방법

- 대구시 차원의 특별 지구를 '청춘빌리지'를 조성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대구의 랜드마크로 건설함.
- 도청 후적지를 활용하며 '청춘빌리지'를 조성,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창업창업지원센터 등의 청년관련 기관이 입주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공간을 분양함. 광장, 문화로 등을 형성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형성함.
- '청춘빌리지' 내에 청년공공임대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함.
- 청년몰, 공공영화관 및 극장, 야외공연장, 청년창업밸리 등을 조성함.

공약 4 반값 공공 산후 조리원 건립

선정이유

-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도시가 미래 지향적 도시임.
  - 그러나 여러 가지 출산대책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출산 후 산후 조리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는 복지가 없는 게 현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 출산과 더불어 산후 조리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에 의존하다 보니 서비스 질에 비해 사용금액은 턱없이 높은 편임. 2013년 기준 544개소로 2006년 294개 대비 85%가 증가한 추세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 산후조리원은 제주 서귀포시, 서울송파 구립 2곳뿐임.(2013년 제주도 서귀포시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평균 199만원, 하루 이용 14만원이 넘고 있음.
- 2014년 4월 현재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 산후 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되어 시행 준비 중.
- 대구 지역 역시 저출산 시대에 맞는 산모들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구현해야 함.

목표

- 소득 편차로 인한 차별 산후조리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주도적인 공공 산후 조리원 설치로 사후조리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확립.

방법

- 산후 조리원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 현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 사업을 평균소득 70%이하까지 점차 확대 시행 추진.
- 셋째아이 이상, 결혼 이주자, 장애아, 장애모, 한부모 가정 등등 소득관계 없이 산후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 지자체 운영하는 공공 산후 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약 5 고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선정이유

-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으로 정착한 무상급식 :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한 복지 이슈였고,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공동 공약이었음. 현재는 진보-보수 교육감 구분 없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착되었음
- 박근혜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파기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걸었음.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했음. 그러나 취임첫해부터 교육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공약을 파기함.
- 무상급식 공약의 유효성 : 2013년 8월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교육만족도 조사를 보면 광주교육청이 가장 잘한 사업으로 교사, 학부모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을 뽑았음.
- 대구는 전국 최저의 무상급식 시행 도시 : 2013년 3월 전국적으로 72.6%의 학교에서 실시. 초등학교의 94.6%, 중학교의 58.6%, 고등학교의 12.9%가 무상급식 실시. 진보교육감 지역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보수교육감 지역은 부산 48.7%, 대구 16.6%, 울산 36.6%로 지역에 따라 교육복지 혜택의 차이가 명확하게 벌어졌음. 그 중 대구는 최악이라 할 수 있음.

목표

-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은 2015년 즉각 실시
-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5년부터 단계적 실시
- 학교급식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

방법 및 예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개정)
-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 교육청과 협조해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

-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총 1조3천억원 정도의 예산 소요
-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며,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여 무상급식에 우선 배정함.
- 고교 무상급식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정치권과 협의를 강화해 나감.

부산광역시

공약 1 간첩조작, 내란조작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간첩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마민중항쟁, 87년 6월항쟁 등 독재정권 시기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부산의 모습처럼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습니다.
- 부산시장이 되는 즉시 민주주의 수호,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위한 부산시장 시국선언을 하겠습니다.

목표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이행방법

- 민주주의 수호,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부산시장 시국선언
- 200억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 광역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500억)과 인천(100억)이 유일, 부산시민들과 함께 200억 예산을 함께 구상해 쓰고자 함.
- 민주공원 예산확대 및 민주시민 교육원 설립
- 시민사회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

공약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간위탁폐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청년층의 고용불안은 더욱 높습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좋은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경우에서 보듯이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부산시민들이 발의했으나 의회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청소/시설관리직에 대한 민간위탁을 폐지해 직접고용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목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위탁 폐지

이행방법

- 학교비정규직에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청 소속으로 전환 추진
  - 전 직종 무기계약 대상 적용
  - 호봉제 도입 등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도입 적극 추진
- 공공기관의 청소/시설관리직에 대한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 전환
  - 2014년 12월 민간위탁계약종료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를 2015년까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함. 서울시의 경우 직접고용이 민간위탁보다는 임금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질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5천개 직접창출
  -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 사업을 흡수해 일시적 형태의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 일자리를 만듦. 방문산후조리서비스/보육/장애인활동보조/노인요양 등의 일자리,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임금을 적용

공약 3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버스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부산지역 33개 버스업체중 절반에 해당하는 14개 업체가 자본잠식상태였으나 준공영제 시행으로 절반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서비스 수준향상과 비용절감 동기요인 저하로 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 한해에 1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대한 완전공영제를 실현해 대중교통을 부산시민의 공공재산으로 만들고 지하철과 함께 통합적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고 예산절감효과(신안군사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

-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시행

이행방법

-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 환승요금 폐지, 버스요금 단계적 인하
- 1단계 환승요금 폐지, 2단계 마을버스비 무료화, 3단계 버스비/지하철비 인하
- 부산버스교통공사 설립 및 부산교통공사와의 통합
-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공약 4 생활임금 157만원, 저소득층부터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제로 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세모녀의 자살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복지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복지의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월 157만원(노동자 평균임금의 60%)을 생활임금으로 해 공공부문부터 저임금 일자리를 없앨 뿐아니라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사회안전망을 수립하기 위해 물, 전기, 가스를 생활 필수 공공제로 지정하고 무상공급제를 도입해 민주노동당 시절 복지논쟁에 앞장섰던 것처럼 제 2의 무상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목표

- 복지시스템 구축

이행방법

- 생활임금제 도입, 157만원 생활임금 보장
-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제 시행
-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확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 보건지소 설립 확대

공약 5 평화통일에 앞장서 부산을 동북아 평화물류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통일과 물류는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부산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는 부산을 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갈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 2002년 아시안게임때 보여준 부산시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정을 기억하며 부산을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 물류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목표

- 부산을 평화통일 물류중심 도시로

이행방법

-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부산 입항 금지
- 대북교류사업 활성화
-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재추진 및 선박금융공사 설립
- 화물운송 직거래 활성화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전라북도

공약 1 쌀값 23만원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목표

- 쌀값 23만원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이행방법

- 지역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및 기금 조성 : 관내 농협 출연금 및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
- 농·축산물 생산량의 50%를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 실시
- 로컬푸드, 학교급식 운동 등 다양한 지역운동과의 연계
-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
- 지자체와 농협, 농민단체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품목별 위원회 구성
- 자가소비(생산량의 30%) 외 물량 전체를 대상
- 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목표가격 23만원을 실현

재원조달방안 등

- 전북 2013년 쌀 생산량 68만 1천톤(8,512,500가마, 쌀 80kg)
- 자가소비 20만 4천톤 / 가외매출 47만 7천톤
- 자가소비 외 23만원 보장할 때 소요예산 2,504억 3천만원
- 기존지원금 1710억(고정직불금 1,105억+지방정부지원 605억)
- 2,504.3억 − 1710억 = 794.3억원(필요추가예산)
- 전북 2014년 총예산 4조 5819억 / 농업예산 7399억

공약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생활임금 154만원 보장

목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생활임금 154만원 보장

이행방법

- 민간위탁 폐지, 공무직 신설로 정규직 전환
-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 무분별한 민간위탁 금지 및 재직영화
-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출연기관의 노동자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지급

이행기간

- 우선 공공기관의 청소/시설관리를 비롯한 각종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설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시킴
- 2015년까지 생활임금 조례 제정

재원조달방안 등

- 단계적으로 공공기관(도 소속 : 250여명)부터 시행함
- 다른 도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 〈참고〉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결과에 따르면 외주 민간업체의 이윤 등 소요경비가 줄어들어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단기적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간접고용직 직접고용 비용 추계〉

연도 · 대상	항 목	민간업체		서울시 직접고용
2012년 12월 (청소직)	관리비	415억원	⇒	254억원 (39% 인하)
	인건비	658억원		765억원 (16% 인상)
2014년 1월 (시설 · 경비직)	관리비	315억원	⇒	260억원 (17.5% 인하)
	인건비	343억원		397억원 (15.7% 인상)

* 민간업체에 보장하는 이윤이 없어지고, 비정규직 임금이 인상

공약 3 만 천개 일자리 지키기

현황

-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전북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어 임금이 개선되고, 삶과 생활이 여유로워질 때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음.

목표

- 만 천개 일자리 지키기

이행방법

- 한국지엠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만 천개 일자리 지키기
- 외국투자자본 먹튀 방지책 마련 및 협력업체 지원 방안 마련
- 외국자본 비정규직 지원 및 협력업체 지원

❖ 현황
-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라북도 수출량의 30%, 군산시 수출의 50%를 담당.
- 한국지엠 군산공장 자동차 생산량 2014년 10만대 (목표량)
  2012년 21만1천대 / 2013년 14만2천대
- 12만4천명(2013.10월 취업자) 中 1만1천여명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규직과 사내·외 협력업체 직원.
-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위기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

재원조달방안 등

- 총 150억원 마련 : 도비 100억원, 지방비 50억원
- 기업투자 유치비 : 232억원 (국비 : 82억원, 도비 : 150억원)

공약 4 물 · 가스 · 전기 무상쿼터제 실시

목표

- 물 · 전기 · 가스의 생활필수 공공재로서 기본권 보장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 감축 유도

이행방법

- 기본 필요 에너지량까지 무상 공급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 에너지 사용 및 비용 실태 조사 우선 실시
  -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위원회(가칭) 설치
    -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정책 및 계획 제안 · 심의
  - (물 · 전기 · 가스) 기본 필요에너지 산정위원회(가칭) 설치
    - 지역주민, 전문가,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
    - 기본 필요에너지량 산정 및 무상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
- 최저생계에 필요한 물 · 전기 · 가스요금 우선 지원
-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 개정 촉구

재원조달방안 등

- 물 · 전기 · 가스 누진율 적용 및 인상 구간을 통한 재원 확보
-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및 누진 적용을 통한 재원 확보
- 물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지급 예산 : 약 13억 8천만원
- 전기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지급 예산 : 약 158억원
- 가스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지급 예산 : 약 212억원
- 전라북도 가용예산 3,750억 중 일부를 충당

공약 5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목표

-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 전라북도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 도민 교통서비스, 발걸음도 가볍게 주머니도 가볍게 이동의 자유를!

이행방법

- 버스공영제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 노선 조정 및 적자노선 인수
- 적자노선 인수 및 부실업체 퇴출(민관 혼합형)
- 시내버스 서비스 심사평가위원회, 버스공영제 시민운영위원회 구성
- 대중교통 공영제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재원조달방안 등

- 현행 보조금과 승객버스비로 가능

❖ 추계
- 총비용 : 약 1470억원
  - 전라북도내 시내버스수 : 980대
  - 차량 1대당 운영비 (차 할부금, 정비, 인건비 등 포함) : 1억 5천만원
- 현행지원금 및 버스운행수입 합계 : 1450억원
  - 도 및 시군지원비 : 년간 약 600억원
  - 전주 시내버스비 : 년간 약 500억원
  - 익산, 군산 시내버스비 : 년간 약 350억원

전라남도

공약 1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제를 도입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목표

- 생활임금보장으로 도민 복지 증대
- (가정용) 물 · 전기 · 가스 생활필수 공공재로서 기본권 보장

이행방법

①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제 실현**

- 단기과제 – 관련 법, 조례 정비
  -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관련 조례 및 법률 제 · 개정
  -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제 기본 설계안 마련
  - 필요에너지 산정위원회(가칭)를 통해 무상구간 설정
- 장기과제 – 필요 에너지량 산정 및 무상 공급을 위한 4개년 계획 수립

② **생활임금 보장**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생활임금조례 제정

  * 생활임금 월 154만원 보장
- 담당부서 계획입안, 도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

이행기간

-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제 : 빈곤층에 즉각 실시
-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 확대 : 2015 ~
- 생활임금 보장 : 즉시 시행

재원조달방안

① **물 · 전기 · 가스 무상공급제**

- 평균사용량 초과 과소비 가구 누진요금 적용으로 소요예산 감축
- 농업용을 제외한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및 누진 적용을 통한 재원 확보
  참고 : 일반용요금 적용 시 전국 약 5조 원, 주택용 요금 적용 약 8조 가량 수입발생
- 관련 법령 제정 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비 배정

② **생활임금 지원** : 도 자체 예산 + 국비

공약 2 농민 · 어민이 잘사는 제대로 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목표

- 농민 · 어민생존권 보장, 통일농업 준비, 자주농업 실현

이행방법

① **벼경영안정대책비 지급을 확대하여 80kg 쌀 소득 23만원 보장**

② **전라남도 주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조례 제정**

-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가격이 보장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 지원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③ **전남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30만원 지원**

- 6~7개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85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④ **중 · 소농(부업 축산농)에 대해서는 조사료 직불금 확대, 종합지원 대책 마련**

⑤ **통일농업교류협력단 구성** - 전남의 농축수산물과 북의 지하자원 교환

⑥ **식량주권 사수**

- 쌀 전면개방 저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반대, 한중FTA 저지!

⑦ **한국농업 자립기반 구축** - 대한민국 농업수도 전남

-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종합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단지 조성

⑧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 보조사업 전면개선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진단과 종합대책 마련

⑨ **수산업 육성, 어민의 최저생계 보장대책 마련**

- 품목별 연구생산체계 구축, 수산 전문대학 유치
- 국내산 수산물 가격안정과 어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책 적극마련

이행기간

- 즉시 : 자주농업 실현를 위한 목표는 즉시 이행
- 2015 ~ : 쌀소득 23만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송아지 생산안정제

재원조달방안

- 농업예산 1순위 배정
- F1 등 난개발 예산삭감, 낭비성 예산삭감,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국비확보
- 80kg 쌀소득 23만원(도 : 시군=4 : 6),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도 : 시군=5 : 5)
- 자립기반 구축사업 : 농어촌 진흥기금 및 친환경 농업육성기금 활용
- 송아지 생산안정기금 300억 조성

공약 3 노동자가 잘 살아야 전남이 행복해 집니다.

목표

-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체불임금 해결,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자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이행방법

① 여수국가산단특별법,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② 화상·골절·가스중독 산재치료 전문병원 설립(산재전문 의대설치)

③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실질적 차별 해소 및 신분 보장

④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로 보장(154만원)

⑤ 전남도 노동국 신설, 노동복지회관 건립, 22개 시군 노동상담소 설치

⑥ 체불임금 선지급 후 기업주에 구상권 청구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

⑦ 공무원노조와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⑧ 노동3권 보장으로 노동조합 조직률 60% 실현

⑨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집단교섭 실시

⑩ 일하는 사람들의 도시락공장(약칭 '일도락') 설립, 통근차량 지원

이행기간

- 2014년~ : 여수국가산단 특별법추진, 노동국 신설, 관급공사 체불임금 지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1단계 처우개선 2014년 ~, 2단계 신분보장 2015년 ~

재원조달방안

-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활보호기금 활용
- 기업이윤 사회환원기금 조성
- 비정규직 체불임금 지원 기금 500억원 조성
  - 기업주에 구상권 청구 및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을 통한 소요예산 최소화
  -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운영을 통한 체불임금 사전방지

공약 4 따뜻한 진보, 함께하는 복지전남

목표

- 의료/교통/교육/복지의 사회공공성 강화

이행방법

① 의료 공공성 강화로 촘촘한 진료체계 마련

- 보건소·진료소 인력확충, 의료장비 지원 및 방문보건 간호사 2배 확대
- 시군별 소아·산부인과,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 간병인 제도 시범사업 확대

② 버스 완전 공영제 단계적 시행

- 교통약자 무상택시(효도택시, 농어촌 통학택시) 운영

③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 혁신 투자

- 참교육 구현(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노동교육(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운영원리)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작은 학교 우선 지원
- 3~5세 누리과정, 방과 후 돌봄 무상 실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④ 여성의 출산, 육아, 건강, 일자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⑤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4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 자립생활권리 및 주거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과 일자리 보장
- 전문성 있는 장애인 교육센터 확보 지원
-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본인부담금 폐지
-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⑥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맞춤형 보청기, 무상틀니 지원
- 공공 노인요양 병원 / 재활병원 확대

이행기간

- 2014년~ 공공의료 실태조사 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 단계적 추진
- 2015년~ 버스 공영제 단계적 시행, 효도택시(도비 : 시군비), 통학택시(교육지원보조예산 항목)
- 교육분야 단계적 지원 확대

재원조달방안

- 관련 법률에 근거한 국비 + 지방비 확보

공약 5 지역경제, 문화, 관광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전남

목표

- 행정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구축

이행방법

① **광양항 활성화**
- 북한과 철광석 직교역 및 배후단지 제조기업 유치
- 컨테이너부두 G/C 24열 3대 추가교체 후 단계적 확대

② **호남선KTX 나주역 정차(나주 통합버스터미널 건설)**
- 혁신도시 활성화

③ **대불공단 활성화**
- 고부가가치 조선산업, 해양플랜트 기자재 육성 및 업종다변화

④ **삼호·구성지구 일대 농업특화지구 설치(골프장 중심에서 자립농업의 보고로)**

⑤ **섬진강 환경유역청 설치**

⑥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⑦ **완도 수산전문대 설립**

⑧ **임진왜란 한·중·일 전적지 역사공원화와 구국정신 함양(여수, 순천, 광양)**

⑨ **중소상인들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마련**

-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전담부서 확대설치
- 중소상인 피해신고 처리센터

⑩ **전남도청 동부출장소 행정기능 강화 '실질적 제2청사' 역할수행**

이행기간

- 2015년 ~ , 단계적 확대

재원조달방안

- 불필요한 예산 감축 후 우선 배정
- 지역발전기금 조성(전남개발공사, 도시군비) 및 활용
- 관련 법률에 근거한 국비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1 제주도 난개발 반대, 외국인투자영주권제도 폐지

목표

- 제주도 천혜의 자연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치로, 제주도 난개발을 실제로 막는 것이 목표임.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부동산 콘도 리조트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중국 부동산자본의 이윤창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전락되었음.
- 제주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카지노 신설불가, 외국인투자영주권제도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 현재 개발중인 사업도 문제점이 있는지 전면재검토하여 제주도 난개발을 확실히 제지하겠음

이행방법

- 개발사업은 도지사 허가사항이며, 법개정, 조례개정사항임.

이행시기

- 2014년 12월내 관련법개정, 조례개정 완료

이행기간

- 2014년 연내 공약이행

재원조달방안 : 재원소요사항이 아님. 재원불필요

공약 2 물, 전기, 가스 생활필수량 무상공급, 무상버스

목표

-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 생활필수량을 무상공급하여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모든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핵심복지공약이다. 우리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 공공재이다. 물전기가스 생활필수량 무상공급을 헌법정신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다.
- 버스는 복지이고 제일 기본적인 이동권이다. 무상버스제도가 도입되며 버스이용이 높아지고 환승이 자유롭게 된다. 간선, 지선, 마을버스 버스체계를 도입하여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무상버스를 만들겠다.

이행방법 및 이행시기

- 물전기가스 요금체계 개편. 2014년 관련법 제정
- 대중교통공사 설립, 버스운영체계 간선-지선-마을버스로 개편(2014년)
- 물전기가스 생활필수량 무상공급, 무상버스 실현(2015년)

재원조달방안

- 물전기가스 생활필수량 무상공급 1350억 소요
- 국비70%, 도비 30% 부담하여 제주도정 연 400억원 예산소요
- 무상버스 연 300억원의 예산필요
- 총 700억원의 예산필요
- 초기예산은 사회연대기금 조성 및 목적세를 신설하여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예산으로 충당

공약 3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정규직화

목표

-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용역을 포함한 지자체 소속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60%(154만원)를 즉각 보장한다. 또한 최저임금 생활임금보장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단행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열악한 노동자의 노동환경, 임금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이행방법 및 이행시기

- 제주도 서비스업 등 비정규직 노동자 대규모 실태조사 실시
- 생활임금조례제정(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 2014년 연내제정
- 생활임금조례 준수여부 감독철저(대규모 숙박업소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 2015년 1월 시행

이행시기

- 관련 조례제정 및 실태조사사업 - 2014년 연내 시행

재원조달방안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 72억
- 도내 전체 공공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 30억
- 연간 102억 예산필요,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해결

공약 4 인천-제주기점 공공여객선도입

목표

- 정부와 도정이 안전한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공성을 버리고 이윤만 추구한 데에 있다. 과적도 안전장비미흡도, 비정규직 선원도, 이들이 제때 퇴선조치하지 않은 것도, 심지어 해경의 무책임한 사고수습과정도 모두 돈과 직결되어 있었다.
- 제주-인천기점 공공여객선 도입으로 안전한 뱃길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여객선을 통해 관광객과 도민이 안전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으며 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유통의 안정성을 높이며, 제주농산물들이 제때에 수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제주-인천기점 공공여객선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사회 돈벌이로 전락된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에서 뜯어고치는 신호탄이다.

이행방법

- 정부가 여객선 도입을 지원
- 제주도청 산하 대중교통 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여객선을 운영
- 제주도청과 관련 정부부처가 공공여객선을 관리감독

이행기간

- 2014년 10월부터 공공여객선 운영

재원조달방안

- 공공여객선구입비용 2,000억원 정부부담, 제주도정 소요예산 100억 예상
- 공사설립 및 초기운영예산 100억은 도출연기금에서 출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정책공약

▣ 중앙 10대 정책

No.	정 책
1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2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3	핵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4	골목안전으로 여성·아동안심사회 실현
5	골목복지 기본선 도입
6	'질 좋은 일자리' 창출
7	더불어 사는 '골목공동체'
8	생태전환, 녹색도시
9	활력 넘치는 사람투자 지역순환 경제
10	튼튼한 지방재정과 깨끗한 지방자치

▣ 시·도별 5대 핵심공약

골목까지 안전한 복지국가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1.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재난·안전시스템 전면 개혁	○ 대통령이 책임지는 국가재난안전체계 구축 ○ 재난 대처 일원화 및 지자체 지원 강화 ○ '안전평가위원회' 설치 및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 지역 방재안전담당관 및 방재안전센터 설치
	책임지는 정치, 관피아 척결	○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공무원 고시 폐지 및 선발 양성제도 다양화 ○ 고위공무원 관련기관(사기업체, 민간위탁, 정부보조·출연기관 등) 5년간 취업 금지 ○ 공무원 비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징벌적몰수제 도입 ○ 비위 사실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 동일 처벌
	생명을 살리는 안전사회로의 전환	○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및 안전사회5개년계획 수립 ○ 매년 희생자 추모 및 대국민 안전공청회 개최 ○ 안전 업무 민간위탁, 비정규직 사용 제한 ○ 의료·교육·철도 민영화 전면 중단
2.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기업 육성	○ 기업 안전 관련 책임정보 공시 의무 법제화 ○ 기업 준법감시인 제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개정
	위험기업 퇴출	○ 기업 살인법 제정 ○ 반사회적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도입 및 강화
3. 핵·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방사능 걱정 없는 학교 실현	○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조례' 제정 ○ 발암물질 걱정 없는 학교 만들기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 고리·월성1호기 즉각 폐쇄, 낡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신규 핵발전소 STOP ○ 핵발전소 고장·사고정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 핵발전소 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전교육 강화
4. 골목안전으로 여성·아동 안심사회 실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건축물과 지역환경에 적용한 조례제정 ○ 재개발로 인한 공가·폐가 관리로 범죄 예방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정비 ○ 성범죄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행
	'아동안전벨트' 구축	○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동행하는 하굣길 ○ 스쿨존을 내집앞까지 확대하는 '홈존' 조례 제정
	1인 가구 여성 주거커뮤니티 지원	○ 안정적인 공간 지원을 위해 '공유 주택' 제공 ○ 여성가구주(1인가구·여성한부모가구·독거노인 등) 방범서비스 제공 ○ 여성 주이용 공간을 활용해 방범, 안전 정보 제공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국가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5. 골목복지 기본선 도입	주민 삶 기본을 지키는 '복지기본선' 도입	○ 골목 삶 책임지는 '복지자치기본선' ○ 아이와 부모를 위한 '육아기본선' ○ 어르신을 위한 '노후기본선'
	'마을이 학교다' 지역교육공동체 복원	○ 마을학교 설립 ○ 입시교육 혁신 ○ 교육복지 강화 ○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건강한 주민, 활기찬 골목	○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주민 보호 ○ 주민의 건강 보장 ○ 공공보건의료 강한 지역 ○ 민간의료의 공공적 역할 강화 ○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생애토대가 되는 주거복지 실현	○ 사회주택쿼터제 도입 ○ 전월세 폭등 방지 대책 ○ 1인가구 등 가족형태 고려한 주거정책 도입 ○ 지역고유성을 살리는 도심재생사업 추진
6.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자체가 선도하는 '질 좋은 일자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보장 ○ 설레는 첫 노동, 청년일자리 확대 ○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
7. 더불어 사는 '골목공동체'	더불어 사는 '골목공동체'	○ 청년을 위한 지구정착프로젝트 ○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 소수자와 함께하는 무지개 사회 ○ 인권 존중의 지방자치시대 ○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 지역에서부터 평화와 통일 기반 튼튼히
8. 생태전환, 녹색도시	녹색도시 실현	○ 지역재생에너지공사 설립으로 에너지순환도시 실현 ○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생태사회로의 전환 실현	○ '빗물 저금통' 의무화와 깨끗한 물 공급 ○ 자연파괴·예산낭비 4대강 후속사업 전면중단, 복원사업 실시
9. 활력 넘치는 사람투자 지역순환 경제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경제'	○ '을' 편한 골목상권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순환경제 구축 ○ 서민 삶 파탄내는 가계부채 회복 지원
	함께 사는 도시와 농촌	○ 마을 공동체로 농촌 사회 활성화 ○ 소득 보장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 여성 농민의 사회안전망 확보
10. 튼튼한 지방재정과 깨끗한 지방자치	지방재정주권 실현으로 활짝 피는 복지 지방자치	○ 중앙정부 재원의 실질적인 지방이양 확대 ○ 중앙과 지방의 책임재정 실현 ○ 주민참여 확대로 재정주권 강화
	깨끗하고 함께하는 지방자치	○ 깨끗한 지방자치 ○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실현

정책 1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안전 사회 4대 공약

재난 ·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 전면 개혁

- 대통령이 책임지는 국가재난안전체계 구축
- 재난 대처 일원화 및 지자체 지원 강화
-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로 ‘안전평가위원회’ 설치 및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 지역 방재안전담당관 및 방재안전센터 설치

책임지는 정치, 관피아 척결

-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 공무원 고시 폐지 및 선발 양성제도 다양화
- 고위공무원 관련기관(사기업체, 민간위탁, 정부보조 · 출연기관 등) 5년간 취업금지
- 공무원 비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징벌적 몰수제 도입
- 비위 사실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 동일 처벌

생명을 살리는 안전사회로의 전환

-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및 매 5년마다 안전사회 종합계획 수립
- 세월호 참사일을 ‘국가안전추모일’로 지정해 희생자 추모 및 국민 안전공청회 개최
- 안전 업무 민간위탁, 비정규직 사용 제한
- 의료 · 교육 · 철도 민영화 전면 중단

정책 2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안전 사회 4대 공약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기업 육성

- 기업 안전 관련 책임정보 공시 의무 법제화
- 기업 준법감시인 제도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위험기업 퇴출

- 기업 살인법 제정
- 반사회적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도입 및 강화

정책 3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안전 사회 4대 공약

핵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방사능 걱정없는 학교 실현

- ‘방사능 걱정없는 급식 조례’ 제정
- 발암물질 걱정없는 학교 만들기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 고리 · 월성 1호기 즉각 폐쇄, 낡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신규 핵발전소 STOP
- 핵발전소 고장 · 사고 정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 핵발전소 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전교육 강화

정책 4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로' 안전 사회 4대 공약

골목안전으로 여성 · 아동 안심사회 실현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건축물과 지역환경에 적용한 조례제정
- 재개발로 인한 공가 · 폐가 관리로 범죄예방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정비
- 성범죄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실행

'아동 안전벨트' 구축

-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동행하는 하굣길
- 스쿨존을 내 집 앞까지 확대하는 '홈존' 조례 제정

'1인가구 여성 주거커뮤니티' 지원

- 안정적인 공간 지원을 위해 '공유주택' 제공
- 여성가구주(1인가구, 여성한부모가구, 독거노인 등) 방범서비스 제공
- 여성 주이용 공간을 활용해 방범, 안전정보 제공

정책 5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복지 사회 6대 공약

골목복지 기본선 도입

주민 삶 기본을 지키는 ‘복지기본선’ 도입

- 골목 삶 책임지는 ‘복지자치기본선’
  - 복지도시 실현, 건강부시장제 도입
  - 복지공무원 3배 확대로 세심한 맞춤서비스 제공
  - ‘유니버설 도시 디자인 조례’로 아동 · 노인 · 여성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실현
  - 지역형 기초보장제 도입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 아이와 부모를 위한 ‘육아기본선’
  - 구립산후조리원을 설치해 건강한 출산 지원
  - 한국형 마더센터를 설립해 육아서비스 원스톱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대기자수 해소
  - 아동주치의제 도입으로 아이 건강 보장
  - ‘내집앞 홈존 조례’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골목 실현
  - ‘방과후조례’ 제정 및 구립방과후센터 설치로 방과후돌봄 확대
- 어르신을 위한 ‘노후기본선’
  - 직업연계일자리, 노노케어 일자리 등 어르신 우대 일자리 창출 및 은퇴자 맞춤 협동조합 육성
  - 실버임대주택, 실버임대료제 도입으로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
  - 경로당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전환해 맞춤 건강프로그램 실시
  - 노인돌봄서비스 2배 확대로 안심노후 보장

‘마을이 학교다’ 지역 교육공동체 복원

- 마을학교 설립
  -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는 ‘마을학교’ 설립
  -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제정
  - 외주형태의 방과후 ·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및 확대

- 입시교육 혁신
  - 혁신학교 확대
  - 등록금 반값, 교육수준 2배 혁신대학 설립
- 교육복지 강화
  - 교실 에어컨 설치, 노후건물 개선 등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지역간 차별 없는 무상급식 실현
  - 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실현
-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 40대 교장, 25명 미만 학급 실현으로 젊은 학교 만들기

건강한 주민, 활기찬 골목

-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주민 보호
  - 중증질환 입원비 본인부담 전액 지원
  -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지원
- 주민의 건강 보장
  - 아동주치의 실시 및 야간당직병원 도입
  - 24시간 공공간병제 도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 지역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 미니보건소와 공공병원 확대
  - 건강책임부서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 민간의료의 공공적 역할 강화
  - 의료옴부즈만 실시로 의료공공성 확보
  - 주민-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민건강위원회' 설치
-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 '건강우선 전략지역'을 선정해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 '건강위험환경 예방 조례' 제정으로 유해물질 · 환경 차단

생애토대가 되는 '주거복지' 실현

- 사회주택쿼터제 도입
  -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20%로 의무화하는 '사회주택쿼터제' 도입
- 전월세 폭등 방지 대책
  - 지역별 공정임대료제 도입 및 주택 협동조합 지원
  - 장기전세주택 등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 1인가구 등 가족형태 고려한 주거정책 도입
  - 1인가구 주택 비율 5% 의무화 및 사회연대계약제 도입
- 지역 고유성을 살리는 도심재생사업 추진
  - 사회영향평가 의무화 및 시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 추진

정책 6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복지 사회 6대 공약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자체가 선도하는 질 좋은 일자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 공공부문 경비 · 청소 · 환경미화 용역의 직영 전환
  - 기간제, 무기계약직 노동자 차별 해소
  - 시간제-전일제 자유전환제 도입
-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보장
  -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 ‘최저임금 시민감시단’ 운영
  - 지방공기업 ‘임금격차지수’ 평가로 기업 내 임금격차 해소
  - 공공조달에 ‘사회적책임 다하는 기업 평가지표’ 도입으로 노동의 질 향상
  - 아파트 직영전환 지원센터 설치로 아파트 노동자 임금 보장
- 설레는 첫 노동, 청년일자리 확대
  - 지자체/공기업 청년 5% 정규직 추가 채용제 도입
  -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설치로 청년창업 지원
  - 취업알선센터 지원 확대로 실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 2030 청년여성, 첫 취업 준비 단계부터 좋은 일자리 지원
  - 「면접·채용시 차별금지 표준 지침」을 마련, 여성 취업 걸림돌 기업 신고제 도입
-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
  -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 공공직업소개소 도입으로 일용직 수수료 걱정 해소
  - 노동복지센터 확대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정책 7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복지 사회 6대 공약

더불어 사는 골목공동체

더불어 사는 ‘골목공동체’ 실현

- 청년을 위한 지구정착프로젝트
  - 공공부문에 정규직으로 청년 5% 추가 채용제 도입
  - 스펙없는 표준이력서 도입
  - 등록금 절반, 교육수준 2배 혁신형 시도립대 육성,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대
  - ‘청년위기탈출론’ 기금 조성으로 청년 신용회복 지원
-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 ‘장애인 공기업’ 설립으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일반택시를 복지택시로 전환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확대
  -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5% 실현
  - 지역형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으로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으로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 소수자와 함께하는 무지개 사회
  - 광역시 · 도에 HIV/AIDS 감염인 이용가능한 장기요양병원 지정 및 자조모임 지원
  - 소수자 친화적 매뉴얼 제작 및 의료진 교육으로 인권감수성 높은 병원 실현
  - 무지개 청소년 세이프 스페이스를 설립하여 성소수자 청소년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
- 인권 존중의 지방자치 시대
  - 인권증진, 차별금지, 인권교육 조례 등 3대 인권조례 제정
  - ‘군입영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군 입대자 상담 및 인권교육 지원 프로그램 실시
  - 군 복무 중 인권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
  - 병역 의무 이행자 지원 프로그램 실시
  - 차별 없는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 역사문화마을 조성으로 원도심(구도심) 및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활성화로 지역문화 재생산 순환 구조 구축
- 지역의 문화진흥,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재단 지원 확대
- 지역문화예술펀드를 조성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 지역에서부터 평화와 통일 기반 튼튼히

- '비핵 평화 도시' 선언 조례 제정으로 핵무기의 개발, 배치, 반입 금지
- 작은 평화박물관(평화센터) 건립과 평화교육 활성화로 군사문화를 평화문화로 변화
- 군 기지 선정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관련 조례 제정
- 지역경제활성화 및 한반도평화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전개

정책 8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복지 사회 6대 공약

생태전환, 녹색도시

녹색도시 실현

- 지역재생에너지공사 설립으로 에너지순환도시 실현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확대로 에너지 복지 강화
  - 하수슬러지를 천연가스로,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확대
-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실현
  - 손바닥공원과 하늘정원 확대해 자연친화도시 실현
  - 인도 및 차도와 분리된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생태사회로의 전환 실현

- ‘빗물 저금통’ 의무화와 깨끗한 물 공급
  - ‘빗물 저금통’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개정
  - 2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 교체로 깨끗한 물 공급
- 자연 파괴·예산낭비 4대강 후속사업 전면 중단 및 복원사업 실시
  - ‘친수구역개발’ 등 4대강 후속사업 및 추가사업 전면 중단
  - ‘4대강 사업’ 이전의 수준으로 강을 재자연화

정책 9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복지 사회 6대 공약

활력 넘치는 사람투자 지역순환경제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경제’

- ‘을’ 편한 골목상권
  - 지역 상인 SOS 원스탑 서비스 ‘지역상권공정거래지원센터’ 조성
  -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및 의무휴일제 강화, 대형유통업체 상품공급점 규제
  - 지역상가마일리지, 공공배달서비스, 충전식 직불카드 도입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 지역상인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도소매 결합한 ‘통합물류센터’ 설치
  - 농협 하나로마트의 독점적 특권 개혁으로 국내 농산물 판매 활성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순환경제 구축
  - ‘사회연대은행’ 설립으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지역순환경제사업단,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 사회적경제 지역특화모델 육성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신규 공공서비스 공급 30%까지 확대
  - ‘지역공영카드사’ 설립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서민 삶 파탄내는 가계부채 회복 지원
  - ‘민생지원센터’로 민생회복 지원체계 구축

함께 사는 도시와 농촌

- 마을 공동체로 농촌 사회 활성화
  - ‘농·도상생 공동창업’ 지원
  - ‘마을 공동생활주택’ 제공
  - ‘지역 유기농 순환농업단지’ 지정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센터’ 설치
- 소득 보장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 ‘기초농산물 지자체 수매제’ 시행

- ‘지역형 농업직불제’ 개발 및 시행
- ‘공익농민 소득 지원 조례’ 제정 및 ‘특별예산’ 편성

● 여성 농민의 사회안전망 확보

- 농가도우미 지원기간 및 대상 확대
- 여성농민의 주 작목에 적합한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정책 10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복지 사회 6대 공약

튼튼한 지방재정과 깨끗한 지방자치

지방 재정주권 실현으로 활짝 피는 복지 지방자치

- 중앙정부 재원의 실질적인 지방이양 확대
  - 사회복지세와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확대
  -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교부세율제 도입
  -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 교부
- 중앙과 지방의 책임재정 실현
  -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거부권 부여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의무화
  - 모범적인 지방재정운용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법규 위반 지자체 페널티 대폭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
- 주민참여 확대로 재정주권 강화
  - 1백억 원 이상 신규 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의무화, 주민들에게 예산낭비사업 중단 요구권 부여
  - 1억 원 이상 사업 사전 · 사후 공개 의무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 강화

깨끗하고 함께 하는 지방 자치

- 깨끗한 지방자치
  - 지방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회 견제기능 강화
  - 외유성 해외연수는 이제 그만! 공부하는 지방의원 선언
-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실현
  - 주민배심원단 도입으로 지역의 갈등 합리적으로 해결
  - 각종 위원회에 주민참여 보장
  - 시군구의회 1층에 주민사랑방 설치
  - 찾아가는 현장의회, 주민5분 발언제 도입

정의당

시·도별 5대 핵심공약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 서울', 기본이 튼튼한 서울입니다

〈공약 개요〉

1. 서울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지켜주는 '서울시민 5대 기본선'을 만드는 서울
   - '복지' '안전' '일자리' '문화·생태' '재정' 등 5대 의제는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제
   - 최근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세월호 침몰 참사 등 삶과 생활의 기본을 지켜주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해 문제 발생
   -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본을 지키는 서울, 기본이 튼튼한 서울, 기본이 미래 동력이 되는 서울의 청사진이 필요
   - 이제 서울시정은 서울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선을 시작으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만족도의 지표, 지수가 되어야 함

2. 민선 지방자치 향후 20년의 설계를 위한 시작은 골목까지 행복한 서울
   - 민선 지방자치 20년이 경과했지만 다수 서민들은 서울시정의 중심이 되지 못함. 도심 중심의 시정운영과 계획 등이 콘크리트 개발을 상징했다면 다수 서울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교차되는 골목 중심 시정 운영은 사람 우선을 상징하는 것.
   - 민선 지방자치 향후 20년의 설계 특히 서울시정의 설계의 시작과 중심은 골목. 민선 지방자치 20년 동안 다수의 서울시민들의 삶의 중심인 골목이 서울시정 운영의 시작과 중심이 되어야 사람 우선의 서울시정을 설계할 수 있음.

공약 1 골목까지 행복한 서울형 복지기본선

생애 불안을 해소할 서울형 복지기본선 도입

- 아이와 부모를 위한 '육아기본선'
  - 구립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한 출산을 지원
  - 한국형 마더센터(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해 육아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해소로 안심어린이집을 실현
- 청소년 · 청년을 위한 '교육기본선'
  - 구립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해 지역 방과후 허브 역할
  - 고등학교 무상교육 · 무상급식 실시
- 어르신을 위한 '노후기본선'
  - 직업연계 · 노노케어일자리 등 어르신우대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퇴자맞춤협동조합을 육성
  - 실버주택 도입, 실버임대료제 실시로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 경로당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전환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
- 주민을 위한 '건강기본선'
  - 아동주치의제 및 야간당직병원 도입으로 아이 건강을 지킴
  - 24시간 공공간병제 확대로 지방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전환
  - 미니보건소,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
- 생애 토대가 되는 '주거기본선'
  - 공정임대료제 및 임대계약등록제를 도입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
  - 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확보
  - 1인가구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나눔하우스'를 확대 보급

공약 2 골목까지 행복한 안전 기본선 도입

생활 불안을 해소할 서울형 안전 기본선 도입

- 복합재난안전관리 전담 부서 신설
  - 복합재난안전관리 전담 부서 신설하여 서울의 재난안전 전반의 업무를 총괄
  - 예방교육 담당을 비롯해 재난안전포털, 재난약자서비스 등 담당
  - 재난전문가 양성 및 30% 이상 재난전문 담당자 배치
  -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 및 고시원 등 취약주거시설 안전설계 도입
- 경전철 무인운영 전면 재검토
  - 도시철도 10년 계획 경전철 무인승무 전면 재검토
  - 안전인력 배치를 통해 무인운영의 안전성을 제고
-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서울
  -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을 실시하고, 발암물질 없는 학교
  - '내 집 앞 홈존 조례'를 제정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동네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으로 아동과 여성 안전골목 실현
  - 좁고, 복잡한 골목길에 LED가로등 보충으로 야간보행 안전
  - 심야시간 '마을버스 집앞 하차제'를 도입해 여성이 안전한 밤길
- 착한규제 YES, 호텔 없는 등굣길 만들기
  - 최근 규제완화 정책발표로 등굣길 앞 유해시설인 호텔건립 추진중
  - 등굣길 앞 호텔건립 등 유해시설에 대한 착한규제 유지

공약 3 골목까지 행복한 일자리. 지역경제 기본선 도입

일터의 불안을 해소할 서울형 일자리. 지역경제 기본선 도입

- 설레는 첫 노동, 청년일자리 확대
  - 지자체/공기업에서 청년을 매년 5%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 취업알선센터 지원 확대로 실업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
- 공공부문부터 일터의 기본 지키기
  -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

- 공공조달에 고용안정, 고용차별지수를 포함시키는 공정기업 우대제 도입
- 아파트 직영전환 지원센터를 만들어 아파트 노동자의 임금 현실화
- 민간위탁사업장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 기간제, 무기계약직 노동자 차별 해소
-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임원 공청회 도입

●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경제'
- 지역공영카드회사를 설립해 자영업자 수수료를 내리고, 지역상가 마일리지로 돈이 살아나는 지역경제
- 우선구매목표제로 공공구매시장을 조성하고, 사회투자기금을 도입해 지역 사회적 경제를 육성
- 불공정한 갑을관계는 '갑/을 불공정 신고센터'로 바로잡기
- 가계부채 해결 위한 '민생지원센터'를 설립해 터널형 민생회복지원체계 구축

공약 4 골목까지 행복한 문화. 생태 기본선 도입

■ 골목에서 함께 하는 서울형 문화. 생태 기본선 도입

● 함께 누리며 함께 창조하는 골목 문화 서울
- 천만의 오케스트라, 문화유전자가 흐르는 서울창조시민 육성
- 우리동네 작은 도서관, 책 읽는 마을육성을 위한 작은 도서관 지원 확대
- 서울시 문화공연 및 시설물 통합 정기관람 이용권 개발 및 운영
- 4대문 안 문화예술지구 조성

●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위한 골목 생태 서울
- 유해물질 관리·강화로 발암물질 없는 생활공간 만들기
- 도시텃밭, 손바닥공원, 하늘공원 확충을 통해 1동네 1녹색지대 만들기
- 재생에너지 기반 구충으로 지역 사회적 기업 지언
- 저소득층 및 노후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 사용량 줄이고 녹색일자리 창출

● 아동·노인·여성·장애인이 함께 하는 새 서울 디자인
- '유니버설 서울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아동·노인·여성·장애인이 함께 하는 서울 디자인 설계
- 장애인 공기업 설립으로 장애인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 5 골목까지 행복한 재정 기본선 도입

공정한 재정 분담. 투명한 서울시 가계부, 튼튼한 서울 재정 기본선 도입

- 공정한 재정분담, 튼튼한 서울 재정
  - 지방복지세·사회복지교부금을 도입하여 맞춤형 복지사업 재원 마련
  - 지방정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으로 20% 확대
  - 자치구에도 보통 교부세를 교부하여 재정 부담 완화
- 투명한 서울시 가계부, 튼튼한 서울재정
  - 1백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 의무화
  - 예산낭비 사업에 대한 사업중단요구권 부여
  -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공개 의무화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강화
  - 주민 모바일투표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결정

부산광역시

공약 1 환승요금 폐지, 대중버스 운영시스템 개선

목표

- 부산 버스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재정비하여 재정지원액을 줄이고, 환승요금을 폐지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준공영제 재정지원액이 인구수, 버스수 등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보다 월등히 많음 (부산 : 134,099,781천원, 인천 : 35,847,890천원)
-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스템 개선은 미비한 가운데 재정지원액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황으로 대중버스 운영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
- 현재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보완적으로 운영되기보다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이며, 서울, 수도권과 같은 지선 개념의 운영만으로도 원가 절감 가능. 현재 부산의 표준운송원가와 서울, 인천의 지선 표준운송원가를 비교해보면, 현재 부산 630,701원, 서울 569,469원, 인천 448,393원 등으로 서울 수준의 운송원가만 되어도 연간 561억 2004만 6480원 절감 가능
  - 630,701원 - 569,469원 = 61,232원 (부산표준운송원가)-(서울표준운송원가)
  - 61,232원 × 365일 × 2,511대 = 56,120,046,480원 (부산서울금액차)×(1년)×(부산 보유차량)
- 현재 부산 시민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환승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시스템 개선과 표준운송원가 조정을 통한 절감액만으로도 환승요금 폐지 가능
  - 부산 대중교통 연간 환승요금 추정액 = 140억797만원
    95,945명(건) × 2번 × 200원 × 365일 = 14,007,970,000원
    [부산지하철1일평균환승(건)수]×(왕복 '가정')×(환승1회요금)×(1년)
  - 절감액 561억 2004만원으로 환승요금 폐지에 필요한 140억 797만원을 빼고도 421억 1207만원의 예산 절감 가능

- 부산의 버스회사들이 서울보다 연간 1억 1276만 원의 이윤을 더 벌고 있음
  - 부산 : 21,353원 × 365일 × 76대 = 592,332,220원 (기본이윤+성과이윤) (1년) (차량수)
  - 서울 : 17,288원 × 365일 × 76대 = 479,569,120원(기본이윤+성과이윤) (1년) (차량수)

  ⇒ 부산의 버스회사들이 연간 112,763,100원의 이윤을 더 획득하고 있는 상황

  ※ 76대 : 부산의 버스회사 평균 버스대수

이행방법

- 대중버스 운영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강서(명지·신호·녹산동 등등), 정관, 기장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공영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불편 해소 및 공영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이행기간

- 2014년 표준운송원가 재조정 및 버스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2015년 '버스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공청회'를 통한 버스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여론 수렴
- 2016년 버스운영 시스템 개선

재원조달방안

- 연구용역비는 유사 예산 조정으로 편성
- 공영버스 도입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절감 예산으로 편성

공약 2 중학교까지 친환경의무급식 실시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여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 부담을 분담하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 31조 3항의 정신을 실현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의 경우, 2014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상황이나 17개 광역시도 중 이미 10개 시도에서 2014년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상황
- 중학생 자녀를 둔 부산 시민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10개 시도 학부모보다 더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중학생 자녀 1인당 연간 533,262원(2014년 급식단가 2,914원, 급식일수 183일 적용)
-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10개 시도의 경우, 모두 필요 재원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나 부산은 교육청 예산만으로 진행

이행방법

- 현재 부산의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319억 3,200만원
  - 초등학교 696억 2,513만원 2,362원(급식단가) × 155,964명(학생수) × 189일(수업일수)= 69,625,136,952
  - 중학교 554억 2,191만원 2,914원(급식단가) × 103,930명(학생수) × 183일(수업일수)= 55,421,919,660
  - 중학교 친환경급식비 68억 8,494만원 362원(지원단가) × 103,930명(학생수) × 183일(수업일수)= 6,884,946,780
    ⇒ 계 : 131,932,003,392
  - 서울의 경우와 같이 교육청과 부산시, 기초자치단체가 5 : 3 : 2의 구조로 재원을 분담할 경우, 부산 교육청이 65,966,001,696원, 부산시가 39,579,601,018원, 기초자치단체가 26,386,400,678원으로 분담 추진 가능

※ 기초자치단체별 분담액 (단위 : 명, 원)

	초등 학생수	초등기초 분담액	중학 생수	중학기초 분담액	중학친환경 분담액	기초지자체 분담액 계
서구	4,012	358,205,803	4,123	439,727,845	54,626,452	852,560,100
사하구	16,000	1,428,537,600	10,217	1,089,667,571	135,367,076	2,653,572,247
영도구	4,716	421,061,458	3,502	373,496,705	46,398,698	840,956,861
중구	1,742	155,532,031	469	50,019,976	6,213,875	211,765,882
부산진구	16,417	1,465,768,861	10,773	1,148,966,305	142,733,632	2,757,468,798
남구	12,385	1,105,777,386	9,473	1,010,318,185	125,509,672	2,241,605,243
동구	3,004	268,207,934	2,591	276,336,368	34,328,677	578,872,980
사상구	9,670	863,372,412	5,799	618,477,268	76,832,111	1,558,681,790
북구	14,399	1,285,594,556	10,339	1,102,679,164	136,983,479	2,525,257,199
강서구	3,424	305,707,046	1,613	172,030,321	21,370,960	499,108,327
동래구	12,358	1,103,366,729	9,475	1,010,531,490	125,536,170	2,239,434,389
금정구	10,519	939,174,188	7,612	811,838,069	100,852,910	1,851,865,168
연제구	9,771	872,390,056	5,203	554,912,437	68,935,588	1,496,238,080
기장군	8,508	759,624,869	4,023	429,062,605	53,301,532	1,241,989,006
수영구	6,772	604,628,539	3,394	361,978,246	44,967,785	1,011,574,570
해운대구	22,267	1,988,077,921	15,324	1,634,341,378	203,030,741	3,825,450,040
계	155,964	13,925,027,390	103,930	11,084,383,932	1,376,989,356	26,386,400,678

이행기간

- 2015년 예산에 편성, 지원 실시

재원 조달 방안

- 부산시 소요 예산 395억 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 232억 원에서 163억 원을 추가 편성하면 실시 가능
- 기초지자체 분담 예산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가능

공약 3 고리1호기 폐쇄

목표

-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낡고 노후한 원전인 고리1호기 운영 영구 중단

현황 및 문제점

-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번째 원전으로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 개시. 설계수명은 30년이지만 2007년 12월 11일에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서 2017년 7월 18일까지 운영될 계획
- 고리 1호기는 2010년 기준 127회 사고가 발생한 국내 최다 사고 발생 원전이며 국내 원전 사고의 약 23% 차지. 원자로 압력용기가 하나의 주물로 만들어지지 않고, 세 조각을 용접하여 안정성에 논란이 있음.
- 1979년 가동시기부터 최대흡수에너지가 수명 말기에 나타나는 68J 이하, 2006년 기준 원자로의 중성자 조사량이 수명말기에 나타나는 1x1017n/cm2(E〉1MeV)을 훨씬 넘어서는 3.938 x1017n/cm2(E〉1MeV)을 기록. 고리1호기의 압력용기가 다른 원자로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됨
- 고리 1호기의 연성-취성 천이온도(원자로 압력용기가 핵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중성자로 인해 점점 약해지는 현상) 변화추이를 보면 79년 134도, 88년에는 138도, 99년에는 142도, 2005년에는 126도로 평가되어 고시기준인 149도시에 육박(2006년 수명연장을 위한 1차 실험에서는 151도시로 나타나 고시기준을 초과함)
- 고리 1호기의 전력생산량은 국내 총 전력의 1% 정도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세계 138개의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었는데 평균 수명은 22년임. 따라서 34년 동안 상업운전되고 있는 고리 1호기는 폐쇄가 타당함
- IAEA가 지난 7월 해체계획 수립 및 갱신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현재 정부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이 있음에도 해체계획서조차 마련이 안 되어 있음

이행방법

- 고리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폐로를 위한 로드맵 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고리1호기 폐로 계획안 초안 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폐쇄 과정 관리
- '원전폐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모델' 태스크포스팀 민관학 협렵으로 마련

이행기간

- 계속운전 승인 기한인 2017년 이전에 폐쇄

재원 조달 방안

- 별도 소요 예산 없음

대구광역시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 대구

1.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경제'의 대구
2. 시민들이 안전한 대구
3. 청년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대구
4. 삶의 질을 높이는 '대구 복지기본선' 도입
5. 좋은 일자리 많은 대구

- ◉ 갑/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 지역공공카드 도입
- ◉ 3호선 안전대피로 설치
- ◉ SSM 영업시간,판매품목 제한
- ◉ 대구시 대중교통공단
- ◉ 안심귀가도우미
- ◉ 청년미래발전소
- ◉ 청년문화거리,문화센터
- ◉ 학자금이자지원조례
- ◉ 아동주치의제
- ◉ 노동복지센터
- ◉ 공공기관 단계적 정규직화

공약 1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경제'의 대구

정책목표

- 대형 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합리적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
  - 가맹사업장의 권리 보호와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최소화
  - 지역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이행방안

- 갑/을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설치
  - 프랜차이저(franchiser: 가맹점 영업권 제공 회사)가 프랜차이지(franchisee: 가맹점)에게 휘두르는 횡포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 지역 공공카드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지역펀드 조성하여 지역 신용협동조합 및 금융기관의 카드업 전환, 기존 금융 기관과 MOU를 통한 지역카드 도입, 카드수수료 및 적립금 협상
  - 지역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1%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
  - 지역민의 공영체크카드 사용시 일정 포인트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
-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 유통산업법 및 조례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및 판매 품목 제한
  - 대형마트, SSM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권리보장
  -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 결정기준을 현행 환산보증금에서 보증금으로 변경

공약 2 시민들이 안전한 대구

현황

- 도시철도 3호선은 무인운전과 무인운영, 안전대피로 미설치로 인해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현재 지하철 운영 부문 적자 800~900억,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민간기업 지원 예산이 800~900억 정도.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이후 노선중복으로 인한 버스 노선 조정 등으로 버스회사의 수입 감소와 준공영제로 인한 비용 증가 예상
- 대구시 인구대비 범죄발생비가 제주도, 광주에 이어 3위

정책목표

- 안전한 도시철도 3호선 개통
- 지하철 운영과 버스 준공영제의 적자 해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대구

이행방안

- 도시철도 3호선 무인운영 전면 재검토
  - 무인운영, 무인역사를 전면 재검토. 안전인력 배치
  - 안전대피로 설치
- 대구시 산하 '대중교통공단' 설립
  - 지하철과 버스 운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중교통공단 설립
  - 버스/지하철간의 노선 조정문제 해소와 편리한 환승 시스템 구축

여성과 생활이 안전한 도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성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범죄 핫스팟 지역에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공약 3 청년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대구

현황

- 2013년 전국 청년(15세~29세) 실업률 8%, 대구 9.9% (경북 10.8%에 이어 2위)
- 지난 10년간 대구 청년인구 감소율 21.3%로, 전국 6대 광역시중 2번째
  - 평균 감소율 보다 8.5%p 높아

정책목표

- 청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구 (일자리)
- 청년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대구 (경제)
- 청년 문화가 꽃피는 대구 (문화)

이행방안

- '청년 미래 발전소' 설립
  -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청년 구직 비용 지원 등 청년 일자리를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 공공부문에서 청년을 매년 5%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 청년고용지침 제정으로 지자체, 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
  - 지방공기업 평가에 청년고용실태 반영
-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정
- 청년 문화센터 건립, 청년문화카드 발급
  - 경북도청 후적지 일부를 청년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여기에 청년 문화센터(취미생활, 문화창작,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건립
  - 청년문화카드 발급으로 지역 극단 공연, 지역 전시회, 지역 카페 이용(프랜차이즈 제외) 등을 저렴하게 관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

공약 4 삶의 질을 높이는 '대구 복지기본선' 도입

현황

- 대구 국공립어린이집 39개로 2.4%에 불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율 전국 최하위
- 대구 2018년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65세이상)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 사회될 전망
- 대구 무상급식 비율 전국 꼴찌

정책목표

- 우리 미래 세대의 육아를 사회가 책임지도록 함.
-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사회기여를 돕고, 안정되고 품위있는 삶을 보장
- 대구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기본선을 도입

이행방안

- 아이와 부모를 위한 '육아기본선'
  - 지역보건소 산하의 구립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한 출산을 지원
  - '한국형 마더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로 육아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 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 무상 예방 접종 실시
- 어르신을 위한 '노후기본선'
  - 은퇴자맞춤협동조합 육성으로 은퇴자 사회 기여 및 소득보전을 도움
  - 노-노케어일자리 :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어르신 우대 일자리로 전환
  - 실버주택 도입, 실버임대료제 실시
  - 경로당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전환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
- 시민을 위한 '건강기본선'
  - 아동주치의제 및 야간당직병원 도입으로 아이 건강 보호
  - 24시간 공공간병제 도입으로 지방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 미니보건소,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대
  - 방사능 걱정 없는 친환경 무상 급식 전면 시행

공약 5 좋은 일자리 많은 대구

현황

- 대구 청년 실업률 전국 최고 9.9%(전국 평균 8%, 2014년 현재)

정책목표

-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이 없는 대구
- 노동조건이 좋아지는 대구
- 좋은 일자리가 많은 대구

이행방안

- 공공기관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 상시적 업무엔 정규직 채용을 원칙
  -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 없도록 제도 정비
  - 지자체 발주시 용역, 위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평가에 반영
  - 지자체/공기업 경비, 청소, 환경미화 용역을 직영으로 전환
- 좋은 일자리 많은 대구
  - 지자체/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 청년(15~34세) 정규직 고용
  - 필요에 맞게 시간제/전일제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 취업알선센터 지원 확대를 통해 실업자와 구인기업간의 적극적인 연계 취업 알선
- 실질적 생활 임금 보장 조례 제정
  - 지자체/공기업부터 최저임금 130% 이상의 실질적 생활임금 보장
- 노동복지센터 건립으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혜택 확대
  - 노동법률 지원(상담, 권리구제 대행)
  - 최저임금 시민 감시단 운영
  - 공공조달 심사시 노동권보장 등 사회적 책임 부분을 30%이상 반영

인천광역시

공약 1 골목행복프로젝트 (지역경제,재정)
1.“골목이 벌어야 인천이 산다.”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인천경제를 **지역자립경제** 시스템으로!

인천에 의한, 인천을 위한, 인천의 힘으로!

현황 및 추진배경

- 수도권 최대의 남동공단, 부평-주안공단이 자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메카(2011년말 159,048개)
- 지역금융 여신 대비 예금은행 여신은 97년 1.8배에서 2012년 4.4배로 급증
- 지방은행이 있는 도시들에 비해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의존도가 약 2배가량
-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위협 당함
- 인천의 경우 특히 외자유치에 목을 매고 있지만, 대기업의 자기업 유치는 시 재정에 비도움

목표

- 지역경제 밀착형 금융기관을 육성하고 활성화 시켜 금융기관의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기반으로 삼는다.
- 지역은행을 통해 신용보증, 기술신보, 지역신보제도 등을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경기비탄력적 혹은 경기역행적 자금조달(일상적 자금 조달)을 가능하도록 추진

실행방안 및 이행절차

- 지방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자본금 250억을 인천시가 출자 (시민,기업,지역상인 공동출자)
-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액대출확대 (미소금융과 비슷한 형태의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세부공약

- 인천 지역은행(미추홀은행) 설립으로 지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활성화와 상가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상권 강화
- 사업조정권한의 적극적인 행사로 대기업 진출 규제, 지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육성
- 인천시 상권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로 중소상인 고충 원스톱 해결(갑-을 불공정센터)
- 생산자와 중소유통상인, 소비자가 상생하는 '도소매통합물류센터' 건립
- 중소상공인경쟁력 강화위원회의 역할 확대 강화
- 중소상인자영업자 주간 운영

공약 2 골목행복 프로젝트 (여성,아동,안전)
2."골목까지 안전안심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골목까지 안전안심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배경

-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1위는 교통범죄, 2위 폭력 및 강력범죄로 주취상태의 범죄가 다수
- 남성중심주의와 잘못된 술 문화 등으로 빚어지는 폭력 등의 범죄들로 여성과 아이에 가해지는 피해가 심각함.
- 범죄예방 전략중 cctv전략이 유효한 전략이 아님 (cctv설치증가 지역이 범죄미발생 효과 미비)
- 단순한 기계적 감시와 경찰에 의한 조직적 감시를 넘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목표

- 지역의 우범지역에 대한 진단과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 여성1인 가구 생활환경을 고려한 안전한 공동주거공간을 제공
- 어둡고 외진 우범 예상 지역을 줄임으로써 범죄불안감 감소
- 교통 범죄 중 아이에 대한 사고율을 낮춰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

실행방안 및 이행절차

- 각 지역별로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발견된 우범지대들을 연결, 물리적 환경 개선
- 모니터링단 활동, 환경개선작업 등에 주민들의 참여, 시민단체 참여를 통해 주민책임성 부여
- 성폭력 예방은 지역사회의 몫임을 지역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실시

세부공약

-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전-안심 우리동네만들기
- 여성1인 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한 공유주택 보급
- 성인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시행
- 정류장부터 집앞까지 여러분의 골목을 지켜드립니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에 LED조명, 보행유도띠, 비상벨 등 설치)
- '어린이집,학교주변 안전골목 만들기 조례제정'과 차량제한골목 지정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약 3 골목행복 프로젝트 (보육, 교육, 원도심)
3. 원도심 골목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돌아옵니다.

현황 및 추진배경

- 무분별한 도심 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함
- 신도심과 원도심의 사회적 격차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도시개발불균형이 가중
- 그럼에도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토건중심의 도시개발 비용 지원 정책이 대부분임

목표

-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 사람중심의 투자형태로 보육·교육 지원
- 사교육에 의해 점령당해 버린 현재의 교육을 혁신교육을 통해 공교육 강화
- 출산에서 고등교육까지 온 마을이 책임지는 살아있는 지역 교육 시스템 마련

실행방안 및 이행절차

- 교육청과 연계하여 원도심 중심의 교육혁신지구 선정위원회를 설치, 기초자치단체 공모 진행
- 교육혁신지구에 대해 보육·교육 정책 우선 지원

세부공약

- 원도심을 중심으로하는 교육혁신지구 선정
- 마더케어센터에서 임산부 통합지원
-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 / 재가 산후조리사 파견 관리 통합
- 생애 첫아이 '출산꾸러미'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대 (걸어서 10분 국공립어린이집)
- 구별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우리동네 보육회장' 보육상담 통합 운영
- 방사능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녹색어린이집 완성
- 혁신초등학교 설치
-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 설립
- 온 마을이 학교다 프로그램 실시
- 중고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공약 4 골목행복 프로젝트 (건강)
4.“인천시민이 건강해집니다. 골목이 활기차집니다.”

현황 및 추진배경

- 중증질환으로 시민들의 치료비 부담이 심각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공약은 축소됨
-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취약하고, 지역중심의 1차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제공되지 못함
- 공공의료 서비스가 취약하다보니, 지역적 건강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남

목표

- 인천지역의 보건의료 영역에 공공성을 확대하여, 편차 없는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아동, 노인, 중증질환자 등 건강권 약자에게 더 많은 보호와 혜택을 주고자 함

실행방안 및 이행절차

- 시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사고하여, 행정부서 등을 신설하고 역할을 강화
- 공공영역으로서의 보건의료, 지역중심의 1차 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함
- 중증질환에 대한 개별 시민의 부담을 최대한 축소시킴

세부공약

- ‘아동주치의 제도’와 ‘야간당직병원’을 도입하여, 아이 전담 의사를 두고 건강관리
- 65세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에서도 시행
- “건강우선 전략지역”선정으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
-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수돗물불소화사업으로 공공치의료 강화
- 건강부시장제도 도입, 건강 책임부서 신설
-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질환 입원비 지원 (단계적 시행)
-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지원
- 인천 제2의료원 건립으로 공공의료 확대

공약 5 골목행복 프로젝트 (평화, 환경)
5. 평화도시 인천, 진정한 미래동력은 평화와 환경입니다

현황 및 추진배경

- 1999년 1차, 2000년 2차, 2009년 3차 서해교전, 2010년 천안함사태와 연평도포격으로 남측 총56명 사망하거나 실종, 북측은 200명 이상 사망 추정
- NLL의 정쟁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추진 누락 등으로 인천은 항상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
- 인천은 서해안 권역이면서도 연안 관광지가 거의 전무한 해안도시임. 이들 섬의 현실은 직접적인 난개발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파괴로 미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변동과 파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목표

- 남북평화의 문제를 정쟁과 중앙정부의 안보관계에서 벗어나 지역시민들의 안전과 생존의 문제로 그리고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사고
- 인천만의 Land-Mark 갯벌 100리길을 조성하여 인천만의 생태 관광 명소 개발
- 사라져가는 습지를 보호하고 인천만의 특성을 살리는 도시형 생태 환경 구축

실행방안 및 이행절차

-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과 맞물려 개성공단 인근 DMZ 일대, 서해 한강하구 등에 평화생태공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남북의 관련 당국과 논의·추진. 단 이 경우에도 철저히 생태친화적인 사업 추진 원칙 견지
- 향후 2년간 인천연안 개발 중지, 습지, 갯벌 생태환경 조사 시행

세부공약

- 서해평화공원 조성으로 평화도시 인천으로 거듭난다.
- 전쟁에서 평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작은 평화박물관 건립과 평화교육 활성화
- 서해5도 시민참여 평화통일기행진행
- 인천아시안게임을 평화아시안게임으로
-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 - 도심 속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추진
- 도심 속 녹지공간을 늘리고 바람길을 열어 상쾌한 도시로 변화
- 인천을 살리는 ECO-CITY 랜드마크-갯벌 100리 길 조성으로 관광산업 추진
- 유해시설을 비롯한 환경파괴시설 관리조례 제정
- 도시농업,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 시스템

대전광역시

함께 만드는 세바퀴 공동체 대전

◉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 **함께 키우는 경제공동체**

1. 원도심이 활기찬 대전
2. 일자리 걱정없는 대전
3. 아이키우기 좋은 대전
4. 건강한 대전
5. 녹색교통도시 대전

◉ 도심형컨벤션지구
◉ 신재생에너지지구
◉ 원도심문화지구
◉ 보존중심도심재생

◉ 원천과학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
◉ 사회적경제활성화
◉ 사회적약자일자리

◉ 국공립어린이집확대
◉ 대전시립병원설립
◉ 버스중심대중교통
◉ 단계적무료버스

공약 1 (지역공동체) 원도심이 활기찬 대전

정책목표

- 동서불균형 해소
- 시민들과 함께 변화시키는 원도심
- 토건 중심이 아닌 사람과 문화, 재생 중심의 원도심 정책

이행방안 및 이행기간

-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형 컨벤션 지구 개발 (2014~2018)
  - 원도심활성화계획 수립 및 지원제도 정비 (2014)
  - 대전역주변 빈 사무실 소유주 '대전역컨번센지구협동조합' 결성
  - 건물 리모델링, 회의시설 구비 등 지원 및 협동조합 운영 지원
- 원도심 문화지구 활성화 (2014~)
  - 협동조합 형태 소극장, 소규모 영화관 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가족친화마을 전환 지원 (2014~2018)
  - 구도심 주택지역 중 노인인구 밀도 높은 지역 우선 에너지절약 주택, 계단없는 주택 등으로 개량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과 도시보건지소, 어르신행복건강센터 등 우선 지원
- 시장 집무실과 주요 정책결정 기능 충남도청사 이전 (2014~2015)
-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단지 조성 및 사업 (2014~2018)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도심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여 도심 재생에 필요한 과학기술과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시비, 민간조달
- 신도시 개발 억제로 재원 마련

공약 2 (경제공동체) 일자리 걱정없는 대전

정책목표

- 일자리 창출
- 원천과학기술기반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순환 경제 구축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사회적약자 일자리 창출

이행방안 및 이행기간

- 복지공무원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복지 인프라 구축
  - 1인당 3,000명 수준에서 1인당 1,000명 수준으로
  -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임기 내 완료
- 원천과학기술 기반 중소기업 육성 전략 수립 (2014~2015)
  - 산재된 과학기술산업 육성 기능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 통폐합
  - 대전시 주도 지역발전전략으로 대학과 기업, 기업지원기능 등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기업 유치보다는 창업 및 기업 육성
  - 취업교육센터 혁신을 통해 미래 필요 기술인력 양성
-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적극 육성 (2014~)
  - 사회적경제 단체간 협력 및 연대, 교육을 위한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2014~)
  - 지자체와 지역공기업의 경비, 청소, 환경미화 용역 사업 직영 전환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장애인, 여성 및 청년 고용 촉진
  - 퇴직 전문인력에 대한 재취업 기회 활성화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시비, 민간조달
- 구조조정 및 신규채용 복지공무원, 사회적약자 채용 우선 예산 조정

공약 3 (복지공동체) 아이키우기 좋은 대전

정책목표

- 아이키우기 좋은 대전

이행방안 및 이행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전국 평균(5.2%, 대전 1.7%) 확대 (2014~)
  - 2012년 현재 28개소를 80개소로 증설 (2014~2018)
  - 각 행정동(79동)마다 1개소 설치 : 주민센터 및 공공시설 등을 이용
- 아파트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2014~)
  - 신규 아파트단지와 대형 아파트단지, 가능한 아파트단지부터 전환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설치 (2014~)
  - 2013년 기준 141개 공립초등학교가 있으나 공립유치원은 90곳에 머물고 있음
  - 병설유치원에 대한 높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확대 설치 필요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참여형어린이집 구축 (2014~)
  -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참여형어린이집'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위주의 도심 및 공단 등에 협동조합 설립하여 설치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이 확대되어 활용 가능
- 주민참여형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사 양성 운영 (2014~)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과후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을 돌봄교사로 양성하고, 지역 유휴시설에 설치 운영
  - 은퇴한 과학자 등을 활용하는 동네과학관 설치 운영

재원조달 방안

- 국비 및 시비, 교육청, 민간조달
- 기존 건물이나 공공시설 등 활용 리모델링 (평균 개설비용 1억 원)
- 대전시 예산조정을 통한 시비 확보

공약 4 (복지공동체) 건강한 대전

정책목표

- 공공의료체계 강화
- 지역거점병원 (대전시립병원) 설립
  -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예방 및 재활센터 공간 확보
  - 취약계층 안전망 기능 및 장애인 치과 등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
  - 무료간병서비스병동, 행려환자병동, 개방병동 등 특성화진료공간

이행방안 및 이행기간

- 공공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대전시 건강(보건)국 신설(2014년)
  - 도시보건지소와 구별보건소, 대전시립병원을 잇는 공공의료서비스 연계 체제 구축
  - 건강 및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 및 행정 능력 제고
-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를 비롯한 지역건강센터 확충
  - 인구 5만 명 당 1개소 이상 설치, 운영 (2015년~)
- 대전시립병원 설립
  - 대전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신설 (2014년)
  - 대전시립병원 건설 및 개원 (2015년 ~ 2018년)

재원조달 방안

- 대전시립병원 설립 : 국비 및 시비, 민간조달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확보
  - 대전시 최우선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 도시보건지소 및 지역건강센터 확충 : 시비
  -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주민센터 등 활용 (평균 개설비용 1억 5천만 원, 유지비용 연간 3억 원)
  - 대전시 보건의료예산 비율 증대를 통한 시비 확보

공약 5 (지역공동체) 녹색교통도시 대전

정책목표

- 대중교통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 전환
- 버스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
- 19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 무료 대중교통 단계적 추진

이행방안 및 이행기간

-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후 진행 (2014년)
- 대전거점 지역에 시내버스 환승센터 및 환승정류장 건설 (2015년~2018년)
  - 대전역, 대전복합터미널, 유성터미널, 정부청사역 등 우선 건설
  - 급행/간선/지선 노선 정비하고 마을버스 도입
- 청소년과 노인 무료 조례 제정 (2014년)
- 단계적 버스공영제 전환

재원조달 방안

- 환승센터 및 환승정류장 건설비용 : 시비와 국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지원
  -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서울역, 여의도, 청량리 환승센터와 같은 규모 건설로 건설비용을 환승센터 당 20~30억 원으로 절감
  - 기존 버스정류장을 환승정류장으로 정비 : 한 개소당 약 5억 원
- 청소년과 노인 무료 대중교통 제공과 버스공영제 : 시비 (교통 예산 전면 재검토하여 우선 배정)
  - 청소년: 지하철 연간 250만 이용 (예산 21억 원), 버스 연간 1,400만 이용 (예산 100억 원)
  - 노인: 지하철 현재 무료(약 70억 원), 버스는 약 2,500만 이용 예상 (예산 300억 원)

울산광역시

공약 1 하청/중소기업 노동자가 원청/대기업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 사내하청 노동자는 노동시간은 길고(216.3h:220.04h) 임금은 낮으며(100%:74.56%), 휴일 휴가일수는 적고(27.06일:16일) 근속년수는 짧음(12.24년:3.38년)
- 기업을 초월하여 산업, 직종, 지역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직무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자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정책목표

- 동종 유사 업무 노동자와 임금, 노동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 차별 금지
- 고의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 및 노동조건 승계

이행방안

- 울산노사민정 포럼을 활성화하여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
- 하도급 노동자 보호법 제정 추진
-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하청노동자 차별 사후지원
-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울산시 직무능력 표준 개발
-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추진('노조법' 36조 1항)

예산 및 재원조달

- 울산노사민정 포럼 활성화 비용 1천만 원 이하
- 울산직무능력표준 시스템 개발비 5억 원 이하
- 광역단위 노동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비용 10억 원 이하

공약 2 새출발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은퇴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겠습니다

현황

- 울산은 향후 고령화 속도도 급격히 진행될 예정. 2020년 노인인구가 13.3%, 2030년 25.5%로 2028년부터 전국 평균을 앞설 전망
- 울산의 베이비붐 세대는 타 지역보다 많고,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음. 50대 비중은 14.2%로 전국 평균 13.6%보다 높고, 50~5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9.6%로 전국 평균 74.6%, 대도시 경제활동참가율 74.4%보다 낮음
- 울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2014년 3월 기준)은 각 41.3%, 40.1%로 전국 평균 50.6%, 48.7%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

정책목표

- 50대 고용률을 전국 평균 수준인 73%대로 높임
- 여성의 고용률을 전국 평균 수준인 50%대로 높임

이행방안

-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 취업지원 계획 수립
- 새출발일자리센터 설립하여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은퇴후 예비학교 실시하여 은퇴 후 재취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산업안전체험관 설립, 어린이 교통마을 도입, 자동차 안전예방센터 및 독거노인 노후 보일러 수립 사업 등과 같은 은퇴자 직업연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은퇴자들의 사회기여 및 소득보전을 위한 '은퇴자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
- 30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고급 직업훈련 과정 개설 및 취업알선

예산및재원조달

- 34억 원(취업지원센터 인력확충 비용 1억 원, 은퇴후예비학교 운영비용 10억 원, 사회적기업 지원비용 20억원, 직업훈련 고급화 비용 3억 원)

공약 3 울산시민문화대학을 설립해 시민들의 문화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현황

-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고졸자가 많은 지역임(2012년 통계 64%, 전국평균 41%). 그럼에도 전국 최고의 GRDP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라 고졸자들의 향학열이 높음
- 울산광역시의 경우 187개의 기관(울산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 건물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평생학습 만족도는 높은 편임. 따라서 보다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을 위해 전문적인 평생학습 기관이 필요함.
- 문화도시로서의 지향을 달성하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은 계속 있어왔으나 울산대학교(음악,미술,디자인학과)를 제외하고는 전문 학과가 부족함.

정책목표

- 학생 1,000명 규모 3개 학부(음악, 미술, 문화콘텐츠)로 구성된 작은 시민전문대학(학위 대상 학교는 아님)을 건립. 향후 시립대학 전환 검토

이행방안

- 울산시민문화대학 건립을 위한 용역조사 진행 (수요 조사 및 잠재력 조사)
- 울산시민문화대학 건립 공개 입찰 진행 (SPC 구성을 위한 업체 공개 입찰)
- 울산시민문화대학 SPC(특수목적회사) 구성 (기업 출자, 문화단체 출자로 구성)
- 울산시민문화대학 지원 조례 제정 후 본격 추진

예산 및 재원조달

- 울산광역시는 용역조사비(10억) + SPC 법인 투자비(51% 200억원)만 부담
- 전체 건립 비용은 3,000억 원 규모(전문대 최소 신설 비용, 대부분 기업체 부담) 학교 운영비는 등록금, 기업 출자금으로 충당

공약 4 아동주치의제를 도입해 필요할 때 전화로 상담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황

- 지금은 아이가 아플 때만 동네의원을 찾아가 약만 처방받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지,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건강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의 여부일 것임
-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며 교육할 수 있을 것임.

정책목표

- 아이들이 매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아동주치의제를 도입해 아동은 건강하게,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이행방안

- 관내 소아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주치의제도' 협약 체결
- 0~12세 아동, 협약을 맺은 소아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에 등록
- 등록 아동에 대하여 해당 소아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가 1년에 2회 주기적인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아동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 부모들이 자연스레 담당 주치의를 찾게 되므로 관내 소아과, 가정의학과가 본 협약에 가입할 유인효과가 크며, 부모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주치의가 있어서 일상적인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안심보육

예산

- 15억 원(울산지역 0~12세 아동 150,663명×의료기관 관리비 10,000원)

공약 5 일본산 농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하지 않고, 발암물질(석면, 라돈 등) 차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황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일부 학교 급식에 납품
- 울산시 교육처에 따르면, 산시 전체 학교의 80%가 석면함유 의심
- 울산의 7개 초등학교에서는 연평균 113.31베크렐의 라돈 검출

정책목표

- 학교(어린이집) 급식에서 일본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 GMO가 포함된 식재료를 원천 차단
- 어린이집 급식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관리 강화
- 학교(어린이집) 건물에서 석면을 완전히 추방하고, 라돈 피해 제로(0)화

이행방안

- 방사능 오염우려 식품 방지 조례 제정
- 울산시에서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비하고, 위탁검사 실시
- 학교(어린이집) 급식 및 안전한 식품 관련 자발적 지역조직과 거버넌스 체계 만들기
- 석면 실태 관련한 기존의 정보 공유 및 추가 실태 조사. 학교 내 석면 내장제 전면 교체
- 학교 등 공공건물에 대한 라돈(222Rn) 실태조사 실시. 차폐시설 설비
- 실내 공기질 개선, 유해물질 차단 및 제거, 안전한 먹을거리 등 종합적 개념의 '녹색배움터 인증' 모델 개발

예산및재원조달

- 50억 원(방사능 측정 장비 구입 5억 원, 라돈 실태조사 및 차폐시설 설비 20억 원, 석면 실태조사 및 교체비용 20억 원, 기타 5억 원)

강원도

공약 1 강원도 고등학교 까지 무상급식 확대

현황 및 추진배경

- 지난해 강원도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도의원들로 인해 전국 최초로 진행될 수 있었던 고교무상급식이 무산되었다
- 제9대 강원도의회에서는 반드시 전국 최초로 고교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목표

- 강원도 고교 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 배정

실행방안 및 이행절차

- 무상급식 지원 조례 및 예산 배정

재원 및 세부 공약

- 강원도 고교무상급식 지원조례 및 관련예산 약 90억 배정

공약 2 '금강산-설악산(혹은 남북 강원도) 통일관광 특별지대' 설치

현황 및 추진배경

- 2008년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고성군 일대의 지역 경기도 상당한 타격을 받아 왔음. 다른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실시된 이후 설악산 관광객의 감소 추세로 지역 관광 경기가 침체를 겪은바 있음.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 상 관광 경기의 악화는 강원도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곧 강원도 서민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 남측에서는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1998년부터 설악산-금강산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함
-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관광 국제화, 원산의 현대화 등을 포함하는 '동해안 관광특구 계획'을 남북관계 발전 및 강원도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

목표

-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남북협력의 활성화라는 하나의 과제와 설악산 등 인근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과제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필요
- 남북협력 재개와 활성화가 자신의 주머니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비단 고성군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강원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는 관광 패키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북돋우는 작용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실행방안 및 이행절차

-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지역, 혹은 북의 동해안 관광특구 계획과 맞물려 남북강원도 동해안 및 태백산맥 일대를 포함한 통일관광 특별지대 설치. 이는 서쪽의 개성공단 활성화–파주 특구–북한 강령군 경제특구 등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상징적인 지역이 될 것임
- 동해안에 평화의 바다공원 및 남북 공동 조업 구역의 설치
- 해당 지역의 DMZ 안에 평화생태공원을 설치하여 '금강산–설악산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단 이 경우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생태 친화적이어야 하며,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관련 시민사회 및 국제적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강원도와 해당 기초 지자체 및 지역민, 중앙 정부가 함께 하는 (가칭) '금강산–설악산(혹은 남북 강원도) 통일관광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설치함

재원 및 세부 공약

- 특별히 어디의 무엇을 더 개발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예산이 별도로 크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해당 지역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은 지뢰 제거 등에 일정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의욕을 갖고 있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예산이나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약 3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배경

-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욕구 조사에 의하면 2위는 동네의 후미진 곳 정비
- 지역의 이미지 관리를 통한 사회적·물리적 무질서도를 낮추는 것은 셉티드 원리 중 하나. 깨진유리창 이론에 의하면 인적이 드문 공,폐가나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관리가 되지 않는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 안전지도를 만드는 작업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행한 사업
-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끝나버리면 우범지역은 게토화될 뿐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 또한 한 해 사업으로 그칠 경우 모니터링 이후에 새롭게 생기는 문제를 간과하게 됨. 그러므로 안전지도 작성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목표

- 지역의 우범지역에 대한 진단과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유대 의식을 형성
-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조사를 통해 각 상황에 맞는 범죄예방 전략을 세움
  (예〉 용산구 해방촌의 "버려진 시장"- 공, 폐가와 범죄/ 관악구 행운동 "여성1인 가구 밀집지역"- 주거침입 범죄가 다수/ 중랑구 면목동 "성폭력 범죄 경력자가 많은 곳"...)

실행방안 및 이행절차

- 각 지역별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우범지대들을 연결. 물리적·환경적 개선
  - 안전지도 작성시 셉티드 요소를 적용. 안전진단 도구로서 활용.
  - 우범지역이나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을 선정, 노후한 주택과 시설에 대한 개선, 주민들이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연적 감시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ex〉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 매년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이전에 개선했던 지역은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새롭게 형성된 범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 또한 주민 공동체 활성을 위한 사업 지원.
- 안전지도 작성 외 안심귀가지원, 마을순찰대, 마을주민 젠더강사 양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고

재원 및 세부 공약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국고보조-여성가족부) : 1억8천~2억
-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한 환경개선 사업 지역 한 곳당 약 1억 9천~2억
- 마을 공동체 사업은 1억

  ※ 이상의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

공약 4 1백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사업중단 요구권 부여

현황 및 추진배경

- 용인 경전철, 성남시 신청사,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리한 지역개발사업, 국제대회 유치, 호화청사 건축, 불필요한 축제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시성, 선심성, 낭비성 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음
- 특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 SOC 사업의 경우 과다 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 보장(MRG)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민자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표만 의식한 개발 공약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민간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무책임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이같은 사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주민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 예산지출 근절
-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 확보

실행방안 및 이행절차

-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융자 심사의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 중 자체사업비가 1백억원(광역은 3백억원) 이상 소요될 경우 주민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 투표실시 전에 사업추진 이유,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비롯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주민들의 찬반운동을 보장
- 예산낭비가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더라도 주민들이 소정의 절차를 통해 사업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재원 및 세부 공약

- 국회와 공조하여 관련 법 신설 또는 개정 및 강원도 조례 제정

공약 5 강원도의회 1층을 주민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배경

- 지난 2011년 안산시의회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사는 곳의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안다'고 응답한 주민은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돈봉투 파문, 지방의원이 관련된 사업체와의 수의계약 만연, 해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외유 등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불신이 팽배
- 지방의회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주민들이 지방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음
- 한편 과천시의회는 지난 2011년 시의회 1층을 북카페로 꾸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학, 문화 등 다양한 주민대상 강좌를 실시하여 호평을 받음

목표

- 지방의회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지방의회에 주민참여 공간을 확보해 다양한 주민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실행방안 및 이행절차

- 의회 청사 1층을 북카페, 상설공연·전시 공간화 하여 주민들이 마음 편히 찾아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 행정 · 의정 정보 공개, 지방의원과의 사랑방 좌담회, 문화 향유 등의 공간으로 활용
-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시행으로 민주주의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

재원 및 세부 공약

- 리모델링 비용과 도서구입비등을 편성하여 집행

충청북도

공약 1 충북행복프로젝트 (건강) 1. 건강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미니보건소와 공공병원을 확대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현황
  - 예방 및 건강증진이 주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 등을 포함한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 연령대와 계층에 국한된 서비스만 제공
  - 급성기 병상 기준으로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의 8% 수준에 불과하여 합리적 공급자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공공병원의 경우는 시설, 인력 등 기본 인프라가 취약함
- 목표
  - 도시지역의 경우 보건소 산하에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하여 지역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보건지소의 보건인력을 확충하여 모든 지역주민 대상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민간병원 과잉 유무와 상관없이 인구 30~100만 명당 공공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기관과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예방, 치료, 재활이 지역사회에서 완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의료옴부즈만 실시로 의료공공성을 지키겠습니다

- 현황
  - 선진 외국과 달리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하여 과잉 진료, 서비스의 질 저하, 중복 투자를 통한 자원 낭비, 가계 부담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목표
  - 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민간의료기관 및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민간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비정상적인 사익추구 경향 축소 및 공익적 역할 유도

공약 2 충북행복프로젝트 (경제) 2.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적경제 획기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의 주체로 참여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 시키겠습니다
  - 생산 – 유통 – 소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내 귀속
  -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과 연대 시장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상품 및 기업경영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정책과제
  - 우선구매 목표제 도입 및 절차 개선 등을 통한 공공구매시장 환경조성
  - 윤리적 소비 기반 구축 및 제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투자기금 및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등 사회적경제 재원 조달을 위한 자본 시장 조성
  - 사회적경제 관련 인적자원 육성 기관 설립 및 컨설팅 등 지원체계 구축
  -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통합적 지원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 구축

최저임금 인상 및 적용확대

- 현황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실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형태가 타지역보다 많은 현실
- 목표
  - 최저임금을 향후 3년(2017년) 내 150만 원(1주 40시간 노동 기준), 향후 6년(2020년) 내 월 200만원/월으로. 2017년까지 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 50%에, 2020년까지 상용근로자 월평균급여 50%에 도달
  - 2020년 내 최저임금 비적용율 5% 도달

공약 3 충북행복프로젝트 (환경) 3. 청정충북을 지키겠습니다.

‘건강위험환경 예방 조례’를 제정해 유해물질 · 환경을 차단하겠습니다

- 현황
  - 건강의 결정요인은 매우 다양해서 의료이용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건강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님.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청소년 유해 업소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건강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음
- 목표
  - 건강유해 환경 및 위험에 대한 지역주민 및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의 원천적 차단을 통하여 불건강 문제를 해소함

에너지 절약,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 현황
  - 공급 위주 및 핵발전소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에너지 과소비가 조장된 측면이 있음
  - 산업시설과 도시민의 전기 소비가 절대 다량을 차지함에도 전기 생산시설은 농어촌 등에 위치해 있음.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생산지역 또는 송전선로 통과 지역의 주민은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환경 부정의(不正義), 에너지 부정의(不正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에너지전환을 시도하는 지자체 및 자발적 시민의 모임이 태동하고 있음
  -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협소한 접근임. ①에너지 자립, ②낙후지역의 경우 도시 재생, ③자발적 주민 조직 확대에 기댄 지역공동체 복원, ④고유의 문화와 역사의 특화, ⑤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의 창출, ⑥행정(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을 아우르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한 계획임

◉ 목표

- 100%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나, 에너지 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
-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
- 에너지 자립 및 도시 재생을 통한 공동체 복원
- 분산형 에너지 체계 기반 마련
- 미래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하여 '탈(脫)핵발전'을 실현

공약 4 충북행복프로젝트 (문화) 4. 찾아오는 문화충북을 만들겠습니다.

■ 농촌지역 문화계획을 수립하여 찾아오는 농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 현황

- 농 · 산 · 어촌은 자연 환경은 상대적으로 잘 보전되어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 지역적 공동화의 문제가 심각
- 개발과 이익에서 소외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
- 그동안 여러 유형의 '주제있는 농촌'이 가꾸어지고 있으나, 환경 · 경제 · 문화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농촌의 보기로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음

◉ 목표

- 도시민이 찾아와 농촌을 체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구상할 수 있는 실마리 제공
- 농촌민의 생활에 활력을 유도
- 농촌과 도시 사이의 지속가능한 교류와 연대의 고리 형성
- 농업, 농민 정책과 연동하여 생태 · 문화 · 생활 프로그램의 종합적 실현

■ 혁신학교를 확대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회복하겠습니다.

◉ 현황

-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학입시에 초중등교육이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현실
- 입시교육과 과도한 교육행정의 간섭이 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봉쇄
- 학교 공동체 붕괴, 교사의 무력감 증대, 학교폭력의 일상화 발생

- 경기도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한 새로운 학교 모델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교육의 대안으로 부상

◉ 목표

- 혁신학교를 자율성이 상실된 학교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
- 원하는 학생이 모두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학교 확대 보급
- 충북만의 특색있는 학교문화를 창조하여 인구유입을 도모

공약 5 충북행복프로젝트 (주민참여) 5. 주민의 뜻대로 충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각종 위원회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 현황

-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자치의 수준이 매우 낮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도 미약한 상태임
- 주민참여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거나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각종 위원회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등 참여기회의 보장이 마련돼 있지 않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목표

-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주민 감사제도 도입
- 주민들이 손쉽게 행정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

■ 1억원 이상 사업의 사전·사후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하겠습니다.

◉ 현황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참여예산제 도입이 제도화 되었으나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결정 권한을 주지 않고 제안의 권한만 주거나 일정한 수의 주민만 참여하도록 하고 소규모 예산에 한해서만 결정권을 주는 등의 소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꺾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업예산은 이미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전체 예산의 1% 정도만 참여예산제로 결정되고 있어 주민참여의 여지가 매우 좁은 것이 현실임.

◉ 목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예산편성요구권 부여
-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한 공개
- 결산과정의 주민참여 제도화
-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사례 확산과 정착화

충청남도

공약 1 재난에서 안전한 충청남도

목표

- 충청남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에 이어 진도 세월호 침몰 참사 발생
- 2013년 한 해 동안만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9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
-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과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들 산재로 잇단 죽음
- 2007년 태안의 허베이-스프리트 호 기름유출 사건과 2009년 12월, 2010년 1월 대산석유화학공단의 현대오일뱅크 부두 기름유출 사건
- 2006년 서해대교 교통사고 참사로 12명 사망
- 대전충남지역 2013년 한 해 동안 산재피해 노동자 10,860명, 산재 사망자 281명, 사망만인율 1.62로 전국 1위

이행방법

- 위기관리 전문가의 도지사 위기관리 보좌관 직제 신설 · 운용
- 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속화 설치
-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발주 시 기존의 사전재해영향평가 철저 준수
- 전문가 참여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지역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한 재난안전 연구 · 조사 및 위험 특성 분석
- 지역 자연 및 인적 재난의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해위험지도 작성
- 저수지, 댐, 석유화학 등 지역 내 주요 재난 예방, 대비 방안 마련

-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 자원 확보 등 대비 방안 마련
- 산재사고 위험 감시/감독을 위한 지역시민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의 위기대응 업무 전담화, 전문화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훈련, 연습
- 초기 재난대응 공무원의 위기대응 교육, 훈련, 연습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적 현장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
- 기업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실시
- 지자체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우선 선발 및 전문화 방안 마련
- 재난피해자를 위한 응급구호, 생활구호, 복지구호 체계 구축
- 다중이용시설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구 확보 점검 및 안전 점검 강화
- 가정폭력 등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심리전문가 상담 센터 설치
- 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 버스, 택시 등의 교통안전 위해요소 시민신고센터 운영

이행기간

- 2014년 충청남도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용역 실시
- 2015년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예산 수립
- 2016년 충청남도 재난안전 전담부서 확대 개편, 관련 조례 제개정

재원조달방안

- 용역비는 기존 방재계획 관련 예산 재조정으로 마련
- 각종 재난안전 관련 예산 통폐합

공약 2 주요 방조제와 간척지에 대한 갯벌복원 추진

목표

- 서산AB, 삽교 등 농업용수 공급에 필수적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 간척지에 대해 방조제의 교량화 등을 통한 해수유통과 갯벌복원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남도 내 갯벌현황
  - 충남도 해안 갯벌면적 : 총 500㎢
  - 간척지 면적 : 약 200㎢
  - 잔여갯벌의 면적 : 약 300㎢(당진 28㎢, 서산 68㎢, 태안 102㎢, 홍성 10㎢, 보령 33㎢, 서천 63㎢)
- 충청남도 내 간척현황

간척지 이름	위치	매립면적(ha)	담수호면적(ha)	방조제길이(km)
서산AB	서산	15,600	4,000	7.7
대호	서산-당진	7,650	2,200	7.8
석문	당진	3,740	1,000	10.6
삽교	당진-아산	2,600	2,000	3.4
홍보	홍성-보령	1,646	-	2.9
부사	보령	1,240	-	3.5
남포	보령	666	-	7.7

※ 자료: 한국의 갯벌, 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 문제점
  - 갯벌의 가치, 향후 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매립·개발해 보전가치가 높은 충청남도 대부분의 갯벌 훼손
  - 갯벌을 매립해 이용하는 일부 경제활동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성은 저하되는 한편 부정적 외부효과는 증가
  - 쌀값 하락에 따라 간척농경지의 경제성은 저하, 폐염전, 폐축제식양식장 등이 방치되고 있어 오염원으로 작용
  - 연안개발로 인한 갯벌생태계 파괴와 생물종 감소 심각
  - 갯벌매립과 단위노력당 어획량, 어패류생산량은 반비례

이행방법

- 대상지 중 일부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성공모델로 개발하여 복원사업 확대
  - 시범사업지는 복원성공 가능성, 지역주민의 의지, 보호지역 여부 등을 고려, 1~2개 지역을 선정
  - 지역별 복원계획 수립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복원목표, 복원유형 등 설정
    ①(해수유통)연륙도로(둑길)의 교량화, ②(단순복원)폐염전 등을 단순 갯벌화, ③(복합복원)폐염전 등에 염생식물 식재 등을 통한 습지조성 등
-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복원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 1개 시군 1개 복원사업으로 발전시켜 성공사례 확산
- 복원사업 추진시 계획, 시공, 성과평가, 결과홍보 등 순응적 관리전략을 통한 단계적 추진
  - 사업성과는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등의 인식전환 유도

이행기간

- 2014년 예산에 충청남도 갯벌복원 계획 용역 예산 수립
- 2015~2015년 시범사업지 선정
- 2017~ 성공사례 확산

재원 조달 방안

- 복원사업비 및 토지매입비는 국가와 지자체간 분담(국가 50~70% 부담)하도록 정부에 요구

공약 3 에너지다소비형 위주 산업의 구조 재편 추진

목표

- 에너지다소비형 위주 산업을 미래형, 자원순환형 산업 등으로 구조 재편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충남의 고성장을 이끌어 온 서북부권의 석유화학단지(서산)와 철강단지(당진) 등의 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자 오염물질 배출산업으로 향후 기후협약에서 제약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희소성과 지역의 자정능력을 볼 때 지속가능성에서 커다란 문제
- 철강산업은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슬래그, 먼지 그리고 슬러그를 포함하는 많은 환경오염물질과 폐수, 폐기물 그리고 소음을 발생시켜 공해를 야기하며 철강단지 인근에 조성된 석유화학, 1차금속, 조립금속, 비금속업종으로 이뤄진 인근 관련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협력업체에서도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공해 발생
- 석유화학산업 관련업체에서 발생되는 최종·중간생산물은 생산과정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공해물질을 생성시킬 수 있지만 생산원료나 최종 혹은 중간생산물의 수송과정에서 2007년 태안의 허베이-스프리트 호 기름유출 사건과 같은 심각한 환경공해 유발
- 서북부권의 자본집약적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해 부가가치중 지역민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용자보수 비중이 전국보다 크게 낮은 데다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업 등이 취약해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 중 상당부분이 역외 소비로 유출
- 지역경제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로 고용은 답보 상태
- 이 같은 생산 – 고용간 연계성 약화는 상대적으로 고용 흡수력이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된 데 기인
- 지역 제조업은 2006년 중 GRDP의 45.5%를 차지해 지역경제 내에서의 비중이 압도적이나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의 40%, 건설업의 55%에 불과
- 이러한 가운데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고용인력의 고령화가 심화
- 주요 제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서산 동희오토, 당진 현대제철)로 비정규직 확대, 일자리의 질 후퇴

이행방법

- 충남지역 산업구조 재편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 기존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들이 친환경적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 환경친화적, 자원순환형 산업의 육성으로 산업구조 다양화 추진
-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위주 기업육성 및 유치 전략

이행기간

- 충청남도 지역경제 산업구조 재편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2014년)
- 기존의 기업유치 전략 수정(2015년)

재원 조달 방안

- 연구용역 예산은 기존 용역 예산 재조정을 통해 마련
- 산업재편 중장기 로드맵은 기업유치 전략 수정 통해 추진

공약 4 화력발전 신설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 석탄화력 발전소 신설을 억제하고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발전소 등) 설비 확대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1월 말 기준 충남도의 가동 중인 전력시설용량은 15,721MW로 전국 발전시설용량 79,342MW의 19.8% 차지
- 화력발전(기력+복합+내연력)만의 설비용량 15,253MW로 전국 대비 29.1%
- 2010년 화력발전(기력+복합+내연력) 전력생산량 116,688MW로 전국 15.6%
- 2011년 충남도 전력사용량 42,650GWh로 전국의 9.4%에 불과
- 충남도 내 주요 발전시설 용량 및 전력생산 현황
  - 보령화력 1~6호기는 먼지 허용농도인 30ppb를 84.2ppb 초과, 질소산화물(Nox)은 기준치인 150ppm을 40.1ppm 초과
  - 당진화력 먼지 허용기준치 29.1ppb 초과
  - 태안화력 먼지 허용 기준치 7.9ppb 초과
  -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전국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7.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충남의 화력발전소 질소산화물 42.6%, 황산화물 38.1%, 미세먼지 41.3% 배출

- 충남도 내 석탄 및 복합화력 발전소 29기는 최근 5년간 2억원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먼지와 황산화물 초과 배출
- 보령화력 1억2300만원, 당진화력 4300만원, 태안화력 2600만원, 서천화력 30여만원 순

이행방법

- '충남 서해안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실시 추진
- 대기오염총량제 등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저지

발전소명	위치	시설용량 (MW)	건설/계획 (MW)
계		15,700	8,835
서천화력 (중부발전)	서천 서면 마량	400 (200×2)	1,000
보령화력 (중부발전)	브령 오천 으포	4,000 (500×8)	2,000
보령복합 (중부발전)	브령화력 발전소내	1,800 (150×12)	-450
태안화력 (서부발전)	태안 원북 방갈	4,000 (500×8)	2,380
당진화력 (동서발전)	당진 석문 교로	4,000 (500×8)	2,040
부곡복합 (GS EPS)	당진 송악 부곡	1,034 (501+533)	415
현대대산	서산 대산 득곶	466	
동부화력	당진 석문 교로		1,000

※ 자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11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아산만 조력발전소처럼 해양 환경을 파괴하고 실효성도 없는 사이비 '신재생에너지' 중단
  - 모든 충남도 내 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 충청남도에 독립적인 에너지관련 부서 신설
- 지방 은행,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및 정책·사업 공조
  - 기초 단위에서는 지역별 특징(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대공장 밀집지역 등)을 감안한

특화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수립

-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지역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녹색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및 녹색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의 내생적 발전 전략과의 통합 전략

이행기간

- 2014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남도 내 석탄화력 신설 저지
- 2014년 재생에너지 확대 종합계획 수립
- 2015년 단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추진

재원 조달 방안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국비와 지방비(50:50) 연차적 확보

공약 5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추진

목표

-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충남의 주택보급률 129% … 14만 채 남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충청남도 주택보급률은 129.1%로 혈연가구수(49만1,784호)에 비해 주택수(63만4,949호)가 더 많아 단순계산으로는 충남도민 모두 가구당 한 채 씩 내집을 갖고도 14만3,165호 남음
- 충남도내 63% 내집에 산다 … 32%는 셋방살이
  - 일반가구 기준으로 충청남도 전체 65만9,871가구 가운데 62.9% 41만4,795가구는 자기 집에, 31.6% 20만8,782가구는 셋방에 거주. 셋방살이를 떠도는 사람은 총 50만6,219명
- 충남 사는 3만6천가구는 다주택 소유자
  - 1990년 이후 새로 지은 주택은 38만5,558호로 매년 평균 약 2만6,000호씩 집을 지은 것. 그 결과 낡은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 재개발한 물량을 대체하고도 22만1,100호나 불어남

- 충남에서 셋방 사는 사람들
  - 충청남도에서 셋방살이('유주택 전월세' 포함)를 떠도는 사람은 전체의 31.6% 20만 8,782가구 50만6,219명. 전체가구의 14.1% 9만3,284가구 25만9천362명은 전세에, 11.6% 7만6,545가구 17만7,855명은 보증금 있는 월세에, 2.9% 1만9,462가구 3만6,407명은 보증금 없는 월세에, 3.0% 1만9,491가구 3만2,595명은 사글세에 거주
- 지하방 2천가구 등 부동산 극빈층 4천가구
  - 충청남도에 사는 전체(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4,248가구 9,593명. 전체 가구의 0.6%에 해당. 지하방에 사는 가구는 2,013가구 4,815명이며, 옥탑방은 323가구 761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에 사는 가구는 443가구 933명.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에 사는 사람은 1,469가구 3,084명
- 읍면 소재지에 늘어 가는 아파트. 농촌 붕괴 가속화
  - 읍면 소재의 아파트 집중으로 농촌 인구 이동, 빈집 증가
  - 빈집은 일단 방치될 경우 대부분 관리되지 않아 마을의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음.
  - 열악한 주거환경의 농촌주택과 함께 방치된 빈집은 어려운 농촌을 더 그늘지게 하고 귀농에 장애로 작용, 농촌붕괴 가속화
  - 최저주거환경 충족 주택비율 노동복합시 83.8%, 군 지역 71.1%로 농촌지역 주거환경이 훨씬 더 열악

이행방법

- 농촌 주거환경 개선 위한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
  - 농촌경관 해치지 않는 5층 미만의 농촌형 다세대 임대주택,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 시유지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민간 소유 토지임차(충남개발공사) 장기임대주택, 농촌빈집 매입 통한 장기임대주택 등 지역농촌의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폭 확대
  -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 예산지원 : 도10%, 시군10%, 농협80%
  - 사업내용 : 노후, 불량주택 개량(신축, 증축, 부분개량 등)
  - 지원기준 : 동당 5천만원 융자(연리3%, 5년거치 15년 상환)

이행기간

-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시행

재원 조달 방안

- 기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개편해 국비와 지방비(50:50) 연차적으로 확보

전라북도

공약 1 '갑의 경제'를 넘어 '을이 편한 경제'의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

- 전북에는 대형마트가 16개 있으며 이들의 연평균 매출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지난 17년간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 자영업자의 수익은 꾸준히 감소
- IMF, 외환위기, 비정규직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음
- 지역의 자금들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함

정책목표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중소기업, 하도급업체 보호
- 지역 경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 민생경제를 회복, 서민이 웃는 사회

이행방안

- 전라북도 생산자와 중소유통상인, 소비자가 상생하는 '전북 도소매통합물류센터 건립'
- 전북지역 대형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저지
- 중소상인 주간 사업 진행, 중소상공인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시/군상권공정거래지원센터'로 개편하고 기초지자체별 1개씩으로 대폭 확대
- 기초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상가마을 공동체 사업'과 '지역화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청에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 불공정거래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업체는 모든 관급공사 수주에서 배제
- 전북내 주요 지자체에 도급업체들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건립

-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민생지원센터'를 설립해 다수의 저신용 취약계층을 경제활동인구로 재편입 시킴
- 지역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

공약 2 주민권익옹호센터와 생애불안을 해소하는 복지기본선을 도입하겠습니다.

현황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육아와 노인복지의 요구가 심각함.
- 전북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7.5%로 전국 2위
- 전북은 최근 3년세 4651가구, 1만1798명이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지역임

정책목표

- 육아 기본선을 도입
- 노후 기본선을 도입
- 복지 기본선을 도입

이행방안

- 시군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
- 한국형 마더센터(영유아플라자)를 설립해 육아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제공
- '어린이집 · 내집앞 홈존 조례'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동네 만들기
- 아동주치의제 도입
- 시군립아동청소년센터(시군립방과후센터) 설치로 지역 방과 후 허브 역할
- 은퇴자 직업연계일자리, 노노케어 일자리 등 어르신우대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퇴자 맞춤협동조합을 육성
- 실버임대주택 도입, 자가 편의시설 지원으로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 경로당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전환해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실시

- 24시간 공공 간병제 도입으로 보호자 없이도 안심할 수 있는 병원
- 복지공무원 3배 확대로 세심한 맞춤서비스를 제공
- 아동 · 노인 · 여성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유니버설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
- 전북형 기초보장제 도입으로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차상위계층 포괄

공약 3 핵없는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정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

- 핵 발전소의 위험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에서 온 인류가 공감하고 있음
- 전북의 전력자립도는 36%에 불과하며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
- 반면 지역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북의 자연자원은 매우 풍부함

정책목표

- 핵 없는 푸른 전북
-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전북
- 에너지농사를 선도하는 미래 전북

이행방안

- 탈핵에너지전환조례제정, 에너지전환 장기계획 및 목표 수립
-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반대
- 방사능비상계획구역 30km 이상 확대
- 2026년 지역에너지자립을 목표로 한 전력수급계획 작성
- 영광 – 고창원전 폐로와 연계하여 전라북도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 다소비기업 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 전력소비량의 10% 이상 재생에너지 설치 권고

- 에너지 감축 및 재생에너지설치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및 시설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대책수립
-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조명밝기 및 시간 등 제한
-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주택가, 자연생태계 공간 등)
- 풍력, 태양광, 소수력, 가축분뇨, 우드펠렛 등 전북지역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역특성별 에너지자립마을 100개 조성지원
- 에너지전환과 자립마을의 점진적 확대
- 에너지 마을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예산보조
- 학교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전개
- 태양광설치를 통한 여름철 냉방, 펠렛난로를 통한 겨울철 난방 등
- 탈핵에너지전환 체험관 조성 등

공약 4 노동자와 농민들이 함께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현황

-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격차가 심각
- 공공부분마저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임
- 안정적인 일자리 없이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함
-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 없어, 가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
- 최소한의 생산비마저 보장받지 못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힘듬

정책목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보장
- 설레는 첫 노동, 청년일자리를 확대
-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를 실현

- 농민들의 복지와 소득을 향상
-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방안

- 전북지역 공공부문 경비, 청소, 환경미화 용역을 직영으로 전환
- 기간제, 무기계약직 노동자 차별 없앰
- 시간제-전일제 자유전환제를 도입
-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
- 지방공기업 '임금격차지수' 평가로 기업내 임금격차 줄임
- 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 기업 평가지표'를 도입해 노동의 질을 향상
- 아파트 직영전환 지원센터를 만들어 아파트 노동자의 임금을 높임
- 지자체/공기업에서 청년을 매년 5%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청년창업 성공과 재도전을 지원
-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 공공직업소개소 도입으로 일용직 수수료 없앰
- 전북지역 각 시군 노동복지센터 확대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
- 전라북도 로컬푸드센터 설립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과정을 혁신하고 농가소득을 향상
-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 기초농산물수매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약 5 아동주치의제를 도입해 필요할 때 전화로 상담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황

- 지금은 아이가 아플 때만 동네의원을 찾아가 약만 처방받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지,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건강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의 여부일 것임
-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며 교육할 수 있을 것임.

정책목표

- 아이들이 매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아동주치의제를 도입해 아동은 건강하게,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도내 소아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주치의제도' 협약 체결

이행방안

- 0~12세 아동, 협약을 맺은 소아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에 등록
- 등록 아동에 대하여 해당 소아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가 1년에 2회 주기적인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아동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 부모들이 자연스레 담당 주치의를 찾게 되므로 관내 소아과, 가정의학과가 본 협약에 가입할 유인효과가 크며, 부모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주치의가 있어서 일상적인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안심보육

전라남도

공약 1 일하는 사람, 중소상인이 살맛나는 전남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지자체, 공기업부터 청년 5%이상 정규직을 고용하겠습니다
- 청년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시간제 – 전일제 자유전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보장 근로조건 개선

- 지자체, 공기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30%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 시간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 공공조달에 사회적책임 기업 평가지표를 도입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

-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직업소개소 도입을 통해 일용직 수수료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일하기 좋은 전남

- 전남지역 생산자와 중소유통상인, 소비자가 상생하는 '전남 도소매 통합물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가마을 공동체' 사업, 사회적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불공정거래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전남 내 주요 지자체에 도급업체들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2 살아나는 농업, 살맛나는 농민

기초농산물 지자체 수매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수입보장과 지자체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 농산물 최저가격 실질적 보장

지역형 농업직불제를 개발하겠습니다

- 밭 직불금 확대 실시(금액 및 대상 품목의 전면화)

농수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 초보 영농인 정착지원 보조금 지원
- 고령 소농 생활안정 지원연금 지원
- 농가도우미 지원 강화

농림어촌 공동체를 살리겠습니다

- 작은학교 살리기 조례제정 및 교육공동체 구축
- 생활중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

FTA 추가협상 중단 및 농어촌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공약 3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 고령화되고 있는 전남의 상황에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설립은 지역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임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겠습니다

- 중증질환 입원비 본인부담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을 공공보건의료가 강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 미니보건소와 공공병원을 확대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건강책임부서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건강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건강우선 전략지역'을 선정해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건강위험환경 예방 조례'를 제정해 유해물질 · 환경을 차단하겠습니다

공약 4 골목까지 행복한 전남, 도민복지 기본선 도입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 방사능 걱정없는 급식실시, 발암물질없는 학교
- 좁고 복잡한 골목길에 LED 가로등 보충으로 안전거리 확보
- 아동주치의 제도도입 및 야간당직병원 도입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기본선 확보

- 어르신우대 일자리창출 및 은퇴자맞춤협동조합 육성
- 경로당을 어르신행복센터로 전환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 24시간 공공 간병제 도입으로 지방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 65세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 동네병의원에서 시행

공약 5 F1 사업중단 및 도민참여를 통한 예산수립방안마련

F1 사업 중단

- 예산낭비, 지방재정악화의 주범 F1 사업중단, 기존 시설 생활레포츠센터등으로 활용

도민 참여를 통한 예산수립

- 1백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의무화와 주민들에게 예산낭비사업에 대한 사업중단권 부여
- 1억원 이상 사업의 사전·사후 공개의무화
- 주민 모바일 투표로 예산배정 우선순위 결정

경상북도

공약 1 골목행복 프로젝트 (환경·안전)
1. 이윤보다 사람, 깨끗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

- 경북은 핵발전소가 밀집(4개 지역 18기)되어 유사시 위험이 가중되고 있고 월성1호기 등은 이미 수명이 다했음에도 무리하게 재가동 하려 함
-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 악취 등 수질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차 넉넉하지 못한 상황임

정책목표

- 안전성이 의문시되는 핵발전소를 신재생 에너지 체계로 전환
- 4대강 재자연화로 경북의 자연환경을 원상복귀하고 무의미한 토목공사를 폐기
- 동해안에 핵발전소건립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단지로 조성

이행방안

-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 즉각 폐쇄추진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확대, 핵발전소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
- 방사능 안전급식조례를 제정하여 방사능 안전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
  - 첫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 둘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물론 방사능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그리고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수용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함.
  - 셋째, 방사성물질 검사장비 및 검사체계를 갖추고,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 설치
  - 넷째, 방사능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

하고, 이것이 친환경 로컬푸드 체계를 통해 인근 지역에 있는 농축수산업 및 가공품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함.

- 칠곡보를 전면 제거하여 낙동강 수질을 개선
- 영양댐 건설안 폐기
-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 폐기
-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지원센터 건립

공약 2 골목행복 프로젝트 (경제) 2. 을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현황

- 지난 10년새 경북 내 대형마트 3배 이상 증가
- 지난 17년간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 자영업자의 수익은 꾸준히 감소
- IMF, 외환위기, 비정규직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음
- 지역의 자금들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함

정책목표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중소기업, 하도급업체 보호
- 지역 경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 민생경제를 회복, 서민이 웃는 사회

이행방안

- 경상북도 생산자와 중소유통상인, 소비자가 상생하는 '경북 도소매통합물류센터 건립'
- 경북지역 대형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저지
- 중소상인 주간 사업 진행, 중소상공인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시/군상권공정거래지원센터'로 개편하고 기초지자체별 1개씩으로 대폭 확대

- 기초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상가마을 공동체 사업'과 '지역화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청에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 불공정거래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업체는 모든 관급공사 수주에서 배제
- 경북내 주요 지자체에 도급업체들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건립
-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민생지원센터'를 설립해 다수의 저신용 취약계층을 경제활동인구로 재편입시킴
- 지역별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

공약 3 골목행복 프로젝트 (친환경 무상급식) 3. 중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현황

- 현재 경북은 무상급식 수준이 낮은 편이고 그나마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100명이하 초 및 읍이하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40%이하))
-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제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도민들의 요구가 높음

정책목표

- 중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 고등학교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장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식자재 공급 사업 전개
- 지역에서 만들어진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로컬푸드를 급식으로 제공

이행방안

- 중학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 고등학교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
-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거버넌스 로컬푸드 급식지원센터 설립
- 다수의 영농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 입찰방식 개선으로 일선 학교의 과도한 업무 개선

공약 4 골목행복 프로젝트 (복지) 4.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 경북도민 복지기본선 확립

현황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육아와 노인복지의 요구가 심각함
- 경북의 노령인구는 15.6%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경북은 민선5기 시절 8천가구(2011년에 3871가구(8,449명), 2012년에는 4,279가구(9,203명))가 넘는 수급가구를 탈락시켜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지역임

정책목표

- 육아 기본선을 도입
- 노후 기본선을 도입
- 복지 기본선을 도입

이행방안

- 시군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
- 한국형 마더센터(영유아플라자)를 설립해 육아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제공
- '어린이집 · 내집앞 홈존 조례'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동네 만들기
- 아동주치의제 도입
- 시군립아동청소년센터(시군립방과후센터) 설치로 지역 방과 후 허브 역할
- 은퇴자 직업연계일자리, 노노케어 일자리 등 어르신우대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퇴자맞춤협동조합을 육성
- 실버임대주택 도입, 자가 편의시설 지원으로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 경로당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전환해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실시
- 24시간 공공 간병제 도입으로 보호자 없이도 안심할 수 있는 병원
- 복지공무원 3배 확대로 세심한 맞춤서비스를 제공
- 아동 · 노인 · 여성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유니버설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
- 경북형 기초보장제 도입으로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차상위계층 포괄

공약 5 골목행복 프로젝트 (노동자,농민)
5. 노동자와 농민들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겠습니다

현황

-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격차가 심각
- 공공부분마저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임
- 안정적인 일자리 없이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함
-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 없어, 가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
- 최소한의 생산비마저 보장받지 못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힘듬

정책목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보장
- 설레는 첫 노동, 청년일자리를 확대
-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를 실현
- 농민들의 복지와 소득을 향상
-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방안

- 경북지역 공공부문 경비, 청소, 환경미화 용역을 직영으로 전환
- 기간제, 무기계약직 노동자 차별 없앰
- 시간제-전일제 자유전환제를 도입
-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
- 지방공기업 '임금격차지수' 평가로 기업내 임금격차 줄임
- 공공조달에 '사회적책임 기업 평가지표'를 도입해 노동의 질을 향상
- 아파트 직영전환 지원센터를 만들어 아파트 노동자의 임금을 높임

- 지자체/공기업에서 청년을 매년 5%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청년창업 성공과 재도전을 지원
-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 공공직업소개소 도입으로 일용직 수수료 없앰
- 경북지역 각 시군 노동복지센터 확대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
- 월급형 공익농민제(농민공무원)를 실시
- 경상북도 로컬푸드센터 설립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과정을 혁신하고 농가소득을 향상
-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 기초농산물수매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1 경관파괴 교통체증 가중 초고층 드림타워 건설, 카지노 허가 등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 촉구

드림타워 건축허가 취소, 카지노 도입 중단!!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 카지노 도입여부 도민투표 회부!!

현황 및 추진배경

- 중국 녹지그룹과 동화투자개발은 공동으로 상업지역인 노형동 부지 2만3천301㎡에 지하 5층, 지상 56층, 전체면적 30만6천517㎡ 규모의 숙박시설과 카지노 시설을 짓는 '드림타워' 건설계획을 제출
- 지난 2월 조건부로 건축 · 교통통합심의를 통과, 4월 14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가 '부분수용'으로 의결, 보완조치 후 재심의 하는 절차만 남겨 둔 상태
- 현 우근민 도정은 드림타워로 인한 교통혼잡, 조망권 · 일조권 피해, 건물풍 문제, 외관유리 빛 반사, 광해(光害) 등 주민 피해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도 심의하지도 않고 있음
- 시내 한복판에 56층이 넘는 초고층건물이 들어오고 대규모 카지노시설까지 같이 들어온다면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사안이므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방적인 허가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에 부쳐 도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하는 것이 참다운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는 민주주의의 기초

목표

- 주민투표를 통해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초고층 드림타워 건설과 카지노사업 확대 정책에 대해 도정의 일방통행식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경고
- 주민투표 발의를 통해 직접적인 도민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재확인

실행방안 및 이행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3항, "그 밖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에 의거하여

드림타워 건설과 카지노 도입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주민투표 발의'를 우근민 도지사에게 요구하고 거부시 직접적인 주민발의 절차에 돌입.「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이므로 약 5만 이상의 도민서명을 받아 직접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고 제출할 것

공약 2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철수! 면세점 환수!!

제주도의 가치를 자산으로 하여 발생한 경제적 이익, 도민 환원

현황 및 추진배경

- 제주공항의 운영권자인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항은 지난 3년(2010~2012년) 동안 1552억원의 흑자
- 연도별로는 2003년 처음으로 55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04년 176억원, 2008년 227억원, 2009년 322억원, 2010년 445억원, 2011년 552억원, 2012년 555억원 등 해마다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2011년과 지난해의 경우 불과 3~4년 전인 2008년보다 갑절 이상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음. 이는 관광객 급증세와 맞물려 항공편 이용객에 대해 공항이용료 4000원(편도)을 받고 있기 때문
- 제주국제공항의 국내선 공항사용료는 4000원, 국제선은 1만2000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은 1849만여명으로 제주공항 사용료는 463억6000만원에 달함. 도와 도의회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나 수익금 제주 환원이 미흡하다며 2011년부터 제주국제공항 사용료 수익금 일부를 제주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 도는 공항사용료 수익금의 10% 정도를 제주발전기금으로 출연 요구, 반면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이용료를 기금출연 방식으로 제주에 재투자하려면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해야 하고, 다른 지방공항의 적자 지원 재원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 신라·롯데면세점 2곳의 매출액은 2012년말 기준 3295억원으로 이는 2008년 대비 274%(2415억원)나 급증, 윤춘광 제주도의원, "제주도 등이 연간 마케팅 비용을 100억원 가량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대기업 면세점들은 앉아서 돈을 챙기는 형국", 신

라는 3년간 지방소득세 1억5000만원, 롯데는 호텔까지 포함해 9900만원 납부한 것이 전부이고, 카지노 업체도 내는 관광진흥기금을 면세점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 제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신라·롯데면세점의 경우 사업장만 제주도에 있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전무, 이들 면세점은 매출액이 제주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본사로 송금되는데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역시 단 한 푼도 적립되지 않고 있다. 작년 제주 지역 카지노 8곳의 매출액은 1438억원으로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액보다 1857억원 적지만, 관광진흥기금 납부액은 102억8400만원을 납부함

목표 및 실행방안

- 역외유출 최대 이윤창출업인 도내 면세점업 인·허가권, 관세청에서 제주도로 이양
- 현 면세점업체 수익 중 일부를 도민복지기금으로 조성, 목적세 형태로 복지분야 전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정
-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공항이용료 수익의 50%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기금조성 조례 제정

공약 3 개발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예산 강화

4년간 일체의 신규 도로공사 전면 중지!

아스팔트 대신 아이들의 교육과 어르신들의 복지를!!

현황 및 추진배경

- 현재 보육과 여성, 장애인, 노인, 노동, 청소년, 주거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은 21.17%, 보건의료, 교육 등의 2.87%를 합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복지분야의 총 예산은 전체 총 예산의 24%, 8,643억원 정도
- 반면 도로, 해운항만 등 수송 분야, 하천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 무역 및 투자유치와 산업진흥,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안전분야의 총 예산은 전체 총 예산의 33%, 1조 1천억원대를 훌쩍 넘는다.
- 제주도는 최근 10여년동안 매년 1,500억에서 2천억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 지속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며 제주의 자연녹지와 농지를 점유해왔다. 2014년 예산안에서도 모두 91억 정도의

도비와 7백억이 넘는 국비를 들여 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총 545억원에 해당하는 100% 도비부담 신규도로를 2020년 완공목표로 건설 예정중이다.

- 도로 1,450억원, 항만건설 900억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 3,100억여원, 공공기반시설확충이라는 명목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지원과 도시계획도로 건설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국토및 지역개발사업에 1,362억원, 3천억원에 이르는 상하수도 관리사업, 약 750억원에 달하는 하천재해 관리사업 등의 예산비중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검토, 꼭 필요한 민생사업이 아니라면 점차 줄여나가는 예산 편성정책 필요

목표 및 실행방안

- 2012년도 전국 평균 사회복지 예산은 26.1%에 비하면 도의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5% 미만의 수준이다. 따라서 총 예산안 편성에서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 장기적으로 편성비중을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까지 사회복지분야 현 21%대에서 2020년까지 30% 편성, 보건의료분야 현 1.2%대에서 5%대까지 편성, 교육 분야 현 1.6%대에서 5%대까지 올리는 등 총 40%대로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과 일반 행정, 공공질서와 안전, 사회간접자본 비중을 줄여나가는 복지중심의 장기 예산 편성 계획이 나와야 함
- 자치재정의 문제, 환경보전세 신설 등 자치 재정 확보를 위한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 자치역량 강화, 목적세 관련 조례 대폭 손질, 개발공사 이익, 세계자연유산 관광 수익 목적세로 지정, 지역마을과 복지정책 등 특수목적에 사용토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조세정책 실현
-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틀니(75세 이상) 및 보청기(70세 이상) 지원 예산이 총 1억 6천 2백만원인데 이는 겨우 틀니 472명, 보청기 130명에게 돌아가는 예산('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의치율 6.6%, 보청기 0.7% 기준)이다. 2013년 1월 기준 제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76,212명의 50%가 의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50% 자부담을 전액 도비로 환산해서 부담하는 예산은 192억원이고 보청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20%가 한다면 50% 자부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03억원, 총 295억원이다.
- 내년 아라 – 회천 – 신촌 우회도로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360억이다. 이는 65세 이상 제주도 어르신들 중 틀니와 보청기가 필요한 어르신 전부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받아도 남으며 도내 115가구가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비를 현재의 4억 3천만정도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예산이다.

공약 4 기초의회 복원, 도지사 권한 축소, 감사위원회 독립, 제주도지사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비율 확대

제주시 서귀포시 시장을 시민 직선으로 ! 제주시, 서귀포시의회 복원!

감사위원회 독립! 제주도지사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현황 및 추진배경

- 주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안과 정치적.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 행동하고 체험되어지는 '주민자치시스템'이 없음. 민주주의의 기본권 문제, 작은 정치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 생략됨, 치안과 통치만 남아 있는 현실
- 감사위원장은 공모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감사위원 6명은 도의회(3명), 제주도(2명)와 도교육청(1명)이 추천한다.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는 도와 교육청이 감사위원의을 추천한다는 것은 모순, 7대 경관문제 혐의없음 결론과 작년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불거진 감사위원회의 독립문제는 도민들도 공분하는 문제
- 현행 상대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 결정방식은 역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0%대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아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옴
- 역대 대통령의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32.96%, 14대 김영삼 대통령 28.04%, 15대 김대중 대통령 31.98%, 16대 노무현 대통령 34.33%, 17대 이명박 대통령 30.52%였다. 제36대 제주도지사선거 전체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은 우근민 26%였고 35대 선거 김태환의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은 28.4%였다.

목표 및 실행방안

- 감사위원회,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존 조례를 개정, 도의회 3, 시민사회 3인의 추천으로 도의회가 임명하도록 해야 최소한의 기관독립이 가능
-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인사권 부여, 감사위 직원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근무평가를 내부적으로 실시해 감사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감사위원장 공모제를 제도화하며,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
- 본선 투표에서 50%이상의 과반득표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순위의 후보들만 다시 2차로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자 득표의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 정통성을 높임. 또한 지지율이 약한 소수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예선전부터 거대정당 후보들과의 후보단일화 압력 부담 없이 자신들의 정치를 소신껏 펼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의 지방의회 진입확대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20%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 특히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줄어들 광역의원 정수 5인을 비례대표 정원으로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30%대로 확대
- 광역의원 선출 지역구획정을 새롭게 개편, 현재 1인 선출 소선구제로 되어 있는 29개 지역구를 3-4인 선출의 중대선거구 7-8개 지역구로 획정, 특정정당의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개편
- 기초의회 없는 기형적 지방자치제 실시 만 8년, 기초의회 복원과 제주시, 서귀포시 시장 직선제 선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선거 직후 도민투표를 통해 확정

공약 5 도민복지와 환경보전, 자치확대를 위한 新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특별법도민제정위원회 구성

'도민복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법' 범도민 제정위원회 구성!

기존 기업형 개발목적의 특별법 폐지!!

현황 및 추진배경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투기목적 방치하는 투자진흥지구, 토지비축제도 등 악법조항이 많으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보장하고 기업자본 투자이익 보장위주로 되어 있음
- 도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비축제를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대·상대보전 지역과 곶자왈, GIS 3등급이 포함된 토지 등을 매입, 또 국공유지내의 연접한 토지와 매각을 희망하는 공동목장도 매입, 환경보전 및 지속 개발가능한 토지 확보위주의 토지비축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최근 밝힘
- 최근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의 경관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지사 훈령으로 토지비

축제도를 환경보전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정책전환은 바람직하나 훈령은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지휘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권한에 불과, 특별법 개정, 또는 폐지와 후속적인 조례개정이 즉각 필요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 제도,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 ·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됨
- 2014년 1월 31일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 43개소에 해당하는 업체가 받은 총 감면세액은 486억원에 달한다.

목표 및 실행방안

- '도민복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법' 범도민 제정위원회 구성!
-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민공청회와 제정운동을 통해 도민 주체의 제주미래 청사진 제시
- 행정부서 개혁, 국제자유도시 지향 개념 탈피, 녹색평화도시에 맞는 새로운 실국체제 개편, 지속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도 차원의 환경보전국 전면강화, 환경관련 도정 산하 실국 통폐합, 종합적인 환경보전센터 설립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겨레자유평화통일당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겨레자유평화통일당 정책공약

▣ 중앙 10대 정책

No.	정 책
1	**통일, 국방 안보** 통일 헌법・정부 조직 구성 통일위원회 발족
2	**행정** 지방자치행정 개혁 – 주식회사 개념 도입
3	**지방의회** 지방의회 토착화 이권화 폐지 및 처벌 – 건전한 견제감시
4	**복지 – 노인/아동/가정** 찜질방복지 시행 – 최소 비용 부담, 최선의 고객만족시스템구축
5	**경제・일자리**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국가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6	**교육/문화 – 일자리** 재단법인 대한민국종친회 설립지원–미래교육, 미래문명 족보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복원, 문화재보호
7	**사면정책** 재활사면정책
8	**실종자, 가정보호대책** 비폭력평화복지– 최소의 투자・최고의 고객 만족 실종조사국, 가정보호국 설치
9	**생활 사회** 성매매 자유촌 설치
10	**국토/건설/세제** 실패한 정책 – 공시지가 제도 폐지, 부당감정법인 공무원 처벌 세제개혁 – 퍼주고 낭비하는 예산절감 재산세 2%로 인하, 양도세등 거래세 인하

▣ 시・도별 5대 핵심공약

정책 1 통일, 국방 안보

통일 헌법 · 정부 조직 구성 통일위원회 발족

- 통일수도 강역 – 남북한 휴전선 전부/ 개성 · 장단 · 문산 · 철원 금강산 · 고성일대
-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 10년 남북총리 각 1인 임기 5년 헌법원 입법원 대법원 선관위 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 통일국가 명칭 – 한국조선
- 통일기 · 애국가 제정 – 삼태극 + 별그림 합성

현황과 문제점

- 남북한이 평화 통일 준비는 전무함

이행방법

-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 제정

이행기간

- 2014년 5월 1일 – 2015년 5월 1일

재원조달방법

- 당비 및 후원회비

정책 2

행정

지방자치행정 개혁 – 주식회사 개념 도입

가. 공무원 감사직군・회계직군 신규설치

나. 감사회계국 설치

다. 각종심의(허가)위원회 3/1 폐지 – 의회의원 참여 배제

라. 부패공무원 퇴출, 명퇴제도 도입 – 신규공무원 충원

마. 자회사 민영화

바. 시민만족평가 인사시스템 도입 – 연봉계약제 도입

사. 서울시예산 포상제실시 – 국민권익위 청렴순위 적용

현황과 문제점

- 행정의 조폭화・퇴폐화・정당조직화 폐지

이행방법

- 기존조직의 구조조정

이행기간

- 당선 즉시

재원조달방법

- 없음(구조조정으로 절약)

정책 3

지방의회

지방의회 토착화 이권화 폐지 및 처벌 – 건전한 견제감시

가. 지방의회의원 각종 위원회 위원 행정참여 불허

나. 행정공무원, 의회 의원 편의 제공 처벌

다. 의회의 공무원, 각종위원회 위원 인사권 참여 금지

라. 행정낭비 지방조례 2/1 폐지

현황과 문제점

- 각종위원회 좌우지로 부패 토착화, 행정조례로 부패화

이행방법

- 의회 진출시 즉시 시행

이행기간

- 즉시

재원조달방법

- 없음

정책 4

복지 – 노인/아동/가정

찜질방복지 시행 – 최소 비용 부담, 최선의 고객만족시스템구축

가. 공무원직제 국민 안전·봉사 조직 개편 구축

나. 복지기관 민간조직 참여 최소화 – 종교 선(포)교조직 배제

다. 수혜자 직접 수혜정책 – 복지현금카드 발급

라. 노인 대리보모제 시행으로 일자리지원으로 자급자족구축 – 고아 유아원 등등

마. 대모대부제도 실시 – 청소년가장, 미아대상, 청소년부모

현황과 문제점

- 퍼주는 복지, 공짜복지, 무상복지 지양

이행방법

- 제도 개편

이행기간

- 당선즉시

재원조달방법

- 없음(구조조정)

정책 5

경제 · 일자리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국가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가. 민족자본 민족은행 17개시도에 설립 – 경제활성화 대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시도농민 경제지원 대책
나.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와 지식으로만 재활 대출을 받는다.
다. 30분주차, 식사주차 허용(4차선 이상 도로, 골목길, 전통시장)
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지원/ 사업지원
마. 백화점 세일기간 주차장 폐쇄 –교통정체 해결
바. 정부규제 정책시행 대행업무 축소
사. 공공 청사 축소
아. 정당, 정치 중립의무 위반 시민단체 지원 배제

현황과 문제점

- 낭비적 예산집행 거부

이행방법

- 구조조정

이행기간

- 당선 즉시

재원조달방법

- 구조 조정/ 시민 민간 주주 참여유도

정책 6

교육/문화 – 일자리

재단법인 대한민국종친회 설립지원–미래교육, 미래문명
족보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복원, 문화재보호

가. 1인1족보 지원
나. 족보 온라인 발급제도 도입
다. 종친회 협동조합 지원 – 전통세습문화 사업화 지원
라. 전국성씨종친회 무상이용 빌딩 제공
마. 역사도서관 설치
바. 역사시험 복원
사. 미래교육 – 공공자산 사교육 서당화 – 실제미래직업교육
아. 고학력실업자 퇴직자 미래직업 교육직 채용
유아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대학 직업교육 교사제 도입 및 채용제도

현황과 문제점

- 전혀 배려 없음

이행방법

- 당선 즉시

이행기간

- 즉시

재원조달방법

- 기업 기부 참여유도, 문화재보호기금 조성,
- 기존예산조정, 교육청 지원예산 구조조정, 수혜자 부담
- 서울시소유 부동산 기부

정책 7 사면정책

재활사면정책

1. 경제사면
   불법주차공과금연체차, 세금기여자, 영세사업자, 생계곤란자
   각종 부담금 면제 사면조치, 신용불량자
2. 일반사면
   직무관련자, 양심수, 일반 경범죄 경력자
3. 특별사면
   기타

현황과 문제점

- 과도한 범죄자 양산

이행방법

- 당선 즉시

이행기간

- 즉시

재원조달방법

- 없음

정책 8 실종자, 가정보호대책

비폭력평화복지– 최소의 투자 · 최고의 고객 만족

실종조사국, 가정보호국 설치

가. 사법공무원 배정 – 실종 행방불명 긴급구조자 지원

나. 가정보호국 – 부녀자 폭행, 납치, 협박, 사채탕감 지원

다. 국가 육해공 구난청 설치

현황과 문제점

- 비폭력 평화 복지 제도 정착

이행방법

- 당선즉시

이행기간

- 당선즉시

재원조달방법

- 구조조정/ 예산조정/ 공무원조직개편

정책 9

생활 사회

성매매 자유촌 설치

가. 인신매매 납치 고용 강력 처벌
나. 개인사업자 부여
다. 위생증미소지자 – 강력처벌
라. 성매수 금지법 개정 추진
마. 성매매 노임착취 강력처벌

현황과 문제점

- 점증하는 성폭력범 대비 정책

이행방법

- 국회 정부와 협상

이행기간

- 즉시

재원조달방법

- 예산확보 / 민간자본 참여

정책 10 국토/건설/세제

실패한 정책 – 공시지가 제도 폐지, 부당감정법인 공무원 처벌
세제개혁 – 퍼주고 낭비하는 예산절감
재산세 2%로 인하,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
가. 부당 감정사 감정기관 국토교통부 개혁과 검찰고발
나. 공짜 아파트 공급 – 재개발 재건축 적극지원
다. 아파트 분양가 통제
라. 담보대출허용, 신용대출과 분리
마. 주택지대 실거래가 즉시 공개

현황과 문제점

- 재산세 2% 인하로 재산평가 현실화로 실질소득 증가

이행방법

- 당선즉시, 정부 국회와 협의

이행기간

- 당선 즉시

재원조달방법

- 없음, 거래활성화로 오히려 지방세 세수증가

겨레자유평화통일당

시·도별 5대 핵심공약

- 17개 특별시・도・광역시 공통

정책 1 경제활성화 대책

서울시경제주식회사 설립 –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서울시 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재산세 2%로 인하

가.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 담보대출허용, 신용대출과 분리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책
나. 신용불량자 사면 – 신용불량자도 담보 대출제도
　　국민 지식 대출제도
다. 정당제 조직폭력행정 뿌리 뽑는다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 폐지, 행정조례 축소
라. 부당감정 감정사 감정기관개혁과 검찰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마. 집주인 공짜 아파트 공급 –재개발 재건축 적극지원
바. 분양가 상한가 통제
사. 불법주차공과금연체차, 세금기여자, 영세사업자, 생계곤란자, 각종 부담금 면제 사면조치

현황과 문제점

- 낭비적 예산집행 거부/연체자만 양산, 경제활동 위축해소, 재산세 2% 인하로 재산평가 현실화로 실질소득 증가

이행방법

- 당선 즉시, 정부 국회와 협의

이행기간

- 당선 즉시

재원조달방법

- 자본금 1조원
- 구조 조정/낭비예산 반영/시민 민간 주주 모집

정책 2

복지, 일자리, 여성, 가정, 청소년, 유아

비폭력평화복지 · 찜질방복지 시행 – 최소의 투자 · 최선의 고객 만족

가. 공무원 봉사직군 개편 구축

나. 민간조직 참여 최소화 – 종교선교조직 배제

다. 수혜자 직접 수혜정책 – 복지현금카드 발급

라. 노인 대리보모 제도시행으로 자급자족구축 – 고아 등등

마. 대모대부제도 실시 – 청소년가장, 미아대상, 청소년부모

바. 실종조사국

– 사법공무원 배정 – 실종 행방불명 의문사 긴급구조자 지원

사. 가정보호국 – 부녀자 폭행, 납치, 협박, 긴급 지원

아. 사회안전국 설치 – 비상사태, 긴급구난

현황과 문제점

- 퍼주는 복지, 공짜복지, 무상복지 지양, 구조조정, 세금부담완화,

이행방법

- 제도 개편

이행기간

- 당선즉시

재원조달방법

- 구조조정/예산조정/공무원조직개편

정책 3 교육, 문화

재단법인 대한민국종친회 설립지원
족보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복원, 문화재보호

가. 1인 1족보 지원
나. 족보 온라인 발급제도 도입
다. 종친회 협동조합 지원 – 전통세습문화 사업화 지원
라. 전국 성씨종친회 무상이용 빌딩 제공
마. 역사도서관 설치
바. 역사시험 복원
사. 미래교육 – 공공자산을 사교육 서당화 – 실제미래직업교육
아. 고학력실업자 미래직업 교육직 채용 – 유아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대학교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 전혀 배려 없음

이행방법

- 당선 즉시

이행기간

- 즉시

재원조달방법

- 기업 기부 참여유도, 문화재보호기금 조성, 기존예산조정, 교육청 지원예산 구조조정, 수혜자 부담
- 서울시 소유 부동산 기부

정책 4

행정개혁 – 의회개혁

지방자치행정 개혁 –주식회사 개념 도입
지방의회 토착화 이권화 폐지 및 처벌– 건전한 견제감시
가. 공무원 감사직군・회계직 신규설치
나. 행정자치위원회 폐지, 협동조합 비 정치화
다. 각종심의(허가)위원회 3/1 폐지
라. 부패공무원 퇴출, 명퇴제도 도입 – 신규공무원 충원
마. 자회사 민영화
바. 시민만족평가 인사시스템 도입
사. 지방의회의원 각종 위원회 위원 행정참여 불허
아. 지방의회의원 행정공무원 편의 제공 처벌
자. 의회 – 공무원, 각종위원회 위원 인사권 참여 금지
차. 행정낭비 지방조례 2/1 폐지

현황과 문제점

- 행정의 조폭화・퇴폐화・정당조직화 폐지・각종위원회 좌우지로 부패 토착화, 행정조례로 부패화

이행방법

- 당선 즉시 시행・기존조직의 구조조정

이행기간

- 즉시

재원조달방법

- 없음

정책 5 사회

성매매 자유촌 설치

가. 인신매매 납치 고용 강력 처벌
나. 성매매 개인사업자 부여
다. 위생증미소지자 – 강력처벌
라. 성매매 금지법 개정 추진
마. 성매매 노임착취 강력처벌

현황과 문제점

- 점증하는 성폭력범 대비 정책

이행방법

- 국회 정부와 협상

이행기간

- 즉시

재원조달방법

- 예산확보/민간자본 참여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제민주당

10대 기본정책

경제민주당 중앙당 10대공약

1. 국가유공자 보상체제 정책(국가유공자로 선정)
   1) 만주독립군
   2) 사할린, 태평양 전쟁 희생자와 후손
   3) 일본 강점하의 강제 징용 희생자 및 피해자와 후손
   4) 종군위안부
   5) 전몰군경
   6) 파독간호사와 파독광부
   7) 소방관 순직
   8) 베트남 파월장병
   9) 애니깽 : 멕시코 쿠바 희생자와 후손

2.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희생자 회복(순교자 순직자 등)

3.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희생당한 정치인과 기타 회복

4. "소외계층 서민 약자 보호대책에 관한 정책"
   1) 서민부채 탕감
   2) 신용불량자 구제
   3) 농어촌부채 탕감(서민 소외계층 약자)
   4)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서민 소외계층 약자)

5.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잘못된 불필요한 이혼법 교육법 상속법 금융법 증권법 유통법 의료법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 개정하며, 잘못된 교육시스템을 '성상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인성교육 중심으로 실시하고, 각 씨족의 전통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경제민주당 중앙당 10대공약

6. 이벤트 회사를 통하여, 양로원 장애우 고아원 청소년 어르신 등 4계절 축하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고, 인터넷(모두다닷컴) 사업으로 백성 모두 다 진짜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한다.

7. 대마도 영토를 수복하고, 간도・연해주・만주 1,300년 동안 잃어버린 옛 선조들의 고토인 영토를 수복하여, 통일된 나라인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이룩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 '통일을 완성하는 정부'인 '통일의 정부'를 구성한다.

8.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우주항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상항공'을 출범시켜, 국가위상을 드높이며, 우리나라 각 지역 곳곳마다, 전통관광명소와 전통의식주를 상품화시켜 세계적으로 알려 세계화시킨다.

9. 국가암행어사원, 국가해외전략정보원, 한글세계화추진원(한글방송국), 국가원로경영자문원, 금도환국국가역사원(역사방송국), 국가화폐개혁원 등을 신설하고, 유통 생산성 복지 대체의학 이벤트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능력에 따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 내각제에 의한 행정부는 '황제제도와 수상 6원 6협의체 28관 56부 22청'을 두며, 입법부는 '상원・하원'을 두고, 사법부는 법원의 명칭을 '성원(聖院)'으로 바꾼다. 통일헌법에 의한 혈연 지역 학연 종교 나이 인종 국경을 초월, '인사탕평책'을 실시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한다.

경제민주당

시·도별 5대 공약

경제민주당 시 · 도별 5대공약

1. 각 지역의 전통문화와 중소기업과 관광명소를 활성화하고, 생산성복지를 활성화시킨다.

2. 이벤트 사업을 통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새로운 삶을 유지할 것이다.

3. 각 지역 유기농 및 특산물재배를 지역 환경과 기후와 토질에 따라 특산물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4. 각 17개 시·도당과 당협위원회 사무실에 1,000평 이상 규모의 '황금푸드' 먹거리와 유통 마케팅을 통하여 국내외로 글로벌화 시킨다.

5. 판검사 부조리를 막기 위하여 '상피제도'를 실시하여 지역감정을 해소할 것이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화당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화당 정책공약

▣ 중앙 10대 정책

No.	정 책
1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
2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등국가 만들기
3	시장경제 확립과 잠재성장력 제고
4	과학기술을 통한 창의적인 국가 구현
5	창조적 교육환경 실현
6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실천
7	친환경사회와 녹색성장 실현
8	국익중심의 외교와 통일시대 주도
9	국민소통과 신뢰정치실현
10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부 만들기

정책 1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

01 헌법적 가치인 행복추구권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복지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생애주기별 기본적 욕구와 개인별 특수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시킨다. 정부는 행복추구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사회서비스 확충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시킨다.

02 사회적 약자 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의 소수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기본적 삶을 영위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사회보험이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킨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회의 균등을 강화시킨다.

정책 2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등국가 만들기

01 청년일자리 창출이 고용정책의 핵심과제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연계하여 벤처기업, 창조기업, 청년기업 등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력에 따른 각종 제도적 차별을 해소시키고, 청년고용증대를 늘리기 위하여 근무성과에 근거하는 임금직무체계의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시킨다.

02 사회적 약자층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노인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늘려서 취업지원을 강화시킨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철폐하고,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감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에 장애인고용기회를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재정지원을 확충한다.

정책 3

시장경제 확립과 잠재성장력 제고

01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세력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시킨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킨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외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02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경쟁력 있는 벤처·중소기업의 육성임을 인식하고 금융, 인력, 기술, 조세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시킨다. 특히 사업실패자의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재기의 기회를 후원한다. 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고, 식품산업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주요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킨다. 농어업을 양성하고 후계인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친환경적인 농어촌을 건설한다.

정책 4

과학기술을 통한 창의적인 국가 구현

01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기술과 원천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혁신기업을 양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대시켜 나간다.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 과학기술의 마인드를 고취시켜서 과학기술계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양성시킨다. 과학기술을 국정과제의 제1정책으로 삼아 국정운영 전 부문과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과학기술인을 제도적으로 참여시켜 과학대국을 이룩한다.

02 창의력과 창조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수학·과학기술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이공계대학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킨다. 젊은 과학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시켜서 경쟁력 있는 세계적 석학으로 육성한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강화시킨다. 기초과학과 원천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융합창조시대를 열어 창업경제시대를 만들어 간다.

정책 5

창조적 교육환경 실현

01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 스스로 생애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한다.

02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인정받는 교육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더불어 사는 창조적 인재를 양성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다. 이를 위해 성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교육이 병행하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책 6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실천

01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다양한 세계문화가 흔쾌히 수용되는 열린 문화사회를 구축한다. 가족은 사회의 핵심단위이므로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 내에서 소통과 역할을 위해 지원을 강화시킨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노인부양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다원화 사회에 대비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대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정착시키며 가족복지의 역할을 강화시킨다.

02 여성과 남성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양성평등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공존 공영하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시킨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지원을 증대시킨다.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들의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책 7

친환경사회와 녹색성장 실현

01 세계최고의 친환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체험인프라구축, 환경연수원조성과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한다. 근본적인 친환경사회체계를 조성하여 친환경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마련하고 환경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연계된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이 세계환경 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시아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조성과 운영 그리고 국제환경기구와 연계해 세계적인 친환경허브를 육성한다.

02 녹색성장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를 건설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림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복원하여 현존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구촌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친환경 녹색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정책 8

국익중심의 외교와 통일시대 주도

01 튼튼한 안보체제의 확립과 군복무시스템 개선으로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지향하며, 미래지향적 국방체제와 공고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과 평화정착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02 국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한다.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이웃나라와의 협력적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되, 국익우선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정책 9

국민소통과 신뢰정치실현

01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는 정치 그리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혁한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정치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장하는 정치를 구현한다. 국민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회네트워크형 정당을 건설한다.

02 실질적 지방화와 분권화 정치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의 기능,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한다.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정책 10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부 만들기

01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를 만든다.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킨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개방하고 민간인과의 공유를 대폭 확대시킨다. 부정 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신뢰를 회복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신뢰사회를 만든다.

02 나라살림을 잘 꾸려가는 유능한 정부로서 균형재정을 지향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한다.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국민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재정지출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의 계획수립, 집행과정에 대하여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제녹색당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제녹색당 정책공약

▣ 중앙 10대 정책

No.	정 책
1	정치 : 평화통일의 민주정치
2	경제 : 빈부격차 최소화
3	사회 : 국민안정 우선 정책
4	교육 : 나쁜 교육환경 철폐
5	문화 : 대표 아이템 선정 홍보
6	복지 : 노후를 편히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
7	환경 :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거리환경 청결법 추진
8	외교, 안보 : 국민 안심, 건강한 정신교육
9	국방 : 튼튼한 국방력과 정신무장
10	통일 : 평화적 통일

▣ 시 · 도별 5대 핵심공약

정책 1 정치

지역주의를 청산하여 '국민대화합'의 열린 정치로 권위주의정치 및 지역주의정치, 가신(패거리)정치, 붕당정치를 청산하고 다양한 여론 수렴과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현실정치를 펼쳐 평화통일의 민주정치를 실행한다.

정책 2 경제

21세기 주력산업을 육성하여 청년 및 노년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고, 탈세와 부정으로 취득한 자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국고에 환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내수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빈곤층과 실업자가 없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빈부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정책 3 사회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롭게 만들어 확실한 법망을 구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다.
기본적인 기초질서부터 확실하게 잡고, 총체적으로 구조적 문제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국가의 재난을 방지하고, 범죄 및 사고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정책 4 교육

21세기 한국 교육의 체계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획일적인 수업방식을 지양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토록 한다.
매년 시비와 걱정거리로 떠오른 학교 등록금 문제도 새롭게 검토하여, 배움의 문턱에서부터 가중한 등록금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나쁜 교육환경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정책 5 문화

전통 민족문화를 우선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를 세계화 하는데 적극 추진한다. 한류는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하고, 한글 및 음식문화 역시 세계 어디에서도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이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성 품목(아이템)을 잘 선정하여 자랑스럽게 홍보한다.

정책 6 복지

의·식·주 걱정 없이 국민 모두가 노후를 편히 누릴 수 있도록 확실한 복지정책을 세운다. 노숙인, 알콜 중독자, 독거노인, 신용불량자 등 국가에서 환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책 7 환경

산업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세운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거리환경을 청결하게 만드는 법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책 8 외교, 안보

안보에 대한 국론을 통합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배양으로 강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한반도 평화유지와 전쟁예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교, 특히 해외에서 국익에 해가 되는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건강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9 국방

튼튼한 국방력은 나라의 힘이다. 국방예산을 증폭시켜 최첨단 무기로 전쟁 억제력을 키우고 병사들의 사기도 드높인다. 전 군은 물론, 전 국민을 상대로 철저한 애국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나라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신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책 10 통일

통한의 휴전선, 70년 다 되도록 남북을 가로막고 있다. 이산 가족 일천만의 수가 한(恨)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러운 민족으로 남을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다. 남과 북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시급히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대표자를 구성하고, 평화통일의 정책을 확고하게 만들어, 무력 전쟁으로 동족을 살상해서 이루는 그러한 통일이 아닌,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한 마디로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은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

국제녹색당

시·도별 5대 핵심공약

공약 1 깨끗한 환경

각 시, 도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국민의 생각과 느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좀 나은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모두가 바라는 생각일 것이다.

무심코 버려지는 담배꽁초 및 오물쓰레기와 자동차, 오토바이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이 주 원인일 수도 있지만, 정부와 각지자체 해당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특별단속과 계몽을 펼쳐 나간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공약 2 거리질서 확립

작은 질서부터 지키는 운동을 벌여나간다. 예를 들어 우측과 좌측보행부터 확실히 지키는 질서부터 시작하여, 서로 몸을 스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널목 횡단보도 및 각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도 시민들이 반드시 실천에 임하도록 철저하게 법으로 다스려 해결토록 한다. 특히, 차량들의 횡단보도 건널목 적신호 시 정지선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질서이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각 지방, 도시마다 자유로운 거리 질서를 확고히 다져간다면 국민 스스로 습관화가 되어 우리의 거리질서는 확실하게 정립될 것이다.

공약 3 음식물 쓰레기

연간 8조원의 낭비라는 오명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음식문화라고 본다. 가정, 직장, 대중음식점 등 매일같이 배출되는 음식 찌꺼기 처리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으로 고민되는 문제이다. 국민들이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가 돈으로 환산하여 연 8조원이라면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이토록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시급히 해결하고 실천하는 문제야 말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와 더불어 국민 각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공약 4 희망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는 물론, 노인들의 소일거리 즉, 일자리가 필요한 시대이다. 수명이 길어져 100세에 가까운 생을 이어갈 수 있다니 참으로 기쁜 일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지루한 시간을 보람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크게는 국가의 책임이요, 작게는 각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소일거리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도심의 거리에서 또는 공원의 빈 의자를 벗삼아 하루하루를 무심히 보내야 하는 노인의 심정을 누가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젠 모두가 크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회전반의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반드시 실버들(노인)의 일자리(소일거리)는 해결되어야 한다.

공약 5 거리에 나무심기

시골과 도시의 차이는 우선 거리에 우뚝 선 나무의 수량부터 다르다고 본다. 메마른 대지 위에 나무는 자연 그대로 오아시스 같은 산물이다. 나무 그늘의 고마움은 물론, 탁한 공기를 정제시키고 국민들의 거리 활보에 크나큰 이로움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 거리에 숲이 우거진 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히 기분이 상쾌해진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빈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과 마찬가지다. 녹색환경을 추구하는 저희 녹색당에서 바라는 공약 가운데, 최우선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희 국제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 및 각 지자체 장들에게 건의를 하고, 깨끗한 환경과 자연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특히, 핵심 공약으로 '**거리에 나무심기**'를 정하기로 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정책공약

▣ 중앙 10대 정책

No.	정 책
1	생활임금 연동 지방 공기업 CEO 최고임금제 도입
2	방사능 없는 지역 사회, 핵 없는 한국 사회
3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4	모든 어르신에게 지역 노령연금 지급
5	모든 민영화 STOP
6	지방 공기업 개혁 : 낙하산 인사 근절,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7	버스 완전공영제, 무상운행노선 확대로 대중교통 혁신
8	영세 자영업 생존권 보장 : 수수료 0% 지역 체크 카드 도입
9	빈틈없는 골목복지 : 내집앞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10	경매주택 사전매입제도로 공공주택 확대

▣ 시·도별 5대 핵심공약

정책 1

생활임금 연동 지방 공기업 CEO 최고임금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250만명이 넘고,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 기업 임원들은 합리적 임금 산정 기준 없이 수백억의 연봉을 받고 있어 노동자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
- 특히 2014년 3월에 공개된 대기업 임원 연봉을 살펴보면 법정 구속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0억(최저임금의 2473배)이 넘는 연봉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는 민간기업처럼 임원이 극단적 연봉을 받는 경우는 없지만, 2012년 기준 26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1억 이상의 연봉을 지급했으며 2억이 넘는 경우도 48곳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목표

-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생활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임원 임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

이행방법

- 생활임금 연동 공공기관 임원상한 조례 제정

이행기간

- 1년차 : 조례 제정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조례안 연구
- 조례 제정 후 익년도 적용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해외 사례

- 프랑스 : 2012년 6월부터 공기업 CEO의 고정급, 변동급, 기타 급여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업 최저임금의 20배 이하로 제한. 적용 대상 공기업은 11곳이다.
- 이탈리아 : 2014년 4월 1일부터 공기업 임원 연봉을 31만1천유로(약 4억5천720여만원)로 상한 실시
- 아일랜드 : 2009년부터 공공 금융기관 CEO 임금상한제 실시. 정부 지원 금융기관 최고경영자의 연봉 상한은 50만 유로로 제한. 최고경영자 보너스는 기본연봉의 80% 이내, 수익이 달성되지 않으면 보너스 지급 금지
- 중국 : 2009년 중국 재정부는 금융공기업 및 국유기업 최고경영자 연봉을 280만 위안(약 5억6,000만원)으로 제한.
- 미국 : 구제금융 지원 대상 기업의 임원에 대해 성과형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제한 및 소득세 공제조항 적용을 50만 달러(약 5억)로 하향조정, 보너스나 스톡옵션에 주어지던 예외조항 적용을 전면 금지

정책 2

방사능 없는 지역 사회, 핵 없는 한국 사회

현황과 문제점

- 핵 위험의 전국화 : 핵발전 증설 정책이 지속되면서 과도밀집한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도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음. 또한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 수입 수산물의 방사성 핵종 검출 사례들은 대도시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줌
- 석유와 핵에너지 에너지 의존 심화, 피크오일에 대한 대응력 취약 :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석유 에너지와 핵에너지 의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전체 중 96.4%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력 자급률은 2.95%(2011년)에 불과함
- 에너지의 지역 불평등 갈등 격화 : 밀양과 청도 등의 고압송전탑 건설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차이로 인한 수송비용 증대와 사회적 갈등 격화는 대도시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지역적 계급적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임을 알려줌
- 재생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수요 저감 잠재력 사장 :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촉진 정책의 미비로 대도시의 큰 에너지 잠재력이 여전히 잠자고 있음. 한 외국 연구자에 의하면, 5월 한 달간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등 서울시 전체 건물의 32%의 지붕 태양광을 활용하면 서울 전체에 한 달 동안 필요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화는 원전, 화력 등 전통적 발전 방식의 고용에 비해 4배 정도 고용창출효과 있음

목표

- "2030 탈핵 한국"의 구체화 : 노동당은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환을 통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음
- 지역부터 시작하는 탈핵 정책 : 지자체 수준의 에너지 정책은 탈핵, 탈방사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기와 수단이 되어야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수준의 탈핵 정책을 더욱 확대해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유도. 광역시도별 핵발전소 1개 발전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이행방법

- 에너지 절약, 효율화 목표치 도입 및 지원 제도 도입 : 지자체별 탈핵을 위한 지역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 5년 단위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 대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마련 : 신·개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중소 노후 건물 에너지 개량 사업, 대형건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강화, 혼잡통행료 확대 등으로 대도시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 확대 : 광역시도 차원의 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 수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으로 자생적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유도. 신축 및 증개축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 의무 상향(30%로)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지원 확대
- 광역시도 에너지공사 설립 : 지역 에너지공사를 설립 운영, 집단에너지, 태양광, 지열, 자원회수 시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과 에너지 이용 시설을 연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제정
- 탈핵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역 연대 · 협력 강화 : 해외 탈핵 도시 및 에너지 자립마을과의 연대 및 북한에 생활 전력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 보급 지원 교류

이행기간

- 1년차 : 지역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 /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 2~3년차 : 지역주민 및 전문가, 유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지역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광역시도 에너지 공사 설립 계획 마련
- 3~4년차 :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대도시 효율화 프로그램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조례 제정은 비예산 사업
- 지역별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 재원 향후 추계

정책 3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과 문제점

-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
- 정부는 반복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대상 규모를 한정하고 신규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하지 않아 비정규직 감소 효과는 실질적으로 매우 미약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 비정규직 남용의 심각함을 알리고 정규직 전환 모범 창출

목표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직접 ·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실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명시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예방
- 특히 그 동안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돼 왔던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우선 추진

이행방법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 파악 후 정규직 전환 대책 수립
- 비정규직 보호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명시, 신규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

이행기간

- 1년차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 파악 후 정규직 전환 대책 수립 / 비정규직 보호 조례 제·개정
- 2~4년차 :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실태 파악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추계 필요
- 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위탁업체의 수익 및 관리 비용 절감으로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 예상

정책 4

모든 어르신에게 지역 노령연금 지급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빈곤율은 16% 수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4~5% 이상 높은 수준. 그 중 노인 빈곤율은 45% 수준으로 전체 빈곤율의 3배 수준으로 매우 심각
- 하지만, 가입자만 보장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커 충분한 노인 안전망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
- 이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집권 후 약속을 파기하고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동하여 차등 지급하겠다고 변경함

목표

- '폐지 줍는 노인이 없는 지역'이 진정한 "문명 사회"
- 노인 빈곤 해소 :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의 보편적 지역 노령연금 지급
- 또한 국회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내용 중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예산 집행하여 지급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년차 : 지역 노령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1년차 : 국회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내용 중에서 지방정부의 부담 분을 7월 1일부터 지급 (기초연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짠 경우에는 그래도 집행, 그렇지 않은 경우 추경)
- 2년차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역 노령연금 지급

재원조달방안 등

- 지역 노령 연금 필요 재원 : 아래 표 참조

지역	대상자	소요예산(단위:억원)		지역	대상자	소요예산(단위:억원)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서울	1105583	3980	6633	경기	1135242	4086	6811
부산	442199	1591	2653	강원	241694	870	1450
대구	274152	986	1644	충북	215245	774	1291
인천	267059	961	1602	충남	309840	1115	1859
광주	144732	521	868	전북	303586	1092	1821
대전	142979	514	857	전남	366524	1319	2199
울산	85736	308	514	경북	437519	1575	2625
세종	17214	61	103	경남	414831	1493	2489
				제주	75925	273	455
※ 시나리오 1: 월 3만원 지급 / 시나리오 2: 월 5만원 지급							

정책 5

모든 민영화 STOP

현황과 문제점

- 현 정부는 철도 민영화 이후 의료와 교육 부문까지 민영화 추진
- 민영화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호시탐탐 자행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청소 및 재활용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미 상수도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13%에 달함
- 지자체의 민영화는 청소나 수도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공공 의료원, 각종 공공복지서비스 등 모든 공공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 민간위탁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은 지난 2008년 39조 규모에서 2012년 52조까지 13조원이 늘어남
- 이러한 공공업무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해당 부문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인한 공공재 비용 상승 및 질 악화, 그리고 주민 안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용인 경전철, 지하철 9호선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간자본 SOC 사업의 수익 보장을 위한 세금 낭비로 지자체 재정 운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야기함. 지난 10년간 최소수익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지출한 예산은 8,800억 원에 달함

목표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직영화 추진
- SOC 민간투자 시설의 과도한 수요예측 등 전면 재검토, 필요한 경우 계약 사항 전면 수정 또는 최소수익보장(MRG) 재협의
- 불가피한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보장으로 해당 부문 노동자 생존권 보장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및 SOC 민간투자 사업 적정성 심의 TFT 구성
- 1~4년차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위탁 적정성 재검토, 상시적 업무의 경우 직영을 원칙으로 전환 계획 수립
- 1~4년차 : SOC 민간투자 사업의 수요예측 적정성 전면 재검토 : 과도한 수요예측 부풀리기를 기반으로 한 계약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 강구, 노동자 서민의 혈세 낭비하는 최소수익보장 재협의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민간위탁 비용 중 업체 이윤 보장 및 관리비용 부분을 인건비 인상 비용 등 직영 전환 비용으로 유도하여 예산 내 재구조화

정책 6

지방 공기업 개혁 : 낙하산 인사 근절,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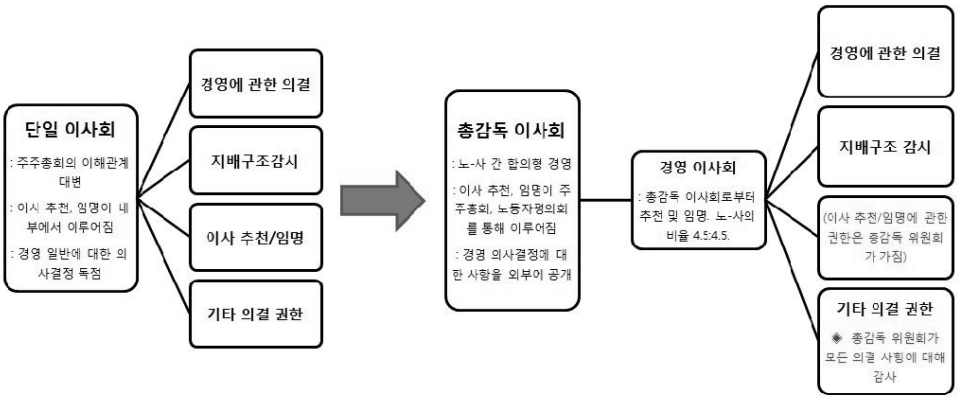
- 지방공기업의 민간부문 사업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낙하산 인사'로 대표자가 되는 일 발생
- 지방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지방 공기업은 지역주민 및 해당 공기업 노동자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주된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있음

목표

- 지방 공기업 개혁을 통해 공공성 및 민주성 확대

이행방법

-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 도입 : 지방의회는 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청문에 필요한 의견을 주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렴,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지방의회는 해당 청문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확대 및 활동보장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추첨제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위원선출, 각 위원회의 사업결정권 및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는 등 권한부여.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제 확보 등
-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이원적 이사회제) 도입 :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이원적 이사회를 도입하여, 최상위 기구인 '총감독 이사회'와 '실무(경영)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내부 폐쇄형 경영구조를 외부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효율적 경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 (이사회 예시 그림 참조)



〈이원적 이사회 예시〉

이행기간

- 1년차~4년차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사업

정책 7

버스완전공영제, 무상운행노선 확대로 대중교통 혁신

현황과 문제점

-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정책이 시행 중임.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매년 증가함 (2011년 기준)
- 기본적으로 노선사업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버스사업자는 별다른 경영혁신이나 혹은 상대적인 관리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비탄력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버스준공영제하에서의 정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운영수입과 지출원가의 차액을 보전해주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체의 이윤을 덧붙여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과되는 업체 이윤은 낭비적인 요인이 됨
- 최근에는 버스 사업자가 지방정부의 버스정책에 반발하면서 시민들을 볼모로 실력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한정면허 취소에 대한 서울시버스사업체의 반발이나 최근 전주시내 5개 업체에서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뜻에서 20% 감차 운행 실시 등이 그러함

목표

-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대중교통의 위상을 강화
- 특히 오일피크, 지구온난화 등 에너지·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가용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

이행방법

- 버스보조금 및 공영버스 운영 조례 제정 : 보조사업의 목적 및 정산, 사업자의 의무사항 명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노선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
- 버스이용자위원회 설치 : 기존 실제 버스이용자가 배제된 버스시민위원회 대신에 실제 버스이용자가 참여하여 버스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버스 노선 공영화 유도 및 지역 내 공영무상노선 신설 : 사업성이 낮은 자치구 마을버스 중 공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 내 교통사각지대 및 주요 공공시설물을 순환하는 공영 무상노선 신설 및 운영

이행기간

- 1년차 : 버스보조금 및 공영버스 운영 조례 제정 / 버스이용자위원회 설치
- 2년차 : 버스 노선 공영화 전환 및 공영무상노선 신설 시범사업 실지
- 3~4년차 : 버스 노선 공영화 전환 및 공영무상노선 확대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보조금사업 적정화를 통해 부실 버스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현행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활용

정책 8

영세 자영업 생존권 보장 : 수수료 0% 지역 체크 카드 도입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현재 자영업(소상공인) 업체수는 283만 개로 전체 사업체 수 대비 87.6%에 달하며, 종사자 수는 554만명에 달함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82.6%가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했으나 월 평균 순이익은 2013년 현재 187만원으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 234만원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
- 반면 2013년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가 2.14%, 직불카드가 1.41%으로 월 평균 15만원 이상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 이는 대형마트 및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 건물주 횡포와 더불어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임

목표

- 영세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행방법

- 광역단위 공영 체크카드 공사를 설립. 신규 공사 설립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금고 운영 은행과 MOU를 체결해 지자체 금고 운영 이익 지역 환수의 한 수단으로 수수료 없는 체크카드를 도입
- 더불어 지자체마다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갑'의 횡포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

이행기간

- 1년차 : 지역 여론 및 시장 조사 등 지역 공영 체크카드 공사 설립 준비 /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설치
- 2년차 : 지역 공영 체크카드 공사 설립 또는 지자체 금고 운영 은행과 MOU 체결
- 3~4년차 : 지역 공영 체크카드 이용 촉진 홍보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금고 운영 이익 지역 환수금 활용

정책 9

빈틈없는 골목복지 : 내집앞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예산 수준은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29개국 29위로 최하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측정한 복지종합지수 국제비교에 의하면 한국은 34개국 중 20위로 중하위권이나, 복지충족이나 복지환경 부문은 각각 31위, 33위로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은 여전히 매우 미약한 수준임
- 그럼에도 지난 총선과 대선 시기 정부 여당이 제시한 복지 공약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거나 축소 후퇴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복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

목표

- 지역부터 보편복지 빈틈없는 골목복지 실현을 위해 1단계 지자체 복지 사업으로 보육과 출산을 위한 공공 사회복지망 확충

이행방법

-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5.3%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읍면동 평균 0.5개 수준)을 최소 동마다 3개 이상 건립하여 '내집앞 국공립 어린이집' 실현
- 이를 위해 지역의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고, 초등학교 여유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민간시설의 국공립 시설 전환 및 필요시 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기초단체마다 보건소 산하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이행기간

- 1년차 :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계획 수립
- 2~4년차 : 설립 계획 집행

재원조달방안 등

- 전국 9천여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비용 : 연간 약 1조7천억원 : 일반 예산 지원
- 기초단체별 1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연간 약 15억여원의 운영비 소요 : 일반 예산 지원

정책 10

경매주택 사전매입제도로 공공주택 확대

현황과 문제점

- 주택보급율이 전국적으로 102%(2012년 기준)로 100%가 넘지만, 그 중 공공주택의 비중은 5.6%로 매우 취약. OECD 가입국의 공공주택 비중은 평균 13% 내외
- 하지만, 기존의 신규 공급방식의 사회주택 정책은, 사실상 뉴타운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승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전제로 한 사업모델로, 사회주택 마련의 부담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뉴타운 재개발과 같은 나쁜 재정비사업을 유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해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입방식은 공공주택 확대의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목표

- 경매주택 사전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

이행방법

-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에서 지방정부가 다가구 소유자의 경매대상 물건의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분할하거나 혹은 이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매전 사전매입' 제도를 도입
- 이 경우, 기준가가 통상 경매가를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으므로 시장가를 바탕으로 하는 매입방법보다 저렴하며, 소유권 분할 방식으로 일정기간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제도 참여의 유인을 제공

<참조>
* 수도권 경매건수 : ('08)21,507건→('09)32,272→('10)35,552→('11)40,944→('12)51,546
[출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국토부, 2013. 4.)

- 지방정부 산하 도시공사에 경매를 전담하는 공공경매사를 채용하고 경매물건(예정)에 대한 사전적인 매수를 전담토록 함

- 우선적으로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매입하고, 이후 활용을 고려하여 부분매입보다는 토지매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행기간

- 1~4년차

재원조달방안 등

- 지역주택 공사 재원 우선 투입 / 광역단체별 예산 지원 / 필요시 주택 매입 채권 발행

노동당

시·도별 5대 핵심공약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전라북도
-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공약 1 버스완전공영제, 무상운행노선 확대로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2004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제도이지만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만 강화된 특권적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개 노선 안팎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선되고 있음에도, 매년 3,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출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2013년 감사원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감사 등에서 ▫보조금의 사용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광고수익 등 수익금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업체 이익으로 귀속되는 점 ▫목적 외 사업에 보조금이 남용되는 점 등이 지적되었음에도 잘못된 버스 준공영제 제도에 의해 시정되고 있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인 승객들과 버스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 버스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대중교통의 위상을 강화함

이행방법

- 버스보조금 및 공영버스 운영 조례 제정 : 보조사업의 목적 및 정산, 사업자의 의무사항 명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노선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
- 버스이용자위원회 설치 : 기존 실제 버스이용자가 배제된 버스시민위원회 대신에 실제 버스이용자가 참여하여 버스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 자치구의 마을버스 노선 공영화 유도 및 서울시 내 공영무상노선 신설 : 사업성이 낮은 자치구 마을버스 중 공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강북지역 등 교통사각지대 및 주요 공공시설물을 순환하는 공영 무상노선 신설 및 운영

이행기간

- (1), (2)의 경우, 2014년 하반기
  (3)의 경우, 2014년 하반기 제도 마련, 2015년 시범사업 실시

재원조달방안 등

- (1), (2)의 경우, 비예산 사업
  (3)의 경우, 기존의 보조금사업 적정화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현행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활용

재원	구분	내용
기존 보조금 사업 재구조화	연간 3,000억원 (04~13년 평균)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비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여 보조금지급 중단 첫해: 10% -> 30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수입: 1조원 (10년기준)	이중, 혼잡통행료 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대중교통특별회계로 분리함. 연간: 2,200억원(10년기준)

공약 2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를 직영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당초 공공서비스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위탁제도는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 본래 제도의 취지를 잃어 버렸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현재 총 374개의 사무에 9,215억원이 민간위탁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십년 이상 장기 위탁 중인 사무가 68건으로 총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민간위탁 사무가 오히려 특정 업체의 독점적인 사업으로 전락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6~70% 수준에 불과하지만 민간위탁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산콜센터와 같이 일반행정정보는 물론이고 세무행정 등 필수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책임감을 보장할 수 없는 민간업체에게 맡겨져 있는 것은 민간위탁 사업의 당초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별 서울시 민간위탁현황(2012년 현재)

구 분	계	市 투자 출연 기관	市 지원 기관	정부 자치구 산하기관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사회 복지 법인	특별법인 (의료, 학교등)	일반 기업	개인, 단체 등
건수	374	78	12	13	69	31	56	28	76	11
예산(억원)	9,215	5,634	153	197	384	411	508	283	1,646	4

목표

- 민간위탁 사업 중 필수 공익사업 및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재직영화를 실시하는 한편, 기존 민간위탁 사업도 노동자 임금 등 처우와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한다.

이행방법

-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 개별 위탁조례의 개폐를 통해서 재직영화 업종의 직영화 추진, 기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에 준하는 임금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적용
- 직무조정을 통한 재직영화 : 374개 민간위탁 사업 중 일반기업에게 위탁 중인 76개 사업에 대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여 직영화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 조례 제개정 및 다산콜센터에 대한 직영화 조치
- 2015년 : 76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시행
- 2017년까지 : 위탁 재계약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재직영화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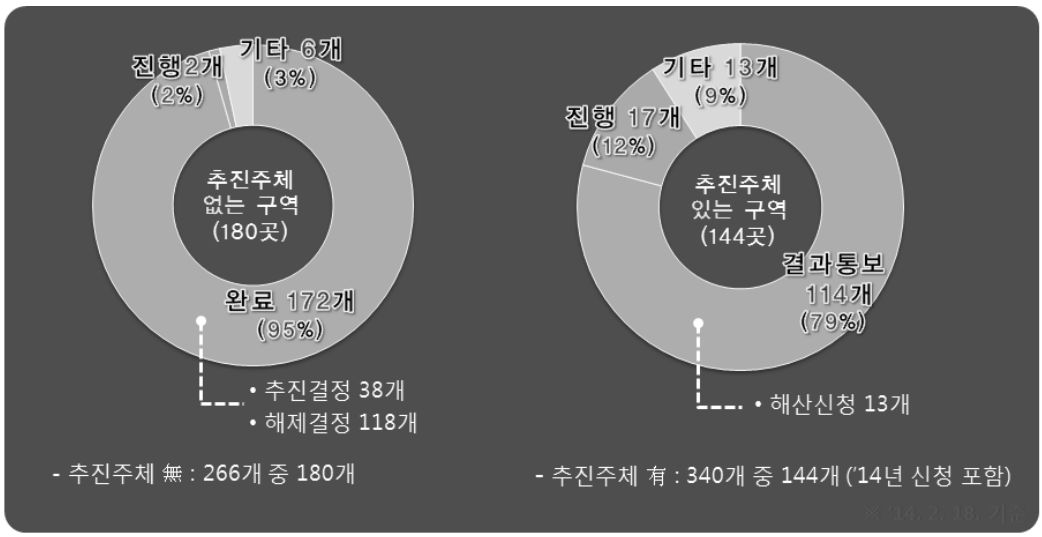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1,646억원(76개 일반기업 위탁사업 비용) 활용 : 위탁비용에서 보장이윤 부분을 인건비 인상비용으로 유도하여 1차적으로 예산내 재구조화 실시
- 일반회계 활용을 통해서 연차 등 처우개선 비용 마련 : 연간 순차적 계획에 따라 시행

공약 3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해 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권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서울지역의 뉴타운재개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뉴타운재개발지역으로 묶인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이 책임은 일차적으로 서울시에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시행된 '실태조사'는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추진주체가 있는 지역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애초 법령에 의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주거정비가 가능해졌음에도 뉴타운재개발로 묶여 있어 사업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목표

- 시장의 직권해제 조항을 활용하여,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구역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전환하여 원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주거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행방법

- 도시재정비촉진조례의 개정 : 법령에 의한 직권해제 조항 명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 시행된 경기도 사례를 참조하여,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해제 조치
- 도시재생특별법 상의 전략계획수립 과정에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우선지정 지역으로 명시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함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 조례 개정 및 기 실태조사 진행구역을 중심으로 직권해제를 위한 해제 심사 진행
- 2014년 하반기 :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조례에 '우선 지정구역' 조건을 명시하고,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함
- 2015년~ : 연간 10구역 ~ 15구역을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

재원조달방안 등

- 주택사업특별회계(1.2조, 2014년예산)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과 재정비촉진사업계획의 연간 전출금(타회계로 전출)이 4,600억원 수준으로 이를 활용하여 연간 1,000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비용 마련

공약 4 상가세입자 피해 구제기구 신설로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는 2002년부터 상가세입자 대책으로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탈적인 상가세입자 명도소송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상가세입자 정책이 여전히 탁상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초기 시설비용을 부담하고도 불과 2년에서 3년 사이에 생겨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평균 영업 유지 기간	상권 (평균 영업 유지 기간(년))
2년 미만	동탄 중심상업(1.74), 압구정 로데오(1.95)
2년 이상 3년 미만	이대입구(2.09), 성신여대입구역(2.13), 영등포역(2.36), 논현역(2.43), 신촌역(2.76), 노량진역(2.79), 신천역(잠실)(2.81)
3년 이상 4년 미만	부평역(3.23), 분당 서현역(3.37), 노원역(3.41), 종각역(3.43), 평내/호평(3.46), 목동역(3.66), 연신내역(3.69), 홍제역(3.73), 시흥사거리(3.76), 미아삼거리역(3.78), 길포시청(3.80), 사가정역(3.85), 구리 수택동(3.85), 왕십리역(3.86), 청담역(3.90), 부천역(3.93), 안양 범계역(3.95), 화곡역(3.96)
4년 이상	수원역(4.10), 사당역(4.12), 광명 철산역(4.14), 일산 화정역(4.25), 방이동 먹자골목(4.42),

이런 상황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없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 비율이 높은 곳에서 서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없습니다.

목표

- 상가세입자들의 장사할 권리를 지키고, 건물주의 약탈적 명도소송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서 제도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이행방법

- 상가세입자 지원 및 피해구제 조례 제정: 서울지역 자영업자들의 현황에 대한 연간조사 실시, 명도소송 등 건물주의 약탈적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가세입자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 도입
- 상가세입자권리지원 민간자원 육성 및 지원 : 상가세입자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제공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실시
- 2015년 : 본격 시행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전출(기존 상가세입자상담센터를 전환)

공약 5 지역에너지거래소 건립을 통해 '서울부터 탈핵'

현황과 문제점

- 오일피크와 지구온난화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압축성장을 한 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 전세계는 0.83도 정도의 기온상승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1.8도, 서울은 2.4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IPCC, 5차보고서, 2013). 이에 서울시도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시도하며 에너지 사용절감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력사용량이 1.6% 줄어든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으며, 이런 조건은 원전을 위한 밀양 송전탑 문제 건설 등 다양한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목표

- 서울시 에너지거래소를 건립하여 지역 내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안에너지 개발 사업을 진행함

이행방법

- 서울시 에너지거래소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 기구의 설치 및 그간 정책별로 나뉘어져 있던 태양광 등 대안발전 지원,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

> 주택별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아파트 베란드형 발전기 등을 보급하고 이에 대해 가구당 60만원 수준의 발전설비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
> 한강 수변의 공원 부지, 다리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

- 수도권 내 발전용량을 네트워크화하여 원거리 전력 수요를 최소화하고 지역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장기 계획 설정

>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증가는 단순히 에너지 생산에만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보임(미국의 경우 환경관련 일자리가 530만개를 창출했는데 이는 제약산업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2005년 기준)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 기존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평가 및 확대 계획 수립
- 2015년 ~ : '한강 태양밭' 프로젝트 시행, 서울시 에너지거래소 설치

재원조달방안

- 기 설치된 '기후변화기금' 의 확대

부산광역시

공약 1 부실재정의 혁신 – 빚으로 망한 살림 나라도 못 구한다 차입금 30% 감축, 민생과 인력개발 30% 증액, 건설 30% 감액

개 요

- 부산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입금 30%를 감축하고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과 인력개발 예산을 30% 증액하고 건설예산 30%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예산구조를 확립한다.

현 황

- 현재 부산시는 3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고, 그 중 지방채권 발행 등 차입금만 2조 7천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하면 6조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해 이자비용만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지도 않은 사업예산 중 이자비용으로만 천억 원이 넘게 빠져나가면 부산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은 거의 없다. 게다가 여전히 사업 예산 중 65%가 건설용 예산이다. 차입으로 토건용 예산에 투입하여 부실재정의 악순환이 확대되어 가는 부실재정의 표본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입금 감축과 토건용 예산을 강력하게 줄이지 않으면, 점점 부실재정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부실재정의 고리를 끊고, 예산 지출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예산방향 전환 목표와 차입금 감축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추진방안

- 토건 예산 30% 감액, 민생 및 인적자원·연구개발 30% 증액, 차입금 30% 감축을 목표로 예산구조를 개편해 부채를 축소하여 부실 재정의 순환 고리를 차단한다.
- 토건형 예산을 최소로 줄이고, 민생과 소프트웨어 개선에 보다 주력하여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구조를 확립한다.
  ① 톱다운 방식에 의한 강력한 예산 구조 개혁
  ②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과 확대
  ③ 부산시 자체 사업예산 중 토건용 예산 30% 감축과 소모성 예산 30% 감축으로 민생 및 인력개발 예산 30% 증액, 차입금 30% 감축

예 산

- 별도의 재원 필요 없음

공약 2 동마다 3개 공공어린이집 확충

개 요

-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마다 3개 설치하여 공공성과 시설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 황

- 부산의 국공립보육시설은 152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1,877개소의 8.1%에 불과함. (2013년 9월 기준, 2013년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p.156)
- 부산의 행정 읍·면·동의 수는 210개로 동별 국공립보육시설 수는 0.72개에 불과한 상황임
- 부산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10,776명으로 전체 72,904명의 14.8%에 그침.(2013년 9월 기준)
- 2009년 12월 말 기준 부산의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과 이용 아동 수 비율은 각각 8.3%와 16.2%였음.(부산시당 2010년 선거공약 자료집). 결국 4년 동안 부산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와 이용 아동 수 비율이 후퇴한 것임
- 보육선진국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이 대체로 절반 이상을 상회(스웨덴 42~91%(연령별), 일본 53%, 독일 40%, 호주 34% 등)
-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이용에 제약
- 구·군별 어린이집 현황은 아래표와 같음

구·군별 어린이집 현황

(개소/명, '13. 9월기준)

구 분	아동수 (0~5세)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등				민간,가정등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			
		시설수	아 동		보육교사	시설수	아 동		보육교사	시설수	아 동		보육교사	시설수	아 동		보육교사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59,834	152	11,796	10,776	1,191	84	7,268	5,824	745	38	2,968	2,513	297	1,603	64,524	53,791	8,111
중구	1,493	4	346	326	39	1	42	42	8	0	0	0	0	9	632	563	80
서구	3,688	10	710	635	78	2	170	108	13	3	215	146	25	29	1,229	1,012	155
동구	3,260	9	676	571	62	2	254	202	22	2	140	120	14	25	1,233	988	162
영도구	4,636	12	914	822	94	1	98	63	9	5	365	315	37	35	1,459	1,212	184
부산진구	17,708	18	1,206	1,125	124	5	408	383	43	6	309	252	31	142	5,517	4,955	754
동래구	11,261	10	607	582	70	5	399	351	54	0	0	0	0	108	4,875	4,173	621
남구	13,297	13	1,251	1,214	115	6	518	453	62	2	182	168	21	123	4,736	4,021	579
북구	14,416	8	495	448	49	7	515	451	54	1	49	47	4	190	7,350	5,902	890
해운대구	20,759	13	1,046	922	102	14	1,367	984	130	4	201	136	21	217	8,314	6,715	1,032
사하구	17,531	17	1,541	1,482	157	10	945	729	96	6	670	606	62	175	6,694	5,621	847
금정구	9,859	5	681	602	58	7	450	394	62	1	60	60	6	111	4,345	3,526	562
강서구	4,349	5	312	274	36	6	616	438	49	0	0	0	0	34	1,705	1,370	181
연제구	9,379	7	408	366	36	4	216	205	28	6	445	353	48	84	3,769	3,127	445
수영구	7,014	4	287	244	29	6	454	407	45	1	176	165	14	73	2,936	2,503	385
사상구	11,524	9	859	746	79	3	188	139	22	1	156	145	14	138	5,296	4,334	684
기장군	9,660	8	457	417	63	5	628	475	48	0	0	0	0	110	4,434	3,769	550

● 구·군별 동당 어린이집 수는 아래표와 같음

구분	동수	국공립어린이집 수	동당 국공립어린이집 수
중구	9	4	0.44
서구	13	10	0.77
동구	14	9	0.64
영도구	11	12	1.09
부산진구	23	18	0.78
동래구	13	10	0.77
남구	17	13	0.76
북구	13	8	0.62
해운대구	18	13	0.72
사하구	16	17	1.06
금정구	17	5	0.29
강서구	7	5	0.71
연제구	12	7	0.58
수영구	10	4	0.40
사상구	12	9	0.75
기장군	5	8	1.60
계	210	152	0.72

추진방안

- 부지 매입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방안
  ① 지역 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유지인 근린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법적으로 설립 가능)
  ※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연천군·파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진행
  ② 대학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대학 소유 건물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 해당 대학에 가점 부여 가능)
  ※ 부산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가 대표적 사례
- 신축 없이 기존 시설 전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재탄생 방안
  ①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②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유휴교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비만으로 확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운동장을 비롯한 넓은 놀이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

예산

- 동마다 3개씩 시립 및 구립 어린이집 설치 : 478개소 추가 확대
  - 동마다 평균 3개씩 설치 시 : 630개소 필요
  - 2013년 9월말 현재 부산 동수 : 210개
  - 2013년 9월말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152개소 : 동당 0.72개소에 불과
- 예산 추계

공약 3 공공베이비시터 제도 전면 도입

개 요

- 공공베이비시터 제도(현행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를 통해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자택 보육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저렴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한다.

현 황

- 시설보육을 하기 어려운 영아, 야근·출장 등 긴급한 사유로 발생하는 보육 공백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베이비시터제' 확대 실시 필요
- 정부는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 중(2008년 65개→2009년 232개로 확대)

-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월 120~240시간(가·나형 : 240, 다·라형 : 200)임
-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줄어듬
- 라형(소득 100% 초과 가정)의 경우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아동의 조부모를 아이돌보미로 지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현재 서울 서초구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
- 아이돌보미 수 부족(특히 영아종일제)으로 신청자 모두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 어려움
- 공공에서 파견하는 아이돌보미라 믿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사업의 만족도는 높은 편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구분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영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서비스안내	가 · 나형 연 720시간 다형 연 480시간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 (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월 120~240 (가 · 나형 : 240, 다 · 라형 : 200) 시간안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 (1일 최소 6시간이상 사용원칙)	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 존재 -만 0세~2세:3명 -만 3세~12세:5명 단, 한명의 돌보미가 여러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별도 정부지원시간 없이 이용비용 50%정부지원 ※ 질병감염여부는 병원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 (미제출시 본래 가구유형에 따라 요금 부과)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 감염병에 한함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경증장애아에 한정하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요금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유형	소득기준('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기준	시간제(천원/시간)		영아종일제(월 110만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0세		1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월241만원)	4,250원	1,250원	75만원	35만원	70만원	40만원
나형	50~70%이하 (월 338만원)	2,250원	3,250원	65만원	45만원	60만원	50만원
다형	70~100%이하 (월 483만원)	1,250원	4,250원	55만원	55만원	50만원	60만원
라형	100%초과	-	5,500원	45만원	65만원	40만원	70만원

* 라형 이용가구의 경우 심야, 주말 이용시 할증요금이 적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500원
  - 아동 1인 증가 시 2,500원씩 이용단가 증가
  - 심야(21:00~08:00)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단가는 시간당 6,500원 (1천원 할증, 할증시간대 아동 1인 증가시 3,000원씩 증가)
    (정부지원 가구(가-다형)의 할증금액(1천원)은 정부에서 지원, 정부미지원 가구(라형)는 부모가 부담)

*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 아동 1인당 110만원(월200시간 이용기준)
  - 아동 1인 증가시 2,500원씩 이용단가 증가
  - 심야 및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 할증요금 적용(시간제 할증 기준과 동일)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금액 상이

추진방안

◉ 저소득층(가형 : 50%이하 소득계층)의 시간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무료화

◉ 나,다,라형에 대해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본인부담금 축소 : 부산시 예산으로 시간당 1,250원 지원

나형 본인부담금 3,250원 → 2,000원

다형 본인부담금 4,250원 → 3,000원

라형 본인부담금 5,500원 → 4,250원

-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유형에 상관없이 연 960시간으로 확대(현재 가·나형 연 720시간, 다형 연 480시간)
- 저소득층(가형 : 50%이하 소득계층)의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무료화
- 나,다,라형에 대해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본인부담금 축소 : 부산시 예산으로 월 15만원씩 추가 지원

나형 본인부담금(0세 기준) 45만원 → 30만원

다형 본인부담금(0세 기준) 55만원 → 40만원

라형 본인부담금(0세 기준) 65만원 → 50만원

- 아동의 조부모 아이돌보미 지정 허용
-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개선

공약 4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개요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 주거복지 개선,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라는 1거4득 효과를 거둔다

현황

- 2010년 부산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다(표 참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은 등유와 같은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부산의 경우 경사율이 70%에 육박하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배관 매설공사가 어려운 고지대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률이 더 낮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라는 측면에서 고지대 주거지역이 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 주로 고지대주거지역은 저소득계층 주거 밀집으로, 저소득 일수록 더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지대주거지역의 경우 노인주거 세대가 많으며, 노후 불량 주택일 가능성이 높다.

2010년 도시가스 보급률 비교 (단위 : %)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9.4	89.6	74.9	88.9	87.6	87.3	80.9

(2012 시정백서, 부산시청)

- 부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일부를 대상으로 월동대비책이나 무료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시적 · 일회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기본권을 보호하고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추진방안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절약 및 비용절감의 복지효과, 온실가스 저감의 환경효과, 녹색일자리 창출 및 유지의 고용효과 등 종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 중 광열비 지출항목이 소득의 10%를 차지하는 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면, 부산의 경우 약 16만가구가 에너지 빈곤가구로 추정된다.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열손실이 많은 창문 · 창호 교체 및 보강, 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중심으로 시공하여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10년간 실시한다.

예산

- 부산의 에너지 빈곤층 약 16만가구(추정)에 가구당 120만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4년간 총 약 1,920억원(연간480억원)의 재원 필요

공약 5 공공도서관 확충,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개요

-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작은 도서관의 야간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확대 및 야간시간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 이로 인하여 별도의 도서관 건립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 작은 도서관의 장서 이용률을 확대할 수 있다.
- 퇴근 후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된다.

현황

-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의해 적어도 주5일은 22시까지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 하지만 공공도서관은 부산에 3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17시 내지 18시까지만 운영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추진방안

- 작은 도서관에 시간제 근로자 1인을 채용하여 야간 22시까지 도서관을 개방한다.

재원 및 일자리 창출 규모

- 부산시 소재 작은도서관 수 : 118개(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연장 시간 : 5시간(17:00~22:00)
- 2014년 최저시급 : 5210원
- 월 61,478,000원, 연 737,736,000원이 소요예상

인천광역시

공약 1 생활임금 연동 지방 공기업 CEO 최고임금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250만명이 넘고,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 기업 임원들은 합리적 임금 산정 기준 없이 수백억의 연봉을 받고 있어 노동자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
- 특히 2014년 3월에 공개된 대기업 임원 연봉을 살펴보면 법정 구속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0억(최저임금의 2473배)이 넘는 연봉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는 민간기업처럼 임원이 극단적 연봉을 받는 경우는 없지만, 2012년 기준 26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1억 이상의 연봉을 지급했으며 2억이 넘는 경우도 48곳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목표

-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생활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임원 임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

이행방법

- 생활임금 연동 공공기관 임원상한 조례 제정

이행기간

- 1년차 : 조례 제정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조례안 연구
- 조례 제정 후 익년도 적용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해외 사례

- 프랑스 : 2012년 6월부터 공기업 CEO의 고정급, 변동급, 기타 급여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업 최저임금의 20배 이하로 제한. 적용 대상 공기업은 11곳이다.
- 이탈리아 : 2014년 4월 1일부터 공기업 임원 연봉을 31만1천유로(약 4억5천720여만원)로 상한 실시
- 아일랜드 : 2009년부터 공공 금융기관 CEO 임금상한제 실시. 정부 지원 금융기관 최고경영자의 연봉 상한은 50만 유로로 제한. 최고경영자 보너스는 기본연봉의 80% 이내, 수익이 달성되지 않으면 보너스 지급 금지
- 중국 : 2009년 중국 재정부는 금융공기업 및 국유기업 최고경영자 연봉을 280만 위안(약 5억6,000만원)으로 제한.
- 미국 : 구제금융 지원 대상 기업의 임원에 대해 성과형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제한 및 소득세 공제조항 적용을 50만 달러(약 5억)로 하향조정, 보너스나 스톡옵션에 주어지던 예외조항 적용을 전면 금지

공약 2 방사능 없는 지역 사회, 핵 없는 한국 사회

현황과 문제점

- 핵 위험의 전국화 : 핵발전 증설 정책이 지속되면서 과도밀집한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도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음. 또한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 수입 수산물의 방사성 핵종 검출 사례들은 대도시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줌
- 석유와 핵에너지 에너지 의존 심화, 피크오일에 대한 대응력 취약 :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석유 에너지와 핵에너지 의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전체 중 96.4%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력 자급률은 2.95%(2011년)에 불과함
- 에너지의 지역 불평등 갈등 격화 : 밀양과 청도 등의 고압송전탑 건설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차이로 인한 수송비용 증대와 사회적 갈등 격화는 대도시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지역적 계급적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임을 알려줌

- 재생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수요 저감 잠재력 사장 :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촉진 정책의 미비로 대도시의 큰 에너지 잠재력이 여전히 잠자고 있음. 한 외국 연구자에 의하면, 5월 한 달간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등 서울시 전체 건물의 32%의 지붕 태양광을 활용하면 서울 전체에 한 달 동안 필요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화는 원전, 화력 등 전통적 발전 방식의 고용에 비해 4배 정도 고용창출 효과 있음

목표

- "2030 탈핵 한국"의 구체화 : 노동당은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환을 통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음
- 지역부터 시작하는 탈핵 정책 : 지자체 수준의 에너지 정책은 탈핵, 탈방사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기와 수단이 되어야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수준의 탈핵 정책을 더욱 확대해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유도. 광역시도별 핵발전소 1개 발전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이행방법

- 에너지 절약, 효율화 목표치 도입 및 지원 제도 도입 : 지자체별 탈핵을 위한 지역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 5년 단위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 대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마련 : 신·개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중소 노후 건물 에너지 개량 사업, 대형건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강화, 혼잡통행료 확대 등으로 대도시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 확대 : 광역시도 차원의 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 수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으로 자생적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유도. 신축 및 증개축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 의무 상향(30%로)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 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지원 확대
- 광역시도 에너지공사 설립 : 지역 에너지공사를 설립 운영, 집단에너지, 태양광, 지열, 자원회수 시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과 에너지 이용 시설을 연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제정
- 탈핵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역 연대 · 협력 강화 : 해외 탈핵 도시 및 에너지 자립마을과의 연대 및 북한에 생활 전력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 보급 지원 교류

이행기간

- 1년차 : 지역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 /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 2~3년차 : 지역주민 및 전문가, 유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지역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광역시도 에너지 공사 설립 계획 마련
- 3~4년차 :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대도시 효율화 프로그램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조례 제정은 비예산 사업
- 지역별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 재원 향후 추계

공약 3 버스완전공영제, 무상운행노선 확대로 대중교통 혁신

현황과 문제점

-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정책이 시행 중임.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매년 증가함 (2011년 기준)
- 기본적으로 노선사업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버스사업자는 별다른 경영혁신이나 혹은 상대적인 관리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비탄력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버스준공영제하에서의 정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운영수입과 지출원가의 차액을 보전해주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체의 이윤을 덧붙여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과되는 업체 이윤은 낭비적인 요인이 됨
- 최근에는 버스 사업자가 지방정부의 버스정책에 반발하면서 시민들을 볼모로 실력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한정면허 취소에 대한 서울시버스사업체의 반발이나 최근 전주시내 5개 업체에서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뜻에서 20% 감차 운행 실시 등이 그러함

목표

-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대중교통의 위상을 강화
- 특히 오일피크, 지구온난화 등 에너지·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가용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

이행방법

- 버스보조금 및 공영버스 운영 조례 제정 : 보조사업의 목적 및 정산, 사업자의 의무사항 명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노선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
- 버스이용자위원회 설치 : 기존 실제 버스이용자가 배제된 버스시민위원회 대신에 실제 버스이용자가 참여하여 버스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버스 노선 공영화 유도 및 지역 내 공영무상노선 신설 : 사업성이 낮은 자치구 마을버스 중 공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 내 교통사각지대 및 주요 공공시설물을 순환하는 공영 무상노선 신설 및 운영
- 수도권 광역단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통통합 시스템 도입

이행기간

- 1년차 : 버스보조금 및 공영버스 운영 조례 제정 / 버스이용자위원회 설치
- 2년차 : 버스 노선 공영화 전환 및 공영무상노선 신설 시범사업 실시
- 3~4년차 : 버스 노선 공영화 전환 및 공영무상노선 확대
- 4년차 : 수도권 교통통합 시스템 도입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보조금사업 적정화를 통해 부실 버스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현행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활용

공약 4 모든 민영화 STOP

현황과 문제점

- 현 정부는 철도 민영화 이후 의료와 교육 부문까지 민영화 추진
- 민영화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호시탐탐 자행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청소 및 재활용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미 상수도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13%에 달함
- 지자체의 민영화는 청소나 수도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공공 의료원, 각종 공공복지서비스 등 모든 공공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 민간위탁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은 지난 2008년 39조 규모에서 2012년 52조까지 13조원이 늘어남
- 이러한 공공업무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해당 부문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인한 공공재 비용 상승 및 질 악화, 그리고 주민 안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용인 경전철, 지하철 9호선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간자본 SOC 사업의 수익 보장을 위한 세금 낭비로 지자체 재정 운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야기함. 지난 10년간 최소수익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지출한 예산은 8,800억 원에 달함

목표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직영화 추진
- SOC 민간투자 시설의 과도한 수요예측 등 전면 재검토, 필요한 경우 계약 사항 전면 수정 또는 최소수익보장(MRG) 재협의
- 불가피한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보장으로 해당 부문 노동자 생존권 보장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및 SOC 민간투자 사업 적정성 심의 TFT 구성

- 1~4년차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위탁 적정성 재검토, 상시적 업무의 경우 직영을 원칙으로 전환 계획 수립
- 1~4년차 : SOC 민간투자 사업의 수요예측 적정성 전면 재검토: 과도한 수요예측 부풀리기를 기반으로 한 계약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 강구, 노동자 서민의 혈세 낭비하는 최소수익보장 재협의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민간위탁 비용 중 업체 이윤 보장 및 관리비용 부분을 인건비 인상 비용 등 직영 전환 비용으로 유도하여 예산 내 재구조화

공약 5 지방 공기업 개혁 : 낙하산 인사 근절,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현황과 문제점

- 지방공기업의 민간부문 사업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낙하산 인사'로 대표자가 되는 일 발생
- 지방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지방 공기업은 지역주민 및 해당 공기업 노동자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주된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있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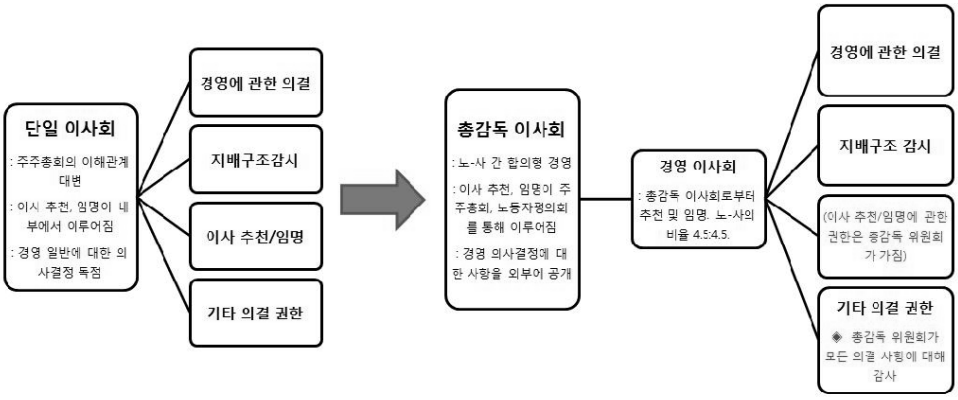
- 지방 공기업 개혁을 통해 공공성 및 민주성 확대

이행방법

-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 도입 : 지방의회는 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청문에 필요한 의견을 주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렴,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지방의회는 해당 청문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확대 및 활동보장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추첨제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위원선출, 각 위원회의 사업결정권 및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는 등 권한부여.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제 확보 등

-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이원적 이사회제) 도입 :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이원적 이사회를 도입하여, 최상위 기구인 '총감독 이사회'와 '실무(경영)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내부 폐쇄형 경영구조를 외부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효율적 경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 (이사회 예시 그림 참조)



〈이원적 이사회 예시〉

이행기간

- 1년차~4년차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사업

울산광역시

공약 1 노동조합 조직율 80%를 위한 '노동조합 지원과' 신설

현황과 문제점

- 전국 노동조합 조직율이 18.6%(1989년)에서 9.7%(2010년)로 낮아짐
-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율은 0.9%에 불과(2012년)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96년 62.6% → 2010년 58.9%)
-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격차 심화

목 표

- 현재 울산 노동조합 조직율(27%)를 4년내 80% 실현
- 노동조합 조직율 상승으로 노동자 소득분배율 70% 실현
- 노동자의 몫을 늘려 소비촉진, 자영업자 살리기 실현

이행방법

- 울산시청 조직내 '노동조합 지원과' 신설, 담당 공무원 약30명 배치
  - 지원과내에 "노동조합 설립지원계"설치, 노동조합 설립 지원
  - 지원과내에 "산업재해 담당계"설치, 산업재해 노동자 지원
  - 지원과내에 "노동조합 법률지원계"설치, 노동자 법률 지원
  - 지원과내에 "이주노동자 지원계"설치, 이주노동자 불이익근절 및 처우개선 지원
  - 지원과내에 "노동인권 교육계"설치, 노동자의 기본권리 교육 진행
  - 향후 '노동조합지원과'를 '노동조합지원국'으로 승격 발전
-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와 고발
  -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사업주의 불법적인 지배개입 단속, 고발 조치
  -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세제 불이익 추진

이행기간

- 즉시시행, 상시운영

재원조달 방안

- 추가재원 필요 없음

공약 2 울산지역 최저시급 7,915원, 기본급 165만원 실현

현황과 문제점

- 울산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 12만4천명(2013년, 통계청 통계)
- 비정규직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부품업체의 경우 사내하청보다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 울산지역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상승 없이는 분배 구조를 바꿀 수 없음

목 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울산시 용역/위탁노동자와 부품업체 노동자, 알바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상승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울산지역 최저임금제 실현

이행방법

- 최저시급 7,915원 기본급 165만원 실현
  -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중소제조업(20~299인)을 대상으로 '제조부분 보통인부 평균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2013년 단순노무종사원 직종 평균 노임 : 일급 63,326원 시급 7,915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울산시 위탁/발주사업에 대해 엄격히 적용
  - 향후 최저임금 7,915원이 울산지역 최저임금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
- 울산시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조건 최소기준 표준안' 작성
  - 울산시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시 직접 및 위탁 운영중인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최소기준 표준안'을 제정

- 노동조건 최소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노동조건 최소기준 미이행 사실 확인 시 즉각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자격 제한

● 대기업의 납품단가 산정 시 납품업체 노동자의 최저시급 보장
- 납품단가에 납품업체 노동자의 최소인건비가 반영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이행기간

● 즉시시행, 상시운영

재원조달 방안

● 추가재원 필요 없음

공약 3 떼인 돈 찾아주기, 떼인 돈 예방하기

현황 과 문제점

● 울산 알바노동자 4명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

● 울산 알바노동자 72% 주휴수당 못 받아, 울산 알바노동자 53% 야간근로수당 못 받아

● 울산지역의 체불임금 270억5200만원(6,966명)

목 표

● 법정최저임금 미달 0% 실현, 체불임금 0% 실현

● 울산지역 최저임금제를 확장하여 생활임금 1만원 조례 제정

이행방법

● 떼인 돈 받아 주기 공약
- 울산시청에 준 근로감독관 확보. 최저임금 미달 사업주 정기적으로 단속 고발 처벌
- "떼인 돈 기금"(체불임금 기금) 조성으로 울산시가 체불임금 선 지급, 사업주에 대하여 울산시가 직접 구상권 청구.
- 종합적인 노동상담 체계 구축 : 알바/영세부품 노동자 밀집 지역에 노동 상담소 설치

- 떼인 돈 예방하기 공약
  -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조례 제정
  - 영세자영업자 및 가맹점 사업주의 영세화 방지 : 갑을 관계에 있는 가맹점 사업주의 영세화를 막기 위해 "가맹점협동조합"설립 지원, 본사와의 교섭력을 높여 영세화 방지
  -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알바노조' 조직화 지원

이행기간

- 즉시시행, 상시운영

재원조달 방안

- 추가재원 필요 없음

공약 4 모든 어르신께 월20만원 지급, 자영업자를 위한 수수료0% 체크카드 도입

현황과 문제점

- 울산 노인인구 상승률 전국 최고, 노인 빈곤화 심화
- 울산 영세 자영업자 비중 전국 최고, 울산 자영업자 5년후 생존율 29.5%

목 표

- 울산 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으로 편안한 노후 실현
- 울산 영세 자영업자 비율을 낮추고, 장사할 맛 나는 울산 실현

이행방법

- 어르신 기본소득 도입 : 모든 어르신께 월20만원 지급
  - 울산 모든 어르신(65세이상 93,237명, 2014년 3월 기준)께 심사없이 20만원 지급
  - 어르신 기본소득 도입 이후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여 단계적으로 '아동 기본소득',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 수수료 0% 지역 체크카드 도입

- 2013년 카드 수수료 월 평균 15만원 지불(신용카드 2,14%, 직불카드 1.41%)
- 울산시 금고 운영 은행과 MOU체결, 지자체 금고 운영 이익을 지역에 환수 수단으로 수수료 없는 울산지역 체크카드 도입
- 이후 울산광역시 공영 체크카드 공사 설립

이행기간

- 어르신 기본소득 : 2015년부터 시행
- 수수료 0% 체크카드 : 2015년 금고 은행과 MOU체결

재원조달 방안

- 어르신 기본소득 : 박맹우 시장 재임기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시비로 쏟아부은 돈 약 2조 2천6백억원을 어르신 기본소득으로 전환.
  2천2백6십억(1년평균) ÷ 12개월 ÷ 93,237명 = 약20만원
- 수수료 0% 체크카드 도입 : 금고 운영 이익 전환

공약 5 안전사고 / 산업재해 / 핵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현황 과 문제점

-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위치, 노후설비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증대
- 산업재해로 노동자 사망사고 빈번, 특히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 가장 노후한 월성, 고리 핵발전소 30KM 이내 위치, 핵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도시

목 표

-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울산 실현
-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산 실현
- 핵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실현

이행방법

-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울산
  - 유해물질 유출 사고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례 제정
  - 안전관리 규칙을 어기는 관행 타파
  - 안전수칙과 제반 지시 사항 준수를 담은 '안전수칙각서'를 울산시가 직접 시행 점검
-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산
  - '산재은폐 건별 과징금제' 시행, 조례 제정을 통해 산재 은폐 엄단
  -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산재보험 요율제' 폐지 추진
  -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장 및 재활 지원. 산재모 병원을 노동자 중심으로 개혁
- 핵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 울산시장 '탈핵울산선언'
  - 정부주도의 에너지 정책 방어를 위한 '탈핵동맹' 실현
  -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 '탈핵에너지 전환 기본계획' 수립

이행기간

- 즉시시행

재원조달 방안

- 추가 재원 없음

경기도

공약 1 생활임금 연동 지방 공기업 CEO 최고임금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250만명이 넘고,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 기업 임원들은 합리적 임금 산정 기준 없이 수백억의 연봉을 받고 있어 노동자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
- 특히 2014년 3월에 공개된 대기업 임원 연봉을 살펴보면 법정 구속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0억(최저임금의 2473배)이 넘는 연봉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는 민간기업처럼 임원이 극단적 연봉을 받는 경우는 없지만, 2012년 기준 26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1억 이상의 연봉을 지급했으며 2억이 넘는 경우도 48곳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목표

-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생활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임원 임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

이행방법

- 생활임금 연동 공공기관 임원상한 조례 제정

이행기간

- 1년차 : 조례 제정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조례안 연구
- 조례 제정 후 익년도 적용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해외 사례

- 프랑스 : 2012년 6월부터 공기업 CEO의 고정급, 변동급, 기타 급여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업 최저임금의 20배 이하로 제한. 적용 대상 공기업은 11곳이다.
- 이탈리아 : 2014년 4월 1일부터 공기업 임원 연봉을 31만1천유로(약 4억5천720여만원)로 상한 실시
- 아일랜드 : 2009년부터 공공 금융기관 CEO 임금상한제 실시. 정부 지원 금융기관 최고경영자의 연봉 상한은 50만 유로로 제한. 최고경영자 보너스는 기본연봉의 80% 이내, 수익이 달성되지 않으면 보너스 지급 금지
- 중국 : 2009년 중국 재정부는 금융공기업 및 국유기업 최고경영자 연봉을 280만 위안(약 5억6,000만원)으로 제한.
- 미국 : 구제금융 지원 대상 기업의 임원에 대해 성과형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제한 및 소득세 공제조항 적용을 50만 달러(약 5억)로 하향조정, 보너스나 스톡옵션에 주어지던 예외조항 적용을 전면 금지

공약 2 방사능 없는 지역 사회, 핵 없는 한국 사회

현황과 문제점

- 핵 위험의 전국화 : 핵발전 증설 정책이 지속되면서 과도밀집한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도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음. 또한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 수입 수산물의 방사성 핵종 검출 사례들은 대도시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줌
- 석유와 핵에너지 에너지 의존 심화, 피크오일에 대한 대응력 취약 :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석유 에너지와 핵에너지 의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전체 중 96.4%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력 자급률은 2.95%(2011년)에 불과함
- 에너지의 지역 불평등 갈등 격화 : 밀양과 청도 등의 고압송전탑 건설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차이로 인한 수송비용 증대와 사회적 갈등 격화는 대도시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지역적 계급적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임을 알려줌

- 재생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수요 저감 잠재력 사장 :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촉진 정책의 미비로 대도시의 큰 에너지 잠재력이 여전히 잠자고 있음. 한 외국 연구자에 의하면, 5월 한 달간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등 서울시 전체 건물의 32%의 지붕 태양광을 활용하면 서울 전체에 한 달 동안 필요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화는 원전, 화력 등 전통적 발전 방식의 고용에 비해 4배 정도 고용창출효과 있음

목표

- "2030 탈핵 한국"의 구체화 : 노동당은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환을 통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음
- 지역부터 시작하는 탈핵 정책 : 지자체 수준의 에너지 정책은 탈핵, 탈방사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기와 수단이 되어야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수준의 탈핵 정책을 더욱 확대해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유도. 광역시도별 핵발전소 1개 발전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이행방법

- 에너지 절약, 효율화 목표치 도입 및 지원 제도 도입 : 지자체별 탈핵을 위한 지역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 5년 단위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 대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마련 : 신·개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중소 노후 건물 에너지 개량 사업, 대형건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강화, 혼잡통행료 확대 등으로 대도시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 확대 : 광역시도 차원의 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 수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으로 자생적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유도. 신축 및 증개축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 의무 상향(30%로)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 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지원 확대
- 광역시도 에너지공사 설립 : 지역 에너지공사를 설립 운영, 집단에너지, 태양광, 지열, 자원회수 시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과 에너지 이용 시설을 연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제정
- 탈핵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역 연대 · 협력 강화 : 해외 탈핵 도시 및 에너지 자립마을과의 연대 및 북한에 생활 전력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 보급 지원 교류

이행기간

- 1년차 : 지역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 /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 2~3년차 : 지역주민 및 전문가, 유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지역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광역시도 에너지 공사 설립 계획 마련
- 3~4년차 :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대도시 효율화 프로그램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조례 제정은 비예산 사업
- 지역별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 재원 향후 추계

공약 3 버스완전공영제, 무상운행노선 확대로 대중교통 혁신

현황과 문제점

-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정책이 시행 중임.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매년 증가함 (2011년 기준)
- 기본적으로 노선사업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버스사업자는 별다른 경영혁신이나 혹은 상대적인 관리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비탄력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버스준공영제하에서의 정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운영수입과 지출원가의 차액을 보전해주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체의 이윤을 덧붙여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과되는 업체 이윤은 낭비적인 요인이 됨
- 최근에는 버스 사업자가 지방정부의 버스정책에 반발하면서 시민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한정면허 취소에 대한 서울시버스사업체의 반발이나 최근 전주시내 5개 업체에서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뜻에서 20% 감차 운행 실시 등이 그러함

목표

-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대중교통의 위상을 강화
- 특히 오일피크, 지구온난화 등 에너지·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가용 중심의 교통 체계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

이행방법

- 버스보조금 및 공영버스 운영 조례 제정 : 보조사업의 목적 및 정산, 사업자의 의무사항 명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노선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
- 버스이용자위원회 설치 : 기존 실제 버스이용자가 배제된 버스시민위원회 대신에 실제 버스이용자가 참여하여 버스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 기초자치단체의 마을버스 노선 공영화 유도 및 지역 내 공영무상노선 신설 : 사업성이 낮은 자치구 마을버스 중 공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 내 교통사각지대 및 주요 공공시설물을 순환하는 공영 무상노선 신설 및 운영
- 수도권 광역단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통통합 시스템 도입

이행기간

- 1년차 : 버스보조금 및 공영버스 운영 조례 제정 / 버스이용자위원회 설치
- 2년차 : 버스 노선 공영화 전환 및 공영무상노선 신설 시범사업 실지
- 3~4년차 : 버스 노선 공영화 전환 및 공영무상노선 확대
- 4년차 : 수도권 교통통합 시스템 도입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보조금사업 적정화를 통해 부실 버스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현행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활용

공약 4 모든 민영화 STOP

현황과 문제점

- 현 정부는 철도 민영화 이후 의료와 교육 부문까지 민영화 추진
- 민영화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호시탐탐 자행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청소 및 재활용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미 상수도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13%에 달함
- 지자체의 민영화는 청소나 수도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공공 의료원, 각종 공공복지서비스 등 모든 공공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 민간위탁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은 지난 2008년 39조 규모에서 2012년 52조까지 13조원이 늘어남
- 이러한 공공업무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해당 부문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인한 공공재 비용 상승 및 질 악화, 그리고 주민 안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용인 경전철, 지하철 9호선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간자본 SOC 사업의 수익 보장을 위한 세금 낭비로 지자체 재정 운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야기함. 지난 10년간 최소수익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지출한 예산은 8,800억 원에 달함

목표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직영화 추진
- SOC 민간투자 시설의 과도한 수요예측 등 전면 재검토, 필요한 경우 계약 사항 전면 수정 또는 최소수익보장(MRG) 재협의
- 불가피한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보장으로 해당 부문 노동자 생존권 보장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및 SOC 민간투자 사업 적정성 심의 TFT 구성

- 1~4년차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위탁 적정성 재검토, 상시적 업무의 경우 직영을 원칙으로 전환 계획 수립
- 1~4년차 : SOC 민간투자 사업의 수요예측 적정성 전면 재검토 : 과도한 수요예측 부풀리기를 기반으로 한 계약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 강구, 노동자 서민의 혈세 낭비하는 최소수익보장 재협의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민간위탁 비용 중 업체 이윤 보장 및 관리비용 부분을 인건비 인상 비용 등 직영 전환 비용으로 유도하여 예산 내 재구조화

공약 5 지방 공기업 개혁 : 낙하산 인사 근절,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현황과 문제점

- 지방공기업의 민간부문 사업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낙하산 인사'로 대표자가 되는 일 발생
- 지방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지방 공기업은 지역주민 및 해당 공기업 노동자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주된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있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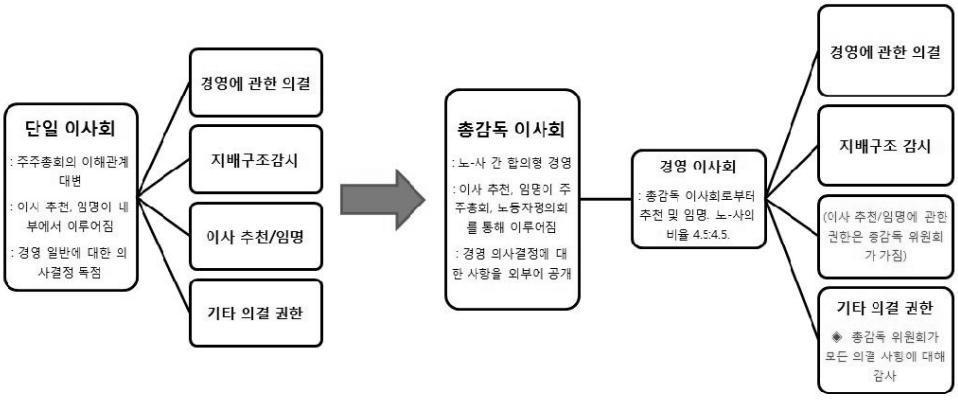
- 지방 공기업 개혁을 통해 공공성 및 민주성 확대

이행방법

-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 도입 : 지방의회는 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청문에 필요한 의견을 주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렴,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지방의회는 해당 청문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확대 및 활동보장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추첨제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위원선출, 각 위원회의 사업결정권 및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는 등 권한부여.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제 확보 등

-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이원적 이사회제) 도입 :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이원적 이사회를 도입하여, 최상위 기구인 '총감독 이사회'와 '실무(경영)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내부 폐쇄형 경영구조를 외부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효율적 경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 (이사회 예시 그림 참조)



〈이원적 이사회 예시〉

이행기간

- 1년차~4년차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사업

강원도

공약 1 생활임금 연동 지방 공기업 CEO 최고임금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250만명이 넘고,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 기업 임원들은 합리적 임금 산정 기준 없이 수백억의 연봉을 받고 있어 노동자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
- 특히 2014년 3월에 공개된 대기업 임원 연봉을 살펴보면 법정 구속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0억(최저임금의 2473배)이 넘는 연봉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는 민간기업처럼 임원이 극단적 연봉을 받는 경우는 없지만, 2012년 기준 26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1억 이상의 연봉을 지급했으며 2억이 넘는 경우도 48곳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목표

-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생활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임원 임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

이행방법

- 생활임금 연동 공공기관 임원상한 조례 제정

이행기간

- 1년차 : 조례 제정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조례안 연구
- 조례 제정 후 익년도 적용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해외 사례

- 프랑스 : 2012년 6월부터 공기업 CEO의 고정급, 변동급, 기타 급여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업 최저임금의 20배 이하로 제한. 적용 대상 공기업은 11곳이다.
- 이탈리아 : 2014년 4월 1일부터 공기업 임원 연봉을 31만1천유로(약 4억5천720여만원)로 상한 실시
- 아일랜드 : 2009년부터 공공 금융기관 CEO 임금상한제 실시. 정부 지원 금융기관 최고경영자의 연봉 상한은 50만 유로로 제한. 최고경영자 보너스는 기본연봉의 80% 이내, 수익이 달성되지 않으면 보너스 지급 금지
- 중국 : 2009년 중국 재정부는 금융공기업 및 국유기업 최고경영자 연봉을 280만 위안(약 5억6,000만원)으로 제한.
- 미국 : 구제금융 지원 대상 기업의 임원에 대해 성과형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제한 및 소득세 공제조항 적용을 50만 달러(약 5억)로 하향조정, 보너스나 스톡옵션에 주어지던 예외조항 적용을 전면 금지

공약 2 방사능 없는 지역 사회, 핵 없는 한국 사회

현황과 문제점

- 핵 위험의 전국화 : 핵발전 증설 정책이 지속되면서 과도밀집한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도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음. 또한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 수입 수산물의 방사성 핵종 검출 사례들은 대도시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줌.
- 석유와 핵에너지 에너지 의존 심화, 피크오일에 대한 대응력 취약 :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석유 에너지와 핵에너지 의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전체 중 96.4%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력 자급률은 2.95%(2011년)에 불과함
- 에너지의 지역 불평등 갈등 격화 : 밀양과 청도 등의 고압송전탑 건설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차이로 인한 수송비용 증대와 사회적 갈등 격화는 대도시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지역적 계급적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임을 알려줌

- 재생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수요 저감 잠재력 사장 :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촉진 정책의 미비로 대도시의 큰 에너지 잠재력이 여전히 잠자고 있음. 한 외국 연구자에 의하면, 5월 한 달간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등 서울시 전체 건물의 32%의 지붕 태양광을 활용하면 서울 전체에 한 달 동안 필요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화는 원전, 화력 등 전통적 발전 방식의 고용에 비해 4배 정도 고용창출효과 있음

목표

- "2030 탈핵 한국"의 구체화 : 노동당은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환을 통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음
- 지역부터 시작하는 탈핵 정책: 지자체 수준의 에너지 정책은 탈핵, 탈방사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기와 수단이 되어야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수준의 탈핵 정책을 더욱 확대해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유도. 광역시도별 핵발전소 1개 발전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이행방법

- 에너지 절약, 효율화 목표치 도입 및 지원 제도 도입 : 지자체별 탈핵을 위한 지역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 5년 단위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 대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마련 : 신·개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중소 노후 건물 에너지 개량 사업, 대형건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강화, 혼잡통행료 확대 등으로 대도시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 확대 : 광역시도 차원의 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 수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으로 자생적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유도. 신축 및 증개축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 의무 상향(30%로)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 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지원 확대
- 광역시도 에너지공사 설립 : 지역 에너지공사를 설립 운영, 집단에너지, 태양광, 지열, 자원회수 시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과 에너지 이용 시설을 연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제정
- 탈핵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역 연대 · 협력 강화 : 해외 탈핵 도시 및 에너지 자립마을과의 연대 및 북한에 생활 전력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 보급 지원 교류

이행기간

- 1년차 : 지역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 /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 2~3년차 : 지역주민 및 전문가, 유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지역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광역시도 에너지 공사 설립 계획 마련
- 3~4년차 :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대도시 효율화 프로그램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조례 제정은 비예산 사업
- 지역별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 재원 향후 추계

공약 3 모든 어르신에게 지역 노령연금 지급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빈곤율은 16% 수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4~5% 이상 높은 수준. 그 중 노인 빈곤율은 45% 수준으로 전체 빈곤율의 3배 수준으로 매우 심각
- 하지만, 가입자만 보장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커 충분한 노인 안전망으로 작용하지 못 하는 상황
- 이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집권 후 약속을 파기하고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동하여 차등 지급하겠다고 변경함

목표

- '폐지 줍는 노인이 없는 지역'이 진정한 "문명 사회"
- 노인 빈곤 해소 :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의 보편적 지역 노령연금 지급

- 또한 국회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내용 중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예산 집행하여 지급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년차 : 지역 노령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1년차 : 국회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내용 중에서 지방정부의 부담 분을 7월 1일부터 지급 (기초연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짠 경우에는 그래도 집행, 그렇지 않은 경우 추경)
- 2년차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역 노령연금 지급

재원조달방안 등

- 지역 노령 연금 필요 재원: 아래 표 참조

지역	대상자	소요예산(단위:억원)		지역	대상자	소요예산(단위:억원)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서울	1105583	3980	6633	경기	1135242	4086	6811
부산	442199	1591	2653	강원	241694	870	1450
대구	274152	986	1644	충북	215245	774	1291
인천	267059	961	1602	충남	309840	1115	1859
광주	144732	521	868	전북	303586	1092	1821
대전	142979	514	857	전남	366524	1319	2199
울산	85736	308	514	경북	437519	1575	2625
세종	17214	61	103	경남	414831	1493	2489
				제주	75925	273	455
※ 시나리오 1: 월 3만원 지급 / 시나리오 2: 월 5만원 지급							

공약 4 모든 민영화 STOP

현황과 문제점

- 현 정부는 철도 민영화 이후 의료와 교육 부문까지 민영화 추진
- 민영화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호시탐탐 자행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청소 및 재활용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미 상수도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13%에 달함
- 지자체의 민영화는 청소나 수도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공공 의료원, 각종 공공복지서비스 등 모든 공공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 민간위탁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은 지난 2008년 39조 규모에서 2012년 52조까지 13조원이 늘어남
- 이러한 공공업무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해당 부문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인한 공공재 비용 상승 및 질 악화, 그리고 주민 안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용인 경전철, 지하철 9호선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간자본 SOC 사업의 수익 보장을 위한 세금 낭비로 지자체 재정 운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야기함. 지난 10년간 최소수익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지출한 예산은 8,800억 원에 달함

목표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직영화 추진
- SOC 민간투자 시설의 과도한 수요예측 등 전면 재검토, 필요한 경우 계약 사항 전면 수정 또는 최소수익보장(MRG) 재협의
- 불가피한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보장으로 해당 부문 노동자 생존권 보장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및 SOC 민간투자 사업 적정성 심의 TFT 구성

- 1~4년차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위탁 적정성 재검토, 상시적 업무의 경우 직영을 원칙으로 전환 계획 수립
- 1~4년차 : SOC 민간투자 사업의 수요예측 적정성 전면 재검토 : 과도한 수요예측 부풀리기를 기반으로 한 계약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 강구, 노동자 서민의 혈세 낭비하는 최소수익보장 재협의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민간위탁 비용 중 업체 이윤 보장 및 관리비용 부분을 인건비 인상 비용 등 직영 전환 비용으로 유도하여 예산 내 재구조화

공약 5 지방 공기업 개혁 : 낙하산 인사 근절,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현황과 문제점

- 지방공기업의 민간부문 사업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낙하산 인사'로 대표자가 되는 일 발생
- 지방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지방 공기업은 지역주민 및 해당 공기업 노동자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주된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있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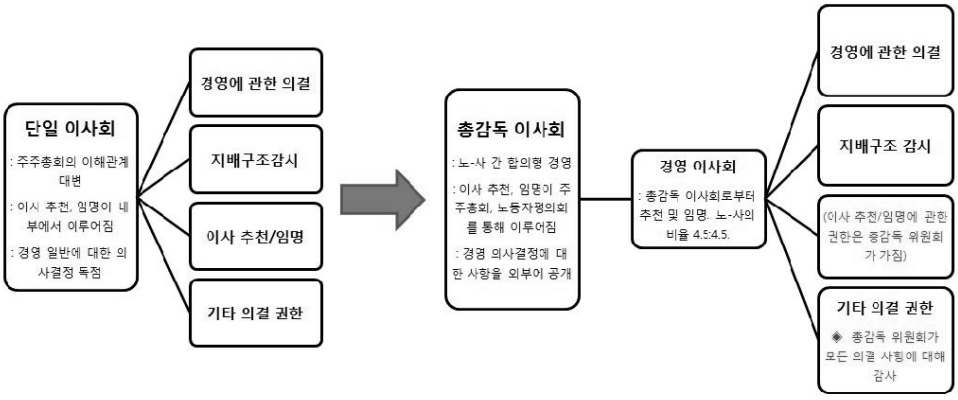
- 지방 공기업 개혁을 통해 공공성 및 민주성 확대

이행방법

-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 도입 : 지방의회는 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청문에 필요한 의견을 주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렴,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지방의회는 해당 청문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확대 및 활동보장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추첨제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위원선출, 각 위원회의 사업결정권 및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는 등 권한부여.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제 확보 등

-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이원적 이사회제) 도입 :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이원적 이사회를 도입하여, 최상위 기구인 '총감독 이사회'와 '실무(경영)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내부 폐쇄형 경영구조를 외부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효율적 경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 (이사회 예시 그림 참조)



〈이원적 이사회 예시〉

이행기간

- 1년차~4년차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사업

전라북도

공약 1 생활임금 연동 지방 공기업 CEO 최고임금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250만명이 넘고,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 기업 임원들은 합리적 임금 산정 기준 없이 수백억의 연봉을 받고 있어 노동자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
- 특히 2014년 3월에 공개된 대기업 임원 연봉을 살펴보면 법정 구속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0억(최저임금의 2473배)이 넘는 연봉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는 민간기업처럼 임원이 극단적 연봉을 받는 경우는 없지만, 2012년 기준 26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1억 이상의 연봉을 지급했으며 2억이 넘는 경우도 48곳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목표

-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생활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임원 임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

이행방법

- 생활임금 연동 공공기관 임원상한 조례 제정

이행기간

- 1년차 : 조례 제정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조례안 연구
- 조례 제정 후 익년도 적용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해외 사례

- 프랑스 : 2012년 6월부터 공기업 CEO의 고정급, 변동급, 기타 급여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업 최저임금의 20배 이하로 제한. 적용 대상 공기업은 11곳이다.
- 이탈리아 : 2014년 4월 1일부터 공기업 임원 연봉을 31만1천유로(약 4억5천720여만원)로 상한 실시
- 아일랜드 : 2009년부터 공공 금융기관 CEO 임금상한제 실시. 정부 지원 금융기관 최고경영자의 연봉 상한은 50만 유로로 제한. 최고경영자 보너스는 기본연봉의 80% 이내, 수익이 달성되지 않으면 보너스 지급 금지
- 중국 : 2009년 중국 재정부는 금융공기업 및 국유기업 최고경영자 연봉을 280만 위안(약 5억6,000만원)으로 제한.
- 미국 : 구제금융 지원 대상 기업의 임원에 대해 성과형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제한 및 소득세 공제조항 적용을 50만 달러(약 5억)로 하향조정, 보너스나 스톡옵션에 주어지던 예외조항 적용을 전면 금지

공약 2 방사능 없는 지역 사회, 핵 없는 한국 사회

현황과 문제점

- 핵 위험의 전국화 : 핵발전 증설 정책이 지속되면서 과도밀집한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도 시시각각 높아지고 있음. 또한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 수입 수산물의 방사성 핵종 검출 사례들은 대도시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줌
- 석유와 핵에너지 에너지 의존 심화, 피크오일에 대한 대응력 취약 :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석유 에너지와 핵에너지 의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전체 중 96.4%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력 자급률은 2.95%(2011년)에 불과함
- 에너지의 지역 불평등 갈등 격화 : 밀양과 청도 등의 고압송전탑 건설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차이로 인한 수송비용 증대와 사회적 갈등 격화는 대도시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지역적 계급적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임을 알려줌

- 재생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수요 저감 잠재력 사장 :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촉진 정책의 미비로 대도시의 큰 에너지 잠재력이 여전히 잠자고 있음. 한 외국 연구자에 의하면, 5월 한 달간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등 서울시 전체 건물의 32%의 지붕 태양광을 활용하면 서울 전체에 한 달 동안 필요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화는 원전, 화력 등 전통적 발전 방식의 고용에 비해 4배 정도 고용창출효과 있음

목표

- "2030 탈핵 한국"의 구체화 : 노동당은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에너지 수요와 공급 전환을 통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음
- 지역부터 시작하는 탈핵 정책 : 지자체 수준의 에너지 정책은 탈핵, 탈방사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기와 수단이 되어야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수준의 탈핵 정책을 더욱 확대해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유도. 광역시도별 핵발전소 1개 발전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이행방법

- 에너지 절약, 효율화 목표치 도입 및 지원 제도 도입 : 지자체별 탈핵을 위한 지역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 5년 단위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 대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마련 : 신·개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중소 노후 건물 에너지 개량 사업, 대형건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강화, 혼잡통행료 확대 등으로 대도시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 확대 : 광역시도 차원의 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 수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으로 자생적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유도. 신축 및 증개축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 의무 상향(30%로)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 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지원 확대
- 광역시도 에너지공사 설립 : 지역 에너지공사를 설립 운영, 집단에너지, 태양광, 지열, 자원회수 시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과 에너지 이용 시설을 연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 방사능안전 급식조례 제정
- 탈핵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역 연대 · 협력 강화 : 해외 탈핵 도시 및 에너지 자립마을과의 연대 및 북한에 생활 전력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 보급 지원 교류

이행기간

- 1년차 : 지역 에너지 기본조례 제·개정 /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 2~3년차 : 지역주민 및 전문가, 유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지역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광역시도 에너지 공사 설립 계획 마련
- 3~4년차 :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대도시 효율화 프로그램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조례 제정은 비예산 사업
- 지역별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 재원 향후 추계

공약 3 모든 어르신에게 지역 노령연금 지급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빈곤율은 16% 수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4~5% 이상 높은 수준. 그 중 노인 빈곤율은 45% 수준으로 전체 빈곤율의 3배 수준으로 매우 심각
- 하지만, 가입자만 보장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커 충분한 노인 안전망으로 작용하지 못 하는 상황
- 이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집권 후 약속을 파기하고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동하여 차등 지급하겠다고 변경함

목표

- '폐지 줍는 노인이 없는 지역'이 진정한 "문명 사회"
- 노인 빈곤 해소 :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의 보편적 지역 노령연금 지급

- 또한 국회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내용 중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예산 집행하여 지급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년차 : 지역 노령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1년차 : 국회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내용 중에서 지방정부의 부담 분을 7월 1일부터 지급 (기초연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짠 경우에는 그래도 집행, 그렇지 않은 경우 추경)
- 2년차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역 노령연금 지급

재원조달방안 등

- 지역 노령 연금 필요 재원: 아래 표 참조

지역	대상자	소요예산(단위:억원)		지역	대상자	소요예산(단위:억원)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서울	1105583	3980	6633	경기	1135242	4086	6811
부산	442199	1591	2653	강원	241694	870	1450
대구	274152	986	1644	충북	215245	774	1291
인천	267059	961	1602	충남	309840	1115	1859
광주	144732	521	868	전북	303586	1092	1821
대전	142979	514	857	전남	366524	1319	2199
울산	85736	308	514	경북	437519	1575	2625
세종	17214	61	103	경남	414831	1493	2489
				제주	75925	273	455
※ 시나리오 1: 월 3만원 지급 / 시나리오 2: 월 5만원 지급							

공약 4 모든 민영화 STOP

현황과 문제점

- 현 정부는 철도 민영화 이후 의료와 교육 부문까지 민영화 추진
- 민영화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호시탐탐 자행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청소 및 재활용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미 상수도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13%에 달함
- 지자체의 민영화는 청소나 수도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공공 의료원, 각종 공공복지서비스 등 모든 공공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 민간위탁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은 지난 2008년 39조 규모에서 2012년 52조까지 13조원이 늘어남
- 이러한 공공업무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해당 부문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인한 공공재 비용 상승 및 질 악화, 그리고 주민 안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용인 경전철, 지하철 9호선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간자본 SOC 사업의 수익 보장을 위한 세금 낭비로 지자체 재정 운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야기함. 지난 10년간 최소수익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지출한 예산은 8,800억 원에 달함

목표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직영화 추진
- SOC 민간투자 시설의 과도한 수요예측 등 전면 재검토, 필요한 경우 계약 사항 전면 수정 또는 최소수익보장(MRG) 재협의
- 불가피한 민간위탁 시 생활임금 보장으로 해당 부문 노동자 생존권 보장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및 SOC 민간투자 사업 적정성 심의 TFT 구성

- 1~4년차 :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위탁 적정성 재검토, 상시적 업무의 경우 직영을 원칙으로 전환 계획 수립
- 1~4년차 : SOC 민간투자 사업의 수요예측 적정성 전면 재검토 : 과도한 수요예측 부풀리기를 기반으로 한 계약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 강구, 노동자 서민의 혈세 낭비하는 최소수익보장 재협의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민간위탁 비용 중 업체 이윤 보장 및 관리비용 부분을 인건비 인상 비용 등 직영 전환 비용으로 유도하여 예산 내 재구조화

공약 5 지방 공기업 개혁 : 낙하산 인사 근절,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현황과 문제점

- 지방공기업의 민간부문 사업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낙하산 인사'로 대표자가 되는 일 발생
- 지방공기업 또는 산하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지방 공기업은 지역주민 및 해당 공기업 노동자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주된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있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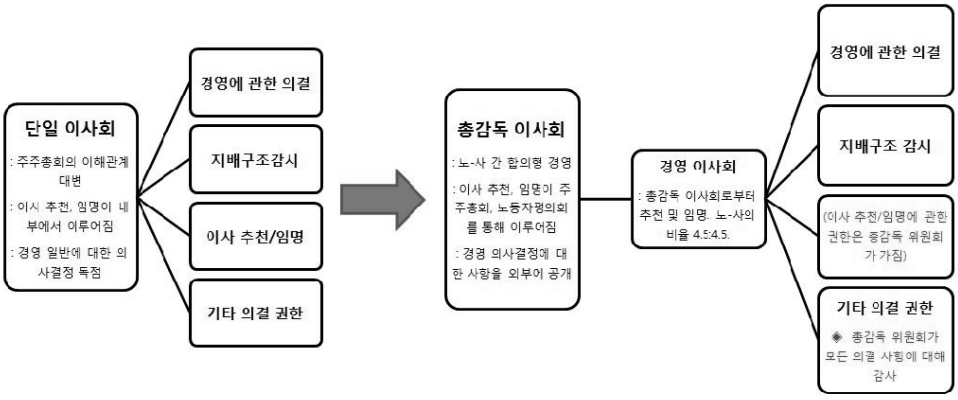
- 지방 공기업 개혁을 통해 공공성 및 민주성 확대

이행방법

-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 도입 : 지방의회는 청문특위를 구성하고 청문에 필요한 의견을 주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렴,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지방의회는 해당 청문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확대 및 활동보장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추첨제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위원선출, 각 위원회의 사업결정권 및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는 등 권한부여.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제 확보 등

- 공기업 노사공동결정제(이원적 이사회제) 도입 :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이원적 이사회를 도입하여, 최상위 기구인 '총감독 이사회'와 '실무(경영)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내부 폐쇄형 경영구조를 외부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효율적 경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 (이사회 예시 그림 참조)



〈이원적 이사회 예시〉

이행기간

- 1년차~4년차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사업

경상남도

공약 1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

현황과 문제점

-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한전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황폐화되었고, 주민들의 고통이 커짐
- 기존의 345kv 송전선 3개를 사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765kv 고전압 송전시설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공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음

목표

- 송전탑 건설 폐지와 지역사회의 복원
- 고전압 송전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방지
- 고전압 송전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방지

이행방법

- 수명 다한 고리1호기 폐기 – 굳이 새로운 송전탑 건설 필요가 없음
- 경상남도 의회의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 결의문 채택

이행기간

- 즉시 시행

재원조달방안

- 추가재원 없음

공약 2 김해경전철, 마창대교 등 MRG 재협상 / 제2경전철 등 포기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경상남도의 부채는 1조원에 달함. 거가대교, 김해경전철, 마창대교 등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민자사업이 진행되면서 과도한 수요예측과 MRG(최소수입보장) 조항을 근거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파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음
- 마창대교는 2003년 착공해 2008년 완공됐고 총 투자비 2648억 원(민자 1894억 원)에 MRG 30년 보장하기로 함.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01억 원, 2012년에는 142억 원 등 2008-2013년까지 5년간 543억 원을 보전해줌
- 김해경전철의 경우는 더욱 심각함. 김해시의 경우 20년간 한 해 687억 원씩을 부담하고 있음. 한 해 가용 예산(1,000억 원)의 70%에 달함. 경전철 MRG가 재정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임
- 아울러, 지역 토호 토건자본과 관료들이 결탁해 추진하는 무리한 민자사업들을 중단한다

목표

-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지방재정의 유출을 막아, 건전한 재정 안정성을 기한다.

이행방법

- 도의회와 경남도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 및 이슈화
- MRG 문제에 대한 재협상. MRG를 비용보전으로 전환
-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정부의 책임-국비 지원 제기

이행기간

(1) 2014년 하반기 : MRG 재협상을 위한 도의회 공동 결의
정부(국토부) 책임문제에 대한 조사 및 협상채널가동

(2) 2015년 : 회사, 정부와 재협상

재원조달방안

- 추가재원 없음

공약 3 아파트 자치관리지원센터

현황과 문제점

-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한 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문화와 생활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각종 관리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행태, 형식적인 주민조직, 중복투자와 관리비의 과다책정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목표

- 관리와 조직에 있어 투명한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나감
- 신임 주민대표자 교육을 지원
- 외부 회계감사 보상을 지원함(10년 이상 또는 저소득층 아파트 대상)
- 공개입찰 의무화 및 감시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공동사업을 위한 주관 및 교류 촉진 사업
-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수칙 제정, 마을 텃밭, 공공탁아소 문제 등 주민 생활상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 모색

이행방법

- 조례를 통해 관리센터 설립

이행기간

- 2014년 하반기 도의회 조례 제정
- 2015년 상반기 활동에 들어감

재원조달방안

- 시설은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하고 운영비는 토건예산을 삭감하고 해당예산을 확보한다.

공약 4 생활임금조례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수시로 부당해고가 자행되고 있고, 효율성과 예산절감이라는 이름 하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처우가 심각하게 낮은 상황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현실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120%로 하고, 공기업 CEO의 임금상한제와 연동하여 추진한다.
- 현재 부천시의 경우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목표

-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경남지역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노동자(위탁 포함)에게 지역 수준에 맞는 생활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이행방법

- 노동계와 협의한 후 도의회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함

이행기간

- 즉시

재원조달방안

- 추가재원 없음

공약 5 진주의료원 재개원

현황과 문제점

- 진주의료원 폐쇄는 서부경남 공공의료체제의 커다란 공백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정치적 이유로 공공의료 기관의 존폐문제를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적 도행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
- 또한, 의료원 폐쇄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 맞닿아 있는 중대한 기로의 한가운데 놓여 있음. 마치 의료문제가 시장의 다른 상품처럼 경제적 득실을 따질 수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의료 확립을 위해 반드시 진주의료원은 재개원 되어야 함

목표

-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이를 통한 공공의료 확대

이행방법

- 새롭게 구성되는 도의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의료원 재개원 방침을 설득한다.

이행기간

- 즉시

재원조달방안

- 불필요한 토건비용 삭감하고 도비로 의료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배정함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독민주당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독민주당 정책공약

▣ 중앙 10대 정책

No.	정 책
1	정치 : 대북정책, 대외정책,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 운영
2	경제 :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3	노동 : 노동차별화 금지
4	실업 : 실업문제 해결
5	교육 : 다양한 자격증시험제도 시행
6	국방 : 모병제 실시
7	의료 : 복지의료보험 전 국민 무료화
8	주택 : 전세・임대단지 조성
9	복역제 : 100년 이상 복역제 및 교도소내 사역장 설치
10	행정구역개편 :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주의 타파

▣ 시・도별 5대 핵심공약

정책 1 정치

(1) 대북 정책

1) 북한을 현재 유엔에 가입한 국가로 인정하고 연합하는 방법을 먼저 도입하고 후에 통일하도록 한다. 만일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 강력 대응한다.
2) 북한에 경제협력을 하여 북한의 지하자원, 노동, 부대시설 등을 활용하여 투자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는다.
3) 정치를 제외한 경제,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대 국가로서가 아닌 민족 대 민족으로서 교류를 한다.
4) 통일에 대해서는 같은 분단국가로서 독일의 통일모델을 교훈삼아 평화적 통일방법을 지향한다.

(2) 대 외국 정책

1) 현 우호협정을 하고 있는 국가를 존중하면서 우호 관계를 계속 가진다. 또 현 우호협정을 가지지 않은 국가와도 우호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2) 대 외국 관계는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우선으로하며, 재외동포가 있는 국가의 재외동포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모든 협력을 한다.

(3)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운영

1) 모든 선출직의 선거 및 임기는 현재와 같이 한다.
2) 행정 구역이 개편되므로 국회를 인원을 줄이면서 양원제를 시행한다.
3) 양원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원을 현 국회의원 수와 같이하면서 가칭 하원의원을 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2명씩으로 가칭 상원의원을 두는 방법
   ② 현 국회의원 수로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두고 가칭 하원의원을 100명으로 하고 가칭 상원위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을 선출하는 방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의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정책 2 경제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1) 대기업의 상호 출자는 점진적으로 없애도록 한다.
2)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대기업의 하청을 3청으로 줄인다.
3) 금융자본주의를 반대한다.

정책 3 노동

동일직종 동일임금제를 실시하여 노동의 차별화를 금지한다.

정책 4 실업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실업하는 국민에게 재정에서 최소 기본급으로 지급하면서 공공서비스 직종을 현실화하여 일자리를 늘려서 봉사하게 한다. 그리고 봉사하는 직종을 직업으로 선택하려고 할 때 직업 교육을 하여 취업하도록 한다.

정책 5 교육

1) 학교 교육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기관을 만들어 학력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등용되도록 각종 자격증 시험을 증가시킨다.
2) 교직원 노조를 활성화하면서 반국가적인 교육을 주장하는 노조 단체를 제재하여 건전한 교육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3)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교육하도록 하며, 대학은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교육개혁을 한다.

정책 6 국방

모병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현 60만에서 20만으로 군대 수를 줄인다.
2) 군의 장비는 최대한 기계화하여 장병을 통한 전쟁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전쟁으로 연구한다.
3) 모든 국민에게 군사 훈련을 직접·간접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 7 의료

복지 의료 보험 전 국민 무료화

1) 1차 목표 – 현 의료진료 시 무료 진료
2) 2차 목표
   - 모든 질병의 의료 보험 실시
   - 소요 예산 년 10조
   - 국가 보증으로 기업을 크게 만든 기업들에게 병원을 지어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모든 특정 병원을 지음

정책 8 주택

주택 가격이 타 지역보다 상승 되어 있는 지역에 전세 단지와 임대 단지를 만들어 저렴하게 전세 입주 또는 임대입주를 시킴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함

1) 전세 단지를 국가 기관 사업으로 조성하면 1가구당 5억의 경비가 들어감
2) 국가가 2억 5천을 지원하고 전세를 2억 5천에 공급하면 전세가 2억 5천에 동결 됨으로 주택 가격도 더 상승 되지 않음
3) 전세자는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하면 1억 – 1억 5천에 입주할 수 있으므로 큰 부담이 없음
4) 다른 지역의 경우 강남과의 주택과 전세의 가격이 월등한 차이가 나므로 부작용이 없음

정책 9 복역제

사형과 무기징역을 없애고 100년 이상 복역제를 실행한다. 100년 이상 복역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인정 억울한 사건으로 복역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감형이 안 되며, 복역기간동안 교도소에 공장과 같은 사역장을 만들어 복역하면서 평생을 지내게 한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들의 생활을 감당하면 남는 돈은 형이 끝난 후 가족에게 지출하며, 가족이 없을 경우 국가에 환수한다.

정책 10 행정구역개편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행정구역을 현 시, 도와 시, 군, 구를 없애고 시, 군, 구를 병합하여 150-200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
2) 지방의 모든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종합 경제정책, 종합국토 개발 정책 등만을 관할한다.
3) 현재 국세는 정부가, 지방세는 각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것을 이전대로 하고 국세로 징수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여 경제적인 지방분권을 이룬다. 또 모든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방법도 채택할 수 있다.
4) 지방 정부는 총 예산에서 OECD국가의 진위계수를 평균수준으로 중앙정부에 지출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한다.

기독민주당

시·도별 5대 핵심공약

서울특별시

공약 1 무료 의료진료

개요

- 현 체제대로 의료보험을 내고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시에서 담당한다.

방법

- 시 예산의 1/10을 우선배정 및 절약하여 2조를 대한민국 전 의료 진료비는 50조 정도 입니다. 여기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30조입니다. 여기서 특진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5조입니다. 여기서 현제 정부가 보조하는 금액이 5조입니다. 그러므로 10조만 만들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서울시의 의료비는 2조원 정도이므로 전 예산에서 10%를 우선배정 및 절약하면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예산이 30조이며, 순수 세액이 20조입니다.
  여기서 10%를 우선배정 및 절약을 하면 2-3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개인이 내는 의료비는 약 2조 내외이므로 가능합니다.

공약 2 대학생 장학금지급

개요

- 현재의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 대상학생 -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시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경우

  (2) 방법 - 각 구의 예산의 1/10을 우선배정 및 절약하면 가능

공약 3 건축가로 전세주택공급

개요

- 서울은 특별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므로 특정지역에 대단지 전세단지를 조성하면 주택문제가 해결됨
- 주택이 가구 수 보다 많은데 전세와 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택소유자가 월세로 전환하며, 월세는 은행이자보다 월등이 비싸므로 전세난과 주택난이 생기는 것임.
- 그러므로 주택을 지어 전세를 주면 주택난이 해결될 수 있음

방법

- 아파트는 평당 500만원에 건축 가능하므로 30평은 1억5천이 됩니다. 이 1억 5천에 전세를 주면 건축비 상관없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또 전세로 들어올 능력이 안 되는 분은 전세를 담보로 융자를 해 주면 많은 사람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대단지 전세단지를 중심부에 지으면 전세난과 주택난이 해결 됩니다.

※ 타 시 / 도의 경우 : 1. 2. 3. 의 공약은 같습니다. - 인구수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녹색당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녹색당 정책공약

▣ 중앙 – 10대 정책

No.	정 책
1	탈핵 · 에너지전환 공약 – 밀양을 위한 약속 /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2	생명권 공약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
3	주거/생활환경 공약 “햇볕 드는 집,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
4	도시계획 · 교통 공약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5	먹거리 공약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겠습니다”
6	농업 공약 /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7	경제 · 노동 공약 “동네에서 먹고 살자”
8	성평등 · 인권 공약 발표 / 성평등 · 성소수자 · 장애인 · 이주민 공약
9	자치 공약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
10	교육 · 돌봄 정책 공약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우리 동네”

▣ 시·도별 5대 핵심공약

정책 1 탈핵 · 에너지전환 공약 – 밀양을 위한 약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회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핵발전,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전기요금과 유류요금의 역전으로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력 소비에 맞춰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전력생산과 송전선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발전설비 중 핵발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것을 결정함. 이로 인해 고리, 울진, 월성에 신규 핵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삼척과 영덕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갖고 있음.
-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수명지난 핵발전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정부가 탈핵 ·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생산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더불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시로 송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밀양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짐을 덜기 위해서는 분산형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밀양을 위한 공약〉을 준비해야 함.

정책의 목표

-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 · 에너지전환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함.
-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냄.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
-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
-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 · 중 · 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 확대

주요정책 1.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 내용
  -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음.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음.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3%로 타 지역에 의존해 전력을 소비하고 있음. 이에 밀양에 지운 과도한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지자체는 탈핵 · 에너지전환도시 선언과 종합계획 수립, 탈핵 · 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관련 부서 인력 배치가 필요함.
- 세부 공약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 : 2012년 2월, 46개 기초지자체에서 탈핵 · 에너지전환 도시선언을 했음. 이후 선언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이 진행됨. 지자체장의 탈핵 선언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녹색당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공약으로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약속.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지역에너지 계획)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및 조직을 마련해야함.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기본계

획에서 전력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지역 내 에너지 소비 각 분야에서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지역에너지 조례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해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함.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시민위원회 구성 : 탈핵 · 에너지전환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주민, 지역노동자, 시민단체가 협동해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참여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시민(도민) 참여 법제화(시민주주) : 장기적으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시영 또는 도영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공사 설립에 시민 참여를 법제화해 보장함. 지역에너지공사는 지자체의 탈핵 · 에너지전환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기관이자 에너지부문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함.
  사례)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주요정책 2. 에너지 저소비 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내용

- 산업단지가 속한 지역의 경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들에게도 열린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지역과 에너지효율적/친환경적인 생산유통 과정을 만들고,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산업체가 밀집한 공단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단위의 주요 에너지 소비는 건물부문에서 발생함. 따라서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도시계획상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이 들어서지 않도록 조례 제정. 조명, 냉난방,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세부 공약

- 조명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자연채광, 적정조명, 장소에 알맞은 조명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업건물에 조명에너지 효율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를 받은 건물에서 자연채광과 LED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마련함.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택에너지 단열사업 확산을 위한 무료 건물 진단사업 : 주택단열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마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노후 주택에 대한 전기/열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에너지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 조명, 냉난방, 조리, 교통 등 도시에서 에너지가 쓰이는 각 분야별로 에너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서비스센터를 구축함. 지역에너지센터의 에너지 서비스가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는 시민은 물론 노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주요정책 3. 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 내용

- 탈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대도시의 경우 지역 내 생산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조사하고,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자원 등 지역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해야 함.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제주도의 바람자원의 공유화 개념을 담은 '공풍화' 제도도 바람직함.

◉ 세부 공약

- 행복태양광 : 시민참여형 행복태양광사업으로 태양광협동조합을 확대함. 철도부지, 전철역사, 학교 지붕을 적극 활용함. 200W 미만의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여 다양한 용량의 태양광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사례 :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 :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만들어 차량 연료로 활용.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최대한 폐식용유를 수거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생산을 늘리며, 수거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바이오가스 활용 : 음식물, 하수종말처리장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열병합 발전으로 활용함.
- 적정기술 활용 : 농촌지역의 경우 햇빛온풍기, 건조기, 고효율난로 등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지역주민들이 지역재료를 활용해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기술 활용과 보급에 지원해야 함.

주요정책 4. 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 내용
  -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개념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대안 모델로 확산해나가야 함.
- 세부 공약
  - 에너지복지 조례 제정과 에너지빈곤 지원 정책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에 대비해 모든 시민들에게 적정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 에너지빈곤 계층에 대한 주택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주거와 에너지빈곤문제 동시 지원. 복지관을 통한 에너지빈곤 실태조사와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 마련.
  -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함.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단계 에너지 교육과 절약, 2단계 효율화 사업, 3단계 에너지 생산으로 단계별 지원 제도 마련.
  - 마을에너지진단사 양성 : 우리 동네 보육반장과 같이 우리 동네 에너지반장(통장) 모집하여 동네사람이 마을 에너지 진단.
  - 동네에너지 슈퍼마켓 확대 : 멀티탭, LED, 단열 필름 등 지역주민들이 에너지를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보급하고 확대함.

주요정책 5. 탈핵 · 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 내용
  - 원자력문화재단의 핵발전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금지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을 목표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교육제도화와 확대. 학교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신개축하며,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장이 되도록 함.
- 세부 공약
  - 시민 탈핵학교 운영 : 시민평생교육과 민방위훈련 등 다양한 시민교육에 에너지 교육 반영.
  - 초중고 학교 건물 단열개선 사업과 에너지 교육 강화 : 교육청과 협력해 에너지효율이 낮은 초중고 학교 건물에 대한 건물단열개선 사업, 태양광지붕을 임대하거나 직접 설치

하는 학교에 대한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지원금 제공.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에너지 전환 교육과 활동 지원.

- 환경에너지센터 운영 : 노원구 에코센터와 서울시 에너지드림센터와 같이 지역에서 다양한 에너지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교육센터 마련과 운영.

정책 2

생명권 공약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

정책의 필요성

- 우리는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물들이 모피 생산으로 희생되거나 실험에 활용되는 등 생명을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공장식 축산, 열악한 동물원 환경, 버려지는 반려동물 등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여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고양이들이 길에서 힘겹게 살다 차에 치이거나나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동물들에게 전달되면서 학대당하는 동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동물들의 고통이 우리 공동체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동물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 공동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동물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보살피고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가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인권운동이 생명권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목표

-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도 동물권 전담 조직과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마련해 실행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길고양이에 대한 TNR 사업을 진행하되 TNR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들을 위한 구조시스템과 동물보건소,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해 동물들의 안락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초 · 중 · 고등학교에서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차에 치여 죽는 동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로드킬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대형마트, 동물병원, 애견 숍을 대상으로 동물유통판매금지 조례를 제정해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운영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열악한 동물원을 동물복지를 고려해 강화하고, 동물복지농장이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권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 만들기

- 내용
  -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동물권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민들과 함께 풀어갑니다. 동물과 공존하는 마을만들기는 대립이 아니라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동물에 대한 선호(좋아하거나 싫어함) 여부를 떠나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며,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며 개선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 세부공약
  -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협동으로 협의체 구성 : 길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이라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갖고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우수사례로 일본 신주쿠 지역이 있습니다. 신주쿠에서는 주민회에서 TNR 실시와 고양이 화장실, 고양이 먹이 등을 관리합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을 배려해 먹이를 준 즉시 주위를 치우고, 고양이 대소변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매일 갈아줍니다. 길고양이가 144마리에 달하던 이 마을은 중성화 수술과 주민들의 지속적 관리로 3년 사이 30마리로 개체 수 감소에 성공했습니다.
  - 길고양이급식소 확대 :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지역캣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주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동구가 처음입니다. 이런 노력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 길고양이 TNR 사업 확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TNR 사업을 진행합니다. TNR사업 예산을 늘리고, TNR 사업이 인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지자체산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과 동물권 전담 조직 마련, 동물 등록제 충실한 시행 : 현 동물보호법 제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와 도에 두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에는 동물보호의 관점에 충실한 활동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고양시가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 (2014년 1월 1일) 되었습니다. 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동물실험 금지, 생명보호 교육 의무화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합니다.
- 단체급식의 채식메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추구권과 선택권 보장 : 우유 강제 급식을 금지하고 두유 선택 등 타 음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로드킬 방지와 대책마련 :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도로를 재자연화 합니다.

주요정책 2. 동물 생산과 거래 제한 정책 마련

내용

-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반려동물을 돈으로 쉽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쉽게 사고, 쉽게 버리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명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입양센터를 통해 입양률을 높입니다.

세부공약

- 대형마트, 동물병원, 애견 숍 동물유통판매금지 조례 제정 : 휴일도 노후도 보장받지 못하는 전시동물들,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는 대형마트의 동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지자체 조례로 동물유통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합니다.
- 파피밀 관련 산업 규제 조례 제정, 유통허가제 실시, 관리 강화 : 반려동물 번식업 및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판매업 및 번식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무등록업소를 단속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센터 관리 강화와 유기동물 구조시스템 마련 : 동물보호센터는 직영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감시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기동물이 식용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유실동물의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유기동물 구조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동물보건소 운영 : 시군구 단위 동물보건소 운영하여 기초접종 및 등록제를 전담하게 합니다. 보건소는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민간영역에서도 마포에서는 마포우리동물병원 생명협동조합과 같이 협동조합형 동물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입양센터 운영 : 동물보호센터들이 구조와 입양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에서 구조와 입양을 분리합니다. 유기되어 보건소에서 기본 접종 및 치료가 끝난 동물을 보살피며, 입양 활성화로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례로 서울시는 과천 서울대공원에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3.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내용

-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동물들이 학대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신규 동물원 설립을 억제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세부공약

- 열악한 동물원 시설개선 방안 마련 :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동물 복지를 개선합니다. 동물원 예산 확충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동물 고유의 생태를 고려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번식 및 개체 관리를 위해 소유, 양도, 판매, 폐사 기록을 공개합니다. 동물전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동물 체험 시설을 규제하고 동물 학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4. 동물복지농장 확대와 지원

내용

- 동물복지 농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7일 전북고창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3월초 현재 약 700만 이상의 닭과 오리가 죽었습니다. 녹색당은 감염되지도 않은 생명을 죽이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 정부는 국내 첫 동물복지축산농가인 충북 음성 동일농장이 AI 확진 농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녹색당은 조류인플루엔자의 근본원인은 공장식 축산이며, 동일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당은 공장식 대량축산 방식을 반대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 농장을 확산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 세부공약

-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장려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공공기관 식당의 동물복지축산물 사용 의무화 제도를 마련합니다.

정책 3 주거/생활환경 공약

"햇볕 드는 집,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

정책의 필요성

- 주택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①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주거에 대한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점유의 법적 보장. 점유는 임차(공공/민간), 협동조합주택, 리스, 자가, 긴급주거 및 토지 또는 건물 점거를 포함한 비공식적 정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점유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 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현재 점유가 불안정한 개인 및 집단과 성실한 협의 하에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 서비스, 물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요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저장수단, 폐기물 처리시설, 긴급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담가능성. 당사국은 주택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여러 유형과 여러 수준의 주택 금융 뿐 아니라 부담 가능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주택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점유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거주가능성. 적절한 주거는 거주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 구조적 위해, 해충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세계보건기구가 작성한 주거의 건강 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는 주거 및 생활 여건은 항상 높은 사망률과 유병률로 이어진다.

○ 이용가능성. 취약계층들도 적절한 주거자원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아동, 신체장애인, 불치병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환자,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자연재해의 피해자, 재해 다발 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주거영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 위치. 적절한 주거공간은 직장, 의료서비스 기관, 학교, 탁아시설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오염지역이나 거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원에 근접된 지역에 주택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 문화적 적절성. 주택 건축방법, 사용되는 건축 자재, 이들의 근거가 되는 정책들은 문화정체성과 주택 다양성이 적절히 표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책의 목표

- (사회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의 권리가 존중 · 보호 · 실현되도록 합니다.
- (지속가능성)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지향합니다.
- (풀뿌리민주주의)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주택부문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2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적정주거 보장

- 내용
  - 우리나라의 전체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0%(2012년)(OECD평균 11.5%(2007년), 영국 17.5%(2010년), 프랑스 17.0%(2005년), 일본 6.1%(2008년), 미국 1.0%(2009년))에 불과하고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높은 주택가격과 극심한 전/월세 임대료 상승으로 저소득층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전세가격 연평균 변동률: 3,9%(91~97년)→5.0%(00~08년)→6.6%(09~13년)
  - 전세거주비중은 2000년 28.2%에서 2010년 21.7%로 감소하고 월세거주비중은 동기간에 14.8%에서 21.5%로 증가
  - 서울의 경우 소득 1분위 저소득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32.3%

◉ 세부공약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 민간토지임차형 및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도입
- 장기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국고지원 현실화
-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개선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다가구 전세임대주택 주택기준 보완
-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
- 고령자와 장애인용 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주택바우처 지원 확대
- 집수리 사업 보완(소득기준 완화, 주택 내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시설개조 지원,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지원)
-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
- 소년소녀가정,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전세지원 확대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공공사업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소형주택공급 확대
- 도시환경정비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거기준 강화 및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홍보 강화

- 준주택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 물리적 주거공간에 대한 적정기준 상향
- 신규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유도
- 독거노인, 치매노인, 홀로 남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센터 설치

주요정책 2.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지원 강화

◉ 내용

- 노숙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이 취약하고 퇴거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적절한 주거의 기준으로 삼기에 매우 부족하며, 그 기준조차 미달한 가구가 2010년 184만 가구(10.6%)에 달합니다(한국과 유사한 기준을 가진

일본의 경우 2008년 4.3%). 따라서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을 위한 최소생활환경의 질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민 대상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전세임대주택 지원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내실화

- 쪽방상담소 역량 강화
- 쪽방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쪽방촌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및 공동작업장 지원 확대
- 쪽방 재임대사업 : 기존 쪽방 · 고시원 건물을 임차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확대

노숙인(가족 재결합 · 주거독립 준비자 등) 주거안정 지원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확보 및 입주 지원
- 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
- 노숙인 실태 입소 생활시설 개선과 일자리 연계강화

주요정책 3. 정의롭고 인간적인 주거권 실현

● 내용

- 용산참사를 겪은 지 4년이 지났지만 개발 사업에서의 원주민과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없습니다. 퇴거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대책은 미약하고, 용산참사에서 문제가 된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재정착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롭고 인간적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세입자 주거권 강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활성화
-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지원 확대
-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지원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 명도소송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상시 이주 및 철거현황 모니터링 실시

- 동절기 철거 원칙적 금지
-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 · 운영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주요정책 4. 녹색주택 확대

내용

-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60%이상이 건물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에너지를 덜 쓰고, 빗물을 활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녹색건축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부공약

건축물에너지 총량제 추진

-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설정
-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친환경 · 고효율 주택건설 확대

- 공동주택 단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확대
- 신규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확대 시행
- 창문 효율 개선, LED 보급 활성화를 통한 조명효율 개선
-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 옥상 및 벽면녹화 확대

주요정책 5.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내용

-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형성을 통한 안전망 구축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갑니다.

세부공약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 장애인 자립 마을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커뮤니티 보육시설 확대

공동체토지신탁

- 임대주택 및 소형분양주택들을 개발할 때, 또는 국공유지 등의 자산을 민간에 이양할 때, 공동체토지신탁 방식을 도입
- 지역시민/해당거주민/공공전문가 등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비영리조직이 토지를 영구히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보존하면서, 지속적인 소형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재생 및 지역 비지니스 활성화에 활용

녹색당 생활환경 공약

정책의 필요성

- 쾌적한 생활환경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보건정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공기, 쾌적한 공원과 산책로를 제공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구와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지역을 살기 좋게 가꾸는 일이 곧 새로운 도시개발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시민들이 생활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풀뿌리 역량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용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위탁 등 처리비용으로만 8,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한 채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는 자원은 연간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재활용 산업은 1조 7천억 원 규모로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책의 목표

- 녹색당의 생활환경 정책은 건강하고,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를 과밀하게 하거나 팽창시키는 개발정책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을 제시합니다.
- 생활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꿉니다. 생물다양성이 높은 건강한 녹지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공기와 물을 맑게 하고 독성물질 등을 사라지게 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 생활환경 정책은 주민의 의견과 참여로 만들고 실천하여 주민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주민의 환경보전 활동과 민관협력을 촉진합니다.
- 조례와 제도, 예산으로 생활환경 정책을 뒷받침합니다.

생활환경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4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관리 강화

내용

- 어린이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어른에 비해 민감하며, 건강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한 역학조사 실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세부 공약

- 아동, 청소년 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 어린이집과 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아동, 청소년 시설의 실내공기질(휘발성유기화합물(VOC), 부유세균, 미세먼지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개선합니다. 치명적인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물과 아동, 청소년 시설의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을 제거합니다.
-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강화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활동 자제, 문자 서비스 등으로 정보를 공개합니다(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시).
- 학교 인조잔디 조성 금지 :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시성 사업으로 벌이기 쉬운 인조잔디는 아토피 유발, 여름 화상 위험, 파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학부모들과 추진 당국을 설득해 사업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와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생태놀이터 : 폐타이어를 활용한 놀이터 매트는 인조잔디처럼 질병 유발, 화상 위험을 안고 있으며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저해합니다. 흙, 나무, 돌 같은 자연적 재료를 이용해 놀이터를 구성하며 이 과정에서 기획은 물론 조성작업에까지 인근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겠습니다.
- 주택가 내 카센터 입점 금지 : 과천시는 주거지에 카센터 입점이 늘고 소음과 휘발성 화합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어나자 2011년 6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고시"를 통해 주택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주변 1km, 공원, 하천 주변 2km 이내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주요정책 2. 공원 농약 사용 금지와 유해 방역약품 사용 금지

- 내용
  - 공원녹지와 방역약품에 만코제브, 카바메이트, 뷰프로페진, 비펜스린 등 발암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암물질을 함유한 약품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생활 주변 살충제, 제초제, 소독약품 등 독성물질 추방 : 가로수, 공원 등 생활 주변에 뿌리는 살충제, 제초제의 성분을 조사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물질을 없애겠습니다. 약품 정보를 공개하고 친환경적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이센엠-45, 카바메이트, 비펜스린, 퍼메트린 등 발암성분 든 농약과 꿀벌집단폐사의 원인이 되는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니아니딘을 공원녹지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모기 살충이 목적이지만 효과 없이 전시행정으로 되풀이되는 연막 소독을 폐지하고, 방역약품에서 비펜스린, 퍼메트린 등 환경호르몬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내포한 약품을 추방하겠습니다.
  - 생태적 방충 대안 활용 : 유충이나 알이 밀집한 가지를 잘라 소각하기, 짚을 통해 해충 유인, 인위적 해충 서식처 마련과 천적 이용, 친환경 유기농자재 이용, 불빛으로 나방 유인해 포획하기 등 생태적 방충 대안을 활용하겠습니다.

주요정책 3. 안전하고 걷기 좋은 골목 만들기

- 내용
  - 현재 100인 이상 보육시설만 스쿨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집은 소규모 운영되고 있어 스쿨존 설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을 확대하고, 통학 길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어린이집 스쿨존 확대 : 스쿨존이 주로 학교 부근에 조성되어 있고 보육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스쿨존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자체가 경찰당국과 협력해 보육시설 부근 스쿨존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태양광 LED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서울시 동대문구는 올해 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172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태양광 LED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하겠습니다.

- 통학 길 전수 조사 : 학교 앞 스쿨존뿐만 아니라 통학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교통 안전물 설치 작업을 벌여 어린이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정책 4. 생쓰레기 분리수거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내용

- 현재 음식물쓰레기 중 57%는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30%는 먹고 남긴 음식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위탁 등 처리 비용으로만 8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고 부패와 악취가 수반되기 때문에 매립, 소각을 할 경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쓰레기를 적극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 퇴비화 및 사료화하겠습니다.

세부공약

- 생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실시 : 생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절감하여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쓰레기를 수거해 지역 텃밭의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단 구성 :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대표, 시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적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 폐기물 관리업무 개선 : 폐기물 관리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며, 직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설관리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이 폐기물 수거 사업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 사기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갈취할 경우 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계약서 및 조례 등에 명시하고, 업체가 반드시 환경미화원 고용을 유지 및 승계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요정책 5. 시민 정원사와 시민 농사꾼이 만드는 녹색도시

- 내용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인공적 조경관리가 아닌, 생태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 조경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원사가 되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해 녹색도시를 만들어갑니다.
- 세부공약
  - 공원과 녹지 관리에 시민 참여 촉진 :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 조경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행정, 전문가, 지역 농민, 조경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 텃밭을 녹지와 조경 활용 : 도시농업학교, 원예교실, 시민 정원사 과정 등을 개설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텃밭이 도시의 녹지와 조경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책 4

도시계획 · 교통 공약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2%를 넘어서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정책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기존 도시정책은 부동산 개발, 산업단지나 교통인프라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이해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생태적 수용력, 시민들의 복지와 인권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컨대, 2012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자산은 거주주택 38.2%,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31.2%, 저축액 17.9%, 전·월세보증금 7.0%,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 5.1%로 구성되어 있어서 압도적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2012년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 발표한 '2012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Living Planet Report 2012)' 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1인당 생태발자국은 4.6헥타르입니다. 이는 세계 149개국 가운데 29번째 순위입니다. 1인당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은 각국 국민 한사람의 일상생활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로 세계 평균 2.7헥타르에 비해 1.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토가 과도한 개발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도시가 개발되는 방향과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부족해 도시개발이 시민들의 삶과 분리된 채 정해지고 부동산 투기와 개발이익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도 개발에 필요한 자원으로만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무한하게 공급될 것처럼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폐기물을 생산해왔습니다.
- 그 결과 도시는 삶을 담아내는 공간, 자연과 공생하는 공간에서 멀어졌으며, 에너지와 물,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는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도시개발,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녹색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의 목표

- 도시계획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참여와 책임이 동반된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 생태발자국을 크게 만드는 부동산 개발보다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진행합니다.
- 녹지를 확대하고, 농지를 확보하며, 도시농업을 활성화 합니다.
-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의 이동이 자유롭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권을 확대합니다. 농촌의 불편한 대중교통을 개선해 교통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녹색전환 도시를 만듭니다.

난개발방지 · 도시계획 · 교통(5대 주요정책, 1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만들기

- 내용
  -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및 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계위 위원명단을 상시 공개한 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에 불과했습니다. 회의록을 상시 공개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계위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평균 7%, 기초자치단체 평균 20%에 해당하는 도계위원들이 엔지니어링, 건설사, 건축사무소 등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이 점령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특혜로부터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세부공약
  - 도계위 투명성 강화: 밀실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도계위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하는 도계위가 되도록 입법화하겠습니다. 제척, 회피제도를 강화해 도계위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도계위 책임성 강화: 도시 계획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표결제 도입, 도계위 위원의 명단 및 소속 상시 공개, 회의록, 심의 결과 공개 등을 통해 도계위가 로비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도계위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실명표

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지구 지정, 해제 등 시의 모든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위원별 찬반 표결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명표결제는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도계위 위원 중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특정 이익집단에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에는 손해를 안긴 행위가 적발될 경우대가성 입증여부와 관련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 규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도계위의 상설화와 현장성 강화: 비상설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로 상설 설치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갈등 소지가 많은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심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도시 공원과 녹지 확보

내용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8.09㎡입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18.6㎡에 이르고, 프랑스 파리도 11.6㎡입니다.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은 1인당 공원 면적이 각각 26.9㎡, 27.9㎡에 달합니다.
- 국내 도시들은 공원 부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원 부지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결정 기준으로만 보면 20.02㎡에 달하지만 미집행률이 59.6%나 됩니다.
- 2020년에 공원일몰제(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공원 용지가 일제히 택지로 바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실행의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부공약

-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방안 마련 : 장기간 토지규제를 받은 토지나 미집행 시설 토지 등을 공원이나 녹지로 전환하기 위해 환지방식 등을 적용하여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합니다.
- 도시올레길 : 도시 올레길, 테마가 있는 산책로 개발 등 도시 내 생태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대합니다.

주요정책 3. 생태교통 확대와 농촌 교통격차 해소

내용

-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전체 간선도로망의 1/6이 혼잡구간으로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23.7조원으로 (혼잡구간 : '91년 1,770㎞ → '03년 2,907㎞) 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 교통혼잡 비용(조원) : ('94)10.0 →('96)15.9→('99)17.1→('02)22.1→('05)23.7
- 자동차 위주의 도로 구성으로 자전거 등 생태교통 이용이 저조합니다. 자전거는 강변 공간 정도에서 주로 레져용으로 이용될 뿐이며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2% 밖에 안됩니다.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10%로만 올려도 유류절약 효과 연간 1조9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거리대비 도시보다 비싼 교통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대비 요금제는 농촌생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농촌지역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부공약

-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대중교통 확대 : 혼잡통행료제도 징수, 차없는 거리 확대, 자동차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 정책을 마련합니다.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확충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반영합니다.
- 생태교통 보급 장기계획의 수립과 개선 : 생태교통 보급 장기 계획 수립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자전거 관련 조례 제정 및 공공자전거 제도를 도입합니다. 수원시는 생태교통 페스티발을 통해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적이고 탄소배출이 적은 교통수단의 확대를 지원하고, 생태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심에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의 수립 및 추진: 레저용이 아니라 도심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편리를 고려한 도로 설계와 구축이 절실합니다.

-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마중버스,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 홍천군, 청양군, 괴산군, 당진시에서는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요금제가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지형적 특색을 고려하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아산시에는 소형버스를 마을버스처럼 운영하는'마중버스'가 있습니다. 작은 버스를 운행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 원하는 시간에 많은 차량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마중버스는 대형버스 운영비의 32%수준). 아산시의 '마중택시'는 소형버스도 다니기 힘든 마을을 대상으로 택시를 이용해 버스정류장까지 오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승객은 버스요금만 지불하고 추가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전남 신안군은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07년부터 민간이 운영하던 버스회사들을 매입해 2013년5월까지 전체 읍면에서 버스완전공영제를 완성했습니다(신안군이 운영하는 버스는 총 40대입니다). 군에서 직접운영하면서 인건비와 관리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버스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주민편익위주의 노선을 운영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버스 이용은 늘어났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버스완전공영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주요정책 4. 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내용

- 우리나라 특·광역시 지역의 전체 행정구역 면적 중에서 농지(전, 답, 과수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8.8%였으나, 2011년 16.5%로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특·광역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174.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농지(전, 답)는 76.76㎢로 전체 감소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와 농촌의 괴리로 인해 먹거리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과 저소득층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부공약

- 도시농업의 토지 확보 및 확대: 그린벨트 해제 및 농지전용 최대 억제, 도시 내 버려진 자투리땅, 공한지, 유휴지, 하천부지 등을 정밀 조사해 농업 가능지역을 경작지로 활용합니다.
- 도시농업 다층거버넌스 형성 및 운용: 도시농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시민단체, 비영리

법인, 농업인 조직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도시농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넓히고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자체 행정부서 내 도시농업 관련 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협력합니다.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복지 정책: 도시생태농업 실태 조사, 교육 지원 사업, 도시농업을 위한 농지 확보, 도시농업운영에서 시민단체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노인과 빈곤가정에 무상으로 텃밭을 분양해 혜택을 나눕니다.

주요정책 5. 기후변화와 재해에 안전한 도시

내용

- 지난 10년(2002-2010)간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홍수 피해액은 전체 피해액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연재해 피해액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도시지역은 높은 불투수율(전 국토 면적 중에서 수계와 임야를 제외하면 불투수면적률은 전 국토의 22.4%), 도시 확장에 따른 취약지역 개발, 강우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취약 등으로 인해 대형화되는 홍수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강우일수는 줄어드는 대신에 강우량은 늘어나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재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부공약

- 재해 예경보 시스템 강화 : 지자체내의 재해 대비 예 · 경보 체계간 연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비를 지원합니다.
- 방재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 광역차원에서는 방재지역-광역도시계획-도 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계시켜 상 · 하류 지자체 개발 및 방재사업 수행에 따른 유기적 영향관계, 광역차원의 공간방재구축방향 등 거시적 차원에서의 공간계획과 방재계획을 연계합니다. 지구차원에서는 방재지구 - 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시 · 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계시킨 지구차원의 통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문별 계획수립 방법 및 재원확보, 단계별 ·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시민이 참여 방재대책 :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여 수정함으로써 재해방지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 나갑니다.

정책 5

먹거리 공약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겠습니다"

정책의 필요성

- 먹거리의 공급체계가 세계화, 산업화되면서 식품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학첨가물, 유전자조작식품, 공장식 축산의 부작용,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기술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오염이 최근 새로운 먹거리 위해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 식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밥상에 오르기까지 식품안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업체 영업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검증을 통해 위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급식의 질적 향상과 관리 강화,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범위 확대, 식생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리를 축소하고 통합·연계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 직판장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의 목표

-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자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 보장,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등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 개념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0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과 시행

- 내용
  -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합니다. 녹색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세부공약

지역별 시민참여형 식품방사능안전감시센터 설립 추진

- 방사능안전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여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참고) 울산 북구청은 무상급식 전반을 책임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방사능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겸하도록 하는 등 식품방사능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 각 시도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식품 방사능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참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민대상 국내유통식품 방사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기준 강화 및 상시 오염도 측정(방사능 등)
- 일본산 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체계 및 시스템의 구축
- 국내 핵발전소 인근 해역과 어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정밀 조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 · 개정과 실행 추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청(소)년들의 위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역체계를 수립합니다.
- 학교급식조례의 제 · 개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 · 공공급식까지 식품방사능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의 제정 및 시행을 확대합니다.
- 일본산 식품의 학교 등 급식 사용을 배제하고 방사성 물질 함량 측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 · 시스템을 마련하며 시민감시위원회 구성, 영유아~청소년 급식에 대한 방사능 관리 기준치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합니다. 더불어 방사능 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식품에 대한 대체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 방사능 농축과정에서 2차 오염이 예상되고 종자 등 화훼 · 비료 · 사료 등의 경우 무분별하게 검사 없이 들어오고 있어, 관련 항목에 대한 일본산 방사능검사 실시와 국내산에 대한 검사 · 관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 급식전달체계 내, 수산물 이력제의 제도화와 수산물 원산지 감시 · 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생산 · 유통업 피해 최소화

- 방사능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도와 무관하게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시 생산 및 유통업자 등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방사능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자발적 참여 지원 및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출 시 제도적 보상과 품종 전환 등 특별지원책 마련합니다.
- 식품 관련 생산 · 유통업자에 대한 방사능식품위험성 교육 의무화,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 5인 이상 지원시스템 등을 이용, 방사능안전식품협동조합을 만들어 방사능식품검사체계를 갖추고 로컬푸드(지역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지역사회 시민참여형 먹거리 안정망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정책 2. 유전자조작(GMO), 식품첨가물로부터 안전한 밥상

내용

- 우리나라는 GMO 재배 상용화를 허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작물 전부가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이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47곳에서 GMO 작물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iv), 국립환경과학원)
- GMO란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일컫는 말로 상품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한 작물 또는 식품을 말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함량 순위로 따져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이하일 경우에도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식품업체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의 GMO를 사용하면 GMO가 들어갔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작물 가운데 7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점과 당국의 관련 정보 비공개로 어떤 기업이 식용 GMO를 얼마나 수입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밀의 경우, 우리나라는 98.3%를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50%는 미국산으로, 2013년 5월말 미국 오레곤주의 GM 밀(몬산토가 개발, 2004년 USDA 미승인 품목)이 수입되었음을 미 농무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 이처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GMO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GMO수입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식약처가 GMO 수입 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차단되고 있습니다.

- 특히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침이나 기준 및 권고사항 조차도 없습니다.

● 세부공약

GMO와 첨가물로부터 안전한 안심먹거리 지원정책

-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확대에 관한 '식품법' 개정 요구
- GMO 자생 실태에 대한 점검과 수입 GMO에 대한 상시조사 및 체계
-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 상관없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 식품관련 위법자 가중처벌 및 식품안전 기준 강화
- 저소득층과 어린이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
-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을 체계화
- 지역단위의 식품안전 정보 구축 및 소통 시스템 활성화
-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의 확대

주요정책 3.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동행

● 내용

- 농업과 생태위기 등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여러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을 장려해 왔습니다.
- 이를 통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가 먹는 밥이 농민, 농촌, 농업이 없다면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도시농업은 여전히 고지가, 농지전용, 농지 임대차 등에 의한 경영불안, 텃밭 공급부족(도시계획 공약 4번째 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참고 http://kgreens.org/89693)과 수입 상토와 시판 비료에 의존하는 소비적인 자원의 활용으로 도시의 토양 기능을 상실시키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을 경험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과 동시에 도시에 귀중한 자원인 빗물, 낙엽, 농산물 부산물, 음식물을 농사에 자원화 하는 도시순환 자립의 농사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흙과 물을 살리는 농사방법의 개선과 대안을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 확대 (지역 귀농자 지원, 농산물 나눔 장터 정례화) :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지원
- 공공텃밭 확보, 텃밭교육 및 텃밭보급을 담당할 '지역 텃밭센터' 설립 : 경작지 확보와 도시농업 실천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확대(조사, 연구 및 개발, 보급)
- 도시농업 공간 확충, 도시순환농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홍보강화
- 텃밭 이용자의 올바른 농사(도시의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적인 도시농업)교육
- 건물 옥상텃밭화 관련 법안 제정
- 학교에서 생태텃밭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농민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강화

주요정책 4. 마땅히 누려야할 먹거리 기본권 향상

◉ 내용

- 지난해 녹색당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집급식 수산물원산지를 파악하는 곳이 겨우 3곳뿐이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우려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점검은 부실한 상태입니다.
-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먹거리도 사회적 차별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권은 지역에서부터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녹색당은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능력(로컬푸드 장려)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질 좋은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세부공약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 학교 급식 식재료는 로컬푸드(지역농산물) 공급을 장려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비 사용실태 공개 (급식비 사용 비율 중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및 원산지 표시 공개)
-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재료 원산지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원산지 표시 공개를 권고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 학교, 군대, 교도소, 시설, 병원, 공장 등 단체급식의 채식매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 추구권과 선택권을 보장
- 우유 강제 급식을 금지하고 두유 선택권 보장
- 제철음식과 로컬푸드(지역농산물)을 채식식단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에 인센티브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 최소한의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소득 보장
- 기초 및 광역 공공급식 지원센터 지원
- 취약계층 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취약시설 급식관리 강화
- 저소득층 노인무료급식 프로그램 개선
- 꿈나무 카드(결식아동 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가맹 식당 지원 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
- 올바른 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6

농업 공약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녹색당 농업정책의 의미

- 농업의 위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지와 농민과 농촌사회의 심각성을 나열합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농업'과 '농민'에 빌붙어 밥벌이 하는 전문가들의 장난질이 심하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농정의 고위 담당자이기도 해서입니다.
- 나라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지방정부도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 구태의연한 문제의 나열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 농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사고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여러 통계지표들이 전문가들의 이런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슨 말을 들어도 암담하기만 한 게 농업현실입니다. 익숙한 호들갑에 불과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가공과 서비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6차 산업 전략은 1차 산업에서 고생은 농민이 하고 나머지는 공업자본의 몫으로 될 공산이 큽니다. 쏟아지는 각종 농민 지원금은 금융자본의 배를 불릴 것입니다.
- 녹색당은 농민 기본소득제를 주장합니다. 재원 마련방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발상의 바탕에는 바른 농업은 사회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 녹색당은 우선 그 실현의 주체와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허공에 삿대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청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 스스로 주장하는 바대로 살고, 그 삶의 공동체를 마을과 지역에서 구축하며 지방정부와 국가 정책으로까지 채택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의 목표

- 기본농지 : 농지를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민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농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하여 농지가 절대 사적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 건강농민 : 농촌의 생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통, 난방, 의료, 농업에너지 부문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촌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민들도 도시적 소비의 유혹을 넘어서서 몸의 건강 뿐 아니라 따뜻한 농촌공동체의 구성으로 삶 전반의 건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식량농정 : 농정의 핵심은 식량자급입니다. 더 나아가 곡물자급입니다. 그것도 친환경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양가만 높은 쓰레기만도 못한 먹을거리들을 다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환경귀농 : 적극적인 귀농정책으로 농업인구를 늘립니다. 이는 소농정책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농촌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와 꿈을 농촌에서 펼칠 수 있게 합니다. 귀농인들이 처음부터 못된 돈벌이 농사에 빠져들지 않도록 친환경 농사를 소개 합니다. 헛된 돈벌이 농사에 빠져 땅 망치고 자연 망치며 소비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귀농은 농민기본소득제와 맞물려 원활해 질 수 있습니다.
- 자립자치 : 자립하는 삶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농촌에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고,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원합니다.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분명해 지도록 농민 스스로 다양한 이익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도록 농업회의소나 면 단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합니다.

농업 주요정책과 세부 내용(5대 주요정책, 17개 세부공약)

주요정책 1. 기본농지의 확보

- 문제의식
  - 농지문제는 농지 규모문제, 소유문제, 질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축소와 반농업 시설의 건축이 아주 심각합니다. 농사지을 땅이 줄어드니 곡물자급률이 날로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땅마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은 화학약품 오염(복합오염)과 영양오염입니다. 우리 농지의 과다한 영양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시디,OECD)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 세부공약

농지 최소 유지를 법률로 강제

- 국가단위와 광역지방정부 단위에서 각각 농지의 최소 유지 규모를 법률로 제정
- 최소 규모라 함은 연차별 곡물자급률 달성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음
- 농지 전용을 엄격히 통제. 농지전용부담금 상향 조정

토지공개념의 도입

- 비 농업인의 농지 소유 엄격 제한과 농민소유 강화
- 농가 가족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농지의 무상 임대 확대
-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 기업농에서 가족소농으로 농지은행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농지관리체계 강화
- 다양한 농업공동체와 농지은행의 농지 소유 확대
- 절대농지의 국가매입과 가격 동결

농지 오염 방지

- 농기계 사용과 시설농업의 제한으로 농지오염 방지
- 농지소유의 상한선 설정하여 토지 집중과 무분별한 단작대량재배 억제

주요정책 2. 건강농민 유지

문제의식

- 우리나라 농민은 절대인구 감소, 노령화, 소득감소, 건강과 교통, 복지 등 생활권 취약, 농가부채 등이 전통적인 과제로 거론됩니다. 소득 감소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도농소득 격차는 매년 커져 10년 사이에 97%에서 69%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농농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상하위 20% 소득인구의 소득격차를 비교하는 5분위 소득비율이 도시는 5.8배인데 비해 농촌은 12.1배입니다. 10년 전에는 6.3배였으니 두 배가량 더 벌어진 것입니다.
-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은 3배, 농가부채는 6배 증가했습니다. 이 나라 농업정책의 산물입니다. 농민 소득의 불안정은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탄력적이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여기에 농촌의 도시 모방소비풍조의 문제, 농민들의 농민의식 상실 문제까지 다룹니다. 건강한 농민이 농업의 중심입니다.

세부공약

농민기본소득제의 실시

- 농업의 공공재 역할을 실현하는 농민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장
- 각종 급여성 농업지원금 통합
- 도시인구의 농업 이전 촉진

농가 소득 보장

-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 쌀 목표가격 인상
- 각종 직불금 확대 - 조건불리, 경관조성, 밭직불금, 친환경 등
- 국민연금 지원 대상 기준소득금액 인상(현행 8만 5천원)

소농의 육성

- 소농은 안전한 식량 공급의 원천이므로 자연재배와 유기재배를 지원
- 기본소득제의 우선 시범 적용
- 소농 개념 정립 : 소규모, 인력과 축력, 비동력 농기계나 소형동력 농기계 중심
- 여성 농민 육성

착한 소비와 농촌복지의 확대

- 친환경 제품의 농민소비 지원
- 농민 소비재 면세 대상 확대
-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마중버스,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 농촌지역의 버스는 낡은데다 배차간격이 길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홍천군, 청양군, 괴산군, 당진시에서는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요금제가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지형적 특색을 고려하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산시에는 소형버스를 마을버스처럼 운영하는 '마중버스'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참고 : 녹색당 도시계획·교통 공약)
- 농가주택 난방대책 : 농촌의 높은 난방요금은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폐지해서 등유로 난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소세 폐지는 중앙정부의 결정권한이므로 지자체에서는 낡은 주택에 대한 단열 개선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농촌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보조난방기구 활용과 더불어 소형태양광과 태양열온수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주군에서는 농촌에 적합한 〈로컬에너지〉정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3. 식량농정

문제의식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자동차 삶아서 먹을

수는 없다'는 말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농식품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정한 2015년의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9%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실적은 22.3%입니다.

끔찍한 이 결과치에 정부는 눈도 꿈쩍 않고 한-캐나다 에프티에이를 졸속 체결하더니 한-중에프티에이도 강행할 태세입니다. 식량자급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놓고도 이에 역행하는 농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축산만 커지고 있습니다. 농정부처 이름도 농'축산'식품부로 바꿔버렸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대량 살육을 일삼는 밀집축산은 국토를 해치고 사람의 건강마저 해칩니다.

농업부문 전문 관료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면서 각종 농업기구를 순회하며 수십 년간 이 나라 농업을 절단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경제연구원의 전임연구원이 버젓이 정부기관에 파견되듯이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의한 대한민국 농정은 농촌사회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오늘날 농촌현실은 이런 농정의 산물입니다.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큰 틀을 시급히 만들 때입니다. 고투입방식의 자원고갈형 단작농업에서 저투입방식의 자원보전형 생태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농업 수취형 이득산업의 이익반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은 그 이득의 일정 비율을 농업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비닐,농기계,석유,유통,식품업,각종 운반수단, 기타 농자재 산업의 농업기여 납부제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제도를 농업먹거리특위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세부공약

식량자급 순차적 실현

- 농산물 수입의 엄격 제한 - 쌀 관세화 유예
- 친환경 자급 농산물 순위제 실시
- 농사 씨앗보호와 자가 채종 토종씨앗 보전
- 쌀 100% 자급 실현을 위한 논 직불금 조건 완화

석유의존 농사의 극복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날로 심화되는 농사방법 극복
- 생태조화 자연재배 농법의 보급과 개발
- 자연재배와 유기재배 소농 적극 지원
- 건강한 밥상의 기본전제가 되는 식품의 이동거리제한제도 도입
- 적정농사기술의 개발

육식산업과 빌딩 · 시설농업에 대한 환경대책 마련

- 지역별 농사 부산물량 기준 및 지역 환경 수용 이내의 축산규모제 도입, 축산, 도축 등 육식산업에 환경부담금 부과 검토
- 축산농가 전업 지원제 실시
- 빌딩농업과 시설유리온실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마련

협동적 생산체계 구축

- 생산과 소비의 지역화 체계 구축
- 품목별 광역 영농조합 구성 권장

주요정책 4. 환경귀농

문제의식

- 귀농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가는 귀농자 수에 언론이 주목합니다. 어떤 이는 문명의 전환 징후라고 하기도 합니다. 농촌과 농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태순환의 환경귀농이 되도록 안내 해야 할 것입니다.
- 이미 지탱 할 수 있는 임계점에 이른 우리의 농촌은 도시의 생활습관과 도시의 소비방식이 이전되어서는 감당 불가능합니다. 농촌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또 다른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도록, 시설 투자비가 싼 지역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환경생태 인식으로 귀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은 환경농업 종사자와 단순 비농업분야 종사자가 구별되어 선택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착에 필요한 농사지을 땅과 집을 빠르게 알선하고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 젊은이들의 귀농이 유리하도록 농촌에 젊은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결혼과 출산이 용이하도록 육아지원과 교육기반의 확충이 있어야겠습니다. 일률적인 제도화 보다는 최근 귀농인들의 지향에 맞게 자율적인 가정학습과 자연교육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의 교통문제, 주거문제, 대기문제 등의 해결에도 귀농정책은 유효합니다.

세부공약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지원

- 귀농교육 기관 지원. 분야별, 지역별, 작목별 교육으로 분화
- 귀농 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멘토링 제도 확충
- 청년귀농 전문 기관 설립
- 각 지자체 귀농지원센터간의 연계

- 출향인 초청행사를 통해 귀향 촉진

귀농인의 생태정착 지원

- 귀농자의 조직화 지원 : 귀농자 개인보다 귀농단체의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생태농업 교육 지원딱지 발급
- 귀농 농가의 가족수에 따른 지원 차등화

토착민과 귀농인의 유대화합 지원

- 토착민과 귀농인의 지속적인 공동사업 지원 - 친목, 전문영역, 영농 등
- 단발성 공동행사 후원

주요정책 5. 자립자치

문제의식

-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나서 그 역사가 25년에 이르지만 여전히 새로운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훨씬 심각합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이 취약한 농촌은 시민단체도 언론도 없기에 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 비리가 일상화 된 형국입니다.
- 농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기본권 강화, 지역 정부의 재량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원과 보조에 의존하다 보면 자립능력이 자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치와 자립역량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 생활형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민생활 밀착형 마을언론 설립, 지역 교육네트워크의 구성, 학교 및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에 친환경지역 농산물 공급구조 마련 등이 다 자치와 자립의 영역입니다.

세부공약

농촌공동체 구성과 운영 지원

- 각종 농업형 협동조합의 설립지원과 운영지원
- 자발적인 주민자치 조직 육성
- 농민의 집과 주민 자치 단위 만들기. 농민의 집을 거점으로 식.의.주.의료.교육,학습 등 여러 주민자치 단위 구성 및 연대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컨텐츠 개발보급
-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지역활성화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농업회의소 등)

읍·면의 자치권 강화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 읍.면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5.16. 군사쿠

데타 이전에는 시.읍.면 자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동네 이장도 주민이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의 조례가 면장에게 임면권을 주고 있어서입니다. 주민은 마을투표를 할지언정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취미교실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행되게 해야 합니다.

지역 협치

- 농업회의소 전국 확대와 바른 운영지원
-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청구 등 '주민기본권' 보장
- 주민 자발적 마을언론 매체 창간과 운영 지원
- 농민이 자긍심과 보람을 키우는 자치조직 구축
- 농촌에 사는 노인농민 지원 방안 수립

정책 7

경제 · 노동 공약

"동네에서 먹고 살자"

정책의 필요성

- 대형토건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경제를 유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자체마다 공단유치를 목표로 걸었지만 비어있는 공장부지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대형 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의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북돋기 위한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밀려나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노동은 생활의 물질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가 어떤 노동을 지향하는가는 그 사회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맺어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사회의 노동의 실태는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게 됩니다.
- 2013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임금노동자 중 45.9%인 837만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5.9%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5.5%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성차별과 고용차별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6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습니다. 그 만큼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의 수치들은 한국의 노동(일자리)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구하는 정부는 있어도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는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노동' 문제를 '경제'의 하위변수로만 생각해왔고, 성장 이데올로기 앞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고, 노동자 스스로가 경영자 정체성을 자기 내면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왜곡된 노동을 바로잡는 일은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지향하는 녹색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여유를 회복해 다시금 노동이 즐거운 사회, 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목표

-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단위 마을단위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노동인권도시' 선언,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명확하게 지역민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고용하고 있거나,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의 일자리를 개선하겠습니다.
- 공공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하겠습니다.

경제·노동·일자리(6대 주요정책, 2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대형마트 동네 진입금지와 상가임차인보호 제도 마련

- 문제의식
  - 동네에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은 무너집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법 때문에 임차인은 늘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네에서 먹고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서울 시내 상가 임대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임대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 보장기간(5년)의 3분의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임대료가 계속 오르면서 기반을 잡자마자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 됩니다.

- 세부공약

대형할인마트 입점 규제 강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대형할인마트가 동네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 동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호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포가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서 1~2년 재계약마다 임대료를 크게 올립니다. 임차인인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내보내도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많은 투자비를 이미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 제도마련과 동시에 지자체와 상인, 건물주들이 상생협약을 맺는 사례를 확산해야 합니다. 서대문구와 신촌번영회는 '신촌 상권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유보하고 임차인은 바가지 상술, 호객행위 등 상권 활성화에 정해되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협약에 따라 9명의 건물주와 50여개의 상가가 상생을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상가 만들기, 에너지와 환경을 실천하는 상가 만들기 지원

- 문화가 있는 거리, 지역 색깔이 깃든 상가 만들기를 위해 상가번영회와 지역문화계, 지역 청년, 지역 예술인들 간의 소통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를 덜 쓰는 에너지효율가게 만들기, 태양광으로 전광판을 밝히는 가게 만들기, 재활용과 분리수거, 친환경제품을 활용하는 가게 만들기 등 상가들이 녹색가게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시간 영업, 야간 영업에 대한 규제 논의

- 24시간 영업은 노동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건강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과도하게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24시간 영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마을에서 자라나는 사회적 경제

문제의식

- 사회적 경제는 마을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경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조달의 수단으로 인식해왔기에 정부의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목표도 양적확대와 네트워크 강화 등 조직 확장에 치우쳐 있습니다.
- 협동조합이 3,000여개를 넘어서고 있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마을살림의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마을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제 몫을 하고, 지역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 및 세부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 또한 사회적 경제는 일상의 삶터에서 경험하고 체화되어야 하는 경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공급생태계 구축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제도화에 치중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녹색당은 국민들이 삶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가까이 하고, 사회적 경제가 주는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호혜와 연대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체감형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세부공약

통합전략 구축과 시민이 주도하는 장기 로드맵 제시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부처별로 나누어져 해당 부처의 목적달성에만 머물러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조직 일원화
- 민관이 함께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및 기본구상을 수립
- 광역, 자치구 단위의 세부계획 수립은 기본구상을 토대로 세부전략을 수립하되 시민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절차 제도화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 공공서비스 공급시스템을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위탁 확대
- 기존 행정업무의 관리위탁 수준에서 상호협력체제로 변화를 유도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 지역개발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시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 수립(Community Link와 같은 사회서비스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및 컨설팅 기관 육성)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자산이전 및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방식 도입
-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사회투자은행, 자산이전전문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지역사회 창업컨설팅 지원기관 등 민간 중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 이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공재산 물품관리법, 도시재생특별법 등을 개정
- 장기적으로 영국의 Localism Act와 같은 지역주권법 등을 제정하여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

사회투자 활성화

- 협동조합 기본법 상 제한되어 있는 금융협동조합 설립을 개방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투자은행 설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금조달 확대
- 마을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제도화 및 활성화 지원
- 주택도시기금의 지역개발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지원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기반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 투자/기부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세금감면 등 투자환경 조성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

- 마을뱅크 : 주민세의 일부를 마을은행에 저축하여 주민들이 마을의 이슈를 발견하고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마을 단위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
- 마을화폐 : 지역화폐 개념을 도입하여 마을기업과 마을가게 마을시설 등의 활용을 높이고 마을 내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경험을 제공
- 마을공유센터 : 마을 단위에서 공유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장비, 기술, 재능, 공간 등에 대한 공유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을 돕는 센터 설치. 마을화폐 활용 가능
- 마을자산은행 : 마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창업공간제공을 위한 마을자산은행을 설립하여 공동체소유권(Community Ownership)을 기반으로 자립기반 확보 및 참여의 장 확대

사회적 경제 학교 및 생활연구실 운영

- Learning by doing,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를 체험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마을학교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
-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거점화 : 지역재생을 통해 확보되는 커뮤니티 시설들의 활용방안 모색 차원에서 마을 단위의 사회적 경제 학교 설치 지원
-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며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교류 확대 및 모임 양성
- 마을의 이슈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마을연구실(living lab) 운영

주요정책 3. “노동인권도시” 선언

내용

- 노동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은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법률

제정을 통해 노동시장을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수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권한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세부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에 주요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차원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인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은 생활공간이자 동시에 일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세부 공약

"노동인권도시" 선언을 통해 지자체 책임을 명확화 하기

- 노동인권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토대로 "노동인권도시"임을 선언하고, 지역에서의 노동인권 수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을 명확화 한다.

노동인권센터 설립

- 노동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센터 설립을 통해 노동자들의 취업지원, 안전/보건, 복지, 쉼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활임금 도입

-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생활임금 개념을 적용해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공 발주 업무를 수탁하는 기업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늘리기 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원

-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들에 대해 지원금,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함.

지자체 차원의 노동사회 책임보고서 작성 및 지수 관리

- ISO 26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 중 노동관련 지표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지표를 관리한다. 해당 지역의 고용, 노사관계, 근로조건, 사회적 대화, 보건과 안전, 인적개발 및 훈련, 지역사회 등의 분야에 대해 세부지표를 수립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매년 보고서 작성하고 지역민들과 공유한다.

청소년/직장인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정례화 한다. 일노동인권교육을 청소년들의 직업탐구와 연계해서 건전한 노동· 직업의식을 갖도록 한다.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통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청소년 노동권리 향상 지원(지방노동청과 법준수 캠페인과 합동단속)

- 지자체는 지방노동청과 협력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준수〉 캠페인을 벌이고, 청소년 노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주요정책 4. 비정규직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내용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민간부문 못지않게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에 대해 비용절감이라는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을 뿐 공공성의 관점은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부문 스스로가 공공성의 가치를 외면할 때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좋은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 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모범 사용자'로서의 자기 책무이기도 하며, 지역의 기업들이 고용의 질을 높이도록 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세부 공약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 상시지속적 업무에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일용직을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직으로 전환한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 지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장만이 아닌 임금 등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근속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규직제로 편재한다(서울시 공무직 사례 참조)

간접고용의 직영화

- 청사 시설관리,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등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사용자로서 행동하거나 지자체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는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민간업자와의 오랜 결탁, 비효율적인 중복관리비용 지출 등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재활용

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 분류 및 처리 업무의 직영화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주요정책 5.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내용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3%대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매우 높습니다. 취업준비생, 취업포기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배제된 가운데 산출된 실업률은 현실과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광범위한 실업자군을 생각할 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하고 지자체도 이러한 과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을 더욱 왜곡시키는 방향으로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갈증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더욱 중시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세부 공약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녹색일자리,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햇빛발전소 등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지역민 의무 고용비율을 정해서 고용을 창출한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역 민관(노사정) 협의체 운영

- 지역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협약을 맺고 이에 따른 고용안정 기업을 양성함으로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실업자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선도하는 고용안정 기업에 고용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정책 6. 폐기물 관리 직영화 등 환경미화업무 공공성 강화

◉ 내용

- 지자체는 법령상 자신의 책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 및 처리, 가정 및 상가건물의 오폐수 수거업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십 수 년째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부당한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 거의 독점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기업은 쓰레기 무게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실제로 일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 지자체의 책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의 특별한 기술이나 고가의 장비를 구비해야만 가능한 사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온갖 비리를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 세부 공약

폐기물 수거 업무의 지자체 직영 또는 공영화

- 사기업체 위탁을 해도 독점사업인 폐기물 관리를 공공독점인 지자체 직영의 원칙에 의거한다. 최소한 현재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업무를 의무적 직영업무로 규정하고 위탁이 가능한 분야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 직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공영화 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를 규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직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설관리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이 폐기물 수거 사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위탁 사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벌칙 강화

- 당장 직영화 또는 공영화가 어려운 경우에 위탁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위탁사기업체가 위탁계약서 상의 미화원 인건비를 중간에서 갈취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계약서 및 조례 등에 명시하고, 위탁계약을 갱신할 때 신규업체가 위탁을 받을 경우 반드시 기존 미화원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 감독권 행사

- 참여희망 주민,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사업의 주민만족도와 노동권 존중 여부에 대해 감독하는 평가단 및 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책 8 성평등 · 인권 공약 발표

성평등 · 성소수자 · 장애인 · 이주민 공약

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또한 단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3대 여성인권법을 비롯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제고와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며, 그러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62.3%보다 낮은 55.2%이며,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OECD 평균인 82.6%보다 무려 20%포인트가 낮습니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in 2013)에 따르면, 한국은 136개국 중 11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들의 각종 성평등 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진전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률은 남녀가 같아졌으나, 경제참여와 소득에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여성폭력 방지법은 있지만 성폭력 · 가정폭력 발생률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일상 관계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의 목표

-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 캠페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참여형 정책을 마련합니다.
- 지자체에서 추진했을 때 더 효과적인 생활밀착형 성평등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성평등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0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외모·문화적 성차별 인식을 줄이기 위한 「공공장소 성형·다이어트 과대광고 금지 조례」제정

● 내용

-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형과 다이어트 광고가 급증하면서 우려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버스 ·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의료광고가 허용된 데 따른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602건이던 성형외과 옥외광고는 지난해 3,24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동차 내 액자형 광고, 모서리형 광고, 천장걸이형 광고는 물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영상광고까지 성형외과 광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성형 · 다이어트 광고가 공해수준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고 있는 현실은 외모지상주의 인식을 재생산하며, 불필요한 성형과 다이어트 행위를 유발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형시술을 왜곡 · 과장하는 광고는 시민의 건강, 평등한 문화 인식 조성을 위해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대중교통 수단 등에 성형과 다이어트 광고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는 공익광고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 세부공약

- 「공공장소 성형 · 다이어트 광고 금지 조례」 제정 : 검증되지 않은 성형 · 다이어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단속이 힘든 실정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장소에서 성형과 다이어트를 조장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터 만들기

● 내용

-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정책이 전문가나 CCTV 설치와 같은 규격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되면서 오히려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범죄 요인을 제거하거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네 안전의 파수꾼'인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여성폭력예방교육은 학생 중심으로만 실시되고 있어, 교육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예방교육은 성인지적 감수성, 인권감수성 증진을 기본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전 연령에 거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주민참여형 "동네 안전 디자인" 정책 실시 : 범죄예방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사회적 연결

망을 복원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 염리동 '소금길'은 주민참여형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로서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볼 만한 사례입니다.

- 주민참여형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동단위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평생학습기관, 통반장회의, 마을회의 등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안산시 지역 여성 · 아동 안전 연대'의 경우 통 · 반장들과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정책 3.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일터 만들기

내용

-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관행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견고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이며, 면접과정에서 결혼계획, 자녀유무, 신체조건 등의 성차별적 질문이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878명을 대상으로 '면접 중 황당하거나 불쾌한 질문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49.1%가 불쾌한 질문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내용으로 '개인 신상에 관련된 질문'(21.3%), '애인여부, 결혼계획 질문'(21.1%), '성별, 나이 등 차별하는 질문'(17.6%), '키, 인상 등 외모 관련 질문'(15.3%), '부모님 학력, 이혼 등 가족사 관련 질문'(15.1%) 등 관련 법규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금지 준칙, 신고제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대 · 중소기업 생산 · 사무직 가릴 것 없이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근로자의 45%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법정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도 12.8%에 달합니다. 2012년 연간 실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705시간)을 400시간 가까이 웃도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불명예도 여전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적인 삶을 어렵게 하는 주원인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을 불가하게 하며, 특히 여성에게는 경력단절을 선택하게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를 조성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금지 준칙」및 시민신고제 도입 : 고용부는 '핵심직무역량 평가 모델'을, 서울시는 '표준이력서'를 마련하여 민간 부문에 보급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당사자의 신고를 받아 지방노동청과 연계하여 처벌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채용과정 성차별 관행 해소 캠페인 : 민간 및 공공부문 채용에서 성차별 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사업장 성폭력 예방 정책 : 아르바이트생들은 불안정한 고용지위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가 있어도 대부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특히 편의점, 피시방과 같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대상에서 제외돼있어 예방이 어려우며,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 캠페인, 사업주 대상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일터에서의 성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캠페인 실시 : 지역 기업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 파악과 사업장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컨설팅, 인센티브제, 캠페인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지자체 공공부문 부터 장시간 노동 줄이기 : 2013년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5명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는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야 하기에,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늘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공적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야 합니다.

주요정책 4. 지자체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 내용

- 성평등 정책은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인식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2006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무원 4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기관장 및 단체장(43.6%), 3급 이상 고위공직자(19.0%), 4,5급 공직자(28.3%) 순으로 나타나 5급 이상 관리직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90.9%에 달했습니다.

-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 사업과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들만으로는 실질적 개선 효과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형으로 성인지예결산제와 성별영향평가제를 운영해야합니다.

● 정책 과제

-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성평등 정책(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교육 · 연수제도 실시 :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지자체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주민참여 모니터링 실시 : 다양한 연령과 성비로 주민참여위원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 정책의 성평등 지수를 파악,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색당 성소수자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녹색당은 강령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 2012년 4.11. 총선당시에도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고,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원칙입니다. 유엔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도 연설과 입장발표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고 인권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들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정책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정책의 목표

- 지역사회에서 성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합니다.
-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차별 없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성소수자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지자체 조례 성소수자 차별금지 명시와 인권교육 제도화

- 내용
  -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명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인권조례에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 하겠습니다. 시 · 도교육청에서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에도 차별금지가 명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단위의 차별금지법도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소수자 차별예방 및 인권교육 제도화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협력하여 차별금지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주요정책 2. 지자체 인권위원회를 통한 성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와 공론화

- 내용
  -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전무합니다. 지자체의 독립적인 인권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부공약
  - 지자체 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소위원회를 두고 성소수자 인권문제 공론화 :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에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소수자들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이뤄냈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인권 관련 위원회 내에 성소수자인권실태 조사 소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지역사회에서의 성소수자인권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덴마크는 1984년 동성애자 현황을 검토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1988년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의거해, 다음 해인 1989년 세계 최초로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이슬란드도 1994년 정부차원의 동성애자인권

위원회를 설치했고, 동성애자의 결혼, 동성애자에 대한 범죄, 학교에서의 동성애자 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1978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입법적 조치와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87년 '동성애적 공동생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1991년 '동성혼 심의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동성결혼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심의를 맡기고, 2002년엔 동성애자 커플과 이성애자 커플의 양육능력이 동일하다는 의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거해 동성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정책 3.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내용
  -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대책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성소수자 청소년 쉼터 및 지원 정책 : 가정 내 성소수자 혐오로 인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정책 4. 혐오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 내용
  - 혐오폭력, 혐오표현 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혐오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혐오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당 장애인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개인의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장애등급과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해야합니다. 장애등급에 의해 서비스신청 조차 제한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의학적 기준을 통한 서비스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별 서비스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녹색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단기적으로는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을 매년 50%씩 확대하여 OECD 평균 수준을 확보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적추가비용 보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해야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법 ·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시설정책으로 일관된 장애인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둔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권리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 정보접근권을 보장을 위한 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하고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확보를 위한 농교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강제입원, 장기입원을 개선하는 탈원화 · 지역사회 자립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
- 도가니사건(광주 인화학원 사건),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인강재단 사건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는 미흡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를 위한 시스템, 인권침해 피해 구제 절차와 지원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의 공적 복지전달체계 구축하여,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에 민간 영리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무분별하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적정기관 제공). 바우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서비스 질 관리 프로그램과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 장애인관련 정책을 시급해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애인정책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 정책의 목표

- 녹색당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해 온 그 동안의 국가 사회적 정책과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도 일상에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써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녹색당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수용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 주거 지원 정책

내용

-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시설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시설중심의 정책은 장애인들을 배제해왔고, 일부 시설에서는 복지의 이름으로 폭력과 감금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시설이 아닌 지역으로 전환해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탈시설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탈시설 전담부서 설치해야 합니다.
- 시설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세부공약

- 지자체 차원의 탈시설 정책 수립과 실행 : 장애인 정책의 중심을 개인별 지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 초기정착금,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전환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을 고려한 탈시설자립생활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비수급자 등을 지원하여 탈시설자립생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농어촌까지 확대하여, 자립에 지역격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농어촌까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장애인 주거권 보장 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정책 2. 지자체 정책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보장

내용

- "장애인을 위한"이 아닌 "장애인에 의한" 지방자치 정책 수립과 실행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노동권, 장애여성의 권리, 교육권, 문화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부공약

- 장애인의 직접 지방자치 참여 촉진 : 당사자 참여에 의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교통, 건축, 도시계획, 주거, 문화 등 장애인에 영향을 미치는 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점검 등 지방자치 장애 관련 정책에 장애유형별 참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지방자치 행·의정 정책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 장애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법정수당, 퇴직금, 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잘 준수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 고용안정 대안을 마련하고, 공적기관을 설립하여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시내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 도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동권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자동차보다 사람이 더 자유로운 도로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 노동권 보장 :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높이고, 중증 장애인 및 장애여성 할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농업자립과 귀농·귀촌을 지원하여 일할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고용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발굴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장애인 교육권 보장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통합교육의 여건을 강화하고, 과밀특수학급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환경 및 성인기를 대비한 중등교육과정의 직업 및 전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장애 여성의 권리 강화 :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임신·출산·육아,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 : 문화향유권, 방송접근, 여가활동, 문화생산주체 등 문화적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조례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화면해설·자막영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영화관람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내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 활동 시 물리적인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지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정책 3. 장애유형별 지원 정책 마련

내용

- 장애유형에 적합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공약

- 청각 장애인 권리 강화 : 지자체별 농학교의 수화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아동 수화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농문화가 확산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 대학병원 등 배치 및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하겠습니다.
- 정신 장애인 권리 강화 : 정신장애인 탈원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인권보장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제입원, 장기입원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시각장애인 권리 강화 : 공공기관 내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정보에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 각 지자체별로 보장구 임대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보장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광역 지자체별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정책 4. 장애 인권교육과 권리옹호 체계 수립

- 내용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문화로서 인권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확대되고, 장애인 인권 침해사례를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장애 인권 교육 확대 : 공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인식을 해소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모니터링을 확대합니다.
  -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구축 : 지역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옹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녹색당 이주민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어섰지만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화센터를 설립해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이주민들이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인 언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이주민들이 겪는 문화의 차이 또는 가족 간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줄 수 있는 방문교사제도 또는 심리상담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주민 가족도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지체가 적극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마을공동체가 남아있는 지역에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자녀가 지역공동체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정책의 목표
  - 유럽에서는 다문화를 도시의 활력과 혁신, 창조, 성장의 원천으로 삼는 'Inter-Cultural City (이문화 간의 대화 정책)'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유럽의 21개 도시가 'Inter- Cultural City Program'에 참여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정책은 적응의 시대를 넘어 이주민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독특한 문화를 살리면서 지역에 활력을 주는 사례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주민 주요정책 (3대 주요정책, 7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이주민의 지자체 정책 참여와 다문화센터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 내용
  - 이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이주민의 지자체 정책 참여 방안 마련 : 이주민관련 정책은 중앙정부 부처간에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주민들은 어떤 지원도 못 받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이 적극적으로 지자체 행정에 참여해, 스스로 지역사회의 역할을 설정하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서 중복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이주민관련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의 언어지원 서비스 제공 : 이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 문제를 지원하는 통역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 의료, 교통 등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이 있어도 정보 전달이 안 되어 이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어 정책 정보 전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질적인 역할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의 출신국별 모임 지원 및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주 여성 가정 폭력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해도 구제를 신청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다문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내용
  -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안산시에서는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부공약

- 다문화 어린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 다문화 어린이들이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왕따나 차별적인 언어폭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문화 어린이들의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차별, 심리위축, 정서불안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과 치료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학교에서의 인종차별예방교육 강화 :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에서의 다문화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종차별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선생님들도 교육받아야 합니다.
-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바우처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를 도입할 때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일감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중언어교육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정책 3.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 내용

- 녹색당에서는 경제 노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존중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상담지원 : 지자체의 노동인권 도시 선언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도 포함되어야 하며, 노동인권센터를 통해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 권리 침해에 대해 지방노동청과 공동으로 법준수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정책 9

자치 공약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

정책의 필요성

- 지방자치는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본래 뜻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때에 지방자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 지방자치는 각종 부패와 비리에 찌들어있고, 소수 지역기득권 세력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환경파괴, 예산낭비, 주민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참여는 가로막혀 있습니다.
- 지방자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제도 혁신, 주민참여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목표

- 주민들이 가깝게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고, 지방의회 기능을 정상화한다.
- 선출된 대표자들의 독선과 전횡,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는 지역기득권 세력의 개발주의, 성장 지상주의에 제동을 걸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녹색전환을 이룬다.

지방자치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8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5.16 군사쿠데타로 왜곡된 지방자치 틀 재정립

- 내용
  - 1952년부터 실시되던 지방자치는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부활했지만, 제도적 결함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23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에서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농촌지역에 맞는 지방자치 틀 정립 : 5.16. 군사쿠데타 이전 기초지방자치는 시.읍.면 단위 자치였습니다. 읍의회, 면의회가 있었고, 읍장과 면장을 직선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선거를 폐지하고, 읍.면 자치단위를 군(郡)이라는 행정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도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위는 군(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군(郡)은 인구나 면적이 지나치게 큰 편입니다. 일본은 시.정.촌 단위로 기초지방자치를 해 왔고, 정.촌은 읍.면과 비슷한 단위입니다. 유럽도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규모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실제로 한 군(郡)내에서도 읍.면별로 지역적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에도 읍.면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위가 군(郡)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하부행정조직에 불과하므로 지역특성이 무시된 탁상행정이 이뤄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고, 농촌지역에 맞는 지방자치 틀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 중단 :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편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구규모가 21만 5000명을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통합되는 지역이 주변부화 되고 지역 내 집중현상을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전국동시 지방선거 방식 개선 :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읍.면장) 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각각 다른 날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1991년 부활한 이후 1995년부터 모든 선거를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시기가 전국적으로 동일할 이유가 없고, 광역선거와 기초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동시지방선거는 정당별로 기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투표방식과 맞물려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선거 종류별로 선거 일자를 달리한다든지, 지역별로 선거 일자를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정제도 전면개선

내용

- 2000년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의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활용되지 못하는 주민참여제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세부공약

- 주민소환투표시 투표율 하한선 조항 폐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기도 하남시장, 과천시장, 강원도 삼척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졌지만, '투표율이 3분의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개표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환대상자가 소환대상이 되는 때부터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운동을 벌이고, 투표에 참여하기 힘든 지역분위기를 조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투표율 하한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환대상자가 소환반대운동을 벌이지 투표불참운동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투표율 하한선 조항 때문에 주민소환투표가 번번이 무산되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투표율 하한선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 주민투표제도 실효성 강화 : 주민투표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발의하려면 발의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주민투표청구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에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쇄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에 주민들의 서명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뤄진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민들의 서명에 의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시장이 주도했던 사례인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외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민투표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전면개정해야 합니다.
-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폐지 또는 전면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소송제기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주민소송을 하려면 집단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처럼 한명의 주

민이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합니다.

- 주민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지연 또는 부결시 주민투표 회부 :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그나마 활용도가 높은 주민발의의 경우에도, 지방의회가 발의된 조례안의 심사를 지연하거나 부결시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발의된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3. 주민참여예산, 토건예산감축 목표제 등 지방예산 혁신·공무원 인사혁신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무늬만 주민참여'인 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는 여전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둘러싼 부패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사용도도 떨어지는 건물을 짓는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 인사를 둘러싼 부패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부공약

- 추첨제 통한 투명한 참여위원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제 전면개선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위원 구성단계부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누구에게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면 추첨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공모절차 없이 추첨으로 위원선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모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런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소수의 시민들만이 공모절차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떼어 내어 주민공모와 참여예산위원 심의를 거쳐 편성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500억 원의 예산을 시민공모와 참여예산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을 시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예산 정보공개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별로 예산편성과정부터 집행까지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누구나 영수증을 볼 수 있도록 비치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관례적으로 편성되는 공사예산, 토목예산 비중이 큽니다. 이런 예산들을 줄여나가야만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시설비 예산의 총량한도를 설정하고, 이것을 매년 10% 이상씩 줄여나가는 '토목예산 감축목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기 재정계획'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이나 행사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시행하는 '투.융자심사' 단계에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들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낭비성예산에 대한 시민감사시스템 마련 :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여비,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홍보예산 등 관례적으로 낭비되는 예산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정보를 요구하고 잘못을 발견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수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일정비율을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방인사시스템 혁신 :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가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를 둘러싼 부패, 불공정이 심하고,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전부 민간위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임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사생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4. 주민자치위원회 개선을 통한 읍.면.동 풀뿌리자치 강화

● 내용

-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에 불과하고 위원 위촉권도 관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대부분 문화센터기능에 그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자치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읍.면.동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상급행정기관에서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네일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자치의 가장 기초단위가 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가 큰 한국에서는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주민자치위원 대표성 확보 : 관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주민들이 선거 또는 추첨으로 선출한 위원을 위촉해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성이 확보되어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읍.면.동 단위로 배정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읍.면.동장 임명에 주민의견 반영 :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를 할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교체, 지방자치단체장 눈치 보기 같은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5. 이권과 부패로 물든 지방의회 개혁

● 내용

- 지방의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지방의회가 사용하는 예산부터 부패와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에 자료실을 설치해 주민들이면 누구나 의회 및 행정에서 취급하는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방청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지방의회 예산 ·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참여 보장 :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기회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나 감사가 끝난 이후에 주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의회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수렴하고, 예산심의 전에 예산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온 바 있습니다.
- 지방의회 예산 투명성 확보 : 논란이 되어 온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결과보고를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나 의정공통경비에 대해 공개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누구나 영수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부에 대해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재량사업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 의정자료실 운영 및 회의방청 편의 최대한 보장 : 지방의회 내에 의정자료실을 설치하고,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계획과 용역보고서 등을 비치해 주민들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의회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의 회의방청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예산심의시 계수조정과정 공개 : 지역구 예산나눠먹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밀실 예산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를 할 때 계수조정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책 10

교육 · 돌봄 정책 공약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우리 동네"

정책의 필요성

-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입증하듯이 철저한 경쟁 체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과 가정환경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녹색당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의 목표

- 교육에서 학습자의 인권과 교육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위원회와 어린이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들을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수당을 신설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에 어린이 ·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사회 정책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에너지, 물, 폐기물 재활용 등 교육공간부터 녹색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활교육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교육, 생태 · 환경 교육, 적정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늘리며,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성을 갖추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평화교육' 등 마을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 독거노인의 소통과 세대 관계 개선을 위한 세대통합형 마을 쉼터 운영, 장기요양노인의 마을 거주와 돌봄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 어린이 · 청소년 주요정책 (9대 주요정책, 34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학습자의 인권·교육권 보장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중고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교육서열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 과도한 경쟁, 과도한 학습을 부추기는 경쟁 위주의 교육체제는, 학력과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입사지원서에서 학력 · 성별 · 사진 표기란을 없애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해 나가야 합니다.
  - 제도적 개선과제와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과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들은 엄연한 교육 주체이나, 학교에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야 할 의무를 가진 교육대상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도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탈학교 어린이 · 청소년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매년 5만~8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를 지키지 않거나 개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학생인권조례/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정 : 학생인권조례외에 학교 밖 어린이, 청소년

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별도 제정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 인권존중 조항, 차별금지 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법제 개선에 착수하겠습니다.

- 학생참여위원회/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 교육청 단위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학생자치기구의 선거를 포함한 각종 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집회 ·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 요소를 포함하는 학교규칙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녹색당은 초 · 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항이 구체화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권리주체이자 동등한 시민으로서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 · 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나가겠습니다.
-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및 학부모/교사/학생 참여 보장 :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용도에 대해서도 공사비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고 학부모/교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학부모/교사/학생 참여 보장 : 교육청의 참여예산제에도 학부모/교사/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민주적인 학교 운영 : 장학사제를 폐지하고, 학교장을 관료적 승진제도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부터 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교사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축소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행정전담 교직원의 채용 등)함으로써 원활한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안교육 지원 : 대안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홈스쿨링 등 제도교육 밖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들은 각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력에 따른 차별이 사라지기까지는 손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형태와 이를 통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법제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정책 2. 어린이·청소년 빈곤과 폭력 방지 대책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성장하며, 쉬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 정책 과제
  - 청소년 쉼터 운영과 지원정책 : 탈학교, 가출, 성소수자 등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안전한 성장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쉼터가 더 많은 곳에,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결식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환경 아침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방학이나 휴일에도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아동 수당 신설 :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양육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수당을 아동수당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어린이 학대와 성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 어린이에 대한 학대로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지원과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인권·노동·평화교육 지원 :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통합적 인권 · 노동 · 평화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타인의 권리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 노동금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착취 금지 : 어린이 노동은 금지되어야 하며, 청소년은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르바이트 착취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자립문화센터 운영 : 청소년들에게 전망, 취업, 자립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자립문화센터를 지역사회에 설립하고, 청소년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소규모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3. 청소년 시민권 보장

- 현황 및 필요성
  - 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청소년이 보호와 지도,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인격

체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한 명의 온전한 시민으로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마땅히 동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일치시키고 동시에 이를 만 16세로 낮추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직접참여의 권리는 "최소한"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16세부터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통상 16세로, 이때에는 이미 취업을 할 수 있으며 (15세 이상), 공식적으로 학교를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에 더해 지자체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지방자치에 청소년 참여 확대 :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들도 청소년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을 연령 제한 없이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어린이 ·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약이나 조례를 제 · 개정하겠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에 어린이 ·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직접 어린이 · 청소년 정책을 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주요정책 4. 교육공간의 녹색전환과 적정기술교육·안전교육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학교 냉난방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는 요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교육예산의 우선순위를 적정한 냉난방을 하는데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학교 건물의 단열개선, 태양광발전 활용, 빗물 활용과 같이 교육공간을 녹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피크오일과 자원부족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정기술과 생활기술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학교마다 태양광 발전, 학교단열 개선 : 학교의 단열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개선, 발암물질 없는 학교, 석면 없는 학교 :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실내공기질과 석면 등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의 유해화학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개선해야 합니다.
- 등하교길 교통사고 안전 대책 :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등하교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적정기술과 농업교육 확대 :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 다양한 교육, 재미있는 교육, 숨 쉴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생활교육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교육, 생태 · 환경 교육, 역사교육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 안전교육 강화 : 각종 재난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도단위로 재난대응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실습과 훈련을 진행해 실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5. 영·유아의 생명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어린이집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시설은 약 5.2%(2012년 기준)로 10.1%를 민간 · 가정 어린이집이 87.9%로 약 9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마련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우수 민간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책임 있게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제 노동을 하는 부모들에게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시 보육시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린이집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조정하고, 이용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위탁방식 개선을 통한 무상보육의 공공성 보장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위탁방식 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모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보육 확대 : 일시보육, 야간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생태교육프로그램 확대와 반생태적인 놀이터환경 개선 : 생태적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중금속 등에 오염된 놀이터를 생태친화적인 놀이터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친환경급식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야합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친환경급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주요정책 6. 부모 배움터-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부모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부재합니다. 지자체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교육도 받을 수 있고, 육아방법 등에 대해 교류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육아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필요합니다.

● 정책 과제

- 부모 배움터 마련 : 모든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모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에 처해 긴급하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상담가가 상주하는 '마을상담소'도 마련해야 합니다.
- 공동육아 나눔터 마련 : 부모교육과 공동육아를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동네사람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새롭게 만들거나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정책 7.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활성화

현황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아동 · 청소년 수에 비해 실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지도, 정서적 지원, 급식 등 돌봄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빈곤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어린이 · 청소년들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 '낙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학교 내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돌봄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수용능력에 있어서는 전체 필요분의 18%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확대와 내실화와 더불어 마을학교를 돌봄 서비스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 과제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처우 개선 : 빈곤 · 위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교육,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인건비 등을 포함해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적절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외에 모든 어린이 ·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돌봄교실은 준비가 미흡해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돌봄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을학교 지원과 확대 :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공간으로, 동네사람들이 참여해 함께 돌보는 지역자원 활용 마을학교를 지원합니다. 노원구의 방과후 '독서돌봄 마을학교' 운영사례와 서울시 동작구의 '성대골 마을학교'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 마을마다 도서관 :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을 확보해 지역에서 돌봄, 교육, 문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의 지역역사문화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을 만들어 지역교육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4년 시가 예산을 지원해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사서인건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주요정책 8. 학교폭력과 왕따 없는 '동네 평화 돌봄망' 만들기

현황 및 필요성

- 학교폭력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19.3%)과 사이버 공간(8.4%)을 제외하면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장소는 모두 교실(50%)과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급 내에는 학생들 간 위계서열이 형성되어 있고, 서열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따돌림이나 집단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학교폭력문제를 가해자-피해자 간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학교폭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나온 결론이며, 폭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관자들도 정신적 무기력과 자책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실, 지역 마을공동체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책 과제

- 동네평화 돌봄망 만들기 : 학교폭력의 가해사례나 피해사례들은 대개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의 갈등과 폭력 치유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돌봄과 사례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자체 차원의 평화교육, 학교폭력예방정책 시행 : 지자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례로 서울 금천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 차원에서 '평화샘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회복적 정의'를 생활지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9. 노인을 위한 돌봄정책

현황 및 필요성

-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인 돌봄 정책은 세대간의 격리가 아닌 세대가 어우러진 가운데 마을에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책 과제

- 노인안전과 생활 정책 마련 : 노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인 교통안전, 노인형 주거개조 주택 활성화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지역 의료시설, 목욕시설(보건과 의료) 등을 확충합니다.
- 노인귀농 지원과 일자리 확대 : 고령사회(인구의 14%이상이 노인)에 접어든 농촌의 노인을 위한 세대통합정책을 마련합니다. 친환경 농사경험을 가진 노인을 귀농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노인의 지혜를 활용합니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및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 돌봄이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 : 독거노인의 소통과 세대 관계 개선을 위한 세대통합형 마을 쉼터 운영과 장기요양노인의 마을 내 거주와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녹색당

시·도별 5대 핵심공약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대구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공약 1 안전하고 편리한 생태교통 도시

-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전철, 버스, 택시 노후차량 교체, 점검주기 단축과 강화
- 혼잡통행료제도,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 시민들과 함께 경전철 건설을 재검토, 자전거를 도심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조례' 제정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휠체어도 유모차도 안전한 거리

공약 2 햇볕 드는 집,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 동네

- 서울시민의 3분의 1인 2인 이하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보급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 생애 첫 독립 공간, 예술인 작업 공간, 시민공유공간, 주거협동조합 확대
-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는 반드시 정화 후 공원으로! 노들텃밭 등 도시농업 활성화!
- 인도적 길고양이 TNR사업, 동물의료보험공제조합 설립지원 등 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

공약 3 시민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도시

-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친환경급식센터 지원강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 경영난을 겪는 동네 중소형 병원을 시립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의료 공공성 확보
- 시민 정신 건강을 위한 공공 심리상담 확대와 동네 10분 거리 운동장 만들기
- 인권전담부서 설치와 인권영향평가로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애기

공약 4 동네에서 먹고 살자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맘 편히 장사하는 가게”, 개성 있는 골목상권 지키기
- 먹거리, 에너지, 교육, 돌봄 분야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노동인권도시”선언, 노동인권센터 설치조례 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도 도입
- 칼퇴근 도시 서울, 청소년 아르바이트 착취와 부당대우 근절,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공약 5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도시

- 시립어린이집 증설, 민간보육시설 공공성 강화, 생태환경교육 · 부모교육 활성화
- 학습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교육예산과 정책 결정에 교사 · 학부모 · 학생 참여
- 지역아동센터 돌봄 기능 강화, 마을학교와 도서관 지원, 학교폭력 없는 동네 만들기
- 세대통합형 마을 만들기, 노인 일자리 · 교육 · 사회참여 강화, 독거노인 지원

공약 6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도시, 원전 모두 줄이기"

- 서울시가 앞장서서 ‘탈핵 · 에너지전환 도시선언’,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도 높이기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동네마다 에너지 슈퍼마켓을 만들어 냉난방 비용 절감 방안 제시
- 에너지 빈곤 계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 학교건물 단열 개선과 태양광 설치 지원, 탈핵 · 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경기도

공약 1 주거, 생활환경 공약 – 햇볕 드는 집,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

적정주거 보장 (주거복지정책의 개발 및 확대)

● 현황과 문제점

경기도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 제고 비중

(단위 : 호, %)

총주택수(A)	공공임대 주택수(B)	임대비중(B/A)
4,060,910호	231,027호	5.7%

자료 : 경기도(2013), 『2013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추정

자료 : 경기도주거취약계층실태 및 지원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2)

경기도의 전체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은 5.7% (2013년)으로 OECD평균 11.5% (2007년)에 비해 적고,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고시원 등)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1월 발표한 2013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중 전세로 사는 1273가구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1억2475만원으로 3년 전인 2010년 조사 때(7528만원)보다 65.7%(4947만원) 급증했습니다.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2009년 3월 이후 60개월 연속 상승(전월 대비)했습니다. 높은 주택가격과 극심한 전/월세 임대료 상승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많은 경기도민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목표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및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주거복지 조례 개정으로 주거복지 정책 확대

정의롭고 인간적인 주거권 실현 – 세입자 주거권 강화

● 이행방법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 주거약자 실태조사,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택바우처 지원 확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강화,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 부적합 주택 개량사업 지원 등

주거복지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 연계 – 민간토지임차형 및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도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공공성이 강화된 도시개발정책 도입,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 도시개발이 주거복지실현과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이행기간

1차년도 – 취약계층 주거실태 현황 모니터링

2차년도 –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 및 계획 수립

3차년도 – 주거복지 지원시범사업 실시

4차년도 – 확대실시

시민정원사와 시민농부가 함께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공원녹지와 방역약품에 만코제브, 카바메이트, 뷰프로페진, 비펜스린 등 발암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인공적 조경관리가 아닌, 생태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 조경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농업은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농장 871,742㎡, 옥상정원 6,656㎡, 학교텃밭 85,112㎡, 공공텃밭 379,552㎡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내부자료 , 2011년)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시농업이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도시공원 내의 경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전문가, 지역 농민, 조경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활동이 미흡합니다.

● 목표

생활 주변 살충제, 제초제, 소독약품 등 독성물질 추방 – 약품정보를 공개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을 없애고 친환경 방제시스템 도입

생태적 방충 대안 활용

공원과 녹지관리에 시민 참여

텃밭을 녹지와 조경에 활용

● 이행방법

다이센엠-45, 카바메이트, 비펜스린, 퍼메트린 등 발암성분 든 농약과 꿀벌집단폐사의 원인이 되는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니아니딘을 공원녹지에 사용하는 것을 관계기관, 방역업체 및 시민들과 합의하여 금지 하겠습니다.

생태적 방충대안을 연구를 지원하고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 조경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확대, 재편하여 경기도와 31개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고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를 지원하여 도시농업학교, 원예교실, 시민 정원사 과정 등을 개설하고 실습하면서 텃밭이 도시의 녹지와 조경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 이행기간

1차년도 –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와 함께 통계DB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공원살충약품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 공청회, 농업공원 조례 마련 등

2차년도 – 녹지와 공원에 도시농업 시범실시, 방제 개선안 시범 시행

3차년도 – 확대 실시 및 모니터링 사업

4차년도 – 평가 와 개선안 마련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수자 참여 보장

● 현황과 문제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29명 중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목표

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 그 결과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조례 시행령 개정

● 이행기간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 조속히 시행

무장애도시,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되는 경기도

● 현황과 문제점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며, 자전거와 유모차가 편히 다닐 수 있는 도로와 인도가 부족하고 이들의 연결이 유기적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스쿨존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목표

자전거도, 휠체어도, 유모차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만들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안전한 보행권 보장
어린이집 스쿨존 확대 / 통학길 전수 조사

● 이행방법

시내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 도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동권이 열악한 농촌지역에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편리를 고려한 도로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자체가 경찰당국과 협력해 보육시설 부근 스쿨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태양광 LED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의회 조속히 시행

폐기물 관리 직영화, 환경미화업무 공공성 강화

● 현황과 문제점

지자체는 법령상 자신의 책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 및 처리, 가정 및 상가건물의 오폐수 수거업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십 수 년째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부당한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쓰레기 무게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실제로 일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 목표

폐기물 수거 업무의 지자체 직영화 또는 공영화
위탁 사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벌칙 강화
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 감독권 행사

● 이행방법

환경미화업무를 의무적 직영업무로 규정하고 위탁이 가능한 분야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직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공영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폐기물 수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위탁계약서 상의 미화원 인건비를 중간에서 갈취할 경우 위탁계약 해지, 향후 입찰 제한 등을 계약서 및 조례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시민, 시민단체,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사업의 주민만족도와 노동권 존중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이행기간

조속히 시행

공약 2 먹거리 –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경기도

■ 친환경무상급식지원 확대, 방사능 안전급식 체계화

● 현황과 문제점

경기도의 2014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860억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8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는 어린이 청소년의 먹거리가 가장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2011년~2013년 경기도 급식에 대한 국정조사 자료 및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대다수 초중고 학교에서 일본산 수입수산물 사용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조례가 지원하는 학교 및 학교 밖 시설과 어린이집의 급식이 방사능에서 안전한지 검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경기도 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 목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

경기도 학교 및 학교 밖 지원시설 관내 영유아 보육기관의 방사능안전급식 검사체계 수립

- 이행방법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제정

경기도 방사능 물질 차단 조례제정

- 이행기간

즉시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네트워크 수립 – 아침에 갓 딴 친환경 토마토 점심시간 학교급식으로

- 현황과 문제점

경기도는 2012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초기의 원칙보다 도매 소매 물류를 위한 대규모 광역물류센터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급식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친환경유통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되 다원화된 계획과 지원 수립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의 지자체별로 급식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특성에 맞는 지원센터는 꼭 필요하지만 지자체별로 개별적 총괄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품목 및 물류의 과잉예산을 소비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현재 로컬푸드 지원예산의 대다수가 물류센터 건립예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역먹거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목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다양화

경기도 광역 급식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급식지원센터 네트워크를 위한 거점 지원센터 도입

로컬푸드 사업예산 개선 및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차년도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현황 및 물류개선 조사

경기도 시군 급식지원센터 현황조사 및 네트워크 방안연구

로컬푸드 예산지원내용 현황조사

2차년도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다양화를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 광역 급식지원센터 조례 제정 및 경기도 급식지원센터 네트워크 거점 지원센터 시군센터 선정

지역먹거리 구축을 위한 경기광역 조례 제정

3차년도

개선, 확대, 전면 시행

공약 3 생명권 공약 –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 인간도 동물입니다.

■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대규모 공장형 축산방식으로 인하여 구제역, 조류독감 등의 치명적인 동물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발생할 경우 급속도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장주변 환경오염, 각종 항생제 및 호르몬제 사용으로 인해 인간에게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축산물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장형 축산농가를 줄이고 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동물복지농장 확대하여 농장주변 환경 개선 및 사람에게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 목표

도내 축산농가 중 동물복지농장의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함.

소비자가 어디서든 동물복지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보하도록 함.

● 이행방법

동물복지농장에 세제 지원

동물복지농장에서 나온 축산제품에 대한 유통망 확보

친환경급식에 동물복지축산물 의무 포함

● 이행기간

1차년도 – 현황 모니터링, 공청회 실시

2차년도 – 동물복지농장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3차년도 – 지원 정책 시범실시 및 평가

4차년도 – 확대실시

■ 동물복지과를 신설하여 종합적인 동물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 현황과 문제점

사회가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 증가, 독신가구 증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기되는 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고 길고양이 증가로 인해 민원 발생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동물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 마련 시급합니다.

● 목표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물관련 문제들을 동물복지차원에서 관리

● 이행방법

환경국 산하에 동물복지과 신설

유기동물 관리, 길고양이 TNR 사업, 야생동물 보호 등의 사업을 총괄하며 각 지자체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함

● 이행기간

1차년도 – 현황 모니터링,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등 간담회 실시

2차년도 – 동물복지과 신설계획 수립, 종합적인 동물보호계획 수립

3차년도 – 평가와 지원

■ 효율적인 동물보호소 운영 및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종합센터 설립

● 현황과 문제점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파행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결국 안락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길고양이 문제로 각종 민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를 가둬두는 공간이 아닌 이들의 건강 및 위생을 관리하고 바람직한

입양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공간으로서 지자체 직영의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며 이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동물보호종합센터를 설립할 필요 있습니다.

● 목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와 반려동물 입양 가정 증가

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 이행방법

유기동물 현황 조사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 수립

길고양이 TNR 사업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실시

동물보호종합센터 교육 프로그램 수립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지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의 확립

● 이행기간

1차년도 - 동물보호소 실태 조사

2차년도 - 동물보호종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3~4차년도 - 동물보호종합센터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공약 4 노동 인권 공약 - 동네에서 먹고 살자 (가안)

생활임금조례 제정

● 현황과 문제점

25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노동자 평균임금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생활안정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2012년 9만명(9.1%, 8월기준) 2013년 10만명(10.4%, 8월기준)으로 증가하였다. 공공부분에서조차도 저임금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천시에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천시 소속 노동자,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부천시 41개 부서 등 516명(청소, 업무보조 등 기간제 노동자 등)에 적용, 2014년 4월부터 시행중(2013년도 노동자 평균급여 40% 5,860원까지 일부 인상구간 설정), 서울의 몇몇 구와 울산 북구에서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목표

생활임금 조례 제정

-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으나 김문수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녹색당은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이행방법

공공부분부터 생활임금 규정 도입 의무화

- 공공부문부터 시행하고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생활임금 도입 업체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 조달이나 민간위탁 및 지자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생활임금조례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민간기업에 확대

● 이행기간

이미 제출된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 가능

추가 방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경우 매년 약2천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약 10만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다발사업장에 포함되고 있습니다.(2013년 용산구청 등 시 · 군 · 구청 19곳) 지자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현재 23개의 자치단체에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산업재해 예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조례는 안산시를 제외하고 전무합니다.

● 목표

- 안전도시 조례 제정
-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 이행방법

-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안전도시 조례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조례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산업재해예방센터의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차원의 노동사회 책임보고서 작성 및 지수관리

  ISO26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 중 노동관련 지표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지표를 관리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고용, 노사관계, 근로조건, 사회적대화, 보건관 안전, 인적개발 및 훈련, 지역사회 등의 분야에 대해 세부 지표를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민과 공유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늘리기 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에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이행기간

1차년도 – 사업장 화학물질관리 실태 조사 및 안전도시 조례 제정

2차년도 – 국회와 협조하여 지자체의 화학물질관리감독 권환 확대

3~4차년도 – 노동사회 책임보고서,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지원 산업재해예방센터 건립 등 필요한 정책 시행 및 평가

■ 노동인권도시 선언

● 현황과 문제점

노동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은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도 자체 권환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지역차원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인식을 지역주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지역은 생활공간이자 일터입니다.

● 목표

- 노동인권도시 선언
- 노동인권센터 설립
- 청소년/직장인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비정규직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 이행방법

- 노동인권센터 설치 조례 제정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토대로 "노동인권도시" 선언, 지역에서 노동인권 수호를 위한 지자체의 자기책임을 명확화 합니다.

- 노동인권센터 설립 통해 노동자들의 취업지원, 안전/보건. 복지, 쉼터, 청소년 노동권리 향상 지원 등의 프로그램 도입
-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우선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영화로 공공성 강화
- 설립을 공약한 노동인권센터와 산업재해예방센터, 산업재해예방위원회 등 노동권 향상을 위한 단체와 경기도 인권위원회와 노동인권 공동사업 추진

● 이행기간

1차년도 -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실시

2차년도 - 노동인권센터 설치 조례 제정, 운영프로그램 수립

3~4차년도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영화,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수행과 노동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지원 강화

■ 경기도 인권조례 제정 - 걸림돌 없는 도시

● 현황과 문제점

녹색당은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 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그 어떤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다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태어난 모습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목표

- 경기도 인권 조례 제정
- 경기도 인권위원회 설립
- 지자체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 인권교육 제도화

● 이행방법

- 포괄적인 경기도 인권조례 제정,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 경기도 인권선언,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보장 제도화. 지자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 인권교육 제도화 "생긴 대로 살아도 좋아."

-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외모 · 문화적 성차별 인식을 줄이기 위한 공공장소 성형 · 다이어트 과대광고 금지 조례 제정
- 성평등 정책 통합적 추진, 5급 이상 관리직 성평등 정책 교육 · 연수제도
- 경기도 인권위원회 설립과 소수자 인권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으로 소수자 인권문제 공론화
- 장애 유형별 지원 정책 마련
- 청소년, 직장인, 사업체, 관공서 등 곳곳에서 인권 교육 상설화

● 이행기간

1차년도 - 경기도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실시

2차년도 -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 설립,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3~4차년도 - 인권교육의 제도화 및 평가 후 지속적인 지원

공약 5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기도

■ 탈핵 · 에너지전환 경기도 선언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음. 전기요금과 유류요금의 역전으로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력소비에 맞춰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전력생산과 송전선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발전설비 중 핵발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것을 결정함. 이로 인해 고리, 울진, 월성에 신규 핵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삼척과 영덕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비민주적인 방식을 갖고 있음.
-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수명지난 핵발전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정부가 탈핵 ·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자생에너지 생산확대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목표

- 2012년 2월, 전국 46개 기초지자체에서 '탈핵 · 에너지 전환도시'를 선언했음. 이에 동참한 경기도의 지자체는 10개 도시로, 수원시, 오산시, 김포시, 부천시, 군포시, 성남시, 용인시, 의정부시, 화성시, 안양시임.
- 경기도 차원에서 탈핵 · 에너지 전환을 선언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탈핵 · 에너지 전환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및 조직을 갖추도록 지원함.

● 이행방법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 및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시민위원회 구성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도민 참여 법제화

● 이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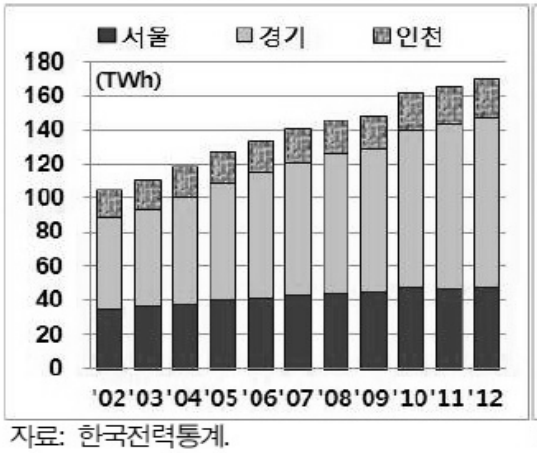
민선 6기 의회 회기 중

경기도 에너지자립도 높이기

●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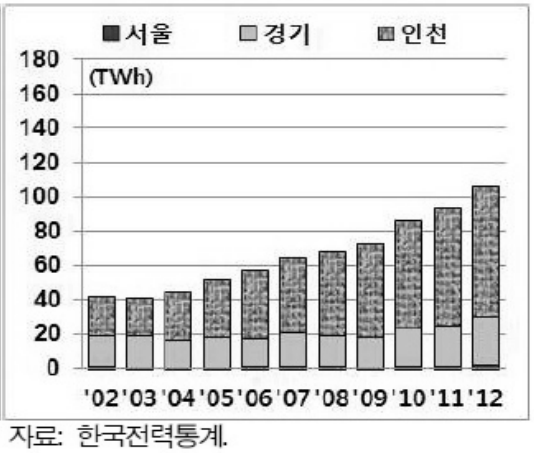
- 경기도의 전력소비량은 증가가 빠른 반면, 생산량의 증가는 낮음. 소비량은 10년 새 두 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임. ('02 54Twh, '12 100Twh) 그러나 생산량은 같은 기간 동안 18Twh에서 29Twh으로 증가하는 미비한 수준으로 수도권 전력수급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황.

< 수도권 전력 소비량 추이 >



자료: 한국전력통계.

< 수도권 전력 생산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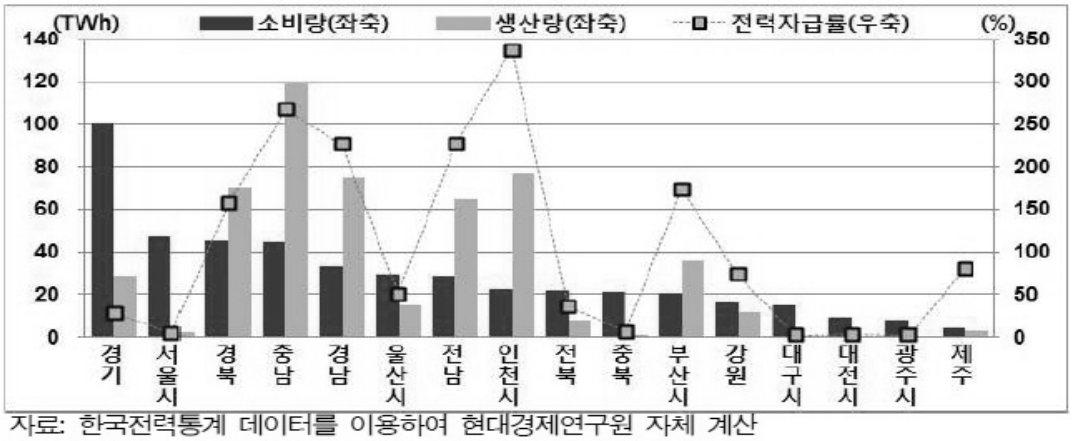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통계.

- 경기도의 전력자급률은 28.5%('12)으로 낮은 수준이며 필요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상황.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 현황 (2012년 기준)

<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 (2012년) >



자료: 한국전력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전력자급률 = 전력생산량 ÷ 전력소비량.

● 목표

-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 · 에너지전환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함.
-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냄.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
- 경기도 에너지자립도를 현재 28.5%에서 연간 증가량 찾아서 넣고 민선6기동안 년간 00%로 감소. 최종 에너지자급율을 00%로 높임.

● 이행방법

-효율적인 수요관리 방안 마련

※ 소비량 감소 방법

1)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하는 기구 운영

2) 공공건물 고효율화

3) 시민참여 공간 확대(절전차액제도, 에너지고효율 주택 지원)

※ 생산량 증대

1) 경기도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확대 실시

2)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생산 촉진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3) 신재생에너지 이용 자가발전 실시 사업장 세제 지원

● 이행기간

1차년도 – 지역 에너지 현황 모니터링

2차년도 – 기구 및 계획 수립

3차년도 – 시범사업 실시

4차년도 – 확대실시

에너지복지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적정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음. 지역내 노후화된 학교들이 예산문제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

● 목표

● 이행방법

– 에너지빈곤계층 조사

– 초중고 건물 단열개선사업

– 경로당 등 노약자 공공이용 시설 단열개선사업등 다양한 지원 시행

● 이행기간

연내 지속사업

강원도

공약 1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전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회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핵발전,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 전기요금과 유류요금의 역전으로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력소비에 맞춰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전력생산과 송전선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발전설비 중 핵발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것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고리, 울진, 월성에 신규 핵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삼척과 영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갖고 있다.

목표

-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수명지난 핵발전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가 탈핵 ·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생산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더불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시로 송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밀양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짐을 덜기 위해서는 분산형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행방법

- 지자체 차원에서 탈핵 · 에너지전환 선언을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든다. 건물과 조명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한다.
-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한다.
-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한다.
-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 · 중 · 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공약 2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현황과 문제점

- 농업의 위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지와 농민과 농촌사회의 심각성을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해 왔지만, 우리 사회의 개발과 성장 논리에 막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회성 대책으로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무너지면 가공과 서비스는 아무 의미가 없다. 현 정부의 6차 산업 전략은 1차 산업에서 고생은 농민이 하고 나머지는 공업자본의 몫으로 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사후적인 보상 성격의 각종 농민 지원금 또한 농민과 농업에 재투자되어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보다 결국 2 ,3차 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

목표

- 녹색당은 농민 기본소득제를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은 다양하겠으나, 이런 발상의 바탕에는 바른 농업을 사회 공공재라고 보는 것이다.
- 녹색당은 우선 그 실현의 주체와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공허한 주장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녹색당 스스로 주장하는 바대로 살고, 그 삶의 공동체를 마을과 지역에서 구축하며 지방정부와 국가 정책으로까지 채택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행방법

- 기본농지 : 농지를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민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농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하여 농지가 절대 사적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 건강농민 : 농촌의 생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므로, 교통, 난방, 의료, 농업에너지 부문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촌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 농민들도 도시적 소비의 유혹을 넘어서서 몸의 건강 뿐 아니라 따뜻한 농촌공동체의 구성으로 삶 전반의 건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식량농정 : 농정의 핵심은 식량자급, 더 나아가 곡물자급이다. 그것도 친환경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영양가만 높은 쓰레기만도 못한 먹을거리들을 다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 환경귀농 : 적극적인 귀농정책으로 농업인구를 늘린다. 이는 소농정책과 맞물리는 것으로, 특히, 청년들을 농촌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귀농인들이 처음부터 못된 돈벌이 농사에 빠져들지 않도록 친환경 농사를 소개한다. 환경귀농은 농민기본소득제와 맞물려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자립자치 : 자립하는 삶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중요하므로, 농촌에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고,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원한다.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분명해 지도록 농민 스스로 다양한 이익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한다.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도록 농업회의소나 면 단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한다.

공약 3 동네에서 먹고 살자

현황과 문제점

- 대형토건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경제를 유지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자체마다 공단유치를 목표로 걸었지만 비어있는 공장부지가 많다. 지자체에서도 대형 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의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북돋기 위한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밀려나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 노동은 생활의 물질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한 사회가 어떤 노동을 지향하는가는 그 사회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맺어갈 것인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그 사회의 노동의 실태는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게 된다.
- 2013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임금노동자 중 45.9%인 837만명이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5.9%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5.5%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성차별과 고용차별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6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그 만큼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수치들은 한국의 노동(일자리)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구하는 정부는 있어도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는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다. '노동' 문제를 '경제'의 하위변수로만 생각해왔고, 성장이데올로기 앞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받았다.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고, 노동자 스스로가 경영자 정체성을 자기 내면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 왜곡된 노동을 바로잡는 일은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지향하는 녹색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여유를 회복해 다시금 노동이 즐거운 사회, 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목표

-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 지역단위 마을단위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노동인권도시' 선언,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명확하게 지역민에게 밝힌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고용하고 있거나,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의 일자리를 개선한다.
- 공공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한다.

이행방법

- **대형마트 동네 진입금지와 상가임차인보호 제도 마련** : 대형할인마트 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상인, 건물주들이 상생협약을 맺는 사례를 확산한다. 에너지를 덜 쓰는 에너지효율가게 만들기, 태양광으로 전광판을 밝히는 가게 만들기, 재활용과 분리수거, 친환경제품을 활용하는 가게 만들기 등 상가들이 녹색가게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을에서 자라나는 사회적 경제** : 장기적으로 영국의 Localism Act와 같은 지역주권법 등을 제정하여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다.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한다.

  (1) 마을뱅크 : 주민세의 일부를 마을은행에 저축하여 주민들이 마을의 이슈를 발견하고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마을 단위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

  (2) 마을화폐 : 지역화폐 개념을 도입하여 마을기업과 마을가게 마을시설 등의 활용을 높이고 마을 내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경험을 제공

  (3) 마을공유센터 : 마을 단위에서 공유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장비, 기술, 재능, 공간 등에 대한 공유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을 돕는 센터 설치. 마을화폐 활용 가능

  (4) 마을자산은행 : 마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창업공간제공을 위한 마을자산은행을 설립하여 공동체소유권(Community Ownership)을 기반으로 자립기반 확보 및 참여의 장 확대

공약 4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먹거리의 공급체계가 세계화, 산업화되면서 식품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각종 화학첨가물, 유전자조작식품, 공장식 축산의 부작용,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기술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오염이 최근 새로운 먹거리 위해요인으로 떠올랐다.

목표

- 식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밥상에 오르기까지 식품안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업체 영업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과학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 급식의 질적 향상과 관리 강화,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범위 확대, 식생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한다
- 장기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리를 축소하고 통합·연계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 직판장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만든다.

이행방법

-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하기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를 만들고 실행한다.
-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자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 보장,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등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 개념을 확산해 나간다.

공약 5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자치는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본래 뜻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때에 지방자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 지방자치는 각종 부패와 비리에 찌들어있고, 소수 지역기득권 세력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환경파괴, 예산낭비, 주민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주민들 참여 또한 가로막혀 있다.

목표

- 주민들이 가깝게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고, 지방의회 기능을 정상화한다.
- 선출된 대표자들의 독선과 전횡,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는 지역기득권 세력의 개발주의, 성장 지상주의에 제동을 걸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녹색전환을 이룬다.

이행방법

- **주민참여예산, 토건예산감축 목표제 등 지방예산 혁신 · 공무원 인사혁신** : 추첨제 등을 통한 투명한 참여위원을 구성하고, 지자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주민공모와 참여예산위원 심의를 거쳐 편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비 예산의 총량한도를 설정하고, 이것을 매년 10% 이상씩 줄여나가는 '토목예산 감축목표제'를 시행한다. 낭비성예산에 대한 시민감사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자체 인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을 전부 민간위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임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한다.
- **주민자치위원회 개선을 통한 읍.면.동 풀뿌리자치 강화** : 관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주민들이 선거 또는 추첨으로 선출한 위원을 위촉해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견수렴, 읍.면.동 단위로 배정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를 할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 **이권과 부패로 물든 지방의회 개혁** :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기회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나 감사가 끝난 이후에 주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논란이 되어 온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결과보고를 투명하게 한다. 또한 지방의회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나 의정공통경비에 대해 공개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누구나 영수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회 내에 의정자료실을 설치하고,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계획과 용역보고서 등을 비치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한다. 지역구 예산나눠먹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밀실 예산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를 할 때 계수조정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경상남도

공약 1 탈핵 · 에너지전환 공약 – 밀양을 위한 약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회 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핵발전,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전기요금과 유류요금의 역전으로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력소비에 맞춰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전력생산과 송전선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발전설비 중 핵발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것을 결정함. 이로 인해 고리, 울진, 월성에 신규 핵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삼척과 영덕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갖고 있음.
-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수명지난 핵발전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정부가 탈핵 ·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생산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더불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시로 송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밀양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짐을 덜기 위해서는 분산형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밀양을 위한 공약〉을 준비해야 함.

정책의 목표

-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 · 에너지전환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함.

-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냄.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
-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
-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 · 중 · 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 확대

주요정책 1.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 내용
  -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음.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음.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3%로 타 지역에 의존해 전력을 소비하고 있음. 이에 밀양에 지운 과도한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지자체는 탈핵 · 에너지전환도시 선언과 종합계획 수립, 탈핵 · 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관련 부서 인력 배치가 필요함.
- 세부 공약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 2012년 2월, 46개 기초지자체에서 탈핵 · 에너지전환 도시선언을 했음. 이후 선언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이 진행됨. 지자체장의 탈핵 선언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녹색당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공약으로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약속.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지역에너지 계획)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및 조직을 마련해야함.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전력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지역 내 에너지 소비 각 분야에서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지역에너지 조례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해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함.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시민위원회 구성 : 탈핵 · 에너지전환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주민, 지역노동자, 시민단체가 협동해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참여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시민(도민) 참여 법제화(시민주주) : 장기적으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시영 또는 도영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공사 설립에 시민 참여를 법제화해 보장함. 지역에너지공사는 지자체의 탈핵 · 에너지전환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기관이자 에너지부문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함. 사례)제주도가 제주에너지 공사를 운영하고 하고 있음.

주요정책 2. 에너지 저소비 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내용

- 산업단지가 속한 지역의 경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 단체들에게도 열린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지역과 에너지효율적/친환경적인 생산유통 과정을 만들고,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산업체가 밀집한 공단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단위의 주요 에너지 소비는 건물부문에서 발생함. 따라서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도시계획상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이 들어서지 않도록 조례 제정. 조명, 냉난방,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세부 공약

- 조명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자연채광, 적정조명, 장소에 알맞은 조명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업건물에 조명에너지 효율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를 받은 건물에서 자연채광과 LED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마련함.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택에너지 단열사업 확산을 위한 무료 건물 진단사업 : 주택단열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마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노후 주택에 대한 전기/열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에너지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 조명, 냉난방, 조리, 교통 등 도시에서 에너지가 쓰이는 각 분야별로 에너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서비스센터를 구축함. 지역에너지센터의 에너지 서비스가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는 시민은 물론 노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주요정책 3. 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내용

- 탈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대도시의 경우 지역 내 생산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조사하고,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자원등 지역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해야 함.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제주도의 바람자원의 공유화 개념을 담은 '공풍화' 제도도 바람직함.

세부 공약

- 행복태양광 : 시민참여형 행복태양광사업으로 태양광협동조합을 확대함. 철도부지, 전철역사, 학교 지붕을 적극 활용함. 200W 미만의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여 다양한 용량의 태양광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사례: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 :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만들어 차량 연료로 활용.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최대한 폐식용유를 수거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생산을 늘리며, 수거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바이오가스 활용 : 음식물, 하수종말처리장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열병합 발전으로 활용함.
- 적정기술 활용 : 농촌지역의 경우 햇빛온풍기, 건조기, 고효율난로 등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지역주민들이 지역재료를 활용해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기술 활용과 보급에 지원해야 함.

주요정책 4. 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내용

-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개념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대안 모델로 확산해나가야 함.

- 세부 공약
  - 에너지복지 조례 제정과 에너지빈곤 지원 정책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에 대비해 모든 시민들에게 적정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 에너지빈곤 계층에 대한 주택단열 개선사업을 통해 주거와 에너지빈곤문제 동시 지원. 복지관을 통한 에너지빈곤 실태 조사와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 마련.
  -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함.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단계 에너지 교육과 절약, 2단계 효율화 사업, 3단계 에너지 생산으로 단계별 지원 제도 마련.
  - 마을에너지진단사 양성 : 우리 동네 보육반장과 같이 우리 동네 에너지반장(통장) 모집하여 동네사람이 마을 에너지 진단.
  - 동네에너지 슈퍼마켓 확대 : 멀티탭, LED, 단열 필름 등 지역주민들이 에너지를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보급하고 확대함.

주요정책 5.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 내용
  - 원자력문화재단의 핵발전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금지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을 목표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교육제도화와 확대. 학교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신개축하며,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장이 되도록 함.

- 세부 공약
  - 시민 탈핵학교 운영 : 시민평생교육과 민방위훈련 등 다양한 시민교육에 에너지 교육 반영.
  - 초중고 학교 건물 단열개선 사업과 에너지 교육 강화 : 교육청과 협력해 에너지효율이 낮은 초중고 학교 건물에 대한 건물단열개선 사업, 태양광지붕을 임대하거나 직접 설치하는 학교에 대한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지원금 제공.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에너지 전환 교육과 활동 지원.
  - 환경에너지센터 운영 : 노원구 에코센터와 서울시 에너지드림센터와 같이 지역에서 다양한 에너지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교육센터 마련과 운영.

공약 2 생명권 공약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

정책의 필요성

- 우리는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물들이 모피 생산으로 희생되거나 실험에 활용되는 등 생명을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공장식 축산, 열악한 동물원 환경, 버려지는 반려동물 등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여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고양이들이 길에서 힘겹게 살다 차에 치이거나나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동물들에게 전달되면서 학대당하는 동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동물들의 고통이 우리 공동체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동물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 공동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동물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보살피고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가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인권운동이 생명권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목표

-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도 동물권 전담 조직과 시민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마련해 실행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길고양이에 대한 TNR 사업을 진행하되 TNR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들을 위한 구조시스템과 동물보건소,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해 동물들의 안락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초 · 중 · 고등학교에서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차에 치여 죽는 동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로드킬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대형마트, 동물병원, 애견 숍을 대상으로 동물유통판매금지 조례를 제정해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운영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열악한 동물원을 동물복지를 고려해 강화하고, 동물복지농장이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권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동물들과 공존하는 마을 만들기

내용

-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동물권 관련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민들과 함께 풀어갑니다. 동물과 공존하는 마을만들기는 대립이 아니라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동물에 대한 선호(좋아하거나 싫어함) 여부를 떠나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며,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며 개선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세부공약

-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협동으로 협의체 구성 : 길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이라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갖고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우수사례로 일본 신주쿠 지역이 있습니다. 신주쿠에서는 주민회에서 TNR 실시와 고양이 화장실, 고양이 먹이 등을 관리합니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을 배려해 먹이를 준 즉시 주위를 치우고, 고양이 대소변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매일 갈아줍니다. 길고양이가 144마리에 달하던 이 마을은 중성화 수술과 주민들의 지속적 관리로 3년 사이 30마리로 개체 수 감소에 성공했습니다.
- 길고양이급식소 확대 :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지역캣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주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동구가 처음입니다. 이런 노력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 길고양이 TNR 사업 확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TNR 사업을 진행합니다. TNR사업 예산을 늘리고, TNR 사업이 인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지자체산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과 동물권 전담 조직 마련, 동물 등록제 충실한 시행 : 현 동물보호법 제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와 도에 두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에는 동물보호의 관점에 충실한 활동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고양시가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2014년 1월 1일) 되었습니다. 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동물실험 금지, 생명보호 교육 의무화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진행합니다.
- 단체급식의 채식메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추구권과 선택권 보장 : 우유 강제 급식을 금지하고 두유 선택 등 타 음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로드킬 방지와 대책마련 :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도로를 재자연화 합니다.

주요정책 2. 동물 생산과 거래 제한 정책 마련

내용

-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반려동물을 돈으로 쉽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쉽게 사고, 쉽게 버리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명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입양센터를 통해 입양률을 높입니다.

세부공약

- 대형마트, 동물병원, 애견 숍 동물유통판매금지 조례 제정 : 휴일도 노후도 보장받지 못하는 전시동물들,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는 대형마트의 동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지자체 조례로 동물유통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합니다.
- 파피밀 관련 산업 규제 조례 제정, 유통허가제 실시, 관리 강화 : 반려동물 번식업 및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판매업 및 번식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무등록업소를 단속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센터 관리 강화와 유기동물 구조시스템 마련 : 동물보호센터는 직영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감시협의체를 구성해 정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기동물이 식용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유실동물의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유기동물구조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동물보건소 운영 : 시군구 단위 동물보건소 운영하여 기초접종 및 등록제를 전담하게 합니다. 보건소는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민간영역에서도 마포에서는 마포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과 같이 협동조합형 동물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입양센터 운영 : 동물보호센터들이 구조와 입양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에서 구조와 입양을 분리합니다. 유기되어 보건소에서 기본 접종 및 치료가 끝난 동물을 보살피며, 입양 활성화로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례로 서울시는 과천 서울대공원에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3.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내용
  -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동물들이 학대받고 있습니다. 지지체의 신규 동물원 설립을 억제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 세부공약
  - 열악한 동물원 시설개선 방안 마련 :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동물 복지를 개선합니다. 동물원 예산 확충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동물 고유의 생태를 고려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번식 및 개체 관리를 위해 소유, 양도, 판매, 폐사 기록을 공개합니다. 동물전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동물 체험 시설을 규제하고 동물 학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4. 동물복지농장 확대와 지원

- 내용
  - 동물복지 농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7일 전북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3월초 현재 약 700만 이상의 닭과 오리가 죽었습니다. 녹색당은 감염되지도 않은 생명을 죽이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 정부는 국내 첫 동물복지축산농가인 충북 음성 동일농장이 AI 확진 농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녹색당은 조류인플루엔자의 근본원인은 공장식 축산이며, 동일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당은 공장식 대량축산 방식을 반대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 농장을 확산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 세부공약
  -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장려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공공기관 식당의 동물복지축산물 사용 의무화 제도를 마련합니다.

공약 3 먹거리 공약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겠습니다"

정책의 필요성

- 먹거리의 공급체계가 세계화, 산업화되면서 식품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학첨가물, 유전자조작식품, 공장식 축산의 부작용,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기술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오염이 최근 새로운 먹거리 위해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 식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밥상에 오르기까지 식품안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업체 영업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검증을 통해 위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급식의 질적 향상과 관리 강화,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범위 확대, 식생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리를 축소하고 통합·연계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 직판장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의 목표

-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하기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자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 보장,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등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 개념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0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과 시행

- 내용
  -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합니다. 녹색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세부공약

지역별 시민참여형 식품방사능안전감시센터 설립 추진

- 방사능안전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여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참고) 울산 북구청은 무상급식 전반을 책임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방사능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겸하도록 하는 등 식품방사능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 각 시도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식품 방사능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참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민대상 국내유통식품 방사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기준 강화 및 상시 오염도 측정(방사능 등)
- 일본산 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체계 및 시스템의 구축
- 국내 핵발전소 인근 해역과 어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정밀 조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 · 개정과 실행 추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청(소)년들의 위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역체계를 수립합니다.
- 학교급식조례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공공급식까지 식품방사능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의 제정 및 시행을 확대합니다.
- 일본산 식품의 학교 등 급식 사용을 배제하고 방사성 물질 함량 측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 · 시스템을 마련하며 시민감시위원회 구성, 영유아~청소년 급식에 대한 방사능 관리기준

치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합니다. 더불어 방사능 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식품에 대한 대체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 방사능 농축과정에서 2차 오염이 예상되고 종자 등 화훼 · 비료 · 사료 등의 경우 무분별하게 검사 없이 들어오고 있어, 관련 항목에 대한 일본산 방사능검사 실시와 국내산에 대한 검사 · 관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 급식전달체계 내, 수산물 이력제의 제도화와 수산물 원산지 감시 · 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생산 · 유통업 피해 최소화

- 방사능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도와 무관하게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시 생산 및 유통업자 등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방사능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자발적 참여 지원 및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출 시 제도적 보상과 품종 전환 등 특별지원책 마련합니다.
- 식품 관련 생산 · 유통업자에 대한 방사능식품위험성 교육 의무화,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 5인 이상 지원시스템 등을 이용, 방사능안전식품협동조합을 만들어 방사능식품검사체계를 갖추고 로컬푸드(지역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지역사회 시민참여형 먹거리 안정망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정책 2. 유전자조작(GMO), 식품첨가물로부터 안전한 밥상

내용

- 우리나라는 GMO 재배 상용화를 허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작물 전부가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이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47곳에서 GMO 작물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iv), 국립환경과학원)
- GMO란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일컫는 말로 상품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한 작물 또는 식품을 말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함량 순위로 따져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일 경우에도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식품업체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의 GMO를 사용하면 GMO가 들어갔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작물 가운데 7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점과 당국의 관련 정보 비공개로 어떤 기업이 식용 GMO를 얼마나 수입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밀의 경우, 우리나라는 98.3%를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50%는 미국산으로, 2013년 5월말 미국 오레곤주의 GM 밀(몬산토가 개발, 2004년 USDA 미승인 품목)이 수입되었음을 미 농무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 이처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GMO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GMO수입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식약처가 GMO 수입 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차단되고 있습니다.
- 특히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침이나 기준 및 권고사항 조차도 없습니다.

● 세부공약

GMO와 첨가물로부터 안전한 안심먹거리 지원정책

-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확대에 관한 '식품법' 개정 요구
- GMO 자생 실태에 대한 점검과 수입 GMO에 대한 상시조사 및 체계
-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 상관없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 식품관련 위법자 가중처벌 및 식품안전 기준 강화
- 저소득층과 어린이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
-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을 체계화
- 지역단위의 식품안전 정보 구축 및 소통 시스템 활성화
-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의 확대

주요정책 3.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동행

● 내용

- 농업과 생태위기 등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여러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을 장려해왔습니다.
- 이를 통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가 먹는 밥이 농민, 농촌, 농업이 없다면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도시농업은 여전히 고지가, 농지전용, 농지 임대차 등에 의한 경영불안, 텃밭 공급부족(도시계획 공약 4번째 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참고 http://kgreens.org/89693)과 수입 상토와 시판 비료에 의존하는 소비적인 자원의 활용으로 도시의 토양 기능을 상실시키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을 경험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과 동시에 도시에 귀중한 자원인 빗물, 낙엽, 농산물 부산물, 음식물을 농사에 자원화 하는 도시순환 자립의 농사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흙과 물을 살리는 농사방법의 개선과 대안을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 확대 (지역 귀농자 지원, 농산물 나눔 장터 정례화) :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지원

공공텃밭 확보, 텃밭교육 및 텃밭보급을 담당할 '지역 텃밭센터' 설립 : 경작지 확보와 도시농업 실천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확대(조사, 연구 및 개발, 보급)

- 도시농업 공간 확충, 도시순환농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홍보강화
- 텃밭 이용자의 올바른 농사(도시의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적인 도시농업)교육
- 건물 옥상텃밭화 관련 법안 제정
- 학교에서 생태텃밭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농민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강화

주요정책 4. 마땅히 누려야할 먹거리 기본권 향상

● 내용

- 지난해 녹색당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집급식 수산물원산지를 파악하는 곳이 겨우 3곳뿐이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우려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점검은 부실한 상태입니다.
-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먹거리도 사회적 차별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권은 지역에서부터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녹색당은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능력(로컬푸드 장려)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질 좋은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세부공약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 학교 급식 식재료는 로컬푸드(지역농산물) 공급을 장려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비 사용실태 공개 (급식비 사용 비율 중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및 원산지 표시 공개)
-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재료 원산지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원산지 표시 공개를 권고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 학교, 군대, 교도소, 시설, 병원, 공장 등 단체급식의 채식매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 추구권과 선택권을 보장
- 우유 강제 급식을 금지하고 두유 선택권 보장
- 제철음식과 로컬푸드(지역농산물)을 채식식단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에 인센티브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 최소한의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소득 보장
- 기초 및 광역 공공급식 지원센터 지원
- 취약계층 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취약시설 급식관리 강화
- 저소득층 노인무료급식 프로그램 개선
- 꿈나무 카드(결식아동 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가맹 식당 지원 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
- 올바른 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공약 4 농업 공약 –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녹색당 농업정책의 의미

◉ 농업의 위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지와 농민과 농촌사회의 심각성을 나열합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농업'과 '농민'에 빌붙어 밥벌이 하는 전문가들의 장난질이 심하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농정의 고위 담당자이기도 해서입니다.

- 나라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지방정부도 대안을 내 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 구태의연한 문제의 나열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 농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사고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여러 통계지표들이 전문가들의 이런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슨 말을 들어도 암담하기만 한 게 농업현실입니다. 익숙한 호들갑에 불과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가공과 서비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6차 산업 전략은 1차 산업에서 고생은 농민이 하고 나머지는 공업자본의 몫으로 될 공산이 큽니다. 쏟아지는 각종 농민 지원금은 금융자본의 배를 불릴 것입니다.
- 녹색당은 농민 기본소득제를 주장합니다. 재원 마련방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발상의 바탕에는 바른 농업은 사회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 녹색당은 우선 그 실현의 주체와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허공에 삿대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청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 스스로 주장하는 바대로 살고, 그 삶의 공동체를 마을과 지역에서 구축하며 지방정부와 국가 정책으로까지 채택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의 목표

- 기본농지 : 농지를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민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농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하여 농지가 절대 사적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 건강농민 : 농촌의 생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통, 난방, 의료, 농업에너지 부문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촌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민들도 도시적 소비의 유혹을 넘어서서 몸의 건강 뿐 아니라 따뜻한 농촌공동체의 구성으로 삶 전반의 건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식량농정 : 농정의 핵심은 식량자급입니다. 더 나아가 곡물자급입니다. 그것도 친환경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양가만 높은 쓰레기만도 못한 먹을거리들을 다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환경귀농 : 적극적인 귀농정책으로 농업인구를 늘립니다. 이는 소농정책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농촌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와 꿈을 농촌에서 펼칠 수 있게 합니다. 귀농인들이 처음부터 못된 돈벌이 농사에 빠져들지 않도록 친환경 농사를 소개 합니다. 헛된 돈벌이 농사에 빠져 땅 망치고 자연 망치며 소비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귀농은 농민기본소득제와 맞물려 원활 해 질 수 있습니다.

- 자립자치 : 자립하는 삶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농촌에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고,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원합니다.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분명해 지도록 농민 스스로 다양한 이익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도록 농업회의소나 면 단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합니다.

농업 주요정책과 세부 내용(5대 주요정책, 17개 세부공약)

주요정책 1. 기본농지의 확보

- 문제의식

농지문제는 농지 규모문제, 소유문제, 질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축소와 반농업 시설의 건축이 아주 심각합니다. 농사지을 땅이 줄어드니 곡물자급률이 날로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땅마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은 화학약품 오염(복합오염)과 영양오염입니다. 우리 농지의 과다한 영양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시디,OECD)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 세부공약

농지 최소 유지를 법률로 강제

- 국가단위와 광역지방정부 단위에서 각각 농지의 최소 유지 규모를 법률로 제정
- 최소 규모라 함은 연차별 곡물자급률 달성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음
- 농지 전용을 엄격히 통제. 농지전용부담금 상향 조정

토지공개념의 도입

- 비 농업인의 농지 소유 엄격 제한과 농민소유 강화
- 농가 가족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농지의 무상 임대 확대
-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 기업농에서 가족소농으로 농지은행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농지관리체계 강화
- 다양한 농업공동체와 농지은행의 농지 소유 확대
- 절대농지의 국가매입과 가격 동결

농지 오염 방지

- 농기계 사용과 시설농업의 제한으로 농지오염 방지
- 농지소유의 상한선 설정하여 토지 집중과 무분별한 단작대량재배 억제

주요정책 2. 건강농민 유지

문제의식

우리나라 농민은 절대인구 감소, 노령화, 소득감소, 건강과 교통, 복지 등 생활권 취약, 농가부채 등이 전통적인 과제로 거론됩니다. 소득 감소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도농소득격차는 매년 커져 10년 사이에 97%에서 69%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농농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상하위 20% 소득인구의 소득격차를 비교하는 5분위 소득비율이 도시는 5.8배인데 비해 농촌은 12.1배입니다. 10년 전에는 6.3배였으니 두 배가량 더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은 3배, 농가부채는 6배 증가했습니다. 이 나라 농업정책의 산물입니다. 농민 소득의 불안정은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탄력적이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여기에 농촌의 도시 모방소비 풍조의 문제, 농민들의 농민의식 상실 문제까지 다룹니다. 건강한 농민이 농업의 중심입니다.

세부공약

농민기본소득제의 실시

- 농업의 공공재 역할을 실현하는 농민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장
- 각종 급여성 농업지원금 통합
- 도시인구의 농업 이전 촉진

농가 소득 보장

-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 쌀 목표가격 인상
- 각종 직불금 확대 : 조건불리, 경관조성, 밭직불금, 친환경 등
- 국민연금 지원 대상 기준소득금액 인상(현행 8만 5천원)

소농의 육성

- 소농은 안전한 식량 공급의 원천이므로 자연재배와 유기재배를 지원
- 기본소득제의 우선 시범 적용
- 소농 개념 정립 : 소규모, 인력과 축력, 비동력 농기계나 소형동력 농기계 중심
- 여성 농민 육성

착한 소비와 농촌복지의 확대

- 친환경 제품의 농민소비 지원
- 농민 소비재 면세 대상 확대
-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마중버스,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 농촌지역의 버스는 낡은데다 배차간격이 길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홍천군, 청양군, 괴산군, 당진시에서는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요금제가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지형적 특색을 고려하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산시에는 소형버스를 마을버스처럼 운영하는 '마중버스'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참고: 녹색당 도시계획 · 교통 공약)
- 농가주택 난방대책 : 농촌의 높은 난방요금은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폐지해서 등유로 난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소세 폐지는 중앙정부의 결정권한이므로 지자체에서는 낡은 주택에 대한 단열 개선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농촌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보조난방기구 활용과 더불어 소형태양광과 태양열온수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주군에서는 농촌에 적합한 〈로컬에너지〉정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3. 식량농정

문제의식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자동차 삶아서 먹을 수는 없다'는 말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농식품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정한 2015년의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9% 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실적은 22.3%입니다.

끔찍한 이 결과치에 정부는 눈도 꿈쩍 않고 한-캐나다 에프티에이를 졸속 체결하더니 한-중 에프티에이도 강행할 태세입니다. 식량자급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놓고도 이에 역행하는 농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축산만 커지고 있습니다. 농정부처 이름도 농'축산'식품부로 바꿔버렸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대량 살육을 일삼는 밀집축산은 국토를 해치고 사람의 건강마저 해칩니다.

농업부문 전문 관료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면서 각종 농업기구를 순회하며 수십 년간 이

나라 농업을 절단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경제연구원의 전임연구원이 버젓이 정부기관에 파견되듯이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의한 대한민국 농정은 농촌사회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오늘날 농촌현실은 이런 농정의 산물입니다.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큰 틀을 시급히 만들 때입니다. 고투입방식의 자원고갈형 단작농업에서 저투입방식의 자원보전형 생태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농업 수취형 이득산업의 이익반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은 그 이득의 일정 비율을 농업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비닐, 농기계, 석유, 유통, 식품업, 각종 운반수단, 기타 농자재 산업의 농업기여 납부제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제도를 농업먹거리특위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세부공약

식량자급 순차적 실현

- 농산물 수입의 엄격 제한 - 쌀 관세화 유예
- 친환경 자급 농산물 순위제 실시
- 농사 씨앗보호와 자가 채종 토종씨앗 보전
- 쌀 100% 자급 실현을 위한 논 직불금 조건 완화

석유의존 농사의 극복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날로 심화되는 농사방법 극복
- 생태조화 자연재배 농법의 보급과 개발
- 자연재배와 유기재배 소농 적극 지원
- 건강한 밥상의 기본전제가 되는 식품의 이동거리제한제도 도입
- 적정농사기술의 개발

육식산업과 빌딩 · 시설농업에 대한 환경대책 마련

- 지역별 농사 부산물량 기준 및 지역 환경 수용 이내의 축산규모제 도입, 축산, 도축 등 육식산업에 환경부담금 부과 검토
- 축산농가 전업 지원제 실시
- 빌딩농업과 시설유리온실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마련

협동적 생산체계 구축

- 생산과 소비의 지역화 체계 구축
- 품목별 광역 영농조합 구성 권장

주요정책 4. 환경귀농

문제의식

귀농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가는 귀농자 수에 언론이 주목합니다. 어떤 이는 문명의 전환 징후라고 하기도 합니다. 농촌과 농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태순환의 환경귀농이 되도록 안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탱 할 수 있는 임계점에 이른 우리의 농촌은 도시의 생활습관과 도시의 소비방식이 이전되어서는 감당 불가능합니다. 농촌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또 다른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도록, 시설 투자비가 싼 지역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환경생태 인식으로 귀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은 환경농업 종사자와 단순 비농업분야 종사자가 구별되어 선택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착에 필요한 농사지을 땅과 집을 빠르게 알선하고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귀농이 유리하도록 농촌에 젊은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결혼과 출산이 용이하도록 육아지원과 교육기반의 확충이 있어야겠습니다. 일률적인 제도화 보다는 최근 귀농인들의 지향에 맞게 자율적인 가정학습과 자연교육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의 교통문제, 주거문제, 대기문제 등의 해결에도 귀농정책은 유효합니다.

세부공약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지원

- 귀농교육 기관 지원. 분야별, 지역별, 작목별 교육으로 분화
- 귀농 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멘토링 제도 확충
- 청년귀농 전문 기관 설립
- 각 지자체 귀농지원센터간의 연계
- 출향인 초청행사를 통해 귀향 촉진

귀농인의 생태정착 지원

- 귀농자의 조직화 지원 : 귀농자 개인보다 귀농단체의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생태농업 교육 지원딱지 발급
- 귀농 농가의 가족수에 따른 지원 차등화

토착민과 귀농인의 유대화합 지원

- 토착민과 귀농인의 지속적인 공동사업 지원 - 친목, 전문영역, 영농 등
- 단발성 공동행사 후원

주요정책 5. 자립자치

문제의식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나서 그 역사가 25년에 이르지만 여전히 새로운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훨씬 심각합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이 취약한 농촌은 시민단체도 언론도 없기에 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 비리가 일상화 된 형국입니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기본권 강화, 지역 정부의 재량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원과 보조에 의존하다 보면 자립능력이 자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치와 자립역량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생활형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민생활 밀착형 마을언론 설립, 지역 교육네트워크의 구성, 학교 및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에 친환경지역 농산물 공급구조 마련 등이 다 자치와 자립의 영역입니다.

세부공약

농촌공동체 구성과 운영 지원

- 각종 농업형 협동조합의 설립지원과 운영지원
- 자발적인 주민자치 조직 육성
- 농민의 집과 주민 자치 단위 만들기. 농민의 집을 거점으로 식.의.주.의료.교육,학습 등 여러 주민자치 단위 구성 및 연대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컨텐츠 개발보급
-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지역활성화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농업회의소 등)

읍·면의 자치권 강화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 읍.면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는 시.읍.면 자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동네 이장도 주민이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의 조례가 면장에게 임면권을 주고 있어서입니다. 주민은 마을투표를 할지언정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취미교실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행되게 해야 합니다.

지역 협치

- 농업회의소 전국 확대와 바른 운영지원
-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청구 등 '주민기본권' 보장
- 주민 자발적 마을언론 매체 창간과 운영 지원

- 농민이 자긍심과 보람을 키우는 자치조직 구축
- 농촌에 사는 노인농민 지원 방안 수립

공약 5 자치 공약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

정책의 필요성

- 지방자치는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본래 뜻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때에 지방자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 지방자치는 각종 부패와 비리에 찌들어있고, 소수 지역기득권 세력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환경파괴, 예산낭비, 주민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참여는 가로막혀 있습니다.
- 지방자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제도 혁신, 주민참여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목표

- 주민들이 가깝게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고, 지방의회 기능을 정상화한다.
- 선출된 대표자들의 독선과 전횡,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는 지역기득권 세력의 개발주의, 성장 지상주의에 제동을 걸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녹색전환을 이룬다.

지방자치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8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5·16 군사쿠데타로 왜곡된 지방자치 틀 재정립

- 내용
  - 1952년부터 실시되던 지방자치는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부활했지만, 제도적 결함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23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에서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농촌지역에 맞는 지방자치 틀 정립 : 5·16. 군사쿠데타 이전 기초지방자치는 시.읍.면 단위 자치였습니다. 읍의회, 면의회가 있었고, 읍장과 면장을 직선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선거를 폐지하고, 읍.면 자치단위를 군(郡)이라는 행정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도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위는 군(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군(郡)은 인구나 면적이 지나치게 큰 편입니다. 일본은 시.정.촌 단위로 기초지방자치를 해왔고, 정.촌은 읍.면과 비슷한 단위입니다. 유럽도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규모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실제로 한 군(郡)내에서도 읍.면별로 지역적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에도 읍.면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위가 군(郡)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하부행정조직에 불과하므로 지역특성이 무시된 탁상행정이 이뤄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고, 농촌지역에 맞는 지방자치 틀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중단 :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편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구규모가 21만 5,000명을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통합되는 지역이 주변부화 되고 지역 내 집중현상을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방식 개선 :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읍.면장) 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각각 다른 날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1991년 부활한 이후 1995년부터 모든 선거를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시기가 전국적으로 동일할 이유가 없고, 광역선거와 기초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의회선거를 동시에 치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동시지방선거는 정당별로 기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투표방식과 맞물려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선거 종류별로 선거 일자를 달리한다든지, 지역별로 선거 일자를 달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정제도 전면개선

내용

- 2000년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의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활용되지 못하는 주민참여제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세부공약

주민소환투표시 투표율 하한선 조항 폐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기도 하남시장, 과천시장, 강원도 삼척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졌지만, '투표율이 3분의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개표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환대상자가 소환대상이 되는 때부터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운동을 벌이고, 투표에 참여하기 힘든 지역분위기를 조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투표율 하한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환대상자가 소환반대운동을 벌이지 투표불참운동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투표율 하한선 조항 때문에 주민소환투표가 번번이 무산되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투표율 하한선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주민투표제도 실효성 강화 : 주민투표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발의하려면 발의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주민투표청구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에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쇄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에 주민들의 서명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뤄진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민들의 서명에 의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시장이 주도했던 사례인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외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민투표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전면개정해야 합니다.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폐지 또는 전면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소송제기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주민소송을 하려면 집단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처럼 한명의 주민이라도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합니다.

주민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지연 또는 부결시 주민투표 회부 :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그나마 활용도가 높은 주민발의의 경우에도, 지방의회가 발의된 조례안의 심사를 지연하거나 부결시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발의된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3. 주민참여예산, 토건예산감축 목표제 등 지방예산 혁신·공무원 인사혁신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무늬만 주민참여'인 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는 여전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둘러싼 부패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사용도도 떨어지는 건물을 짓는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 인사를 둘러싼 부패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부공약

추첨제 통한 투명한 참여위원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제 전면개선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위원 구성단계부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누구에게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면 추첨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공모절차 없이 추첨으로 위원선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모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런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소수의 시민들만이 공모절차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떼어 내어 주민공모와 참여예산위원 심의를 거쳐 편성하

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500억 원의 예산을 시민공모와 참여예산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을 시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예산 정보공개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별로 예산편성과정부터 집행까지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누구나 영수증을 볼 수 있도록 비치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관례적으로 편성되는 공사예산, 토목예산 비중이 큽니다. 이런 예산들을 줄여나가야만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시설비 예산의 총량한도를 설정하고, 이것을 매년 10% 이상씩 줄여나가는 '토목예산 감축목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기 재정계획'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이나 행사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시행하는 '투.융자심사' 단계에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들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낭비성예산에 대한 시민감사시스템 마련 :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여비,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홍보예산 등 관례적으로 낭비되는 예산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정보를 요구하고 잘못을 발견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수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일정비율을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방인사시스템 혁신 :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가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를 둘러싼 부패, 불공정이 심하고,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전부 민간위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임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사생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4. 주민자치위원회 개선을 통한 읍.면.동 풀뿌리자치 강화

내용

-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에 불과하고 위원 위촉권도 관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대부분 문화센터기능에 그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자치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읍.면.

동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상급행정기관에서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네일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자치의 가장 기초단위가 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가 큰 한국에서는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주민자치위원 대표성 확보 : 관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주민들이 선거 또는 추첨으로 선출한 위원을 위촉해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성이 확보되어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읍.면.동 단위로 배정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읍.면.동장 임명에 주민의견 반영 :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를 할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교체, 지방자치단체장 눈치 보기 같은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5. 이권과 부패로 물든 지방의회 개혁

● 내용

- 지방의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지방의회가 사용하는 예산부터 부패와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에 자료실을 설치해 주민들이면 누구나 의회 및 행정에서 취급하는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방청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지방의회 예산 ·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참여 보장 :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기회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나 감사가 끝난 이후에 주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의회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수렴하고, 예산심의 전에 예산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온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예산 투명성 확보 : 논란이 되어 온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결과보고를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나 의정공통경비에 대해 공개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누구나 영수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부에 대해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재량사업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정자료실 운영 및 회의방청 편의 최대한 보장 : 지방의회 내에 의정자료실을 설치하고,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계획과 용역보고서 등을 비치해 주민들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의회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의 회의방청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산심의시 계수조정과정 공개 : 지역구 예산나눠먹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밀실 예산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를 할 때 계수조정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공약 1	핵발전에서 벗어나 재생가능 에너지로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약 2	도시는 안전하고 동물과 공존하며, 장애인과 소수자도 평등한 세상을 원합니다.
공약 3	경쟁과 과로에서 벗어나 상생하는 경제, 누구나 직접 참여하는 정치
공약 4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5	방사능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약 1 역 주변 장애인/자전거 이동권 보장

- 교통사고 발생률, 사망률 전국 1위 도시 인천! 길을 건너려면 먼저 지하도부터 찾아야 하고, 또 지하도에 들어가면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지 몰라 헤맸던 경험 많으셨죠? 부평역, 주안역, 동인천역, 석바위 지하상가 부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2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

-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과 노인, 아이들과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물 설계 입니다. 인천에는 아직 휠체어가 다니기에 계단과 턱이 너무 많습니다. 공공시설, 주택 등에 적용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인천이 안전하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3 인천-영종도 공항고속도로 무료도로화

- 인천공항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종도. 이곳에 사는 시민들과 공항 노동자들에게는 소중한 삶터이자 일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종도를 오가려면 자동차건 기차건 반드시 값비싼 통행료를 물어야 합제 3연륙교 착공을 앞둔 지금, 영종대교를 무료도로로 바꾸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인천시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크게 높이겠습니다.

공약 4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례제정

- 인천에는 게이와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들이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없습니다. 인천 녹색당은 교육, 취업, 사회, 제도 전반에서 성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찾아내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인천

공약 5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 부양의무제 축소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많고 부양의무제를 통해 가족에게 복지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천 녹색당은 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수급을 받을 수 있고, 자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경제구조를 인천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약 1 농업 공약 –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녹색당 농업정책의 의미

- 농업의 위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지와 농민과 농촌사회의 심각성을 나열합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농업'과 '농민'에 빌붙어 밥벌이 하는 전문가들의 장난질이 심하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농정의 고위 담당자이기도 해서입니다.
- 나라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지방정부도 대안을 내 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 구태의연한 문제의 나열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 농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사고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여러 통계지표들이 전문가들의 이런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슨 말을 들어도 암담하기만 한 게 농업현실입니다. 익숙한 호들갑에 불과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가공과 서비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6차 산업 전략은 1차 산업에서 고생은 농민이 하고 나머지는 공업자본의 몫으로 될 공산이 큽니다. 쏟아지는 각종 농민 지원금은 금융자본의 배를 불릴 것입니다.
- 녹색당은 농민 기본소득제를 주장합니다. 재원 마련방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발상의 바탕에는 바른 농업은 사회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 녹색당은 우선 그 실현의 주체와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허공에 삿대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청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 스스로 주장하는 바대로 살고, 그 삶의 공동체를 마을과 지역에서 구축하며 지방정부와 국가 정책으로까지 채택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의 목표

- 기본농지 : 농지를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민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농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하여 농지가 절대 사적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 건강농민 : 농촌의 생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통, 난방, 의료, 농업에너지 부문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촌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민들도 도시적 소비의 유혹을 넘어서서 몸의 건강 뿐 아니라 따뜻한 농촌공동체의 구성으로 삶 전반의 건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식량농정 : 농정의 핵심은 식량자급입니다. 더 나아가 곡물자급입니다. 그것도 친환경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양가만 높은 쓰레기만도 못한 먹을거리들을 다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환경귀농 : 적극적인 귀농정책으로 농업인구를 늘립니다. 이는 소농정책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농촌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와 꿈을 농촌에서 펼칠 수 있게 합니다. 귀농인들이 처음부터 못된 돈벌이 농사에 빠져들지 않도록 친환경 농사를 소개 합니다. 헛된 돈벌이 농사에 빠져 땅 망치고 자연 망치며 소비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귀농은 농민기본소득제와 맞물려 원활해 질 수 있습니다.
- 자립자치 : 자립하는 삶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농촌에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고,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원합니다.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분명해 지도록 농민 스스로 다양한 이익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도록 농업회의소나 면 단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합니다.

농업 주요정책과 세부 내용(5대 주요정책, 17개 세부공약)

주요정책 1. 기본농지의 확보

- 문제의식

농지문제는 농지 규모문제, 소유문제, 질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축소와 반농업 시설의 건축이 아주 심각합니다. 농사지을 땅이 줄어드니 곡물자급률이 날로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땅마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은 화학약품 오염(복합오염)과 영양오염입니다. 우리 농지의 과다한 영양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시디,OECD)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 세부공약

농지 최소 유지를 법률로 강제

– 국가단위와 광역지방정부 단위에서 각각 농지의 최소 유지 규모를 법률로 제정

- 최소 규모라 함은 연차별 곡물자급률 달성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음
- 농지 전용을 엄격히 통제. 농지전용부담금 상향 조정

토지공개념의 도입

- 비 농업인의 농지 소유 엄격 제한과 농민소유 강화
- 농가 가족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농지의 무상 임대 확대
-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 기업농에서 가족소농으로 농지은행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농지 관리체계 강화
- 다양한 농업공동체와 농지은행의 농지 소유 확대
- 절대농지의 국가매입과 가격 동결

농지 오염 방지

- 농기계 사용과 시설농업의 제한으로 농지오염 방지
- 농지소유의 상한선 설정하여 토지 집중과 무분별한 단작대량재배 억제

주요정책 2. 건강농민 유지

문제의식

우리나라 농민은 절대인구 감소, 노령화, 소득감소, 건강과 교통, 복지 등 생활권 취약, 농가부채 등이 전통적인 과제로 거론됩니다. 소득 감소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도농소득격차는 매년 커져 10년 사이에 97%에서 69%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농농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상하위 20% 소득인구의 소득격차를 비교하는 5분위 소득비율이 도시는 5.8배인데 비해 농촌은 12.1배입니다. 10년 전에는 6.3배였으니 두 배가량 더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은 3배, 농가부채는 6배 증가했습니다. 이 나라 농업정책의 산물입니다. 농민 소득의 불안정은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탄력적이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여기에 농촌의 도시 모방소비 풍조의 문제, 농민들의 농민의식 상실 문제까지 다룹니다. 건강한 농민이 농업의 중심입니다.

세부공약

농민기본소득제의 실시

- 농업의 공공재 역할을 실현하는 농민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장
- 각종 급여성 농업지원금 통합
- 도시인구의 농업 이전 촉진

농가 소득 보장

-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 쌀 목표가격 인상
- 각종 직불금 확대 - 조건불리, 경관조성, 밭직불금, 친환경 등
- 국민연금 지원 대상 기준소득금액 인상(현행 8만 5천원)

소농의 육성

- 소농은 안전한 식량 공급의 원천이므로 자연재배와 유기재배를 지원
- 기본소득제의 우선 시범 적용
- 소농 개념 정립 : 소규모, 인력과 축력, 비동력 농기계나 소형동력 농기계 중심
- 여성 농민 육성

착한 소비와 농촌복지의 확대

- 친환경 제품의 농민소비 지원
- 농민 소비재 면세 대상 확대
-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마중버스,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 농촌지역의 버스는 낡은데다 배차간격이 길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홍천군, 청양군, 괴산군, 당진시에서는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요금제가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지형적 특색을 고려하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산시에는 소형버스를 마을버스처럼 운영하는 '마중버스'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참고: 녹색당 도시계획 · 교통 공약)
- 농가주택 난방대책 : 농촌의 높은 난방요금은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폐지해서 등유로 난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소세 폐지는 중앙정부의 결정권한이므로 지자체에서는 낡은 주택에 대한 단열 개선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농촌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보조난방기구 활용과 더불어 소형태양광과 태양열온수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주군에서는 농촌에 적합한 〈로컬에너지〉정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3. 식량농정

문제의식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자동차 삶아서 먹을

수는 없다'는 말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농식품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정한 2015년의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9%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실적은 22.3%입니다.

끔찍한 이 결과치에 정부는 눈도 꿈쩍 않고 한-캐나다 에프티에이를 졸속 체결하더니 한-중 에프티에이도 강행할 태세입니다. 식량자급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놓고도 이에 역행하는 농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축산만 커지고 있습니다. 농정부처 이름도 농'축산'식품부로 바꿔버렸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대량 살육을 일삼는 밀집축산은 국토를 해치고 사람의 건강마저 해칩니다.

농업부문 전문 관료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면서 각종 농업기구를 순회하며 수십 년간 이 나라 농업을 절단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경제연구원의 전임연구원이 버젓이 정부기관에 파견되듯이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의한 대한민국 농정은 농촌사회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오늘날 농촌현실은 이런 농정의 산물입니다.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큰 틀을 시급히 만들 때입니다. 고투입방식의 자원고갈형 단작농업에서 저투입방식의 자원보전형 생태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농업 수취형 이득산업의 이익반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은 그 이득의 일정 비율을 농업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비닐, 농기계, 석유, 유통, 식품업, 각종 운반수단, 기타 농자재 산업의 농업기여 납부제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제도를 농업먹거리특위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세부공약

식량자급 순차적 실현

- 농산물 수입의 엄격 제한 - 쌀 관세화 유예
- 친환경 자급 농산물 순위제 실시
- 농사 씨앗보호와 자가 채종 토종씨앗 보전
- 쌀 100% 자급 실현을 위한 논 직불금 조건 완화

석유의존 농사의 극복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날로 심화되는 농사방법 극복
- 생태조화 자연재배 농법의 보급과 개발
- 자연재배와 유기재배 소농 적극 지원
- 건강한 밥상의 기본전제가 되는 식품의 이동거리제한제도 도입
- 적정농사기술의 개발

육식산업과 빌딩 · 시설농업에 대한 환경대책 마련

- 지역별 농사 부산물량 기준 및 지역 환경 수용 이내의 축산규모제 도입, 축산, 도축 등 육식산업에 환경부담금 부과 검토
- 축산농가 전업 지원제 실시
- 빌딩농업과 시설유리온실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마련

협동적 생산체계 구축

- 생산과 소비의 지역화 체계 구축
- 품목별 광역 영농조합 구성 권장

주요정책 4. 환경귀농

문제의식

귀농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가는 귀농자 수에 언론이 주목합니다. 어떤 이는 문명의 전환 징후라고 하기도 합니다. 농촌과 농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태순환의 환경귀농이 되도록 안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탱 할 수 있는 임계점에 이른 우리의 농촌은 도시의 생활습관과 도시의 소비방식이 이전되어서는 감당 불가능합니다. 농촌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또 다른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도록, 시설 투자비가 싼 지역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환경생태 인식으로 귀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은 환경농업 종사자와 단순 비농업분야 종사자가 구별되어 선택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착에 필요한 농사지을 땅과 집을 빠르게 알선하고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귀농이 유리하도록 농촌에 젊은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결혼과 출산이 용이하도록 육아지원과 교육기반의 확충이 있어야겠습니다. 일률적인 제도화 보다는 최근 귀농인들의 지향에 맞게 자율적인 가정학습과 자연교육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의 교통문제, 주거문제, 대기문제 등의 해결에도 귀농정책은 유효합니다.

세부공약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지원

- 귀농교육 기관 지원. 분야별, 지역별, 작목별 교육으로 분화
- 귀농 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멘토링 제도 확충
- 청년귀농 전문 기관 설립

- 각 지자체 귀농지원센터간의 연계
- 출향인 초청행사를 통해 귀향 촉진

귀농인의 생태정착 지원

- 귀농자의 조직화 지원 : 귀농자 개인보다 귀농단체의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생태농업 교육 지원딱지 발급
- 귀농 농가의 가족수에 따른 지원 차등화

토착민과 귀농인의 유대화합 지원

- 토착민과 귀농인의 지속적인 공동사업 지원 - 친목, 전문영역, 영농 등
- 단발성 공동행사 후원

주요정책 5. 자립자치

문제의식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나서 그 역사가 25년에 이르지만 여전히 새로운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훨씬 심각합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이 취약한 농촌은 시민단체도 언론도 없기에 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 비리가 일상화 된 형국입니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기본권 강화, 지역 정부의 재량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원과 보조에 의존하다 보면 자립능력이 자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치와 자립역량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생활형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민생활 밀착형 마을언론 설립, 지역 교육네트워크의 구성, 학교 및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에 친환경지역 농산물 공급구조 마련 등이 다 자치와 자립의 영역입니다.

세부공약

농촌공동체 구성과 운영 지원

- 각종 농업형 협동조합의 설립지원과 운영지원
- 자발적인 주민자치 조직 육성
- 농민의 집과 주민 자치 단위 만들기. 농민의 집을 거점으로 식.의.주.의료.교육,학습 등 여러 주민자치 단위 구성 및 연대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컨텐츠 개발보급
-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지역활성화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농업회의소 등)

읍·면의 자치권 강화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 읍·면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는 시·읍·면 자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동네 이장도 주민이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의 조례가 면장에게 임면권을 주고 있어서입니다. 주민은 마을 투표를 할지언정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취미교실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행되게 해야 합니다.

지역 협치

- 농업회의소 전국 확대와 바른 운영지원
-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청구 등 '주민기본권' 보장
- 주민 자발적 마을언론 매체 창간과 운영 지원
- 농민이 자긍심과 보람을 키우는 자치조직 구축
- 농촌에 사는 노인농민 지원 방안 수립

공약 2 탈핵 · 에너지전환 공약 – 핵발전 없는 전남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핵발전,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 전기요금과 유류요금의 역전으로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력소비에 맞춰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전력생산과 송전선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발전설비 중 핵발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리, 울진, 월성에 신규 핵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삼척과 영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수명지난 핵발전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정부가 탈핵 ·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생산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더불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시로 송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양, 여수봉두마을의 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짐을 덜기 위해서는 분산형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목표

-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 · 에너지전환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해야합니다.
-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합니다.
-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합니다.
-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 · 중 · 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 확대합니다.

주요정책 1.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 내용
  -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음.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음.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3%로 타 지역에 의존해 전력을 소비하고 있음. 이에 밀양에 지운 과도한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지자체는 탈핵 · 에너지전환도시 선언과 종합계획 수립, 탈핵 · 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관련 부서 인력 배치가 필요함.

● 세부 공약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 2012년 2월, 46개 기초지자체에서 탈핵 · 에너지전환 도시선언을 했음. 이후 선언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이 진행됨. 지자체장의 탈핵 선언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녹색당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공약으로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약속.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지역에너지 계획)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및 조직을 마련해야함.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전력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지역 내 에너지 소비 각 분야에서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지역에너지 조례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해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함.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시민위원회 구성 : 탈핵 · 에너지전환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주민, 지역노동자, 시민단체가 협동해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참여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시민(도민) 참여 법제화(시민주주) : 장기적으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시영 또는 도영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공사 설립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해 보장함. 지역에너지공사는 지자체의 탈핵 · 에너지전환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기관이자 에너지부문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함. 사례)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를 운영하고 하고 있음.

주요정책 2. 에너지 저소비 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 내용

- 산업단지가 속한 지역의 경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들에게도 열린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지역과 에너지효율적/친환경적인 생산유통 과정을 만들고,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산업체가 밀집한 공단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단위의 주요 에너지 소비는 건물부문에서 발생함. 따라서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도시계획상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이 들어서지 않도록 조례 제정. 조명, 냉난방,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세부 공약

- 조명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자연채광, 적정조명, 장소에 알맞은 조명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업건물에 조명에너지 효율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를 받은 건물에서 자연채광과 LED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마련함.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택에너지 단열사업 확산을 위한 무료 건물 진단사업 : 주택단열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마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노후 주택에 대한 전기/열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에너지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 조명, 냉난방, 조리, 교통 등 도시에서 에너지가 쓰이는 각 분야별로 에너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서비스센터를 구축함. 지역에너지센터의 에너지 서비스가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는 시민은 물론 노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주요정책 3. 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 내용

- 탈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대도시의 경우 지역 내 생산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조사하고,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자원등 지역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해야 함.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제주도의 바람자원의 공유화 개념을 담은 '공풍화' 제도도 바람직함.

● 세부 공약

- 행복태양광 : 시민참여형 행복태양광사업으로 태양광협동조합을 확대함. 철도부지, 전철역사, 학교 지붕을 적극 활용함. 200W 미만의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여 다양한 용량의 태양광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사례: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 :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만들어 차량 연료로 활용.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최대한 폐식용유를 수거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생산을 늘리며, 수거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바이오가스 활용 : 음식물, 하수종말처리장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열병합 발전으로 활용함.
- 적정기술 활용 : 농촌지역의 경우 햇빛온풍기, 건조기, 고효율난로 등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지역주민들이 지역재료를 활용해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기술 활용과 보급에 지원해야 함.

주요정책 4. 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내용

-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개념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대안 모델로 확산해나가야 함.

세부 공약

- 에너지복지 조례 제정과 에너지빈곤 지원 정책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에 대비해 모든 시민들에게 적정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 에너지빈곤 계층에 대한 주택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주거와 에너지빈곤문제 동시 지원. 복지관을 통한 에너지빈곤 실태조사와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 마련.
-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함.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단계 에너지 교육과 절약, 2단계 효율화 사업, 3단계 에너지 생산으로 단계별 지원 제도 마련.
- 마을에너지진단사 양성 : 우리 동네 보육반장과 같이 우리 동네 에너지반장(통장) 모집하여 동네사람이 마을 에너지 진단.
- 동네에너지 슈퍼마켓 확대 : 멀티탭, LED, 단열 필름 등 지역주민들이 에너지를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보급하고 확대함.

주요정책 5.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 내용
  - 원자력문화재단의 핵발전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금지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교육제도화와 확대. 학교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신개축하며,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장이 되도록 함.
- 세부 공약
  - 시민 탈핵학교 운영 : 시민평생교육과 민방위훈련 등 다양한 시민교육에 에너지 교육 반영.
  - 초중고 학교 건물 단열개선 사업과 에너지 교육 강화 : 교육청과 협력해 에너지효율이 낮은 초중고 학교 건물에 대한 건물단열개선 사업, 태양광지붕을 임대하거나 직접 설치하는 학교에 대한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지원금 제공.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에너지 전환 교육과 활동 지원.
  - 환경에너지센터 운영 : 노원구 에코센터와 서울시 에너지드림센터와 같이 지역에서 다양한 에너지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교육센터 마련과 운영.

공약 3 먹거리 공약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겠습니다"

정책의 필요성

- 먹거리의 공급체계가 세계화, 산업화되면서 식품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학첨가물, 유전자조작식품, 공장식 축산의 부작용,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기술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오염이 최근 새로운 먹거리 위해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 식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밥상에 오르기까지 식품안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업체 영업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검증을 통해 위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급식의 질적 향상과 관리 강화,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범위 확대, 식생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리를 축소하고 통합·연계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 직판장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의 목표

-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하기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를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자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 보장,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등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 개념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0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과 시행

- 내용
  -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합니다. 녹색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세부공약

지역별 시민참여형 식품방사능안전감시센터 설립 추진

- 방사능안전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여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참고) 울산 북구청은 무상급식 전반을 책임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방사능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겸하도록 하는 등 식품방사능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 각 시도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식품 방사능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참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민대상 국내유통식품 방사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기준 강화 및 상시 오염도 측정(방사능 등)
- 일본산 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체계 및 시스템의 구축
- 국내 핵발전소 인근 해역과 어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정밀 조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 · 개정과 실행 추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청(소)년들의 위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역체계를 수립합니다.
- 학교급식조례의 제 · 개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 · 공공급식까지 식품방사능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의 제정 및 시행을 확대합니다.
- 일본산 식품의 학교 등 급식 사용을 배제하고 방사성 물질 함량 측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 · 시스템을 마련하며 시민감시위원회 구성, 영유아~청소년 급식에 대한 방사능 관리기준치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합니다. 더불어 방사능 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식품에 대한 대체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 방사능 농축과정에서 2차 오염이 예상되고 종자 등 화훼 · 비료 · 사료 등의 경우 무분별하게 검사 없이 들어오고 있어, 관련 항목에 대한 일본산 방사능검사 실시와 국내산에 대한 검사 · 관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 급식전달체계 내, 수산물 이력제의 제도화와 수산물 원산지 감시 · 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생산 · 유통업 피해 최소화
- 방사능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도와 무관하게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시 생산 및 유통업자 등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방사능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자발적 참여 지원 및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출 시 제도적 보상과 품종 전환 등 특별지원책 마련합니다.
- 식품 관련 생산 · 유통업자에 대한 방사능식품위험성 교육 의무화,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 5인 이상 지원시스템 등을 이용, 방사능안전식품협동조합을 만들어 방사능 식품검사체계를 갖추고 로컬푸드(지역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지역사회 시민참여형 먹거리 안정망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정책 2. 유전자조작(GMO), 식품첨가물로부터 안전한 밥상

내용

- 우리나라는 GMO 재배 상용화를 허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작물 전부가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이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47곳에서 GMO 작물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iv), 국립환경과학원)
- GMO란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일컫는 말로 상품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한 작물 또는 식품을 말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함량 순위로 따져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일 경우에도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식품업체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의 GMO를 사용하면 GMO가 들어갔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작물 가운데 7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점과 당국의 관련 정보 비공개로 어떤 기업이 식용 GMO를 얼마나 수입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밀의 경우, 우리나라는 98.3%를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50%는 미국산으로, 2013년 5월말 미국 오레곤주의 GM 밀(몬산토가 개발, 2004년 USDA 미승인 품목)이 수입되었음을 미 농무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 이처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GMO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GMO수입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식약처가 GMO 수입 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차단되고 있습니다.
- 특히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침이나 기준 및 권고사항조차도 없습니다.

세부공약

GMO와 첨가물로부터 안전한 안심먹거리 지원정책

-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확대에 관한 '식품법'개정 요구
- GMO 자생 실태에 대한 점검과 수입 GMO에 대한 상시조사 및 체계
-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 상관없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 식품관련 위법자 가중처벌 및 식품안전 기준 강화
- 저소득층과 어린이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
-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을 체계화

- 지역단위의 식품안전 정보 구축 및 소통 시스템 활성화
-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의 확대

주요정책 3.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동행

내용

- 농업과 생태위기 등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여러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을 장려해왔습니다.
- 이를 통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가 먹는 밥이 농민, 농촌, 농업이 없다면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도시농업은 여전히 고지가, 농지전용, 농지 임대차 등에 의한 경영불안, 텃밭 공급부족(도시계획 공약 4번째 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참고 http://kgreens.org/89693)과 수입 상토와 시판 비료에 의존하는 소비적인 자원의 활용으로 도시의 토양 기능을 상실시키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을 경험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과 동시에 도시에 귀중한 자원인 빗물, 낙엽, 농산물 부산물, 음식물을 농사에 자원화 하는 도시순환 자립의 농사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흙과 물을 살리는 농사방법의 개선과 대안을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부공약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 확대 (지역 귀농자 지원, 농산물 나눔 장터 정례화) :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지원

공공텃밭 확보, 텃밭교육 및 텃밭보급을 담당할 '지역 텃밭센터' 설립 : 경작지 확보와 도시농업 실천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확대(조사, 연구 및 개발, 보급)

- 도시농업 공간 확충, 도시순환농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홍보강화
- 텃밭 이용자의 올바른 농사(도시의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적인 도시농업)교육
- 건물 옥상텃밭화 관련 법안 제정

- 학교에서 생태텃밭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농민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강화

주요정책 4. 마땅히 누려야할 먹거리 기본권 향상

내용

- 지난해 녹색당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집급식 수산물원산지를 파악하는 곳이 겨우 3곳뿐이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우려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점검은 부실한 상태입니다.
-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먹거리도 사회적 차별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권은 지역에서부터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녹색당은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능력(로컬푸드 장려)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질 좋은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공약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 학교 급식 식재료는 로컬푸드(지역농산물) 공급을 장려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비 사용실태 공개 (급식비 사용 비율 중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및 원산지 표시 공개)
-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재료 원산지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원산지 표시 공개를 권고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 학교, 군대, 교도소, 시설, 병원, 공장 등 단체급식의 채식매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추구권과 선택권을 보장
- 우유 강제 급식을 금지하고 두유 선택권 보장
- 제철음식과 로컬푸드(지역농산물)을 채식식단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에 인센티브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 최소한의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소득 보장
- 기초 및 광역 공공급식 지원센터 지원
- 취약계층 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취약시설 급식관리 강화
- 저소득층 노인무료급식 프로그램 개선

- 꿈나무 카드(결식아동 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가맹 식당 지원 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
- 올바른 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공약 4 교육 · 돌봄 공약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우리 동네"

정책의 필요성

-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입증하듯이 철저한 경쟁 체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과 가정환경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녹색당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의 목표

- 교육에서 학습자의 인권과 교육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위원회와 어린이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들을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수당을 신설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에 어린이 ·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사회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에너지, 물, 폐기물 재활용 등 교육공간부터 녹색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활교육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교육, 생태 · 환경 교육, 적정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늘리며,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성을 갖추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평화교육' 등 마을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 독거노인의 소통과 세대 관계 개선을 위한 세대통합형 마을 쉼터 운영, 장기요양노인의 마을 거주와 돌봄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 어린이 · 청소년 주요정책 (9대 주요정책, 34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학습자의 인권·교육권 보장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중고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교육서열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 과도한 경쟁, 과도한 학습을 부추기는 경쟁 위주의 교육체제는, 학력과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입사지원서에서 학력 · 성별 · 사진 표기란을 없애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해 나가야 합니다.
- 제도적 개선과제와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과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들은 엄연한 교육 주체이나, 학교에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야 할 의무를 가진 교육대상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도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탈학교 어린이 · 청소년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매년 5만~8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를 지키지 않거나 개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학생인권조례/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정 : 학생인권조례외에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별도 제정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 인권존중 조항, 차별금지 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법제 개선에 착수하겠습니다.
- 학생참여위원회/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 교육청 단위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학생자치기구의 선거를 포함한 각종 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집회 ·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 요소를 포함하는 학교규칙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녹색당은 초 · 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항이 구체화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권리주체이자 동등한 시민으로서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 · 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나가겠습니다.
-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및 학부모/교사/학생 참여 보장 :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용도에 대해서도 공사비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고 학부모/교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학부모/교사/학생 참여 보장 : 교육청의 참여예산제에도 학부모/교사/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민주적인 학교 운영 : 장학사제를 폐지하고, 학교장을 관료적 승진제도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부터 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교사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축소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행정전담 교직원의 채용 등)함으로써 원활한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안교육 지원 : 대안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홈스쿨링 등 제도교육 밖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들은 각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력에 따른 차별이 사라지기까지는 손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형태와 이를 통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법제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정책 2. 어린이·청소년 빈곤과 폭력 방지 대책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성장하며, 쉬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 정책 과제
  - 청소년 쉼터 운영과 지원정책 : 탈학교, 가출, 성소수자 등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안전한 성장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쉼터가 더 많은 곳에,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결식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환경 아침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방학이나 휴일에도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아동 수당 신설 :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양육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수당을 아동수당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어린이 학대와 성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 어린이에 대한 학대로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지원과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인권. 노동. 평화교육 지원 :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통합적 인권 · 노동 · 평화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타인의 권리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 노동금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착취 금지 : 어린이 노동은 금지되어야 하며, 청소년은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르바이트 착취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자립문화센터 운영 : 청소년들에게 전망, 취업, 자립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자립문화센터를 지역사회에 설립하고, 청소년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소규모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3. 청소년 시민권 보장

현황 및 필요성

- 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청소년이 보호와 지도,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한 명의 온전한 시민으로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마땅히 동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일치시키고 동시에 이를 만 16세로 낮추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직접참여의 권리는 "최소한"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16세부터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통상 16세로, 이때에는 이미 취업을 할 수 있으며 (15세 이상), 공식적으로 학교를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에 더해 지자체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책 과제

- 지방자치에 청소년 참여 확대 :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들도 청소년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을 연령 제한 없이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어린이 ·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약이나 조례를 제 · 개정하겠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에 어린이 ·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직접 어린이 · 청소년 정책을 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주요정책 4. 교육공간의 녹색전환과 적정기술교육·안전교육 강화

현황 및 필요성

-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학교 냉난방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는 요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교육예산의 우선순위를 적정한 냉난방을 하는데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학교 건물의 단열개선,

태양광발전 활용, 빗물 활용과 같이 교육공간을 녹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피크오일과 자원부족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정기술과 생활기술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학교마다 태양광 발전, 학교단열 개선 : 학교의 단열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개선, 발암물질 없는 학교, 석면 없는 학교 :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실내공기질과 석면 등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의 유해화학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개선해야 합니다.
- 등하교길 교통사고 안전 대책 :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등하교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적정기술과 농업교육 확대 :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 다양한 교육, 재미있는 교육, 숨 쉴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생활교육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교육, 생태 · 환경 교육, 역사교육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 안전교육 강화 : 각종 재난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도단위로 재난대응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실습과 훈련을 진행해 실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5. 영·유아의 생명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어린이집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시설은 약 5.2%(2012년 기준)로 10.1%를 민간 · 가정 어린이집이 87.9%로 약 9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마련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우수 민간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책임 있게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제 노동을 하는 부모들에게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시 보육시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린이집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조정하고, 이용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위탁방식 개선을 통한 무상보육의 공공성 보장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위탁방식 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모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보육 확대 : 일시보육, 야간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생태교육프로그램 확대와 반생태적인 놀이터환경 개선 : 생태적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중금속 등에 오염된 놀이터를 생태친화적인 놀이터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친환경급식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야합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친환경급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6. 부모 배움터-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부모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부재합니다. 지자체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교육도 받을 수 있고, 육아방법 등에 대해 교류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육아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필요합니다.
- 정책 과제
  - 부모 배움터 마련 : 모든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모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에 처해 긴급하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상담가가 상주하는 '마을상담소'도 마련해야 합니다.
  - 공동육아 나눔터 마련 : 부모교육과 공동육아를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동네사람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새롭게 만들거나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정책 7.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활성화

현황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아동 · 청소년 수에 비해 실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지도, 정서적 지원, 급식 등 돌봄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빈곤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어린이 · 청소년들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 '낙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학교 내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돌봄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수용능력에 있어서는 전체 필요분의 18%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확대와 내실화와 더불어 마을학교를 돌봄 서비스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 과제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처우 개선 : 빈곤 · 위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교육,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인건비 등을 포함해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적절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외에 모든 어린이 ·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돌봄교실은 준비가 미흡해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돌봄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을학교 지원과 확대 :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공간으로, 동네사람들이 참여해 함께 돌보는 지역자원 활용 마을학교를 지원합니다. 노원구의 방과후 '독서돌봄 마을학교' 운영사례와 서울시 동작구의 '성대골 마을학교'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 마을마다 도서관 :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을 확보해 지역에서 돌봄, 교육, 문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의 지역역사문화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을 만들어 지역교육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4년 시가 예산을 지원해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사서인건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주요정책 8. 학교폭력과 왕따 없는 '동네 평화 돌봄망' 만들기

- 현황 및 필요성
  - 학교폭력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19.3%)과 사이버 공간(8.4%)을 제외하면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장소는 모두 교실(50%)과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급 내에는 학생들 간 위계서열이 형성되어 있고, 서열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따돌림이나 집단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학교폭력문제를 가해자-피해자 간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학교폭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나온 결론이며, 폭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관자들도 정신적 무기력과 자책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실, 지역 마을공동체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정책 과제
  - 동네평화 돌봄망 만들기 : 학교폭력의 가해사례나 피해사례들은 대개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의 갈등과 폭력 치유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돌봄과 사례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자체 차원의 평화교육, 학교폭력예방정책 시행 : 지자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례로 서울 금천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 차원에서 '평화샘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회복적 정의'를 생활지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9. 노인을 위한 돌봄정책

- 현황 및 필요성
  -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인 돌봄 정책은 세대간의 격리가 아닌 세대가 어우러진 가운데 마을에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노인안전과 생활 정책 마련 : 노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인 교통안전, 노인형 주거개조 주택 활성화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지역 의료시설, 목욕시설(보건과 의료) 등을 확충합니다.
  - 노인귀농 지원과 일자리 확대 : 고령사회(인구의 14%이상이 노인)에 접어든 농촌의 노인을 위한 세대통합정책을 마련합니다. 친환경 농사경험을 가진 노인을 귀농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노인의 지혜를 활용합니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및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 돌봄이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 : 독거노인의 소통과 세대 관계 개선을 위한 세대통합형 마을 쉼터 운영과 장기요양노인의 마을 내 거주와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공약 5 주민자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

정책의 필요성

- 지방자치는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본래 뜻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때에 지방자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 지방자치는 각종 부패와 비리에 찌들어있고, 소수 지역기득권 세력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환경파괴, 예산낭비, 주민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참여는 가로막혀 있습니다.
- 지방자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제도 혁신, 주민참여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목표

- 주민들이 가깝게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고, 지방의회 기능을 정상화한다.
- 선출된 대표자들의 독선과 전횡,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는 지역기득권 세력의 개발주의, 성장 지상주의에 제동을 걸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녹색전환을 이룬다.

지방자치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8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5.16 군사쿠데타로 왜곡된 지방자치 틀 재정립

- 내용
  - 1952년부터 실시되던 지방자치는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부활했지만, 제도적 결함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23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에서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농촌지역에 맞는 지방자치 틀 정립 : 5.16. 군사쿠데타 이전 기초지방자치는 시.읍.면 단위 자치였습니다. 읍의회, 면의회가 있었고, 읍장과 면장을 직선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선거를 폐지하고, 읍.면 자치단위를 군(郡)이라는 행정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도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위는 군(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군(郡)은 인구나 면적이 지나치게 큰 편입니다. 일본은 시.정.촌 단위로 기초지방자치를 해 왔고, 정.촌은 읍.면과 비슷한 단위입니다. 유럽도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규모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실제로 한 군(郡)내에서도 읍.면별로 지역적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에도 읍.면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위가 군(郡)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하부행정조직에 불과하므로 지역특성이 무시된 탁상행정이 이뤄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고, 농촌지역에 맞는 지방자치 틀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중단 :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편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구규모가 21만 5000명을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통합되는 지역이 주변부화 되고 지역 내 집중현상을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방식 개선 :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읍.면장) 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각각 다른 날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1991년 부활한 이후 1995년부터 모든 선거를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시기가 전국적으로 동일할 이유가 없고, 광역선거와 기초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동시지방선거는 정당별로 기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투표방식과 맞물려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선거 종류별로 선거 일자를 달리한다든지, 지역별로 선거 일자를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정제도 전면개선

- 내용

  - 2000년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의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활용되지 못하는 주민참여제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세부공약

주민소환투표시 투표율 하한선 조항 폐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기도 하남시장, 과천시장, 강원도 삼척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졌지만, '투표율이 3분의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개표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환대상자가 소환대상이 되는 때부터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운동을 벌이고, 투표에 참여하기 힘든 지역분위기를 조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투표율 하한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환대상자가 소환반대운동을 벌이지 투표불참운동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투표율 하한선 조항 때문에 주민소환투표가 번번이 무산되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투표율 하한선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주민투표제도 실효성 강화 : 주민투표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발의하려면 발의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주민투표청구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에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쇄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에 주민들의 서명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뤄진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민들의 서명에 의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시장이 주도했던 사례인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외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민투표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전면개정해야 합니다.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폐지 또는 전면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소송제기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주민소송을 하려면 집단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처럼 한명의 주민이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합니다.

주민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지연 또는 부결시 주민투표 회부 :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그나마 활용도가 높은 주민발의의 경우에도, 지방의회가 발의된 조례안의 심사를 지연하거나 부결시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발의된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3. 주민참여예산, 토건예산감축 목표제 등 지방예산 혁신·공무원 인사혁신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무늬만 주민참여'인 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는 여전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둘러싼 부패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사용도도 떨어지는 건물을 짓는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 인사를 둘러싼 부패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세부공약

추첨제 통한 투명한 참여위원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제 전면개선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위원 구성단계부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누구에게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면 추첨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공모절차 없이 추첨으로 위원선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모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런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소수의 시민들만이 공모절차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떼어 내어 주민공모와 참여예산위원 심의를 거쳐 편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500억 원의 예산을 시민공모와 참여예산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을 시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예산 정보공개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별로 예산편성과정부터 집행까지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누구나 영수증을 볼 수 있도록 비치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관례적으로 편성되는 공사예산, 토목예산 비중이 큽니다. 이런 예산들을 줄여나가야만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시설비 예산의 총량한도를 설정하고, 이것을 매년 10% 이상씩 줄여나가는 '토목예산 감축목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기 재정계획'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이나 행사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시행하는 '투.융자심사' 단계에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들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낭비성예산에 대한 시민감사시스템 마련 :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여비,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홍보예산 등 관례적으로 낭비되는 예산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정보를 요구하고 잘못을 발견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수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일정비율을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방인사시스템 혁신 :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

위원회가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를 둘러싼 부패, 불공정이 심하고,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전부 민간위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임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사생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4. 주민자치위원회 개선을 통한 읍.면.동 풀뿌리자치 강화

내용

-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에 불과하고 위원 위촉권도 관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대부분 문화센터기능에 그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자치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읍.면.동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상급행정기관에서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네일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자치의 가장 기초단위가 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가 큰 한국에서는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부공약

주민자치위원 대표성 확보 : 관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주민들이 선거 또는 추첨으로 선출한 위원을 위촉해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성이 확보되어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읍.면.동 단위로 배정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읍.면.동장 임명에 주민의견 반영 :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를 할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교체, 지방자치단체장 눈치 보기 같은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5. 이권과 부패로 물든 지방의회 개혁

내용

- 지방의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지방의회가 사용하는 예산부터 부패와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에 자료실을 설치해 주민들이면 누구나 의회 및 행정에서 취급하는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방청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합니다.

세부공약

지방의회 예산 ·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참여 보장 :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기회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나 감사가 끝난 이후에 주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의회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수렴하고, 예산심의 전에 예산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온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예산 투명성 확보 : 논란이 되어 온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결과보고를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나 의정공통경비에 대해 공개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누구나 영수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부에 대해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재량사업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정자료실 운영 및 회의방청 편의 최대한 보장 : 지방의회 내에 의정자료실을 설치하고,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계획과 용역보고서 등을 비치해 주민들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의회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의 회의방청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산심의시 계수조정과정 공개 : 지역구 예산나눠먹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밀실 예산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를 할 때 계수조정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공약 1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녹색정책 기조

- 지자체에서 탈핵 · 에너지전환 선언을 하겠습니다. 비리와 잦은 고장사고를 일으키는 핵발전소에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겠습니다. 신규원전 건설 폐지와 노후원전 폐쇄로 탈핵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대형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초고압송전탑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지역에너지공사를 만들고, 동네마다 에너지슈퍼마켓을 만들어 다양한 에너지 절감방안과 효율화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자체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생에너지 시민펀드, 미니 태양광 등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직접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빈곤 계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습니다.
-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 · 중 · 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 단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북 공약

-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주민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100곳 지정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조례' 제정 및 '전라북도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 도교육청과 연계한 에너지자립 시범학교 지정 및 확대

공약 2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

동물권 정책 기조

- 동물복지위원회를 만들고, 길고양이에 대한 인도적인 TNR 사업을 확대해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전주시가 관리하는 열악한 동물원의 운영을 개선하고,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물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겠습니다.
- 초 · 중 · 고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교육을 하겠습니다.
- 채식인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북 공약

- 전주시 동물원 실태조사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개선
- 동물권 관련 전주시동물원 운영 조례 수정, 동물복지조례 제정
- AI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기준 완화 및 복지농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과밀 축산 농장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도록 하는 법 제·개정
- 전라북도 가축위생 방역 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남부권 AI 진단센터를 전북에 유치

공약 3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기후변화와 재해에 안전한 도시"

도시계획 정책 기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막대한 권한과 불투명한 운영이 도시의 난개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 시민들이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과 둘레길을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걷기 쉬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교통비 부담이 높은 농촌의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게 단일요금제, 버스 완전공영제, 미니버스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복지연계 프로그램, 공동 텃밭, 도시 텃밭 등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악화되는 환경과 녹지 감소를 막는 안전벨트, 그린벨트를 지켜야 합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빗물 활용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홍수에 대비하겠습니다.

전북 공약

-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 개발 부서 및 심의 위원회에 실질적인 시민단체 추천인사 배정 제도
- 바람 길과 물길을 고려한 공동주택 심의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 공공 청사 및 공연장, 대형 교회 주차장을 잔디 블록형 주차장 조성해서 빗물 흡수율을 높이고 빗물 저금통을 설치한다.
- 도시림 등 조성 · 관리계획과 가로수관리계획 연계 수립으로 푸른도시 만들기
- 전주시 모악산 중인동 난개발 억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
- 도심 숲과 하천을 활용한 숲 유치원 프로그램 지원

공약 4 "도심 숲과 하천,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

생활 환경권 정책 기조

- 자전거도, 휠체어도, 유모차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주거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모두에게 적정 주거를 보장하겠습니다.
-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 생활공간에서 석면, 미세먼지 등을 관리하고 학교 인조잔디를 금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 도심공원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원관리와 방역에 사용하는 살충제, 제초제, 소독약품 등의 독성물질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도심공원을 확충하고, 시민 정원사와 시민 농사꾼이 만드는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주거비 지원프로그램 강화, 쪽방 지하방 등 최소 생활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강화하겠습니다.
- 주거권에 인권개념을 반영해 명도소송 중인 정비사업장에 대해 상시 이주 및 철거현황 모니터링 실시, 동절기 철거 원칙 금지,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 · 운영,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세입자 주거권 강화 등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여 녹색건축물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비리와 민원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업무를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시설관리공단 등이 폐기물 수거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공약

- 녹색커튼, 옥상녹화로 건물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여름철 햇빛 차단으로 실내온도를 1~1.5로 낮춰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 기대
- 공공 청사 및 공연장, 대형 교회 주차장을 잔디 블록형 주차장 조성해서 빗물 흡수율을 높이고 빗물 저금통을 설치한다.
- 복개하천 개거화 및 도심공원 습지 조성, 도심 주변 소류지 생태 습지화
-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확대 조례 제정과 화학안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중 시급한 우선순위 선정한 뒤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추진
-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도심 숲 및 도시 공원으로 조성

공약 5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

먹거리 정책 기조

- 녹색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방사능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지역농산물) 운동 등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고 얼굴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곡물자급률 향상,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조례 확산,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자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며, 단체급식의 채식메뉴 의무화,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등 먹거리 기본권 개념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공약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게르마늄 반도체 측정기 도입 확대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등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 대책 수립.
- 노후 학교 라돈 노출 실태 보고서 작성 후 대책 수립.
- 환경부 조사 결과를 참고해 라돈 수치가 높은 지역 추가 조사 및 라돈 피해 교육 홍보 및 저감 대책 수립.

공약 6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생명농업 정책 기조

- 소농을 보호하고, 농지를 지키겠습니다.
- 취약한 농촌의 복지를 개선하고,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 농정의 핵심은 곡물자급입니다. 농산물 수입의 엄격 제한, 친환경 자급 농산물 순위제 실시, 농사 씨앗보호와 자가 채종 토종씨앗 보전, 적정농사 기술 보급, 육식산업과 빌딩 · 시설농업에 대한 환경 대책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지역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목별 광역 영농조합 구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귀농인의 정착을 위해 땅과 집을 제공하고, 육아, 교육 등 생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농촌에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고, 농촌 학교를 살리겠습니다.

전북 공약

-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지역활성화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농업회의소 등)
- 가족농지원특별조례 제정
-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쌀 목표가격 인상, 경관조성, 밭직불금, 친환경 등 각종 직불금 확대
- 귀농교육 기관 지원. 분야별, 지역별, 작목별 교육으로 분화, 청년귀농 전문 기관 설립, 귀농 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멘토링 제도 확충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지원

충청남도

공약 1 탈핵 · 에너지전환 공약 – 밀양을 위한 약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회 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핵발전,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전기요금과 유류요금의 역전으로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력소비에 맞춰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전력생산과 송전선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발전설비 중 핵발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것을 결정함. 이로 인해 고리, 울진, 월성에 신규 핵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삼척과 영덕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갖고 있음.
-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수명지난 핵발전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정부가 탈핵 ·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생산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더불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시로 송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밀양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짐을 덜기 위해서는 분산형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밀양을 위한 공약〉을 준비해야 함.

정책의 목표

-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 · 에너지전환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함.

-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냄.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
-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
-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 · 중 · 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 확대

주요정책 1.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 내용
  - 밀양에서 9년째 송전탑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음. 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음.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3%로 타 지역에 의존해 전력을 소비하고 있음. 이에 밀양에 지운 과도한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지자체는 탈핵 · 에너지전환도시 선언과 종합계획 수립, 탈핵 · 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관련 부서 인력 배치가 필요함.
- 세부 공약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 2012년 2월, 46개 기초지자체에서 탈핵 · 에너지전환 도시선언을 했음. 이후 선언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이 진행됨. 지자체장의 탈핵 선언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녹색당에서 출마하는 후보들은 공약으로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약속.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지역에너지 계획)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산 및 조직을 마련해야함.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전력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지역 내 에너지 소비 각 분야에서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지역에너지 조례와 담당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해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함.
  - 탈핵 · 에너지전환 지자체 시민위원회 구성 : 탈핵 · 에너지전환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 주민, 지역노동자, 시민단체가 협동해서 에너지전환을 위

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참여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시민(도민) 참여 법제화(시민주주) : 장기적으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시영 또는 도영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공사 설립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해 보장함. 지역에너지공사는 지자체의 탈핵 · 에너지전환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기관이자 에너지부문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함. 사례)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를 운영하고 하고 있음.

주요정책 2. 에너지 저소비 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내용

- 산업단지가 속한 지역의 경우,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들에게도 열린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 지역과 에너지효율적/친환경적인 생산유통 과정을 만들고,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산업체가 밀집한 공단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단위의 주요 에너지 소비는 건물부문에서 발생함. 따라서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도시계획상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이 들어서지 않도록 조례 제정. 조명, 냉난방,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세부 공약

- 조명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 자연채광, 적정조명, 장소에 알맞은 조명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업건물에 조명에너지 효율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를 받은 건물에서 자연채광과 LED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마련함.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택에너지 단열사업 확산을 위한 무료 건물 진단사업 : 주택단열사업에 대한 융자제도 마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노후 주택에 대한 전기/열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에너지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 조명, 냉난방, 조리, 교통 등 도시에서 에너지가 쓰이는 각 분야별로 에너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서비스센터를 구축함. 지역에너지센터의 에너지서비스가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는 시민은 물론 노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주요정책 3. 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 내용

- 탈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대도시의 경우 지역 내 생산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조사하고,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 자원등 지역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해야 함.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제주도의 바람자원의 공유화 개념을 담은 '공풍화' 제도도 바람직함.

● 세부 공약

- 행복태양광 : 시민참여형 행복태양광사업으로 태양광협동조합을 확대함. 철도부지, 전철역사, 학교 지붕을 적극 활용함. 200W 미만의 미니태양광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여 다양한 용량의 태양광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사례: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구성.
-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 :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만들어 차량 연료로 활용.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최대한 폐식용유를 수거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생산을 늘리며, 수거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함.
- 바이오가스 활용 : 음식물, 하수종말처리장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열병합 발전으로 활용함.
- 적정기술 활용 : 농촌지역의 경우 햇빛온풍기, 건조기, 고효율난로 등 적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지역주민들이 지역재료를 활용해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정기술 활용과 보급에 지원해야 함.

주요정책 4. 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 내용

-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개념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대안 모델로 확산해나가야 함.

◉ 세부 공약

- 에너지복지 조례 제정과 에너지빈곤 지원 정책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에 대비해 모든 시민들에게 적정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 에너지빈곤 계층에 대한 주택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주거와 에너지빈곤문제 동시 지원. 복지관을 통한 에너지빈곤 실태조사와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 마련.
-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 마을에서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생산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시범 사업을 진행함.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단계 에너지 교육과 절약, 2단계 효율화 사업, 3단계 에너지 생산으로 단계별 지원 제도 마련.
- 마을에너지진단사 양성 : 우리 동네 보육반장과 같이 우리 동네 에너지반장(통장) 모집하여 동네사람이 마을 에너지 진단.
- 동네에너지 슈퍼마켓 확대 : 멀티탭, LED, 단열 필름 등 지역주민들이 에너지를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보급하고 확대함.

■ 주요정책 5.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 내용

- 원자력문화재단의 핵발전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금지하고, 에너지절약과 효율개선을 목표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교육제도화와 확대. 학교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신개축하며,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장이 되도록 함.

◉ 세부 공약

- 시민 탈핵학교 운영 : 시민평생교육과 민방위훈련 등 다양한 시민교육에 에너지 교육 반영.
- 초중고 학교 건물 단열개선 사업과 에너지 교육 강화 : 교육청과 협력해 에너지효율이 낮은 초중고 학교 건물에 대한 건물단열개선 사업, 태양광지붕을 임대하거나 직접 설치하는 학교에 대한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지원금 제공.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에너지 전환 교육과 활동 지원.
- 환경에너지센터 운영 : 노원구 에코센터와 서울시 에너지드림센터와 같이 지역에서 다양한 에너지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교육센터 마련과 운영.

공약 2 교육 · 돌봄 정책 공약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우리 동네”

정책의 필요성

-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입증하듯이 철저한 경쟁 체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과 가정환경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녹색당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의 목표

- 교육에서 학습자의 인권과 교육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위원회와 어린이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들을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수당을 신설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에 어린이 ·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사회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에너지, 물, 폐기물 재활용 등 교육공간부터 녹색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활교육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교육, 생태 · 환경 교육, 적정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늘리며,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 ·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성을 갖추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평화교육’ 등 마을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 독거노인의 소통과 세대 관계 개선을 위한 세대통합형 마을 쉼터 운영, 장기요양노인의 마을 거주와 돌봄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 어린이 · 청소년 주요정책 (9대 주요정책, 34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학습자의 인권·교육권 보장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중고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교육서열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 과도한 경쟁, 과도한 학습을 부추기는 경쟁 위주의 교육체제는, 학력과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입사지원서에서 학력 · 성별 · 사진 표기란을 없애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해 나가야 합니다.
- 제도적 개선과제와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과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들은 엄연한 교육 주체이나, 학교에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야 할 의무를 가진 교육대상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도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탈학교 어린이 · 청소년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매년 5만~8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를 지키지 않거나 개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학생인권조례/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정 : 학생인권조례외에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별도 제정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 인권존중 조항, 차별금지 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법제 개선에 착수하겠습니다.

- 학생참여위원회/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 교육청 단위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학생자치기구의 선거를 포함한 각종 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집회 ·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 요소를 포함하는 학교규칙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녹색당은 초 · 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항이 구체화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권리주체이자 동등한 시민으로서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 · 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나가겠습니다.
-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및 학부모/교사/학생 참여 보장 :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용도에 대해서도 공사비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고 학부모/교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학부모/교사/학생 참여 보장 : 교육청의 참여예산제에도 학부모/교사/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민주적인 학교 운영 : 장학사제를 폐지하고, 학교장을 관료적 승진제도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부터 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교사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축소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행정전담 교직원의 채용 등)함으로써 원활한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안교육 지원 : 대안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홈스쿨링 등 제도교육 밖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들은 각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력에 따른 차별이 사라지기까지는 손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형태와 이를 통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법제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정책 2. 어린이·청소년 빈곤과 폭력 방지 대책 마련

현황 및 필요성

-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성장하며, 쉬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 정책 과제

- 청소년 쉼터 운영과 지원정책 : 탈학교, 가출, 성소수자 등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안전한 성장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쉼터가 더 많은 곳에,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결식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환경 아침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방학이나 휴일에도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아동 수당 신설 :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양육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수당을 아동수당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어린이 학대와 성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 어린이에 대한 학대로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지원과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인권. 노동. 평화교육 지원 :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통합적 인권 · 노동 · 평화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타인의 권리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 노동금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착취 금지 : 어린이 노동은 금지되어야 하며, 청소년은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르바이트 착취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자립문화센터 운영 : 청소년들에게 전망, 취업, 자립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자립문화센터를 지역사회에 설립하고, 청소년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소규모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3. 청소년 시민권 보장

● 현황 및 필요성

- 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청소년이 보호와 지도,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한 명의 온전한 시민으로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마땅히 동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일치시키고 동시에 이를 만 16세로 낮추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직접참여의 권리는 "최소한"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대

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16세부터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통상 16세로, 이때에는 이미 취업을 할 수 있으며(15세 이상), 공식적으로 학교를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에 더해 지자체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지방자치에 청소년 참여 확대 :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들도 청소년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을 연령 제한 없이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어린이 ·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약이나 조례를 제 · 개정하겠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에 어린이 ·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직접 어린이 · 청소년 정책을 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주요정책 4. 교육공간의 녹색전환과 적정기술교육·안전교육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학교 냉난방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는 요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교육예산의 우선순위를 적정한 냉난방을 하는데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학교 건물의 단열개선, 태양광발전 활용, 빗물 활용과 같이 교육공간을 녹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피크오일과 자원부족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정기술과 생활기술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학교마다 태양광 발전, 학교단열 개선 : 학교의 단열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개선, 발암물질 없는 학교, 석면 없는 학교 : 환경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실내공기질과 석면 등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의 유해화학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개선해야 합니다.

- 등하교길 교통사고 안전 대책 :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등하교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적정기술과 농업교육 확대 :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 다양한 교육, 재미있는 교육, 숨 쉴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생활교육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교육, 생태 · 환경 교육, 역사 교육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 안전교육 강화 : 각종 재난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도단위로 재난대응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실습과 훈련을 진행해 실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5. 영.유아의 생명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어린이집 확대

현황 및 필요성

-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시설은 약 5.2%(2012년 기준)로 10.1%를 민간 · 가정 어린이집이 87.9%로 약 9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마련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우수 민간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책임 있게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제 노동을 하는 부모들에게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시 보육시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린이집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조정하고, 이용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 과제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위탁방식 개선을 통한 무상보육의 공공성 보장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위탁방식 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모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보육 확대 : 일시보육, 야간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생태교육프로그램 확대와 반생태적인 놀이터환경 개선 : 생태적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중금속 등에 오염된 놀이터를 생태친화적인 놀이터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친환경급식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야합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친환경급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6. 부모 배움터-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현황 및 필요성

- 부모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부재합니다. 지자체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교육도 받을 수 있고, 육아방법 등에 대해 교류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육아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필요합니다.

정책 과제

- 부모 배움터 마련 : 모든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모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에 처해 긴급하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상담가가 상주하는 '마을상담소'도 마련해야 합니다.
- 공동육아 나눔터 마련 : 부모교육과 공동육아를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동네사람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새롭게 만들거나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정책 7.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활성화

현황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아동·청소년 수에 비해 실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지도, 정서적 지원, 급식 등 돌봄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빈곤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어린이 · 청소년들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 '낙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학교 내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돌봄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수용능력에 있어서는 전체 필요분의 18%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확대와 내실화와 더불어 마을학교를 돌봄 서비스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정책 과제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처우 개선 : 빈곤 · 위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교육,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인건비 등을 포함해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적절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외에 모든 어린이 ·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돌봄교실은 준비가 미흡해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돌봄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을학교 지원과 확대 :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공간으로, 동네사람들이 참여해 함께 돌보는 지역자원 활용 마을학교를 지원합니다. 노원구의 방과후 '독서돌봄 마을학교' 운영사례와 서울시 동작구의 '성대골 마을학교'운영사례가 있습니다.
- 마을마다 도서관 :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을 확보해 지역에서 돌봄, 교육, 문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의 지역역사문화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을 만들어 지역교육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4년 시가 예산을 지원해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사서인건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주요정책 8. 학교폭력과 왕따 없는 '동네 평화 돌봄망' 만들기

◉ 현황 및 필요성

- 학교폭력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19.3%)과 사이버 공간(8.4%)을 제외하면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장소는 모두 교실(50%)과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급 내에는 학생들 간 위계

서열이 형성되어 있고, 서열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따돌림이나 집단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학교폭력문제를 가해자-피해자 간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학교폭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나온 결론이며, 폭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관자들도 정신적 무기력과 자책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실, 지역 마을공동체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정책 과제

- 동네평화 돌봄망 만들기 : 학교폭력의 가해사례나 피해사례들은 대개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의 갈등과 폭력 치유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돌봄과 사례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자체 차원의 평화교육, 학교폭력예방정책 시행 : 지자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례로 서울 금천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 차원에서 '평화샘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회복적 정의'를 생활지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9. 노인을 위한 돌봄정책

● 현황 및 필요성

-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인 돌봄 정책은 세대간의 격리가 아닌 세대가 어우러진 가운데 마을에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노인안전과 생활 정책 마련 : 노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인 교통안전, 노인형 주거개조 주택 활성화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지역 의료시설, 목욕시설(보건과 의료) 등을 확충합니다.
- 노인귀농 지원과 일자리 확대 : 고령사회(인구의 14%이상이 노인)에 접어든 농촌의 노인을 위한 세대통합정책을 마련합니다. 친환경 농사경험을 가진 노인을 귀농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노인의 지혜를 활용합니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및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 돌봄이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 : 독거노인의 소통과 세대 관계 개선을 위한 세대통합형 마을 쉼터 운영과 장기요양노인의 마을 내 거주와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공약 3 농업 공약 -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녹색당 농업정책의 의미

- 농업의 위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지와 농민과 농촌사회의 심각성을 나열합니다. 수십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농업'과 '농민'에 빌붙어 밥벌이 하는 전문가들의 장난질이 심하다는 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농정의 고위 담당자이기도 해서입니다.
- 나라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지방정부도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 구태의연한 문제의 나열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 농업입니다. 농업에 대한 사고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여러 통계지표들이 전문가들의 이런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슨 말을 들어도 암담하기만 한 게 농업현실입니다. 익숙한 호들갑에 불과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가공과 서비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6차 산업 전략은 1차 산업에서 고생은 농민이 하고 나머지는 공업자본의 몫으로 될 공산이 큽니다. 쏟아지는 각종 농민 지원금은 금융자본의 배를 불릴 것입니다.
- 녹색당은 농민 기본소득제를 주장합니다. 재원 마련방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발상의 바탕에는 바른 농업은 사회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 녹색당은 우선 그 실현의 주체와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허공에 삿대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청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 스스로 주장하는 바대로 살고, 그 삶의 공동체를 마을과 지역에서 구축하며 지방정부와 국가 정책으로까지 채택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의 목표

- 기본농지 : 농지를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민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농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하여 농지가 절대 사적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 건강농민 : 농촌의 생활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통, 난방, 의료, 농업에너지 부문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촌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민들도 도시적 소비의 유혹을 넘어서서 몸의 건강 뿐 아니라 따뜻한 농촌공동체의 구성으로 삶 전반의 건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식량농정 : 농정의 핵심은 식량자급입니다. 더 나아가 곡물자급입니다. 그것도 친환경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양가만 높은 쓰레기만도 못한 먹을거리들을 다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환경귀농 : 적극적인 귀농정책으로 농업인구를 늘립니다. 이는 소농정책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농촌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와 꿈을 농촌에서 펼칠 수 있게 합니다. 귀농인들이 처음부터 못된 돈벌이 농사에 빠져들지 않도록 친환경 농사를 소개 합니다. 헛된 돈벌이 농사에 빠져 땅 망치고 자연 망치며 소비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귀농은 농민기본소득제와 맞물려 원활해 질 수 있습니다.
- 자립자치 : 자립하는 삶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농촌에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고,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원합니다.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분명해 지도록 농민 스스로 다양한 이익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도록 농업회의소나 면 단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합니다.

농업 주요정책과 세부 내용(5대 주요정책, 17개 세부공약)

주요정책 1. 기본농지의 확보

- 문제의식

농지문제는 농지 규모문제, 소유문제, 질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축소와 반농업 시설의 건축이 아주 심각합니다. 농사지을 땅이 줄어드니 곡물자급률이 날로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땅마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은 화학약품 오염(복합오염)과 영양오염입니다. 우리 농지의 과다한 영양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시디,OECD)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 세부공약

농지 최소 유지를 법률로 강제

- 국가단위와 광역지방정부 단위에서 각각 농지의 최소 유지 규모를 법률로 제정
- 최소 규모라 함은 연차별 곡물자급률 달성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음
- 농지 전용을 엄격히 통제. 농지전용부담금 상향 조정

토지공개념의 도입

- 비 농업인의 농지 소유 엄격 제한과 농민소유 강화
- 농가 가족 수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농지의 무상 임대 확대
-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 기업농에서 가족소농으로 농지은행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농지 관리체계 강화
- 다양한 농업공동체와 농지은행의 농지 소유 확대
- 절대농지의 국가매입과 가격 동결

농지 오염 방지

- 농기계 사용과 시설농업의 제한으로 농지오염 방지
- 농지소유의 상한선 설정하여 토지 집중과 무분별한 단작대량재배 억제

주요정책 2. 건강농민 유지

● 문제의식

우리나라 농민은 절대인구 감소, 노령화, 소득감소, 건강과 교통, 복지 등 생활권 취약, 농가부채 등이 전통적인 과제로 거론됩니다. 소득 감소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도농소득격차는 매년 커져 10년 사이에 97%에서 69%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농농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상하위 20% 소득인구의 소득격차를 비교하는 5분위 소득비율이 도시는 5.8배인데 비해 농촌은 12.1배입니다. 10년 전에는 6.3배였으니 두 배가량 더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은 3배, 농가부채는 6배 증가했습니다. 이 나라 농업정책의 산물입니다. 농민 소득의 불안정은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탄력적이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여기에 농촌의 도시 모방소비 풍조의 문제, 농민들의 농민의식 상실 문제까지 다룹니다. 건강한 농민이 농업의 중심입니다.

● 세부공약

농민기본소득제의 실시

- 농업의 공공재 역할을 실현하는 농민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장
- 각종 급여성 농업지원금 통합
- 도시인구의 농업 이전 촉진

농가 소득 보장

-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 쌀 목표가격 인상
- 각종 직불금 확대 - 조건불리, 경관조성, 밭직불금, 친환경 등
- 국민연금 지원 대상 기준소득금액 인상(현행 8만 5천원)

소농의 육성

- 소농은 안전한 식량 공급의 원천이므로 자연재배와 유기재배를 지원
- 기본소득제의 우선 시범 적용
- 소농 개념 정립 : 소규모, 인력과 축력, 비동력 농기계나 소형동력 농기계 중심
- 여성 농민 육성

착한 소비와 농촌복지의 확대

- 친환경 제품의 농민소비 지원
- 농민 소비재 면세 대상 확대
-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마중버스,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 농촌지역의 버스는 낡은데다 배차간격이 길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홍천군, 청양군, 괴산군, 당진시에서는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요금제가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지형적 특색을 고려하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산시에는 소형버스를 마을버스처럼 운영하는 '마중버스'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참고 : 녹색당 도시계획·교통 공약)
- 농가주택 난방대책 - 농촌의 높은 난방요금은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폐지해서 등유로 난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소세 폐지는 중앙정부의 결정권한이므로 지자체에서는 낡은 주택에 대한 단열개선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농촌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보조난방기구 활용과 더불어 소형태양광과 태양열온수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주군에서는 농촌에 적합한 〈로컬에너지〉정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3. 식량농정

문제의식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자동차 삶아서 먹을 수는 없다'는 말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농식품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정한 2015년의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9% 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실적은 22.3%입니다.

끔찍한 이 결과치에 정부는 눈도 꿈쩍 않고 한-캐나다 에프티에이를 졸속 체결하더니 한-중 에프티에이도 강행할 태세입니다. 식량자급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놓고도 이에 역행하는 농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축산만 커지고 있습니다. 농정부처 이름도 농'축산'식품부로 바꿔버렸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대량 살육을 일삼는 밀집축산은 국토를 해치고 사람의 건강마저 해칩니다.

농업부문 전문 관료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면서 각종 농업기구를 순회하며 수십 년간 이 나라 농업을 절단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경제연구원의 전임연구원이 버젓이 정부기관에 파견되듯이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 의한 대한민국 농정은 농촌사회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오늘날 농촌현실은 이런 농정의 산물입니다.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큰 틀을 시급히 만들 때입니다. 고투입방식의 자원고갈형 단작농업에서 저투입방식의 자원보전형 생태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농업 수취형 이득산업의 이익반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은 그 이득의 일정 비율을 농업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비닐,농기계, 석유,유통,식품업,각종 운반수단, 기타 농자재 산업의 농업기여 납부제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제도를 농업먹거리특위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공약

식량자급 순차적 실현

- 농산물 수입의 엄격 제한 : 쌀 관세화 유예
- 친환경 자급 농산물 순위제 실시
- 농사 씨앗보호와 자가 채종 토종씨앗 보전
- 쌀 100% 자급 실현을 위한 논 직불금 조건 완화

석유의존 농사의 극복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날로 심화되는 농사방법 극복

- 생태조화 자연재배 농법의 보급과 개발
- 자연재배와 유기재배 소농 적극 지원
- 건강한 밥상의 기본전제가 되는 식품의 이동거리제한제도 도입
- 적정농사기술의 개발

육식산업과 빌딩·시설농업에 대한 환경대책 마련

- 지역별 농사 부산물량 기준 및 지역 환경 수용 이내의 축산규모제 도입, 축산, 도축 등 육식산업에 환경부담금 부과 검토
- 축산농가 전업 지원제 실시
- 빌딩농업과 시설유리온실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마련

협동적 생산체계 구축

- 생산과 소비의 지역화 체계 구축
- 품목별 광역 영농조합 구성 권장

주요정책 4. 환경귀농

문제의식

귀농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가는 귀농자 수에 언론이 주목합니다. 어떤 이는 문명의 전환 징후라고 하기도 합니다. 농촌과 농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태순환의 환경귀농이 되도록 안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탱 할 수 있는 임계점에 이른 우리의 농촌은 도시의 생활습관과 도시의 소비방식이 이전되어서는 감당 불가능합니다. 농촌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또 다른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도록, 시설 투자비가 싼 지역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환경생태 인식으로 귀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은 환경농업 종사자와 단순 비농업분야 종사자가 구별되어 선택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착에 필요한 농사지을 땅과 집을 빠르게 알선하고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귀농이 유리하도록 농촌에 젊은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결혼과 출산이 용이하도록 육아지원과 교육기반의 확충이 있어야겠습니다. 일률적인 제도화 보다는 최근 귀농인들의 지향에 맞게 자율적인 가정학습과 자연교육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의 교통문제, 주거문제, 대기문제 등의 해결에도 귀농정책은 유효합니다.

세부공약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지원

- 귀농교육 기관 지원. 분야별, 지역별, 작목별 교육으로 분화
- 귀농 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멘토링 제도 확충
- 청년귀농 전문 기관 설립
- 각 지자체 귀농지원센터간의 연계
- 출향인 초청행사를 통해 귀향 촉진

귀농인의 생태정착 지원

- 귀농자의 조직화 지원 : 귀농자 개인보다 귀농단체의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생태농업 교육 지원딱지 발급
- 귀농 농가의 가족수에 따른 지원 차등화

토착민과 귀농인의 유대화합 지원

- 토착민과 귀농인의 지속적인 공동사업 지원 - 친목, 전문영역, 영농 등
- 단발성 공동행사 후원

주요정책 5. 자립자치

문제의식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나서 그 역사가 25년에 이르지만 여전히 새로운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훨씬 심각합니다. 감시와 견제 기능이 취약한 농촌은 시민단체도 언론도 없기에 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 비리가 일상화 된 형국입니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기본권 강화, 지역 정부의 재량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원과 보조에 의존하다 보면 자립능력이 자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치와 자립역량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생활형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민생활 밀착형 마을언론 설립, 지역 교육네트워크의 구성, 학교 및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에 친환경지역 농산물 공급구조 마련 등이 다 자치와 자립의 영역입니다.

세부공약

농촌공동체 구성과 운영 지원

- 각종 농업형 협동조합의 설립지원과 운영지원
- 자발적인 주민자치 조직 육성

- 농민의 집과 주민 자치 단위 만들기. 농민의 집을 거점으로 식·의·주·의료·교육·학습 등 여러 주민자치 단위 구성 및 연대
-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컨텐츠 개발보급
-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지역활성화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농업회의소 등)

읍.면의 자치권 강화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 읍.면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는 시.읍.면 자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동네 이장도 주민이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의 조례가 면장에게 임면권을 주고 있어서입니다. 주민은 마을투표를 할지언정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취미교실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행되게 해야 합니다.

지역 협치

- 농업회의소 전국 확대와 바른 운영지원
-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청구 등 '주민기본권' 보장
- 주민 자발적 마을언론 매체 창간과 운영 지원
- 농민이 자긍심과 보람을 키우는 자치조직 구축
- 농촌에 사는 노인농민 지원 방안 수립

공약 4 먹거리 공약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을 만들겠습니다"

정책의 필요성

- 먹거리의 공급체계가 세계화, 산업화되면서 식품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학첨가물, 유전자조작식품, 공장식 축산의 부작용,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기술 등과 함께 지구온난화와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오염이 최근 새로운 먹거리 위해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 식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밥상에 오르기까지 식품안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업체 영업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검증을 통해 위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급식의 질적 향상과 관리 강화,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범위 확대, 식생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리를 축소하고 통합·연계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 직판장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의 목표

-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하기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를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자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 보장,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등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 개념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0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과 시행

- 내용
  -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합니다. 녹색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세부공약

지역별 시민참여형 식품방사능안전감시센터 설립 추진

- 방사능안전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여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참고) 울산 북구청은 무상급식 전반을 책임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방사능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겸하도록 하는 등 식품방사능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 각 시도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식품 방사능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참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민대상 국내유통식품 방사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든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기준 강화 및 상시 오염도 측정(방사능 등)
- 일본산 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체계 및 시스템의 구축
- 국내 핵발전소 인근 해역과 어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정밀 조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개정과 실행 추진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청(소)년들의 위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역체계를 수립합니다.
- 학교급식조례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공공급식까지 식품방사능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의 제정 및 시행을 확대합니다.
- 일본산 식품의 학교 등 급식 사용을 배제하고 방사성 물질 함량 측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시스템을 마련하며 시민감시위원회 구성, 영유아~청소년 급식에 대한 방사능 관리기준치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합니다. 더불어 방사능 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식품에 대한 대체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 방사능 농축과정에서 2차 오염이 예상되고 종자 등 화훼·비료·사료 등의 경우 무분별하게 검사 없이 들어오고 있어, 관련 항목에 대한 일본산 방사능검사 실시와 국내산에 대한 검사·관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 급식전달체계 내, 수산물 이력제의 제도화와 수산물 원산지 감시·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생산·유통업 피해 최소화

- 방사능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도와 무관하게 식품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시 생산 및 유통업자 등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방사능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식품방사능안전관리 시스템 자발적 참여 지원 및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출 시 제도적 보상과 품종 전환 등 특별지원책 마련합니다.
- 식품 관련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방사능식품위험성 교육 의무화, 자발적 식품방사능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 5인 이상 지원시스템 등을 이용, 방사능안전식품협동조합을 만들어 방사능

식품검사체계를 갖추고 로컬푸드(지역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지역사회 시민참여형 먹거리 안정망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정책 2. 유전자조작(GMO), 식품첨가물로부터 안전한 밥상

내용

- 우리나라는 GMO 재배 상용화를 허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내산 농작물 전부가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이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47곳에서 GMO 작물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iv), 국립환경과학원)
- GMO란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일컫는 말로 상품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한 작물 또는 식품을 말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함량 순위로 따져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일 경우에도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식품업체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의 GMO를 사용하면 GMO가 들어갔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작물 가운데 7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점과 당국의 관련 정보 비공개로 어떤 기업이 식용 GMO를 얼마나 수입하고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밀의 경우, 우리나라는 98.3%를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50%는 미국산으로, 2013년 5월말 미국 오레곤주의 GM 밀(몬산토가 개발, 2004년 USDA 미승인 품목)이 수입되었음을 미 농무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 이처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GMO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GMO수입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식약처가 GMO 수입 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차단되고 있습니다.
- 특히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침이나 기준 및 권고사항 조차도 없습니다.

세부공약

GMO와 첨가물로부터 안전한 안심먹거리 지원정책

-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확대에 관한 '식품법'개정 요구
- GMO 자생 실태에 대한 점검과 수입 GMO에 대한 상시조사 및 체계
-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 상관없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 식품관련 위법자 가중처벌 및 식품안전 기준 강화
- 저소득층과 어린이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 강화
-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을 체계화
- 지역단위의 식품안전 정보 구축 및 소통 시스템 활성화
-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의 확대

주요정책 3.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동행

내용

- 농업과 생태위기 등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여러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을 장려해왔습니다.
- 이를 통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가 먹는 밥이 농민, 농촌, 농업이 없다면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도시농업은 여전히 고지가, 농지전용, 농지 임대차 등에 의한 경영불안, 텃밭 공급부족(도시계획 공약 4번째 도시농지 확보와 도시농업 확대 참고 http://kgreens.org/89693)과 수입 상토와 시판 비료에 의존하는 소비적인 자원의 활용으로 도시의 토양 기능을 상실시키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을 경험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과 동시에 도시에 귀중한 자원인 빗물, 낙엽, 농산물 부산물, 음식물을 농사에 자원화 하는 도시순환 자립의 농사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흙과 물을 살리는 농사방법의 개선과 대안을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부공약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 확대 (지역 귀농자 지원, 농산물 나눔 장터 정례화) :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지원

공공텃밭 확보, 텃밭교육 및 텃밭보급을 담당할 '지역 텃밭센터' 설립 : 경작지 확보와

도시농업 실천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확대(조사, 연구 및 개발, 보급)
- 도시농업 공간 확충, 도시순환농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홍보강화
- 텃밭 이용자의 올바른 농사(도시의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적인 도시농업)교육
- 건물 옥상텃밭화 관련 법안 제정
- 학교에서 생태텃밭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농민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강화

주요정책 4. 마땅히 누려야할 먹거리 기본권 향상

내용

- 지난해 녹색당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집급식 수산물원산지를 파악하는 곳이 겨우 3곳뿐이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우려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점검은 부실한 상태입니다.
-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먹거리도 사회적 차별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권은 지역에서부터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녹색당은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능력(로컬푸드 장려)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질 좋은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공약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
- 학교 급식 식재료는 로컬푸드(지역농산물) 공급을 장려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비 사용실태 공개 (급식비 사용 비율 중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및 원산지 표시 공개)
-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재료 원산지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원산지 표시 공개를 권고

단체급식의 채식문화 확산 :
- 학교, 군대, 교도소, 시설, 병원, 공장 등 단체급식의 채식매뉴 의무화로 채식인의 행복추구권과 선택권을 보장
- 우유 강제 급식을 금지하고 두유 선택권 보장
- 제철음식과 로컬푸드(지역농산물)을 채식식단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에 인센티브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개선 :

- 최소한의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소득 보장
- 기초 및 광역 공공급식 지원센터 지원
- 취약계층 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과 취약시설 급식관리 강화
- 저소득층 노인무료급식 프로그램 개선
- 꿈나무 카드(결식아동 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가맹 식당 지원 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
- 올바른 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공약 5 주거/생활환경 공약 "햇볕 드는 집,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

정책의 필요성

- 주택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①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주거에 대한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점유의 법적 보장. 점유는 임차(공공/민간), 협동조합주택, 리스, 자가, 긴급주거 및 토지 또는 건물 점거를 포함한 비공식적 정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 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현재 점유가 불안정한 개인 및 집단과 성실한 협의 하에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2. 서비스, 물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 · 하수도, 도로, 요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저장수단, 폐기물 처리시설, 긴급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부담가능성. 당사국은 주택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여러 유형과 여러 수준의 주택 금융 뿐 아니라 부담 가능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주택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점유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4. 거주가능성. 적절한 주거는 거주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 구조적 위해, 해충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세계보건기구가 작성한 주거의 건강 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는 주거 및 생활 여건은 항상 높은 사망률과 유병률로 이어진다.
5. 이용가능성. 취약계층들도 적절한 주거자원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아동, 신체장애인, 불치병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환자, 만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자연재해의 피해자, 재해 다발 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주거 영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위치. 적절한 주거공간은 직장, 의료서비스 기관, 학교, 탁아시설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오염지역이나 거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원에 근접된 지역에 주택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7. 문화적 적절성. 주택 건축방법, 사용되는 건축 자재, 이들의 근거가 되는 정책들은 문화 정체성과 주택 다양성이 적절히 표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책의 목표

- (사회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의 권리가 존중 · 보호 · 실현되도록 합니다.
- (지속가능성)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지향합니다.
- (풀뿌리민주주의)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주택부문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2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적정주거 보장

- 내용

우리나라의 전체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0%(2012년)(OECD평균 11.5%(2007년), 영국 17.5%(2010년), 프랑스 17.0%(2005년), 일본 6.1%(2008년), 미국 1.0%(2009년))에 불과하고 소득이 매우 낮은 계층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주택가격과 극심한 전/월세 임대료 상승으로 저소득층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전세가격 연평균 변동률: 3.9%(91~97년)→5.0%(00~08년)→6.6%(09~13년)
- 전세거주비중은 2000년 28.2%에서 2010년 21.7%로 감소하고 월세거주비중은 동기간에 14.8%에서 21.5%로 증가
- 서울의 경우 소득 1분위 저소득 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32.3%

◉ 세부공약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 민간토지임차형 및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도입
- 장기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국고지원 현실화
-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개선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다가구 전세임대주택 주택기준 보완
-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
- 고령자와 장애인용 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주택바우처 지원 확대
- 집수리 사업 보완(소득기준 완화, 주택 내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시설개조 지원,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지원)
-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
- 소년소녀가정,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전세지원 확대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공공사업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소형주택공급 확대
- 도시환경정비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거기준 강화 및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홍보 강화

- 준주택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 물리적 주거공간에 대한 적정기준 상향
- 신규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유도
- 독거노인, 치매노인, 홀로 남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센터 설치

주요정책 2.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지원 강화

◉ 내용

- 노숙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이 취약하고 퇴거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적절한 주거의 기준으로 삼기에 매우 부족하며, 그 기준조차 미달한 가구가 2010년 184만 가구(10.6%)에 달합니다(한국과 유사한 기준을 가진 일본의 경우 2008년 4.3%). 따라서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을 위한 최소생활환경의 질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민 대상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전세임대주택 지원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내실화

- 쪽방상담소 역량 강화
- 쪽방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쪽방촌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및 공동작업장 지원 확대
- 쪽방 재임대사업 : 기존 쪽방 · 고시원 건물을 임차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확대

노숙인(가족 재결합 · 주거독립 준비자 등) 주거안정 지원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확보 및 입주 지원
- 전세자금 융자지원 확대
- 노숙인 실태 입소 생활시설 개선과 일자리 연계강화

주요정책 3. 정의롭고 인간적인 주거권 실현

◉ 내용

- 용산참사를 겪은 지 4년이 지났지만 개발 사업에서의 원주민과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없습니다. 퇴거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대책은 미약하고, 용산참사에서 문제가 된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재정착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롭고 인간적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세입자 주거권 강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활성화
-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지원 확대
-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지원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 명도소송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상시 이주 및 철거현황 모니터링 실시
- 동절기 철거 원칙적 금지
-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 · 운영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주요정책 4. 녹색주택 확대

내용

-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60%이상이 건물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에너지를 덜 쓰고, 빗물을 활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녹색건축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부공약

건축물에너지 총량제 추진

-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설정
-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친환경 · 고효율 주택건설 확대

- 공동주택 단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확대
- 신규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확대 시행
- 창문 효율 개선, LED 보급 활성화를 통한 조명효율 개선
-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 옥상 및 벽면녹화 확대

주요정책 5.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내용

-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형성을 통한 안전망 구축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갑니다.

● 세부공약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 장애인 자립 마을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커뮤니티 보육시설 확대

공동체토지신탁

- 임대주택 및 소형분양주택들을 개발할 때, 또는 국공유지 등의 자산을 민간에 이양할 때, 공동체토지신탁 방식을 도입
- 지역시민/해당거주민/공공전문가 등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비영리조직이 토지를 영구히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보존하면서, 지속적인 소형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재생 및 지역 비지니스 활성화에 활용

[녹색당 생활환경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쾌적한 생활환경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보건정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과 공기, 쾌적한 공원과 산책로를 제공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구와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지역을 살기 좋게 가꾸는 일이 곧 새로운 도시개발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시민들이 생활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풀뿌리 역량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용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위탁 등 처리비용으로만 8,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한 채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는 자원은 연간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재활용 산업은 1조 7천억 원 규모로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 정책의 목표

- 녹색당의 생활환경 정책은 건강하고,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를 과밀하게 하거나 팽창시키는 개발정책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정책을 제시합니다.

- 생활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꿉니다. 생물다양성이 높은 건강한 녹지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공기와 물을 맑게 하고 독성물질 등을 사라지게 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 생활환경 정책은 주민의 의견과 참여로 만들고 실천하여 주민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주민의 환경보전 활동과 민관협력을 촉진합니다.
- 조례와 제도, 예산으로 생활환경 정책을 뒷받침합니다.

생활환경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4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물질 관리 강화

내용

어린이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어른에 비해 민감하며, 건강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한 역학조사 실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세부 공약

- 아동, 청소년 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 어린이집과 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아동, 청소년 시설의 실내공기질(휘발성유기화합물(VOC), 부유세균, 미세먼지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개선합니다. 치명적인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물과 아동, 청소년 시설의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을 제거합니다.
-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강화 :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부 활동 자제, 문자 서비스 등으로 정보를 공개합니다(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시).
- 학교 인조잔디 조성 금지 :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시성 사업으로 벌이기 쉬운 인조잔디는 아토피 유발, 여름 화상 위험, 파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학부모들과 추진 당국을 설득해 사업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와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생태놀이터 : 폐타이어를 활용한 놀이터 매트는 인조잔디처럼 질병 유발, 화상 위험을 안고 있으며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저해합니다. 흙, 나무, 돌 같은 자연적 재료를 이용해 놀이터를 구성하며 이 과정에서 기획은 물론 조성작업에까지 인근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겠습니다.
- 주택가 내 카센터 입점 금지 : 과천시는 주거지에 카센터 입점이 늘고 소음과 휘발성화합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늘어나자 2011년 6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기준

고시"를 통해 주택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주변 1 km, 공원, 하천 주변 2 km 이내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주요정책 2. 공원 농약 사용 금지와 유해 방역약품 사용 금지

● 내용

공원녹지와 방역약품에 만코제브, 카바메이트, 뷰프로페진, 비펜스린 등 발암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암물질을 함유한 약품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생활 주변 살충제, 제초제, 소독약품 등 독성물질 추방 : 가로수, 공원 등 생활 주변에 뿌리는 살충제, 제초제의 성분을 조사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물질을 없애겠습니다. 약품 정보를 공개하고 친환경적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이센엠-45, 카바메이트, 비펜스린, 퍼메트린 등 발암성분 든 농약과 꿀벌집단폐사의 원인이 되는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니아니딘을 공원녹지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모기 살충이 목적이지만 효과 없이 전시행정으로 되풀이되는 연막 소독을 폐지하고, 방역약품에서 비펜스린, 퍼메트린 등 환경호르몬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내포한 약품을 추방하겠습니다.
- 생태적 방충 대안 활용 : 유충이나 알이 밀집한 가지를 잘라 소각하기, 짚을 통해 해충 유인, 인위적 해충 서식처 마련과 천적 이용, 친환경 유기농자재 이용, 불빛으로 나방 유인해 포획하기 등 생태적 방충 대안을 활용하겠습니다.

주요정책 3. 안전하고 걷기 좋은 골목 만들기

● 내용

현재 100인 이상 보육시설만 스쿨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집은 소규모 운영되고 있어 스쿨존 설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을 확대하고, 통학 길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어린이집 스쿨존 확대 : 스쿨존이 주로 학교 부근에 조성되어 있고 보육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스쿨존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자체가 경찰당

국과 협력해 보육시설 부근 스쿨존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태양광 LED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서울시 동대문구는 올해 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172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태양광 LED발광형 표지판으로 교체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하겠습니다.

- 통학 길 전수 조사 : 학교 앞 스쿨존뿐만 아니라 통학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교통 안전물 설치 작업을 벌여 어린이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요정책 4. 생쓰레기 분리수거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내용

현재 음식물쓰레기 중 57%는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30%는 먹고 남긴 음식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위탁 등 처리비용으로만 800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고 부패와 악취가 수반되기 때문에 매립, 소각을 할 경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쓰레기를 적극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 퇴비화 및 사료화하겠습니다.

세부공약

- 생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실시 : 생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절감하여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쓰레기를 수거해 지역 텃밭의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단 구성 :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대표, 시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적합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 폐기물 관리업무 개선 : 폐기물 관리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며, 직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설관리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이 폐기물 수거 사업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사기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갈취할 경우 이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계약서 및 조례 등에 명시하고, 업체가 반드시 환경미화원 고용을 유지 및 승계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요정책 5. 시민 정원사와 시민 농사꾼이 만드는 녹색도시

내용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인공적 조경관리가 아닌, 생태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 조경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원사가 되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해 녹색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세부공약

- 공원과 녹지 관리에 시민 참여 촉진 :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 조경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행정, 전문가, 지역 농민, 조경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 텃밭을 녹지와 조경 활용 : 도시농업학교, 원예교실, 시민 정원사 과정 등을 개설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텃밭이 도시의 녹지와 조경이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약 1 지역공동체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초: 6시간, 중: 7시간, 고: 8시간 이하)
  - 아이들이 지나치게 일찍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제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자고, 아침 든든히 먹고 여유있게 학교에 들어서게 만들겠습니다.
  - 해가 지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 가정과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유로이 놀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학원 수업도 밤 8시 이전까지 제한하겠습니다.
  - 아이들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이외에 아이들의 의사에 반해 공부를 강요하는 학교 규정이나 주변 환경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가 마을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 아이들이 방과 후 마을로 돌아와 마을 공동체 속에서 뛰어놀도록 만들겠습니다.
  - 마을의 어린이 공원의 수를 단계적으로 2배까지 늘리고, 마을 내 어린이 보육시설 및 놀이 공간, 방과 후 교육시설 등의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 마을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과 주민, 어르신들이 자주 어울리며 자라나도록 주민 복지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마을의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지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학교와 동네부엌 설치 및 운영지원, 마을신문 제작비 지원 등의 마을 공동체 복지 체계를 〈어린이-청소년-주민-어르신〉 모두가 어울려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2 지역이 나서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책임지겠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어린이 급식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이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급식을 위해 어린이 단체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일상적인 방사능 검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학교 및 급식재료 공급 업체 등에 대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부모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급식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를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영역이 상시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해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 학부모들과 영유아보육시설, 초중고학생 일반 시민 대상으로 상시적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를 위한 식생활 교육 강사 양성 및 바른 식생활 체험 시설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충북을 유전자조작 농식품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 충북을 GMO Free Zone 으로 만들겠습니다.
  - 주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해 GMO 농식품의 유통과 소비를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 충북을 태양과 생명의 땅,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 생산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 충북에서의 GMO 녹식품의 생산을 규제하고, 자연 친화적인 농업, 생명을 살리는 농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먹거리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겠습니다.

- 2020년까지 1인당 연간 쌀소비량 67kg을 80kg으로 늘리고, 식량자급률 24%를 50%로 올리기 위한 충청북도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이를 위한 지역 농업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및 연차적으로 기초농산물 품목의 지역 내 생산 확대와 지역 먹거리 기본 계획을 연계하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 충북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초 지자체 및 농협과 협력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기초농산물(5대 곡물, 10대 과일 채소, 5대 축산물. 10대 임산물 특용작물)에 대한 가격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시키기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및 유통체계(로컬푸드 매장 및 꾸러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도시지역 내, 혹은 주변 지역의 농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주민들의 농업에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한 도시농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약 3 안전한 삶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기업 및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청주 및 오창과 같이 화학물질 취급기업이 많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한 없이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기업의 유해 화학물질 관련 재난 관리 체계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기업과 주민이 공동으로 재난에 대한 관리 체계에 참여하고, 재난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재난 안전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매뉴얼과 이를 시행할 기구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내 핵발전소 폐쇄와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지역 에너지 정책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 기존의 지역 내 에너지 소비 실태를 바탕으로 기업과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 및 공동주택, 공장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강화된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적용하고, 건축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생태건축 요소의 도입 의무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강화된 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 충청북도의 태양광 에너지 관련 산업육성 정책과 연계해 기업, 상업용 건물 및 주택에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역이 나서서 지원하겠습니다.
  - 기존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인센티브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충청북도의 지역 내 에너지 생산 비율을 높여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 4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와 모두에게 예외 없는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지역 내 각종 권리 침해, 각종 분쟁 시 충북도의회의 개입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 내 인권 침해 및 관련 분쟁 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회 및 분쟁을 조정하는 활동의 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 청주노인병원의 노조탄압과 200일이 넘는 고공농성중인 영동 유성기업의 옥천휴게소 고공농성 투쟁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것에 의회가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 장애인, 노인,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충북도의회를 통해 권리 침해를 고발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 충북도의회가 해당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기능을 의회 사무국에 설치하고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차원의 독자적이고 강화된 인권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국가 차원의 장애인, 노인,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및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례 제정 및 정책 수립, 추진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 지역의 관련 개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통해 충청북도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약 1 안전하고 문턱이 낮은 녹색 교통도시

- 지하철 3호선 승무원 유인화 및 안정성 정밀 진단
- 전철, 버스, 택시 노후차량 교체, 점검주기 단축과 강화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충
-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별 관리, 휠체어와 유모차가 안전한 거리
- 대중 교통 안전 매뉴얼 마련 및 위기 대처 훈련 강화
- 자전거를 도심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공약 2 어린이,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 학교텃밭확대, 근교 및 경북지역의 농가 등과 연계한 어린이 농사교육프로그램 도입
- 앞산, 신천, 동촌 등 도심녹지공간을 어린이 생태평화교육프로그램 마련
- 시립어린이집 증설, 민간보육시설 공공성 강화, 생태환경교육 · 부모교육 활성화
- 지역아동센터 돌봄 기능 강화, 마을학교와 도서관 지원, 학교폭력 없는 동네 만들기
- 학습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교육예산과 정책 결정에 교사 · 학부모 · 학생 참여

공약 3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살기 좋은 주거 도시

-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기후변화시대 재난대비실태조사와 방재시설 확충
- 공공임대주택, 주거협동조합 및 공동주거시설 확대
-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상담 및 제도적 보완
- 낭비성예산에 대한 시민감사시스템 마련, 특히 토건예산감축 목표제 시행
-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예산교육 지원, 의정자료실 운영, 회의방청편의보장, 예산심의계수조정 공개 등 지방의회 개혁

공약 4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도시

- 원전으로부터 2시간 거리의 대구. 핵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위해 신규원전건설폐지와 노후원전폐쇄
- 수요관리와 지역에너지생산으로 에너지 자립도 높이기
- 재생에너지 시민펀드, 미니 태양광 옥상설치 등 시민들의 에너지 생산 활동 지원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자치구에 에너지절감 지원상담창구 마련
- 에너지 빈곤 계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 학교건물 단열 개선과 LED조명 확대, 태양광 설치 지원, 탈핵 · 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공약 5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도시

- 마을 공터의 노들 텃밭화와 주민 분양 및 지원사업
- 자치구별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재정 및 제도 지원
- 보건소의 생활 및 심리 상담 기능 강화 (공동체 상담 프로그램 도입)
- 성서공단 등 소규모 공장의 작업장 환경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지원
- 공단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원 관리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대기정화시설 지원
- 수돗물의 수원지 환경조사 및 상하수도 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바로 먹어도 안전한 수돗물' 실현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1 지방자치 공약

- 제주도개발특별법 폐지, 제주도보전특별법 제정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체
- 공항면세점 제주도로 운영권 이양
- 지방인사시스템 혁신
-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주민참정권 강화
- 기초자치제 전면 부활

공약 2 환경 공약

- 도내 신규도로건설 중지
- 해발600m 이상 개발행위 제한
- 해양환경보전 전담부서를 신설,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 제주 해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보호대상 해양생물 혼획 근절
- 초, 중, 고 동물실험 금지, 생명교육 실시
- 학교내 인조잔디 설치 금지
- 제주시내 도심 속 녹지공원 대폭 확충
- 신축건물의 고도제한 철저하게 적용

공약 3 탈핵/에너지 공약

- 제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제주 자체에서 생산되는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10년 로드맵 완성
- 에너지 낭비 유발하는 도청 등 관공서의 과도한 야근 금지

정책 1 탈핵 · 에너지전환 공약 – 밀양을 위한 약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을 위한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으로 세계에서 9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회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핵발전,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전기요금과 유류요금의 역전으로 빠른 속도로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력 소비에 맞춰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 전력생산과 송전선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발전설비 중 핵발전 비중을 29%까지 늘릴 것을 결정함. 이로 인해 고리, 울진, 월성에 신규 핵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삼척과 영덕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방식을 갖고 있음.
- 녹색당은 2030년 탈핵을 목표로 신규 핵발전 건설은 중단해야 하며, 수명지난 핵발전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정부가 탈핵 ·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생산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더불어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시로 송전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밀양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짐을 덜기 위해서는 분산형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도시의 책임을 강조하는 〈밀양을 위한 공약〉을 준비해야 함.

공약 4 인권/복지 공약

-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수립
- 제주도내 전지역 버스공영제 실시
- 장애인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리프팅 설치
-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보장(이동권, 노동권, 문화권, 교육권 등),
- 이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제공
- 작은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공약 5 먹거리 공약

- 방사능, 유전자조작, 유해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도입
- 지역먹거리(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결제시스템 등을 구축

공약 6 경제 공약

- 골목상권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카지노사업을 전면 금지시키겠습니다.

공약 7 농업 공약

-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번기에 마을 급식소를 설치
- 제주도 전지역이 친환경특구로 지정
- 제주도를 무항생제 무제초제의 섬으로 (골프장 제초제사용을 제한)

공약 8 평화 공약

- 해군기지건설은 일단 중단, 강정마을은 국제평화지대로 선포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국민의당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국민의당 정책공약

▣ 중앙 10대 정책

No.	정 책
1	국민대통합과 정치혁명
2	인권과 민주주의
3	노동자의 삶과 사회통합
4	여성주권과 양성평등
5	시장경제와 국가의 역할
6	민족의 화해와 세계평화
7	세계화의 도전과 산업정책
8	환경보호와 생명윤리
9	다양성이 만개한 문화대국
10	분권화와 지방자치

정책 1

국민대통합과 정치혁명

- 우리 당은 국민대통합을 지향하며 모든 형태의 분열책동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남북 간 민족분열, 지역 간 정치분열, 노사 간 계층분열, 빈부 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대립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와 통합의 숲을 가꾸겠습니다.
- 공익실현에 봉사하는 정치를 추구하고, 사익과 당파이익을 추구하는 권력투쟁,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정치, 권력을 남용하는 부정부패, 지역주의 패권다툼을 단호하게 배격하겠으며, 정당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정치부패를 청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권력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개혁의 주체인 정당의 내부 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당비와 후원금, 국고보조금 등을 투명하게 조성하고 관리하겠으며, 국민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 당의 역사인식에 공감하는 다른 정치세력과 기꺼이 연대하겠습니다.
- 우리는 오랜 세월 사회를 지배해 왔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부패정치의 유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 집단적 이해를 표출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극좌세력의 집단이기적 행태'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러한 극단주의적 집단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정책 2

인권과 민주주의

- 우리 당은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기본질서를 철저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민주사회의 토대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개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한, 정치적 경쟁자와 반대자를 포함한 만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우의 교육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믿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난민을 보호하는 인도주의적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해외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모범적 인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정책 3

노동자의 삶과 사회통합

- 생산 활동 없이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치러야 했던 무수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기본적 인권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몫을 누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실업과 고용불안은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사회악입니다. 실업은 귀중한 사회적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인간적 자존심과 삶의 물질적 근거를 박탈합니다. 우리 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에 특히 주목하며, 노동자들을 실업의 공포에서 보호하는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옹호하고 강화하겠습니다.
- 노동3권은 민주사회의 기본권입니다. 노사분쟁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불신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신뢰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사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노동은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현실로 다가온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지식 기술과 전문적 직무능력을 길러야 하며,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노동자의 삶과 사회통합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정책 4

여성주권과 양성평등

- 우리는 모든 종류의 차별이 인간정신을 해치고 인류사회를 병들게 하며,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나 사회적 분업이 야기한 차이를 차별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양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겠으며, 양성평등이 평화공존과 생태보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름길임을 확신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정치적 지도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성 할당제'를 채택하여 여성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경험을 쌓을 기회를 우선 당내에서부터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당원들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문화와 관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국민들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며, 업무분담과 승진, 급여의 차별과 직장 성희롱 등,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당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육아와 노인 부양 등 사회 전체의 책임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노동은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우리 당은 이들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는 노령화와 인구감소의 치명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가임 여성을 특별히 배려하는 모성보호제도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폭력과 소외, 빈곤의 악순환 속에 방치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 성폭력과 가정폭력피해자, 빈민여성과 농어촌여성, 장애여성, 성매매여성, 모자가정의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책 5

시장경제와 국가의 역할

- 우리 당은 시장경제체제를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로 인정합니다. 시장경제체제는 세계화와 과학기술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도분업사회에서 창의적 개인의 자발적 경제활동을 북돋우고 조율하며 경제활동주체들의 개별적 이해관계 대립을 절충할 수 있는 효율적 경제 시스템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또한 완전무결한 시장경제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삶의 모든 영역을 비인격적인 시장의 강제에 내맡길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합니다. 우리는 시장을 선(善)으로 국가를 악(惡)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국가의 퇴각과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장숭배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금융정책과 노동시장정책, 독과점과 환경파괴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미시적 규제, 풍부한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국가의 기본 임무에 속합니다.
-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최대한 시장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독점에 의한 경쟁 제약이나 불공정경쟁을 통해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소비자와 거래기업을 수탈하는 시장 내부의 경제적 권력집중에도 반대합니다.
- 우리 당은 소비자와 투자자, 지역주민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제 몫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경제적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특권을 철폐하고 기회의 불균등과 차별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분배를 시정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우리 당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근본적 조세개혁과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으며,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을 실천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겠습니다.
- 우리는 재해와 질병, 실업과 노령을 비롯한 삶의 근원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 돈이 없는 사람도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주어야 하고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진 이웃은 언제라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 당은 국가의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6

민족의 화해와 세계평화

- 우리 당은 나라 안팎의 모든 갈등과 분쟁에 대해 정치적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한 정부와 대표자가 서명한 모든 합의와 조약을 승인하고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지기 위해 상호군비축소를 포함한 군사적 화해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에 입각한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없는 지구를 만드는 국제사회의 주도국이 되어야 하며 먼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그 출발점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 우리 당은 또한 민족의 번영과 이웃 나라들의 공존공영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인류문명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이면서 민족 고유의 가치와 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 모든 종류의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타파하며 인권, 민주주의, 평화주의 정신에 입각해 국경을 초월한 국제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에 체류하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과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7

세계화의 도전과 산업정책

- 상품과 사람과 정보와 자본이 국민국가의 국경을 제한 없이 넘나드는 이른바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지구촌의 무한경쟁에 임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세계화를 명분으로 국민국가의 정책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미래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전통산업의 기반 유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가의 부를 증진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혜택과 손실을 모든 국민이 고루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우위를 지니지 않은 산업, 특히 농축산업과 어업에 드리운 세계화의 짙은 그림자에 주목합니다. 우리 당은 시장 친화적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8

환경보호와 생명윤리

- 깨끗한 물과 공기와 토양은 인간적 삶의 필수조건이며 이미 값비싼 경제재가 되었습니다. 지구 환경은 무한히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미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도 완전히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 우리 당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산성비와 삼림파괴를 비롯한 국지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규제정책을 지지하며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한 삶의 질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당은 대한민국이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 지구적 환경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환경협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환경협력사업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우리는 또한 국제환경협약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국제환경운동과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녹색GNP 개념의 도입과 활용을 지지하며 환경보호 운동과 유기농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첨단 생명과학의 발전을 환영합니다.

정책 9

다양성이 만개한 문화대국

- 우리는 개인의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꽃피는 사회를 꿈꿉니다. 우리 당은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더 많은 국가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교육이 특정 계층이나 세력의 신분세습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육의 목적은 자라나는 세대가 자주적인 인격체로 민주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룰 역량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 교육은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과 소질을 다양하게 실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획일적으로 측정한 학력을 유일한 선발기준으로 삼는 대학입시제도와 그로 인한 중등교육의 획일화가 개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그것을 모든 학교로 확산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경을 넘는 문화교류와 문화융합은 시대의 대세입니다. 개인의 문화적 실험을 장려하는 원칙은 국경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문화는 서로 다를 뿐 우열은 없다는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편견 없이 인정하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같은 지위를 요구합니다. 우리 당은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이 만개한 문화대국을 지향하겠습니다.

정책 10

분권화와 지방자치

- 민주주의는 분권적 정치시스템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비대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장악한 과도한 권력을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국회와 사법부에 돌려주는 수평적 권력분산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 당은 조세권과 치안권, 사법권과 인사권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수직적 권력분산을 추진하겠습니다.
- 중앙정부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생산과 지역적 이해관계의 조정, 국가인프라공급과 거시경제정책, 국방과 외교 등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연방정부에 준하는 작고 강력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 당은 지역의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지역 고유의 이해관계를 존중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불만을 표출하며 지방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직적 권력분산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의 실책을 견제하고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10대 기본정책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

▣ 중앙 10대 정책

No.	정 책
1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제 5차원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며,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
2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국민 서민의 아픔과 고통 애환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	한나라당 정강정책 제2조와 한나라당 당헌 제2조의 사항을 실천하여 세계 일류 선진 민족으로 등극시켜 드릴 것입니다.
4	먼저 정치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제5의 산업혁명과 제5의 에너지 혁명
6	한나라당의 6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을 통하여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당연성을 회복하는 사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모두 되돌려 놓는 사회, 근본성에 충실한 사회, 대통합을 이룩하고, 깨달음의 세상, 대광명의 세상을 이룩하겠습니다.
7	복본을 통한 복락원을 추구할 것이며, 역사청을 설립하여 한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재정립하겠습니다.
8	교육부를 독립시키고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룩할 것이며,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으며, 전문가가 숭상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9	갸륵(가륵) 천황의 가림토 정음 38자 (가림토 문자 38자)에서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겠습니다.
10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The Grand National Party)의 이념과 정강 정책과 당 강령, 당헌, 당규 등이 기존 정당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매우 좋은 정당이며,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소원성취 시켜드리는 정당입니다.

정책 1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제 5차원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며,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

- 제 4권 분립의 창시자인 한나라당 대표자의 국권부 (한풀이부, 참전 계경부, 홍익 인간부)를 신설하여 3개의 위원회와 6개의 청을 두어 국권부의 수장인 국령으로 하여금 한을 풀고, 한을 승화시키고, 해원 상생하고, 공생발전하고,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
- 3개의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여 드리고 홍익인간화 시키겠습니다.
  (1)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고 소원성취 시키고 홍익인간화 시키기 위하여 국권부(People's Rights & Nation's Rights)를 창설합니다. 국권부에는 수장인 국령을 두고 3개 위원회와 6개청을 신설하겠습니다. 2권 분립론의 창시자인 존 록크, 3권 분립론의 창시자인 몽테스키외, 4권 분립론의 창시자 한나라당 대표인 이태희가 4권분립론을 제시하면서 국권부를 창설하고자 합니다.
  (2)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을 신설하겠습니다.
  (3) 국권부는 한풀이부 라 하기도 하고, 참전계경부 라 하기도 하고, 홍익인간부 라 하기도 합니다.
  (4) 국권부에는 3개 위원회인 국민 권익 위원회 (한풀이 위원회)와 국가 인권 위원회 (참전계경 위원회)와 국가 인격 위원회 (국가 품격 위원회, 홍익인간 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는 국권부의 2개청인 한풀이청과 한푸세청을 관할하고 이론적 토대와 감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국민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한'의 원인과 전개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그 연구를 하여 '한'을 풀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한다.
  -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국권부의 2개청인 공생 발전청과 해원 상생청을 관할하고 이론적 토대와 감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국민 권익 위원회와 국가 인격 위원회를 상호 조정하고 상호 견제하고 상호 협력 하게 하는 기능을 갖게 하겠습니다.
  - 국가 인격 위원회에서는 국권부의 2개청인 소원 성취청과 홍익 인간청을 관할하고 이론적 토대와 감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국가 인격 위원회에서는 국가의 품격과 국가의 인격을 유지하며, 국가의 품격과 인격을 상승시키고, 홍익인간화 합니다.

(5) 국권부에는 6개청인 한풀이청, 한푸세청, 해원 상생청, 공생 발전청, 소원 성취청, 홍익 인간청을 두게 됩니다. 한풀이청에서는 한 많은 사람들의 한을 접수합니다. 한푸세청에서는 한풀이청에 접수된 국민의 한을 풀어드립니다. 해원 상생청에서는 한을 승화시켜서 해원 상생하여 제5차원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공생 발전청에서는 한을 승화시켜서 공생 발전시켜 제5차원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소원 성취청에서는 한을 승화시켜서 해원상생하고 공생 발전시켜 제5차원의 세계로 인도하고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 홍익 인간청에서는 한을 승화시켜서 해원상생하고 공생 발전시켜 제5차원의 세계로 인도하고 소원성취 시켜드리고 홍익인간화 시켜드리겠습니다.

(6) 해원 상생의 길을 터놓고 공생발전하며, 홍익인간 재세이화 사상으로 한겨레 한민족을 세계일류 장손 민족으로 등극시키고 발돋움시킬 것입니다.

(7) 한을 풀고 한을 승화시키고 해원 상생하고 공생발전하며 소원성취, 홍익인간, 행복 추구, 성공 시대, 국민의 지위 향상, 국가의 품위와 국가 인격인 국격의 향상, 지상 낙원 건설을 이룩할 것입니다.

정책 2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국민 시민 서민의 아픔과 고통 애환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의 정의를 이룩하겠습니다.
  (1) 경세제민의 약어로서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법칙이 공존하며 공공재와 사적재, 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바람 나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실천 해 보이겠습니다.
  (3) 주 5일제 근무를 하되 가동은 주 7일을 풀가동하여 역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4) 대기업의 임원의 월급을 현실화하여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5) 경제 정의를 이룩하겠습니다.
  (6)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 경제 균형과 균형배분을 실현하겠습니다.
  (7) 실업자를 구제하여 실업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8) 빈익빈 부익부를 고쳐서 부의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 노동 3법인 근로 기준법,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노동쟁의 조정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10)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되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실천하도록 하며, 기업의 사회 봉사 정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 기업의 독과점을 폐지하며,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유도할 것입니다.
  (12) 한국경제의 가장 문제점은 '협상차 가격'입니다.
  즉 공산품가격과 농산품가격의 차이를 '협상차 가격'이라고 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진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병렬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기업과 농촌의 빈부격차와 소득수준의 차이 및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 격차가 극심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대표들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13) 그리고, 한국경제의 가장 문제점은 샌드위치 경제입니다. 밑으로는 중국 경제, 위로는 미국 일본 경제 구조 하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샌드위치 경제에서 살아나갈 방향과 전략을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14) 기업의 임직원의 월급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 월급을 현실화하면 대졸 취업자 문제 해결됩니다. 왜 근본에서 생각하지 않고서 예외와 그 네들의 기득권 논리에 사로잡혀 좋은세상을 왜 못 보시고 왜 못 하시는 것입니까? 대기업의 임원 1인의 월급을 현실화하여 삭감하면 20여명의 대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삭감한 금액으로 대학교 졸업자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15) 쌀값 폭락문제 해결과 채소 값 폭락 문제 등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 해결을 한나라당 대표에게 맡겨 봐 주십시오. 쌀 값 가격 하락 문제는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면 깨끗이 해결됩니다. 다른 여타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문제는 폭락이나 폭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폭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가격을 보전해 주고, 폭등할 때에도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여 정부가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모 당 후보의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대북 쌀 지원의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쌀값 폭락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내년에 흉년이 들 때에 대비해야 합니다.

(16) 부동산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금융비용의 필요 경비 산입과, 의제 취득일을 2005.12.31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를 2005.12.31일 이전 취득시에 2005.12.3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국민들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여 주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독과점을 폐지하겠습니다.

가. 경제 민주화 방안

압축성장의 신화 속에 우리 경제의 아픔이 바로 경제 민주화 문제입니다.

(1) 1 %의 부자와 99 %의 일반 시민 서민간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99%의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입법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농민 어민 노년층 병자 등 사회적 약자의 설움과 고통과 애환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노동3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채용과 퇴사의 용이함과 유연성을 회복하고, 근로자와 사주 모두가 그 회사의 사원이요 주인이라는 자주의식으로, 공동모색을 통하여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제 주체들이 조화로운 상생의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개인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와 병진화 및 병렬화를 통하여, 공생발전 상생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대기업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근본시각과 의무를 부여하여, 대기업의 각성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국가가 경제 정책 수립 집행시 개인이나 시민 서민 및 중소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개인의 공생 발전 및 병진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 소비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7)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제7광구에서 일본과 중국은 가스와 석유를 채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제7광구에서 가스와 석유탐사를 하여 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

- 일자리 창출

(1) 대기업 임원의 임금과 보수를 적정선에서 통제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대졸신규 취업자들의 구직난을 해소하여 일자리창출과 인간다운 생활 유도 및 기업 확장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임원이 연봉 100억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봅시다. 이 임원의 연봉을 10억원으로 현실화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계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생 90명을 채용하여 1인당 연봉 1억원으로 90명에게 90억원을 지불하고, 세계 각국에서 외화를 벌어올 수 있게 하여 91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91명의 유능한 인재를 통하여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세계경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임원은 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구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풍요로운 삶과 복지다운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3) 몽고와 연해주에 취업, 교사, 선교 이민을 선발하여 1인당 5억원의 생활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 정년 퇴직자에 대한 노후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졸 신규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7) 노동의 숭고함과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노동의 질과 수준을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 고용 안정

(1)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 정년 퇴직자에 대한 노후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졸 신규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4) 노동의 숭고함과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노동의 질과 수준을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정책 3

한나라당 정강정책 제 2조와 한나라당 당헌 제2조의 사항을 실천하여 세계 일류 선진 민족으로 등극시켜 드릴 것입니다.

- 세계선진 일류 국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 풍요로운 세상, 지상의 낙원을 창조할 것입니다.
  -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 깨달음의 세상, 대광명의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을 통하여 국호는 대한국(GRAND KHAN)을 건설하여 세계 제1 강대국을 형성할 것입니다.
  (1)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5연방 1체제 1공화국 체제로서 한.몽 연방공화국, 한.연해주 연방공화국, 한.북한 연방공화국, 한.만주 연방공화국을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 제1대 강국인 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국(大桓國)]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한나라당은 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국(大桓國)]을 통하여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하고, 6대 교육과 9자 정신을 통하여 선진 민족성을 앙양하며, 살기 좋고 잘 사는 부강한 국민을 만들고 찬란한 문화를 꽃 피워가는 정당입니다.
  (3)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비애를 벗어나 세계 3대강국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문제를 일소하고, 각종 사회적 병폐를 척결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일소하고, 교육문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대학(원) 등록금 50% 인하와,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 교육을 전면 실시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금을 대폭 내리겠습니다. 휘발유 값, 경유 값 등 기름 값을 대폭 내리겠습니다. 서민생활 물가를 잡아, 안정시키겠습니다. 서민 농민 어민 및 사회적 약자의 설움과 고통과 애환을 속 시원히 해결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서 정치발전 시스템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4)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국방 행정 관행 헌법 법률 관습법 조리 판례 등 모든 면에서 당연성과 근본성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구조, 시스템으로 정착, 발전시키겠습니다.

- 현재의 대한민국의 삶의 질과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국민성 함양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대변혁시켜서 대전환을 이루고 대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지방자치 문화도 향상시키고, 제6회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유능하고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사랑하는 선량들이 당선되어 지방자치의 질을 한층 높여서 지방과 지역과 주민이 잘 되어야 국가와 국민이 잘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살기 좋고 살맛나는 고장이 되어야 살기 좋고 살맛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 살기 좋고 살맛나는 지역이 되어야 살기 좋고 살맛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 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국민성 함양이 잘 되어야 나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과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국민성 함양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나라가 잘 되어야 지방이 잘 되는 것이고, 지역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 지역과 주민이 일치가 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그 주민이 뛰어날 수 있듯이, 국가와 국민이 일치가 되어야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그 국민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의 혁신을 꾀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할 것이고, 국가도 혁신을 꾀하고, 국가가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 4

먼저 정치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치가 잘 되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국방 행정 등 모든 분야가 업그레이드 되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정치는 전 국민의 참여하에 참여정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고,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전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 국민의 복지와 행복 건강과 사랑을 위한 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만이 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리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서로 돕고 국민이 바로 서고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민이 스스로를 위하고 국민이 스스로 자유를 누리며 국민이 스스로 규율하며 국민이 스스로 자각 하며 국민이 스스로 이루어 나갈 때에 비로소 올바른 국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전 국민 모두가 선진국민이 될 때에 그 국가도 선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 정치란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로 정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물 흐르듯이 순리에 맞게 우주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회의 혁신 방안

(1)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행정부 국회 법원 등 정부기관을 국민의 뜻에 따라 재구성하겠습니다.

(2) 각종 언론기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을 국민의 뜻에 따라 재구성하겠습니다. 한 많은 사람들은 저희 한나라당에 오셔서 한을 푸시고, 소원 성취 하시기를 빕니다.

(3)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여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으로 절반을 감축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중에서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숫자를 2명으로하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게 할 것입

니다. 즉, 국회의원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수를 2인 이내로 줄여서 예산을 절약할 것입니다.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군의원 선거를 하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군의원은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당초 지방자치의 뜻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시도교육감 선거를 모두 없애겠습니다. 각종 농협장 선거 등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선거를 없애고 국민 전체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5) 국회의 회기 중 정기회를 연 2회 (3월 20일~5월 31일, 9월 20일~12월 31일) 로 하고, 국회를 365일 연중무휴 개회하여, 법안 상정 심의 의결에 있어서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6)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 및 자질향상과 양식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므로, 1인의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출과 법률안 심의 회부, 법률안 상정권 및 예산결산심사권 상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 국회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선거를, 개원하는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이 직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제1당에서 내세우는 대표가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무작위로 직선제로 변경하여, 자질이 되는 자를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8) 국회의원의 표결 시 무기명투표 및 교차투표 및 투표에 있어서 정당의 개입을 차단하고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국회와 정당의 혁신은 국민 심판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투표 때 이루어지므로 투표 시 국회의원후보를 심판하고 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10)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못하는 경우에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1) 중앙당의 비대화를 막고 돈이 적게 드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정당의 혁신 방안

(1) 군소정당의 애환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없는 군소정당에도 정당보조금을 지급한다.

(2) 정당대표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다.

(3) 중앙당의 비대화를 막고 돈이 적게 드는 구조로 전환한다.

(4) 중앙당과 지구당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정당의 최적의 효과를 유지한다.

(5) 헌법상 보장한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6) 정당과 국회의 구조 개혁이 잘 안되고 정치가 3류인 것은 거대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동 책임이며, 제 19대 국회의원들 전체가 정치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7) 국회의원들이나 서울특별시장 등 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등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어느 특정 정당에서 과반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당선만 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국회의원들과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 때에 국민의 심판인 선거를 통해서 어느 일당에 몰표를 주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양식 있는 국회의원과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를 뽑아야 하고,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심판하여, 따끔한 맛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8)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국민 참여 경선 정당, 정당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9) 재.보궐 선거 시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는 후보자 피선거권을 배제한다.

정책 5

제 5의 산업혁명과 제5의 에너지 혁명

- 제 5의 산업혁명과 제5의 에너지 혁명, 제5의 자본주의(재원주의), 제5의 새 시대, 새 지구·새 우주·새나라 건설, 수소 헬륨을 이용한 제5의 에너지 혁명, 수소 헬륨을 이용한 제5의 첨단 무기 개발과 세계 제5차원의 국방력과 제5차원의 기술, 제5차원의 세계를 정립하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재정립하고, 재창조하고 재정립하고 재실천하고 재도약하고 재발전시키겠습니다.

정책 6

한나라당의 6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을 통하여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당연성을 회복하는 사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모두 되돌려 놓는 사회, 근본성에 충실한 사회, 대통합을 이룩하고, 깨달음의 세상, 대광명의 세상을 이룩하겠습니다.

- 6대 교육 (가정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국민 교육, 국가 교육, 세계인류 교육)을 통하여 국민성을 계발하고 더 높여서(업그레이드시켜) 세계 선진 일류 국민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 9자 정신인 (자조 자립 자결 자위 자주 자유 자율 자각 자성 정신)을 통하여 국민성을 계발하고 더 높여서(업그레이드시켜) 세계 선진 일류 국민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1) 한나라당은 대표자가 주장하는 6대 교육과 9자 정신을 계승하여 선진민족성을 고취하고, 국민성을 함양하고 교양과 양식이 넘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촌이 논을 샀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국민성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 한나라당의 22개 덕목인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정심 희망 기여 봉사 정의 진리 헌신 나눔 수증 창조 생명 복본 대통합 깨달음 대광명)이라는 가치를 통하여 사람의 삶의 목표인 소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2대 덕목을 실천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대변혁하여 대전환을 이룩하고, 대통합을 이룩하고, 깨달음의 세상, 대광명의 세상을 이룩하겠습니다.
- 한국의 국민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 국민성은 국민 간에 우애와 신의와 믿음과 협력과 자조정신 자립정신 자결정신 자위정신 자주정신 자유 자율 자성정신 자각정신 자승 정신이 있어야 하고 나눔 봉사 기여 헌신 깨달음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 사이에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자율과 생명존중사상 및 상호 협동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사회 양식이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 살기 좋고 살맛나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 양보하는 사회, 최적의 소유, 광명 천지인 합일 사회, 재세이화, 홍익인간 사회, 본성 회복, 양심이 작동하는 사회, 도덕성이 확립된 사회, 새롭고 좋은 사회구조 확립, 새롭고 좋은 문화가 형성 되어져야 하며, 풍요로운 새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고, 친구 간에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간에는 경쟁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이고, 영원한 친구입니다. 남한이 가장 적으로 아는 북한, 그 다음은 일본, 그 다음은 중국으로 치고 있는데,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6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으로 치유하고 깨우치고 실천하고 창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제 1 등 국민이 됩니다.

- 일제 만행의 36년간의 산물인 사촌이 논을 샀을 때 배가 아픈 사회는 망조가 든 사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1) 호주제 부활하여야 합니다.

- 노무현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고 두고두고 뿌리 없는 자손들 만들 것입니까?
-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이어지고 문화 창달과 한민족의 우수성과 삼강오륜과 윤리 도덕이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2) 모든 부조리와 폐단은 과감히 척결하고,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 당연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근본성에서 모든 것을 조망했을 때에, 근본으로의 회귀하에 근본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모든 문제를 근본에서 시작하십시오. 왜 자기네들의 이익만 지키려고 하십니까? 다른 반대편의 사람들도 평등하게 최저생활 이상의 중산층 생활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시대를 돌파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농민여러분 서민 여러분 살림살이가 늘어났습니까?

(4) 사촌이 논을 샀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회. 국민성·민족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웃이 잘 되었을 때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주고, 이웃이 슬플 때 위로해 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도와주고, '세월호' 사건에 같이 슬퍼해 주고 울음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공감해주고, 국민 스스로 국가와 민족과 우리 이웃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9자 정신을 발휘하여, 살기 좋고 살맛나는 사회,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5) 농촌 총각 장가가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다민족 문화 정책으로서, 본래의 다문화 정책과 근본적으로 괴리되어 있습니다.

정책 7

복본을 통한 복락원을 추구할 것이며, 역사청을 설립하여 한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재정립 하겠습니다.

- 한나라당은 마고성 시대와 마고성시대의 중엽 말엽의 황궁씨 청궁씨 백소씨 흑소씨 시대와 안파견 환인 천제 시대의 정치와 천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본성을 회복할 것이며, 복락원으로 복본할 것입니다. 마고성 시대의 낙원으로 되돌아가서 복본하고 천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계발하고 깨달음과 관용 아량과 명상과 뇌 음악 명상으로 복락원으로 들어갈 것이며, 지상 낙원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들 한민족은 황궁씨의 장손민족의 후예들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백소씨가 따먹고, 마고성에서 쫓겨나서, 복본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소씨가 마고성으로 되돌아옴으로써, 마고성의 낙원시대는 끝이 나고, 실락원의 상태에 빠져들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직계선조이시고, 조상이신 황궁씨는 백소씨의 잘못을 뒤집어쓰고 장손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서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조차 힘든 북방으로 가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황궁씨의 소원하는 바를 황손인 저희가 마고성 시대의 낙원인 황궁씨의 초창기의 천성과 낙원으로 회복하고 복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안파견 환인 천제 시대의 천성과 낙원으로 회복시키고 복락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서로 돕고, 서로 위해 주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정신적 욕구의 충족과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 정신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와, 행복과 한나라당의 22개 덕목을 실천하고 누릴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도 350년으로 (점차로 120세 ~150세, ~200세, ~250세, ~300세,~350세로) 점차 수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안파견 환인 시대로 복본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새로 쓰겠습니다.
  - 역사청을 신설하여 역사를 재 편찬, 재 감수, 재 기록, 재정립하겠습니다. 올해(2014년)가 환국 9212년의 역사, 배달국기 5911년의 역사, 단기 4347년의 역사, 불기 2558년의 역사, 예수님 탄생 2018년의 역사, 서기 2014년의 역사를 찾아서 재기록 재감수 재편찬 재정립하여 올바르게 정립하겠습니다.

(1) BC. 7198년 ~BC. 3897년 : 안파견 환인의 환국(한나라, 환나라) 건국(파밀 고원 과 몽고의 발기리 호수에 이르는 지역 :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 제1대 안파견 환인 천제부터 제2대 혁서 환인 천제, 제3대 고시리 환인 천제, 제4대 주우양 환인 천제, 제

5대 석제임 환인 천제, 제6대 구을리 환인 천제, 제7대 지위리 환인 천제까지 3301년간 통치함.

(2) BC.3897년 ~ BC.2333년 거발한 환웅의 배달국 건국 (태백산 신단수에 신시) : 제1대 거발환 환웅 천황부터 제2대, 제3대, 제5대 태우의 환웅 천황, 제14대 자오지 환웅 천황, 제18대 거불단 환웅 천황까지 통치하였습니다. : 배달국은 1565년간 통치하셨습니다.

(3) BC. 2333년 ~ BC. 108 년 준왕 : 단군 왕검의 원조선 건국 (아사달 : 하얼삔 근처) 기자 조선, 위만 조선 : 조선은 단군 왕검 황제께서 2226년간 통치하셨습니다.

(4) 진한 번한 마한의 역사를 새로 정립하겠습니다.

(5) 부여 북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를 재정립 하겠습니다.

(6) 통일 신라 시대와 대진국(발해)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재정립 하겠습니다.

(7) 고려의 역사와 거란족 말갈족 동이족 저족 흉노족 스키타이문화를 재조명하고 역사를 재정립하겠습니다.

(8) 조선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명·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역사적 재조명을 실시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겠습니다.

(9) 일제 36년 동안 온갖 민족성과 국민성이 말살되고 식민사관과 황국사관에 갈기갈기 찢어진 한민족의 역사성과 민족성과 국민성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1910년 한일합방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69년 동안,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41년 동안) 일제 도당들의 온갖 나쁜 쪽으로 비뚤어진 국민성 조작과 민족 말살정책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온갖 못된 짓을 한 일제 식민사관과 황국사관에서 하루 빨리 청산하고, 올바른 국민성과 민족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국민성과 민족성이 잘못된 이유를 파악하고, 그 근본을 치유하고, 그 근본을 찾아, 올바른 처방으로, 당초의 한민족 고유의 민족성과 국민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 고유의 국민성과 민족성을 되찾아서 안파견 환인천제 시대의 천성과 인간성으로 복본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1947년 9월 9일 북한 괴뢰정권의 탄생과 신 남북한 시대탄생.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남침 전쟁은 조국광복의 기쁨과 신탁 통치와 6.25 남침 동란은 씻을 수 없는 민족끼리의 전쟁으로 생명이 희생되어 물질적 재산적 인명 살상 적인 피해가 엄청났으며, 극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 1945.8.15. 조국 광복
- 1948.8.15. 이승만 대통령의 제1 공화국 수립
- 1950.6.25.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한 6.25 동란의 동족상잔,
- 1960.4.19. 4.19 의거 혁명에 의한 장면 정권의 제2 공화국
- 1961.5.16. 5.16 혁명으로 인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 3 공화국 탄생과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이루었다.
- 1972.10.17. 10월 유신으로 인한 제4 공화국 탄생,
- 1980년 봄 : 3김 시대의 봄
-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제 5공화국 탄생,
- 1987. 6. 6월 항쟁으로 인한 노태우 정권의 제6공화국 탄생과 1988년 제24회 올림픽 개최
- 김영삼 정권 5년
- 김대중 정권 5년 :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월드컵 4강
- 노무현 정권 5년
- 이명박 정권 5년
- 박근혜 정권 5년
- 오늘의 경제 대국 10위권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책 8

교육부를 독립시키고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룩할 것이며,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으며, 전문가가 숭상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 지성교육과 덕성교육과 체력단련과 연마와 그 상위 목표인 영성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 깨달음의 세계를 이룩할 것입니다.
  - 인성 교육 강화와 생명 존중 사상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 학교 폭력과 학교 범죄를 없애고, 각종 폐단을 깡그리 뿌리 뽑겠습니다.
  - 영성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교화경인 삼일신고를 통하여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분야를 물질 교육과 정신 교육과 마음 교육과 신체단련 교육과 영성 교육을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 교육의 기본을 세우고, 근본성을 확립하고, 당연성과 당위성을 회복하고, 교육을 교화경인 삼일신고를 근본으로 삼아, 교육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 6대 교육을 고상하게 질을 높여 실천하겠습니다.
  - 9자 정신을 고품격으로 연마하겠습니다.
  - 22대 덕목을 배우고 꿈꾸고 이상으로 삼아 실천하고 희망으로 삼겠습니다.
  - 가정 교육 윤리 규범과, 학생 교육 장전과, 시민 교육 장전과, 국민 교육 헌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 학교 폭력을 없애고 교육감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교육 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 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 외국에 유학할 필요가 없도록 외국대학교 국내 분교를 8도에 하나씩 설치하겠습니다.
  - 제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용의 묘미를 살려서 어여쁜 백성들이 이를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 교육의 기회 균등은 절대적으로 보장될 것이고 부여될 것입니다.
  - 교육의 자유 정의 진리에 빛나는 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 최첨단 과학 기술을 계발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 기술부를 독립된 부로 신설하겠습니다.

(1) 생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생명 공학 분야에 세계 선진 일류를 구가하겠습니다. 생리학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재개와 명예 회복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세계일류가 안 나오면 이상한 현실이기에, 의과대학에서 세계일류가 나오도록 의학과 분야에서 세계 제일을 이룩하겠습니다.

(2) 물리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3) 화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특히 수소와 헬륨을 이용한 생활의 이기와 제 5차원의 세상을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4) 지구 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전문가가 숭상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 장인 제도 마스터 제도 도입, 최고 전문가에게 시상식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기술 장려와 과학의 발달, 예술의 발달, 국방기술의 발달,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분야도 세계 제1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책 9

갸륵(가륵) 천황의 가림토 정음 38자 (가림토 문자 38자)에서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겠습니다.

- 가림토 정음청을 설치하여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히 연구하고 계발하여 완전 해독하고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고 세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가림토 정음 38자에서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고 발췌하고 반포 하였는 바, 훈민정음 28자와 나머지 가림토 문자 10자를 또다시 연구하여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 복원하여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이룩 하겠습니다.
- 정음청을 설치하여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완전히 발음기관과 발성기관과 발음기호와 문자를 일치시켜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완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림토 정음 38자의 완전 실용화로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정책 10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The Grand National Party)의 이념과 정강 정책과 당 강령, 당헌, 당규 등이 기존 정당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매우 좋은 정당이며,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소원성취 시켜드리는 정당입니다.

- 한나라당은 기존의 해악과 폐단을 일소하는 혁신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굉장히 좋은 정당입니다.

(1) 한나라당은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제5차원의 세계로 인도하며,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

(2) 대한민국 국민 시민 서민의 아픔과 고통 애환과 숙원 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 속에 2012년 3월 5일에 창당하고, 2013.4.15. 새한나라당을 창당하고, 2014.2.6. 한나라당으로 재창당한 정당입니다.

(4) 한나라당은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등 22대 덕목을 통하여 풍요로운 세상, 대통합의 세상, 깨달음의 세상, 대광명의 세상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5) 한나라당은 6대 교육으로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풍요로운 새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6) 한나라당은 9자 정신을 통하여 깨달음의 세상, 대통합의 세상을 추구할 것입니다.

(7) 한나라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안파견 환인 천제의 나라인 환국 (한나라)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이름이 좋고 가장 아름답고 그 내용이 가장 알차고 좋은 정당입니다.

(8)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이상적이고 근본을 중시하는 매우 좋은 정당입니다.

(9) 한나라당은 세계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정당입니다. 예컨대, 세계 시민을 중산층화하는 정당입니다.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을 퇴치하고 무지를 타파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중산층까지 견인하는 정당이며, 새로운 문화의 창출에 이바지하는 정당입니다.

(10) 우리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다 같이 뭉쳐서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풍요로운 세상, 깨달음의 세계, 대통합의 세계, 대광명의 세계, 새롭고 희망차고 좋은 세상을 창조합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정책 · 공약모음집」

❖ **발행일** 2014년 7월

❖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
(02)523-6482

❖ **인 쇄** 이문기업 (02)504-1600~1

〈비매품〉